

연구보고서 2025-07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고도화 및 활용방안 연구

박성준

김가희·함영진·김경환·송현진·김지민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박성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김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함영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환	아주대학교 교수
	송현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김지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보고서 2025-07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고도화 및 활용방안 연구

발 행 일 2025년 3월
발 행 인 신 영 석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 쇄 처 (주)정인애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ISBN 979-11-7252-086-1 [9351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5.07>

발|간|사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이 중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지역사회보장정책에도 데이터를 활용한 기획·관리·평가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 및 사업을 뒷받침할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적극적 활용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핵심 자료로 활용되는 지역사회보장지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 차원의 정책 근거로 쓰인다.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영역과 세부 지표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지표 관리의 효율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은 본 연구에 이르러 비로소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지표의 구축·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지표체계의 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개편 방향과 효율적 관리·활용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영역별 세부 지표의 적절성과 활용 가능성을 재검토하여 데이터 제공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보장정책 이해관계자,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족할 데이터 관리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은 크게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고도화와 활용 촉진으로 구분된다. 지표 고도화 부문에서는 지표체계의 전면 재구성이나 세부 지표 추가, 데이터 출처 변경보다는 현행 지표체계와 세부 지표의 재검토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지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지역사회보장지표를 지속적·안정적으로 관리할 전략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박성준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수행되었으며, 원내 연구진으로는 김가희 부연구위원, 함영진 선임연구위원, 김지민 전문연구원이 참여하였다. 또한 원외 연구진으로는 아주대학교 김경환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송현진 초빙연구위원이 참여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지역

사회보장 전 영역에 해당되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기여한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단위 보건복지 통계데이터의 수요에 대응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지역사회 정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관리와 활용, 수요 친화적 데이터
제공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해당 지표의 활용
영역 확대, 각종 지역사회 정책 수립 및 관리를 위한 데이터 접근성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별적 연구 활동에 따른 결과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2025년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신 영 석





요 약	1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향	23
제2장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현황 및 사례 검토	27
제1절 지역사회보장지표 구축·관리의 배경 및 변화	29
제2절 지표체계 및 데이터 활용 관련 사례 분석	39
제3장 지역사회보장지표 체계의 개선 방향 설정	99
제1절 영역별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구성 및 세부 지표의 적절성 검토	101
제2절 지역사회보장지표 관리를 위한 구조 설정	159
제4장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 방향 설정	165
제1절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 범위 설정	167
제2절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 수요 검토	217
제3절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성 확대 방향	229
제5장 지역사회보장지표 고도화 전략	251
제1절 지역사회보장지표 구성 및 관리	253

제2절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 활성화 방안	263
제6장 결론	275
제1절 주요 연구 결과의 시사점	277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제언	281
참고문헌	285
부록	293
Abstract	343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1-1〉 주요 선행연구	22
〈표 1-2〉 구성별 내용	24
〈표 2-1〉 2023년 지역사회보장지표 생산 현황	34
〈표 2-2〉 2024년 시·도의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 진단 기준	35
〈표 2-3〉 2024년 시·도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 현황	36
〈표 2-4〉 한눈에 보는 사회의 5개 영역 25개 지표 구성	43
〈표 2-5〉 인구 건강 및 보건 시스템 성과: 핵심 지표	53
〈표 2-6〉 미국의 Healthy People 2030 5개 범주 62개 주제 영역	58
〈표 2-7〉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영역	66
〈표 2-8〉 한국의 사회지표 영역별 내용 구성	67
〈표 2-9〉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의 변화 추이	69
〈표 2-10〉 제5차 한국의 사회지표 주요 개편사항	70
〈표 2-11〉 국민 삶의 질 지표 선정 기준	72
〈표 2-12〉 국민 삶의 질 지표체계	73
〈표 2-13〉 국민 삶의 질 지표 정의서 예시: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적 고립도	76
〈표 2-14〉 건강도시 지표 항목 구성	87
〈표 2-15〉 단계별 국가교육지표 영역과 지표: 투입	94
〈표 2-16〉 단계별 국가교육지표 영역과 지표: 과정	95
〈표 2-17〉 단계별 국가교육지표 영역과 지표: 결과	96
〈표 3-1〉 조사 대상 집단 구분	105
〈표 3-2〉 영역별 검토 대상 세부 지표 목록	107
〈표 3-3〉 10대 영역 주관식 응답 요약	114
〈표 3-4〉 돌봄(아동) 주관식 응답 요약	119
〈표 3-5〉 돌봄(성인) 주관식 응답 요약	125
〈표 3-6〉 보호안전 주관식 응답 요약	131
〈표 3-7〉 건강 주관식 응답 요약	135

〈표 3-8〉 교육 주관식 응답 요약	138
〈표 3-9〉 고용 주관식 응답 요약	144
〈표 3-10〉 주거 주관식 응답 요약	147
〈표 3-11〉 문화여가 주관식 응답 요약	152
〈표 3-12〉 총괄 주관식 응답 요약	157
〈표 3-13〉 세부 지표 간명화 결과	160
〈표 4-1〉 지자체 주요 정책(계획) 현황	170
〈표 4-2〉 인구/청년 분야 활용 가능 지표	174
〈표 4-3〉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175
〈표 4-4〉 아동/청소년 분야 활용 가능 지표	178
〈표 4-5〉 장애인 분야 활용 가능 지표	183
〈표 4-6〉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187
〈표 4-7〉 노인 분야 활용 가능 지표	188
〈표 4-8〉 여성/가족 분야 활용 가능 지표	194
〈표 4-9〉 보건 분야 활용 가능 지표	199
〈표 4-10〉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시·도 지방시대 계획 예시	201
〈표 4-11〉 경제/지역 분야 활용 가능 지표	203
〈표 4-12〉 주거/문화/환경 분야 활용 가능 지표	210
〈표 4-13〉 기타 지역복지 분야 활용 가능 지표	216
〈표 4-14〉 지표 수요 조사지 구성 1	217
〈표 4-15〉 지표 수요 조사지 구성 2	218
〈표 4-16〉 지역사회보장계획 내 지표 활용 영역별 결과	219
〈표 4-17〉 지역사회보장계획 내 지표 활용에 관한 세부 응답 결과	221
〈표 4-18〉 지역사회보장 정책분야 지표 활용 영역별 결과	224
〈표 4-19〉 지역사회보장 정책 영역 지표 활용 세부 응답 결과	226
〈표 4-20〉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성 확대 방향	229
〈표 4-21〉 지역사회보장통계 및 지표 고도화를 위한 법 근거 개편 방향	232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4-22〉 지역사회보장 목표 점검지표 설정을 위한 SMART 확인 점검 사항	236
〈표 4-23〉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보고서의 이행점검 모니터링 작성 부분 매뉴얼 개편	237
〈표 4-24〉 사회보장 사전협의 신청서 작성 내용 중 통계 및 지표 활용 가능 부분	239
〈표 4-25〉 2023 지역사회보장지표 산출 현황 및 조사데이터 활용 지표	241
〈표 5-1〉 2023년(FY2022) 지방재정분석 유형 분류 기준 변수 현황	269
〈표 5-2〉 2023년(FY2022) 지방재정분석 유형 분류 결과	270
〈부표 1〉 한눈에 보는 사회 2024에서 고려한 출산율 지표의 상세 목록	293
〈부표 2〉 한눈에 보는 사회 2024에서 고려한 일반 지표의 상세 목록	295
〈부표 3〉 한눈에 보는 사회 2024에서 고려한 형평성 지표의 상세 목록	297
〈부표 4〉 한눈에 보는 사회 2024에서 고려한 자활 지표의 상세 목록	299
〈부표 5〉 한눈에 보는 사회 2024에서 고려한 보건 지표의 상세 목록	301
〈부표 6〉 한눈에 보는 사회 2024에서 고려한 사회통합 지표의 상세 목록	303
〈부표 7〉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대표·형평성 지표	305
〈부표 8〉 2023 한국의 사회지표 세부 구성 및 지표 소개	308
〈부표 9〉 저출산 통계지표의 주요 지표와 지표 정의	327
〈부표 10〉 균형발전지표 구축현황: 43종	331
〈부표 11〉 지역사회보장지표 지표별 분석 결과 전체	336

[그림 1-1] 연구의 방향 및 목표 설정	26
[그림 2-1] 한눈에 보는 사회 2024(Society at a Glance 2024)	40
[그림 2-2] 한눈에 보는 사회의 고용 영역의 지표 '정의 및 측정'	44
[그림 2-3] 한눈에 보는 사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형태의 차트	45
[그림 2-4] Society at a Glance와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아시아/태평양 판	48
[그림 2-5] 건강 상태에 관한 상황판	50
[그림 2-6]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지표 체계도	51
[그림 2-7] 주요 지표에 관한 인포그래픽	54
[그림 2-8] Healthy People 추진체계	56
[그림 2-9] 미국의 Healthy People 2030 지표별 상세 페이지: 자살률	60
[그림 2-10] 지표누리 메인화면	61
[그림 2-11] 지표누리 메뉴 소개: 통합 지표목록 및 검색	62
[그림 2-12] 한국의 사회지표와 관련 지표체계 간의 작성 범위 비교	65
[그림 2-13] 동심원으로 표현된 삶의 질 프레임워크	73
[그림 2-14] 국민 삶의 질 지표 웹사이트상의 2024년 4분기 업데이트 현황	77
[그림 2-15]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최근 추세 판정 기준	78
[그림 2-16] 국민 삶의 질 지표 보고서상에 나온 지표의 최근 추세	79
[그림 2-17] 지표누리 저출생 통계 자료 웹페이지에서 영역·부문별 지표 조회	80
[그림 2-18] 저출생 통계지표의 지표체계	81
[그림 2-19] 저출생 통계자료의 활용: 지표를 활용한 인포그래픽	83
[그림 2-20] 저출생 통계자료의 활용: 지표 상세페이지	84
[그림 2-21] 서울시 자치구 C의 건강 프로파일 주요 결과 예시 1: 건강 상태	88
[그림 2-22]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건강 프로파일 주요 결과 예시 2	89
[그림 2-23] 한눈에 보는 균형발전 현황판: 지역	91
[그림 2-24] 2023년 균형발전지표 개선 추진 현황	92
[그림 3-1]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체계 및 구성	102
[그림 3-2] 지역사회보장지표를 검토한 집단 및 기준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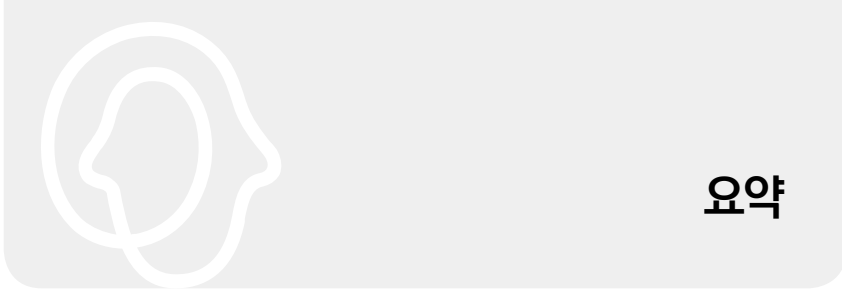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3-3] 지표 분석 결과: 10대 영역	112
[그림 3-4] 지표 분석 결과: 돌봄(아동)	116
[그림 3-5] 지표 분석 결과: 돌봄(성인)	122
[그림 3-6] 지표 분석 결과: 보호안전	129
[그림 3-7] 지표 분석 결과: 건강	133
[그림 3-8] 지표 분석 결과: 교육	136
[그림 3-9] 지표 분석 결과: 고용	141
[그림 3-10] 지표 분석 결과: 주거	145
[그림 3-11] 지표 분석 결과: 환경	148
[그림 3-12] 지표 분석 결과: 문화여가	150
[그림 3-13] 지표 분석 결과: 총괄	155
[그림 3-14] 지역사회보장지표 데이터 특성에 따른 구조 재설정(안)	164
[그림 4-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체계도	172
[그림 4-2]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2027) 정책체계도	180
[그림 4-3] 제5차 경기도 장애인정책 기본계획(2024~2028) 비전 체계도	181
[그림 4-4] 강원도 노인복지 기본계획(2023~2027) 비전체계도	185
[그림 4-5]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체계	190
[그림 4-6] 세종특별자치시 제2단계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비전체계도	193
[그림 4-7] 제8기(2023~2026) 수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별 세부과제	196
[그림 4-8] 보건복지부의 건강도시 지표	198
[그림 4-9] 2030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방향과 전략	205
[그림 4-10]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비전 체계도	206
[그림 4-11]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 비전 체계도	208
[그림 4-12]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 비전 체계도	212
[그림 4-1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요 내용(요약)	215
[그림 4-14]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추진 경과	239

[그림 4-15]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를 통한 지역사회보장지표 공유 방식	244
[그림 4-16] 지표누리의 목적 및 특징	245
[그림 4-17] 지역사회보장지표 데이터 연계체계(안)	247
[그림 4-18] 지역사회보장지표 데이터 관리체계(안)	248
[그림 5-1] 지역사회보장지표 개편 전략별 특성 비교	255
[그림 5-2] 지역사회보장지표 구성별 활용 세분화	258
[그림 5-3] 지역단위 보건복지통계데이터의 수요-공급 특성 도식화	260
[그림 5-4]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전략	262
[그림 5-5] 지역사회보장지표 데이터 제공 방안 구성	265
[그림 5-6]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서비스 예시(종합 분석)	266
[그림 5-7]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서비스 예시(추이 분석, 현황 지도)	267
[그림 5-8] 지역사회보장지표 관리 및 제공 체계 설정(안)	273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보장정책과 관련해서도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기획·관리·평가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보장 관련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 및 책임성이 강조되면서 관련 정책과 사업에서 데이터의 관리와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정책과 관련된 주요 데이터로는 지역사회보장지표가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비롯하여 지역단위에서 추진되는 각종 지역사회보장정책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지표는 여러 차례 개편되었으나 관리의 효율성 및 활용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전략 마련 등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구축·관리 현황을 검토하고 관련 지표체계의 특성들을 분석하여, 향후 지역사회보장지표 체계의 개편 방향과 효율적 관리 및 활용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영역별 세부 지표의 적절성과 활용 가능성 등을 재검토하여 데이터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보장정책의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등의 수요에 맞는 데이터 제공 및 관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고도화와 활용 활성화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고도화에서는 지표체계의 재구성이나 세부 지표의 추가, 데이터 출처의 수정보다는 기존 지표체계 및 세부 지표에 대한 재검토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정확도 및 신뢰도가 충분히 확보된 지표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 지역사회보장지표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 등을 검토하였다.

2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고도화 및 활용방안 연구

둘째,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에서는 근거 법률에 따른 활용 범위를 넘어 다양한 목적의 데이터 활용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특히 기존 지표체계 및 데이터 제공 방안의 한계를 보완하고 수요 친화적 데이터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접근을 검토하였다.

〈요약 표 1〉 구성별 내용

구분	목차	내용 및 방법	연구 구성 및 흐름
1장	서론	[내용] 지역사회보장지표 고도화 및 활용 활성화의 필요성 검토	지역사회보장지표 관리의 근거, 체계 구성 및 변화 등의 배경을 검토하여 지표체계와 관련된 주요 쟁점 도출
2장	지역사회보장 지표의 구성 및 관리	[내용]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구축·관리의 배경 및 변화, 관련 지표와의 관련성 검토 [방법] 데이터 수집, 문헌조사	
3장	지역사회보장 지표 체계의 개선 방향 설정	[내용] 지역사회보장 영역별 지표의 적절성, 관리의 효율성, 지표별 우선순위 설정 등 [방법]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조사	▼ 영역별 지표 내용의 적절성 검토 및 지표별 중요도 도출을 통한 활용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방안 검토
4장	지역사회보장 지표 활용 방향 설정	[내용]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검토 [방법] 사례조사, 데이터 이용자 및 관리자 대상 FGI 등	▼ 지역사회보장지표 관리·제공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개편안 제시, 수요 친화적 데이터 관리 방안 논의
5장	지역사회보장 지표 고도화 전략	[내용] 지역사회보장지표 구성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 도출,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제공 방안 논의 [방법] 데이터 제공 개선안에 대한 시범적 도입	▼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도 제고 및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방안 제시
6장	논의 및 결론	[내용] 주요 연구 결과 내용 및 합의 요약,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 등	

출처: 저자 작성

2. 주요 연구 결과

가.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현황 및 사례 검토

지역사회보장지표는 「사회보장급여법(2024)」 제3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해당 지표를 구축하는 목적은 1)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유할 수 있는 정책 지향의 설정, 2)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자체별 복지 수준 인식 제고, 3)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수준 인지를 통한 복지 참여 제고, 4) 지역 실행 기반의 모니터링, 성과관리 체계화이다. 그러나 1) 지표의 표준화와 지역의 특수성 반영 간 불분명한 방향성, 2) 실질적인 정책 설계와 평가 활용의 한계, 3) 미생산 지표 등 지표관리 체계의 한계, 4) 지표 개발과 활용에 대한 주민 참여 제한 등의 문제가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지역사회보장지표 외에 타 지표체계의 구축 목적과 관리 및 개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편의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둘째, 지표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협의체 운영 등의 다각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셋째, 지표의 정확도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개편 및 관련 기술 도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보장지표에서도 지표체계 고도화의 일환으로 직관적인 시각화 규칙 적용, 원자료와의 연결성을 높이는 기술 적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표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나. 지역사회보장지표 체계의 개선 방향 설정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구성 및 세부 지표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 영역 전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검토 기준은 크게 적절성(해당 영역의 여건 및 성과를 확인·분석하는 데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중요도(해당 영역의 여건 및 성과를 확인·분석하는 데 중요한가), 활용 가능성(지표를 활용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해당 세부 지표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으로 구분하였다. 영역별로 지표의 검토 범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미생산 지표와 비정기적으로 생산되는 지표는 제외하였다. 이상의 검토 결과에 따라 영역별 지표를 간명화하고, 핵심 지표를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요약 표 2〉 세부 지표 간명화 결과

영역 전→후	지표 코드	지표명
돌봄(아동) 13→7	a5	만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설립 주체별 어린이집 정원
	a6	만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특수보육어린이집 정원
	a7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a9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a10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a17	등록 발달장애아동 백 명당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률
	a23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비율
돌봄(성인) 15→7	b1	장애인구 비율
	b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인구 비율
	b16	노인인구 비율
	b17	요보호 노인인구 비율
	b18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b22	노인 만 명당 지역사회 거주시설 수
	b28	노인 만 명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수

영역 전→후	지표 코드	지표명
보호안전 8→6	c3	아동보호전문기관당 아동 수
	c4	노인보호전문기관당 노인 수
	c6	학대아동 발견율
	c7	학대노인 발견율
	c9	1인당 안전 및 범죄예방 예산
	c15	노인학대 재학대 사례 비율
건강 21→13	d3	전체 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 비율
	d5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률
	d6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d7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
	d9	건강생활 실천율
	d10	현재 흡연율
	d11	고위험 음주율
	d13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d17	자살사망률
	d19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
	d21	인구 100만 명당 응급의료기관 수
	d22	연간 미충족의료율
	d23	응급 시 119 구급차 현장 도착 시간 30분 이내 도달률
교육 15→8	e2	학령기 인구 1만 명당 학교 수
	e3	특수교육 대상자 수
	e10	학생 1인당 교육 투자액
	e12	교사 1인당 학생 수
	e14	학급당 학생 수
	e15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
	e16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
	e18	특수학교(급)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
고용 7→3	f1	고용률
	f2	실업률
	f3	장애인 의무고용률
주거 11→5	g4	공공부문 임대주택 재고
	g6	1인당 주거 면적
	g9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g18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g19	주택 이외의 거주 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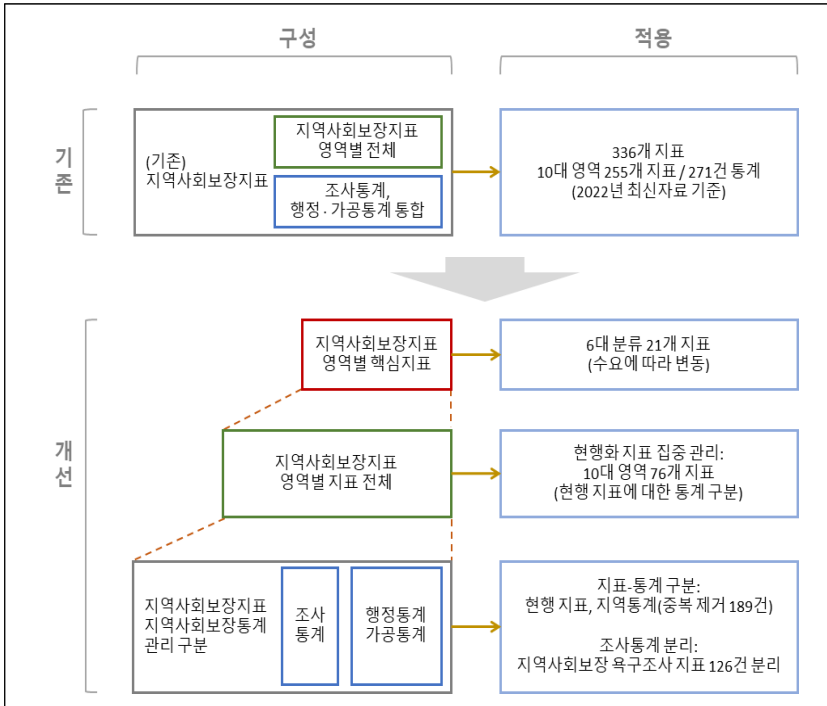
6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고도화 및 활용방안 연구

영역 전→후	지표 코드	지표명
환경 6→3	i1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연간 발령 횟수
	i2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연간 발령 횟수
	i3	오존 주의보 연간 발령 횟수
문화 6→1	h16	도서관 1관당 인구 수
총괄 7→6	j1	기초연금 수급률
	j2	장애인연금 수급률
	j3	총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
	j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j9	차상위계층 수급자 비율
	j10	근로연령층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출처: 저자 작성

다음으로는, 세부 지표 개편안을 바탕으로 지표의 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존 지역사회보장지표 원자료는 생산 지표/미생산 지표가 혼합된 형태이며, 조사통계와 행정·가공통계가 통합되어 관리되었다. 특히 각 지표의 결과와 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통계가 통합되어 관리·제공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데이터 이용 및 관리의 편의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표체계의 구조적 변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표의 지속성과 연속성, 비교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사통계와 행정통계·가공통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각 영역 및 세부 지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현행화 등 관리와 제공 및 활용 촉진 전략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활용도가 높은 지표들을 선정하여 데이터 제공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요약 그림 1] 지역사회보장지표 데이터 특성에 따른 구조 재설정(안)



출처: 저자 작성

다.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 방향 설정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복지정책의 수립 및 성과 평가에서 점차 근거 기반 (evidence-based) 의사결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근거 기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통계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체계적 관리와 데이터의 활용성 확대를 이의 중요한 과제로 이해할 수 있다.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영역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간 연관성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요약 표 3〉 지자체의 주요 정책(계획) 현황

구분	지자체의 주요 정책(계획)	지역사회보장지표 영역 관련
인구/청년	•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 청년정책 시행계획 등	돌봄(아동), 돌봄(성인),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총괄
아동/ 청소년	• 아동정책 시행계획, • (지자체별) 보육 기본/시행계획, • 청소년 시행계획 등	돌봄(아동), 보호안전, 교육, 문화여가
장애인	• (지자체별) 장애인정책 기본/시행계획, • 장애인 친화도시 등	돌봄(아동), 돌봄(성인), 고용, 총괄
노인	• (지자체별) 노인복지 기본/시행계획, • 고령친화도시 등	돌봄(성인), 보호안전, 건강, 고용, 총괄
여성/가족	•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 건강가족 시행계획, • 여성친화도시 등	돌봄(아동), 돌봄(성인), 보호안전, 고용
보건	• (지자체별) 지역보건의료계획, • 건강도시 인증 등	돌봄(아동), 돌봄(성인), 건강, 총괄
경제/지역	• 지방시대 시행계획 등	돌봄(아동), 돌봄(성인), 건강, 환경, 총괄
주거/문화 / 환경	• (지자체별) 주거종합계획, • (지자체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 (지자체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주거, 문화여가, 환경, 총괄
기타 지역복지	•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2024년 1차 예정), • (지자체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등	돌봄(성인), 교육, 고용 총괄

출처: 저자 작성

한편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 영역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요약 표 4〉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 영역별 사례 요약

활용 영역	활용 여부	세부 활용 사례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복지 수요·공급·지역 자원 현황 분석	(활용) 각종 지역사회 현황에 대한 기술 (미활용) 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지표의 활용 어려움, 데이터 생산 시점상 계획지표로 활용 한계
	주요 사회보장 욕구 및 핵심과제 도출	(활용) 지역 현황 분석, 과제 도출 배경으로 활용 (미활용) 지역사회보장조사가 상대적으로 활용도 높음
	전략체계 수립 배경 및 목표 설정 근거	(활용) 지역 간 비교 등 (미활용) 계획 내 목표에 부합하는 지표 내용 부재
	전략 및 세부 사업 성과지표 설정	(활용) 관련 성과에 대한 확인 등 간접적 활용 (미활용) 데이터 생산 시점상 문제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 (평가체계, 통계관리 등)	(활용) 관련 성과에 대한 확인 등 간접적 활용, 타지역 변화 검토 등 (미활용) 데이터 생산 시점상 문제, 특히 모니터링 특성에 맞지 않음
지역사회보장 정책 영역	지역 복지	(활용) 취약계층 위기가구 등 관련 정보 활용, 시군구 지표 데이터 제공 등 (미활용) 해당 정책 미추진 또는 해당 지표 활용 여부에 대한 확인 한계
	인구 청년 등	(활용) 청년 고용 등 관련 실태 확인 (미활용) 해당 정책 미추진 또는 해당 지표 활용 여부에 대한 확인 한계
	아동	(활용) 보육 등 아동 관련 정책 현황 검토 (미활용) 해당 정책 미추진 또는 해당 지표 활용 여부에 대한 확인 한계
	노인	(활용) 노인인구 현황, 관련 자원 수준, 고령친화도시 관련 지표 활용, 지역사회통합돌봄 관련 데이터 활용
	여성 가족	(미활용) 해당 영역 정책에서의 활용도 낮음
	장애 등	(활용) 장애인 인구, 장애인 관련 자원 현황, 장애인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 시에 활용
	보건	(미활용) 자살률, 건강 상태 등 일부 지표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나 보건 영역 정책에 대한 직접적 활용도는 떨어짐

출처: 저자 작성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는 1) 데이터 현행화의 한계로 인한 시의성 부족, 2) 지역 특성 및 지역사회보장 영역에 대한 반영 한계, 3) 데이터의 완결성 부족, 4) 인지도 및 활동 안내 등 정보의 부족 등이 도출되었다. 한편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개선 방안으로는 성과 중심 지표 개발, 생애주기별 지표 구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지표 개발, 통합적·체계적 지표관리 등이 제안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한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성 확대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적 측면에서 통계지표 활용 기반 및 범위 확대를 위하여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설정하고 타 법률 및 정책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비롯한 지역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점검 지표 활용과 정책 설계 시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지표체계 및 관리 방식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조사데이터의 활용 강화, 행정통계와의 통합적 활용 등 수요자 중심의 지표를 설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보장통계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개편과 해당 지표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요약 표 5〉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성 확대 방향

핵심 목표	활용성 강화 부문	세부 방향
지역사회보장 지표 활용성 강화 방향	→ 법·제도적 측면 통계지표 활용 기반 및 범위 확대	→ ① 사회보장통계 및 지표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사회보장급여법 지표 관리 및 활용 명확화 - 사회보장통계 및 지표 관련 지침 마련 - 사회보장기본법 등 타법과 연계 확대 → ② 지역사회보장 통계 및 지표 활용 확대 강화 - 지역사회보장계획 점검(모니터링) 지표 활용 - 지역사회보장 정책 설계 활용 강화
	→ 통계지표 구성체계 및 제공 등 관리 방식 개선	→ ③ 수요자 중심 지표 설계 및 조사데이터 활용 확대 - 지역 주관 지역사회보장통계 관리체계 - 조사통계와 행정통계 통합적 활용 - 지역 수요 중심 지역사회보장통계지표 제공 확대 → ④ 지표 데이터 제공체계 개선 및 교육 확대 - 지역사회보장통계 플랫폼 기반 마련 - 사회보장통계와 지역사회보장지표 간 연계 - 지역사회보장통계지표 인식개선 및 교육

출처: 저자 작성

3. 주요 제언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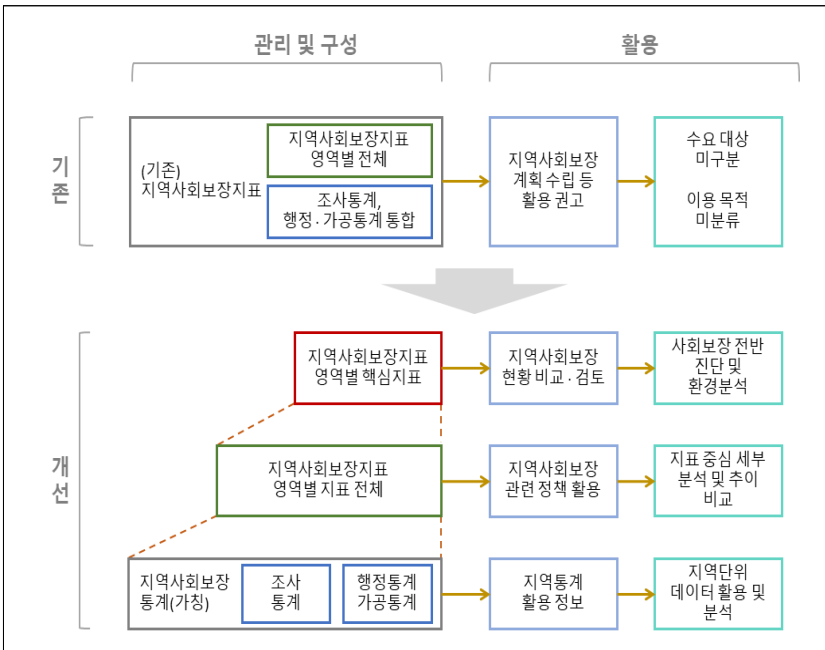
가.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구성 및 관리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표체계 구조의 개편이 선행되어야 하며, 개편의 방향은 데이터 수요와의 매칭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지표 활용의 양상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의 사회보장 전반을 진단하고 정책 환경을 분석하는 데 지표가 활용되는 경우에는 데이터의 수요층과 내용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영역과 세부 지표 중심의 데이터 제공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둘째, 지표의 변화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데이터의 안정성(주기적 생산, 현행화, 신뢰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12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고도화 및 활용방안 연구

셋째, 지역단위 데이터 분석에 해당 지표가 활용되는 경우에는 각 지표 데이터가 분석 가능한 수준의 형태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요약 그림 2〕 지역사회보장지표 구성별 활용 세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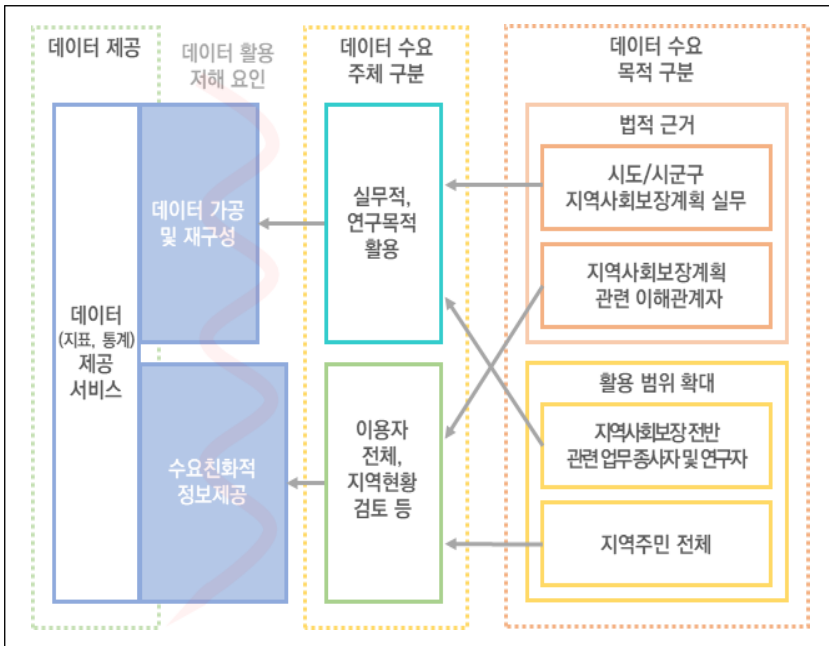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전략은 첫째, 지표 데이터에 대한 실무·분석 목적의 수요를 가진 경우에 대응하여 수요 친화적인 데이터 가공 및 재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사회보장 수준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나 환경을 검토하고자 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직관적 정보 중심의 데이터 구성과 제공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주로 시도/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이행 주체인 경우와 지역사회보장 관련 업무종사자 또는 관련 연구자 등을 위한 전략이며, 후자는 지역 내 지역

사회보장계획 관련 이해관계자나 지역주민 전체를 위한 전략이라 볼 수 있다.

[요약 그림 3]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전략



출처: 저자 작성

나. 수요 친화적 데이터 제공 방안 도입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수요 친화적 데이터 제공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1) 관련 분야의 데이터 제공과 관련된 범용 플랫폼을 활용하여 데이터 활용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2) 또한 데이터 제공을 목적으로 생산된 결과물은 각 수요에 맞게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수요 친화적 데이터 제공 방안을 도입하고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

14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고도화 및 활용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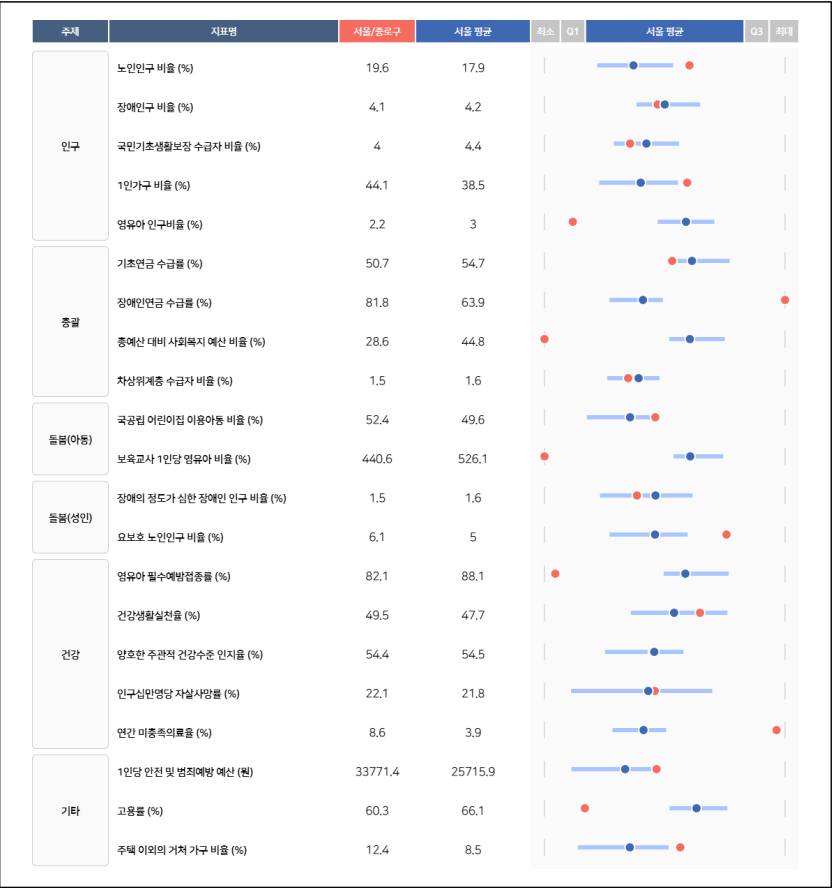
데이터포털을 활용하여 특정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 전반에 대한 현황을 보여주는 분석 정보(지역 비교 총괄), 세부 지표의 시계열적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정보(지역 추이 비교), 각 지표의 직관적 비교를 위한 지리 기반 시각화 자료(현황 GIS)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다. 그 외에도 유사 지역과의 비교를 위한 기준 재설정 방안, 지표의 제공체계 개편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요약 그림 4] 지역사회보장지표 데이터 제공 방안 구성



출처: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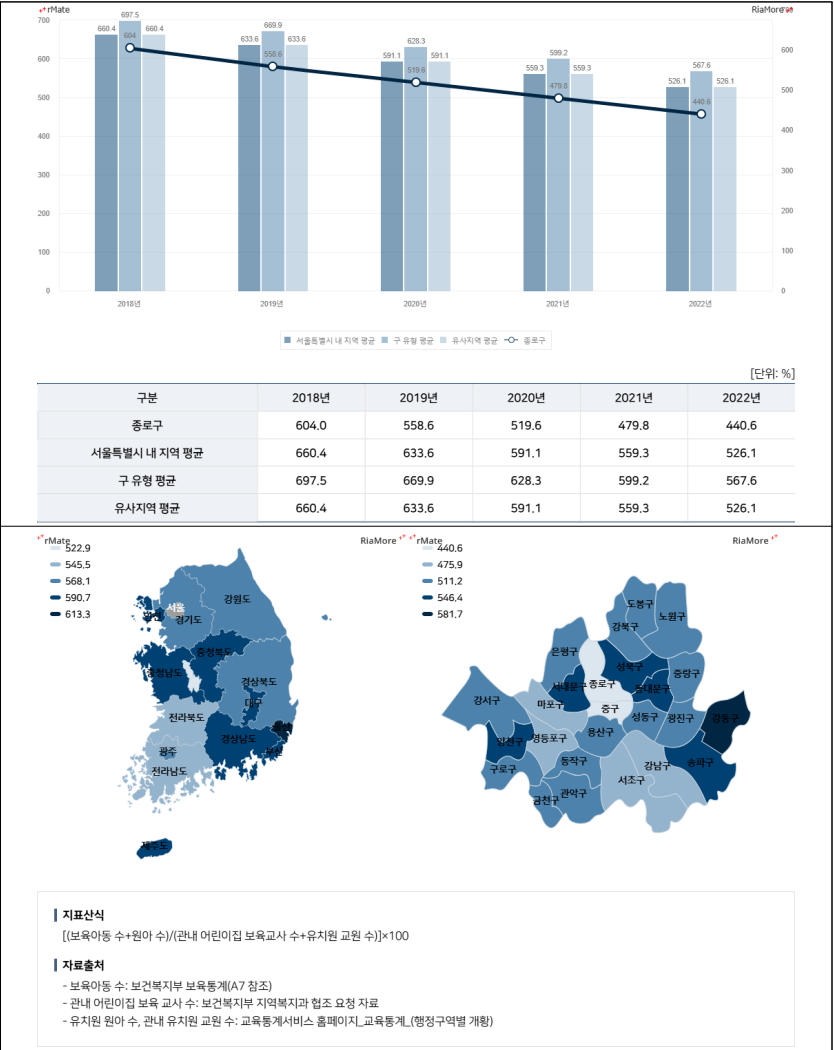
[요약 그림 5]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서비스 예시(종합 분석)



주: 해당 통계 수치는 임의의 값이므로 해당 예시 지역의 결과와 다를 수 있음
출처: 보건복지포털 내 데이터 제공 예시

16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고도화 및 활용방안 연구

[요약 그림 6]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서비스 예시(추이 분석, 현황 지도)



주: 해당 통계 수치는 임의의 값이므로 해당 예시 지역의 결과와 다를 수 있음
출처: 보건복지포털 내 데이터 제공 예시

주요 용어: 지역사회보장지표, 데이터 기반 지역사회보장정책, 지표체계 고도화, 수요 기반 데이터 활용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보장정책에 대해서도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기획·관리·평가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보장 관련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 및 책임성이 강조되면서 관련 정책과 사업서 데이터의 관리와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정책과 관련된 주요 데이터로는 지역사회보장지표가 있다.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생산 및 관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해당 데이터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비롯하여 지역단위에서 추진되는 각종 지역사회보장정책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지표는 2015년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 관련 연구(강혜규 외, 2015) 이후 지표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23년 기준 총 10개 영역 255개 지표가 산출·공표되고 있다. 그러나 초기 지표체계를 설정한 이후, 이에 대한 개편이나 관리 및 활용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전략 마련 등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생산·관리 목적에 맞게 지표체계가 변화·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지역사회보장지표를 개편하여 중앙정부의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 수립과 지자체의 증거 기반 지역사회보장정책 추진

등에 활용도 높은 데이터 생산·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구축·관리 현황을 검토하고 관련 지표체계의 특성들을 분석하여 향후 지역사회보장지표 체계의 개편 방향과 효율적 관리 및 활용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영역별 세부 지표의 적절성과 활용 가능성 등을 재검토하여 데이터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보장정책의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등의 수요에 맞는 데이터 제공 및 관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배경 및 필요성에 따라 다음의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구성 및 관리 실태에 대해 검토한다. 지역사회보장지표 구축·관리의 배경 및 변화를 검토하고, 지표 생산 목적에 맞는 개편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관련 영역 지표와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지역사회보장지표 체계의 구성 및 관리 방안을 도출한다.

둘째,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고도화를 위한 방향을 설정한다. 특히 각 영역별 지표의 구성 및 세부 지표의 적절성, 활용 가능성 등을 재검토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 지표의 효율적 관리 및 제공을 위한 세부 과제를 도출한다.

셋째,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 촉진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적용한다. 데이터 수요를 고려하여 지표 및 통계 데이터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며,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 국민 대상의 수요 친화적 데이터 제공 방안을 검토하고 반영한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데이터에 기반한 지역단위 사회보장정책 추진과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은 기존에도 강조된 바 있으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였다. 지역사회보장지표와 관련하여 초기에 지표체계 구성을 위한 연구(강혜규 외, 2015)가 수행된 이후에 지표체계 구성이나 세부 지표의 점검 등이 이루어진 바는 없다. 한편, 지표 설정 및 관련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된 바가 있으나 이러한 연구들은 데이터의 활용과 지표의 설정, 정책적 활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 결과들은 지표의 고도화와 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데 참고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지역사회보장지표와 관련된 과제를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보장지표에 초점을 맞추어 지표에 대한 관리와 활용, 수요 친화적 데이터 제공 방안을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점을 가진다. 특히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범위의 확대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22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고도화 및 활용방안 연구

〈표 1-1〉 주요 선행연구

관련 연구	연구 목적 및 방법	주요 내용
강혜규 외(2015).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 및 지역 간 균형발전지원체계 마련 연구 지역사회보장지표 체계 및 세부 지표 등에 대한 개발	- 문헌 검토 및 주요 사례 분석 - 관련 통계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지역단위 사회서비스 통계 분석을 통한 데이터 생산 가능성 진단 - 국내외 사회서비스 통계 활용 사례 분석 - 지역단위 사회서비스 통계의 관리 방안 제안
정해식 외(2018). 지역단위 사회서비스 기초통계 개발 및 관리 방안 연구 지역별 관리가 필요한 사회서비스 통계 선정 및 특성 분석	- 문헌 검토 및 주요 사례 분석 - 관련 통계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지역단위 사회서비스 통계 분석을 통한 데이터 생산 가능성 진단 - 국내외 사회서비스 통계 활용 사례 분석 - 지역단위 사회서비스 통계의 관리 방안 제안
오영민(2020). 사회보장사업의 성과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 사업의 성과지표 관련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 지역사회보장사업 관련 성과지표 설정 현황 검토 - 성과지표 적절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Logic Model 적용 - SMART 원칙에 따른 지표개설 원칙 설정 등	- 지역사회보장사업 관련 성과지표 설정 현황 검토 - 지역사회보장사업 정책 영역별 지표의 개선 방안 논의 - 신설 협의 사회보장사업 성과지표 설정에 대한 개선 방안 제안
이현주 외(2020). 사회보장정책 효과성 분석을 위한 행정데이터 연계·활용 연구 사회보장 관련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관련 제도의 효과를 분석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연계 구축을 통한 분석 - 관련 전문가 대상 포럼 운영 등	-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사회보장제도 평가 틀 구성, 행정자료를 통한 효과 분석 - 사회보장제도 분석과 관련된 자료 활용의 한계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시 - 행정자료 기반 사회보장제도 분석에 요구되는 기반 제시
이재용 외(2021). 데이터기반행정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관리체계 정립방안 연구	- 이론적 논의 및 지역단위 데이터 실태 분석 - 지자체 데이터 관리 사례검토 - 지자체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제안	- 데이터 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 개념 및 속성 검토 -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관리 기반 실태 분석 - 지자체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체계 제시
김필(2022).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새 통계지표체계 모색. 지방통계 지표의 개선 과제 도출 및 대안 제시	- 문헌 검토 및 주요 사례 분석 - 관련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 대상 수요 조사 - 관련 통계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통계 현황 검토 -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와 통계지표 활용 실태 검토 - 관련 지표체계의 개편안 설정

출처: 저자 작성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향

1.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먼저, 서론에서는 지역사회보장지표 고도화의 필요성과 본 연구의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가치와 함의, 연구 결과에 대한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제2장에서는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구성과 관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해당 장에서는 지역사회보장지표 구축 및 관리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역사회보장지표 체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해당 장에서는 지역사회보장 영역별 지표의 적절성, 필요성, 활용 가능성을 바탕으로 우선 순위 높은 지표 영역 및 세부 지표를 산출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을 위한 과제들을 도출하였다. 먼저, 각 정책 영역별 지역사회보장지표가 가지는 활용 가치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는 지역사회보장지표의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활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제5장에서는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고도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고도화를 위한 체계 구성 개편안과 관리체계 등을 검토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세부과제와 그에 동반된 데이터 제공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내용 및 함의 등을 정리하고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성화에 따른 정책적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24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고도화 및 활용방안 연구

〈표 1-2〉 구성별 내용

구분	목차	내용 및 방법	연구 구성 및 흐름
1장	서론	[내용] 지역사회보장지표 고도화 및 활용 활성화의 필요성 검토	지역사회보장지표 관리의 근거, 체계 구성 및 변화 등의 배경을 검토하여 지표체계와 관련된 주요 쟁점 도출
2장	지역사회보장 지표의 구성 및 관리	[내용]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구축·관리의 배경 및 변화, 관련 지표와의 관련성 검토 [방법] 데이터 수집, 문헌조사	
3장	지역사회보장 지표 체계의 개선 방향 설정	[내용] 지역사회보장 영역별 지표의 적절성, 관리의 효율성, 지표별 우선순위 설정 등 [방법]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조사	영역별 지표 내용의 적절성 검토 및 지표별 중요도 도출을 통한 활용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방안 검토
4장	지역사회보장 지표 활용 방향 설정	[내용]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검토 [방법] 사례조사, 데이터 이용자 및 관리자 대상 FGI 등	지역사회보장지표 관리·제공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개편안 제시, 수요 친화적 데이터 관리 방안 논의
5장	지역사회보장 지표 고도화 전략	[내용] 지역사회보장지표 구성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 도출,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제공 방안 논의 [방법] 데이터 제공 개선안에 대한 시범적 도입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도 제고 및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방안 제시
6장	논의 및 결론	[내용] 주요 연구 결과 내용 및 함의 요약,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 등	

출처: 저자 작성

2. 연구의 방향

본 연구 주제 및 목적에 따라 연구 내용의 방향은 크게 지역사회보장 지표의 고도화와 활용 활성화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지표의 고도화와 활용에 대한 범위가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각 방향별 목표를 구체화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먼저,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고도화에서는 지표체계의 재구성이나 세부 지표의 추가, 데이터 출처의 수정보다는 기존 지표체계 및 세부 지표에 대한 재검토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정확도 및 신뢰도가 충분히 확보된 지표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 지역사회보장지표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 등을 검토하였다.

한편,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에서는 근거 법률에 따른 활용 범위를 넘어 다양한 목적으로 데이터가 활용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특히 기존 지표체계 및 데이터 제공 방안의 한계를 보완하고, 수요 친화적 데이터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접근을 검토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방향 및 목표 설정

방 향	목 표	과 제
지역사회보장지표 고도화	정확도 및 신뢰도 높은 지표 체계 구성	데이터 특성 및 우선순위를 반영한 위계적 지표 구성
	지표체계 관리 효율성 제고, 지속성 및 안정성 확보	지표/통계의 구분, 활용 목적을 고려한 관리체계 검토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 활성화	수요친화적 지표데이터 구성 및 제공	데이터 수요 특성을 반영한 지표제공 방안 검토 및 적용
	지표 및 통계 데이터 접근성 제고	데이터 포털을 통한 데이터 제공 방식 및 형태 다양화

출처: 저자 작성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장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현황 및 사례 검토

제1절 지역사회보장지표 구축·관리의 배경 및
변화에 대한 검토

제2절 지표체계 및 데이터 활용 관련 사례 분석

제2장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현황 및 사례 검토

제1절 지역사회보장지표 구축·관리의 배경 및 변화

1. 지역사회보장지표 구축 관련 법·제도적 근거 및 선행연구

정부는 「사회복지사업법」을 통해 지자체의 복지사업 수행 책임을 확대해 왔으며, 2005년부터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5년 시행된 「사회보장급여법(2024)」은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명칭을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변경하고,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 중앙정부의 지원 등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동법 제4조, 제45조, 제47조, 제48조).

특히, 법 제36조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에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법 제41조, 제41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운영체제인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하였다. 즉,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임을 고려할 때, 결국 계획은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는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운영체제의 심의 및 자문을 거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 영역이 사회보장 부문으로 확장되고, 정책의 실질적인 집행이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으나,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역단위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근거는

미흡하였다. 예를 들어, 지역단위의 사회보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회보장 수준의 측정과 비교, 전국 지자체의 복지 수준 상향을 위한 근거 등에 대한 정보가 매우 미미하였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 ①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 ② 제35조제3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제40조(시·도사회보장위원회)

- ① 시·도지사는 시·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시·도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 ② 시·도사회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2. 시·도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이에, 2015년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 사회 보장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지역별 합리적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중앙 차원의 체계 마련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기보다 정책의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는 지역 차원의 사회보장체계의 발전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새로운 역할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종합 연구로 진행되었다.

사회보장지표 설정의 근간이 되는 연구는 강혜규 외(2015)의 ‘지역사회 보장 지표 개발 및 지역 간 균형발전 지원체계 마련 연구’이다. 그 연구는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체계 마련,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매뉴얼 정비라는 세 가지 과업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지역사회보장지표는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지역별 합리적 목표 설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시범적으로 측정하고, 사회보장 실태의 지속 추적, 관리, 활용을 위한 조사 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연구에서 제시한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구축 목적은 첫째,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유할 수 있는 정책 지향의 제시이다. 국가 사회보장제도 및 중앙정부 정책의 지자체 집행 역량을 제고하고 지자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연차별 실행 계획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둘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자체별 복지 수준 인식 제고이다. 지자체의 사회보장 범위, 지역 수준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기반하여 적극적으로 지역의 사회 보장 기반 마련 및 정책 추진을 독려하고, 지역의 수월성 파악을 통한 지역 간 벤치마킹, 상승 작용 효과를 기대하였다. 셋째,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수준 인지를 통한 복지 참여 제고이다. 지역사회보장 수준 인지를 통해 지역 복지공동체 형성, 주민참여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기대하였다. 넷째, 지역 실행 기반의 모니터링, 성과관리 체계화이다. 지역사회보장 지표를 통해 정책 집행 상황의 체계적, 시계열적 모니터링을 기대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에서 시·도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에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를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지역사회 보장지표의 산출은 지역별 사회보장 환경, 사회보장 증진 노력, 결과·성과 등을 대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작업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2. 지역사회보장지표 체계의 개편 과정 및 활용 현황

가. 지역사회보장지표 체계의 개편 과정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와 연계하여 2015년에 구축된 지역사회보장지표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의 정의(법 제3조 제4항)를 고려하여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분야를 포함하였다. 이 중 사회복지 영역은 아동 및 성인 돌봄, 보호·안전이라는 세부 기능별로 구분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사회보장 기반을 반영하기 위한 총괄 영역이 추가되었다. 그 결과, 돌봄(아동), 돌봄(성인),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총괄(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의 총 10개 영역 총 230개 지표가 도출되었다. 이렇게 2015년에 구축된 지역사회보장지표는 중앙에서 전국적 공통 지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었으며, 생산 및 확보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표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지자체별로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15년 이후 지역사회보장지표는 생산 중인 지표, 생산되지 않지만 산출 가능한 지표, 신규 조사가 필요한 지표 등 자료 확보 가능 여부에 따라 제공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었다. 그동안의 개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8년은 변화된 사회보장정책 환경 등을 고려하여 10대 영역별 정책 비전을 재설정하고, 각 비전과 해당 지표 간 정합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지표체계를 대폭 개편하였으며, 2019년과 2020년은 총 230개 지표에서 147개(63.9%) 지표값을 산출하였다. 다만, 2020년은 2019년 대비 신설(1건), 변경(2건), 갱신 중단(1건)이 발생하였다.

2021년은 총 230개 지표 중 149개(64.8%) 지표 값이 산출되었다. 기존에 미생산되던 지표가 재생산되어 2020년도의 147개 지표에서 149개로 2개 증가하였으며, 1년 단위로 생산되지 않아 현행화가 불가능한 지표 총 37개는 기존 지표 값을 유지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관련 지표(삶의 만족도, 각종 서비스 인지율 및 만족도 등) 20개, 돌봄(성인) 영역 지표(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1개, 주거 영역 지표(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 주택 이외의 거주 가구) 2개, 문화·여가 영역 지표(지역문화실태조사) 10개, 환경 영역 지표(도시립 및 온실가스 배출 등) 4개이다. 이외에 기존 지표의 오류 정정, 산식 검토 및 수정 등 기존 내용의 점검·보완·개선이 이루어졌다.

2022년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개편에 따라 총 지표 수를 2021년 대비(230개) 106개 증가(신설 126개, 삭제 20개)한 총 336개로 설정하였으며, 실제 지표값을 포함한 공개 지표 또한 2021년의 149개에서 2022년 255개로 106개 증가하였다. 정책 영역별 신설 지표는 돌봄(아동, 성인) 영역 36개, 보호·안전 영역 6개, 건강 영역 18개, 교육 영역 8개, 고용 영역 18개, 주거 영역 3개, 문화·여가 영역 6개, 총괄(삶의 질 및 인프라) 영역 31개이며, 2018년 지역주민욕구조사에 기반했던 20개 기존 지표는 지표체계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지역문화실태조사 기반 문화·여가 영역의 10개 지표(5년 주기)는 관련 자료 공개 시점이 2024년도로 예정되어 기존 지표값을 유지하였고, 지표 산식 및 자료 출처 보안을 위해 기존 산식 중 모호한 표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자료 출처는 이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더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2023년 지역사회보장지표는 현행화가 가능한 지표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최근 공개된 2020년 지역문화실태조사 등 최신 자료를 반영하였다. 2022년과 동일하게 총 336개 지표 중 미생산 지표 81개를 제외

하고, 최종적으로 10개 영역 255개 지표(75.9%)를 공개하였고, 지역문화 실태조사(2017; 2020 기준)가 공개됨에 따라 문화·여가 영역의 10개 지표를 현행화하였다.

〈표 2-1〉 2023년 지역사회보장지표 생산 현황

구분		돌봄 (아동)	돌봄 (성인)	보호 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 여가	환경	총괄 (삶의 질 및 인프라)	계	
소계		33	49	22	41	27	42	22	30	19	51	336	
PSR 분류	여건지표	9	16	4	11	7	12	5	4	3	14	85	
	투입지표	9	12	6	6	5	8	6	6	4	7	69	
	산출지표	13	19	8	17	11	16	8	15	10	19	136	
	영향지표	2	2	4	7	4	6	3	5	2	11	46	
생산 현황 별 구분	지표 산출 단위	시군구	33	48	14	38	26	42	20	30	19	51	321
		시도		1	8	3	1		2				15
	현재 산출 단위	시군구	22	39	7	32	17	24	9	21	7	38	216
		시도	3	2	9	7	6	2	5	1	4		39
		현재 미생산	8	8	6	2	4	16	8	8	8	13	81

출처: “2023년 지역사회보장지표 개괄 및 구축 현황 설명 자료”, 보건복지부, 2024a,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지원센터, p.5.

나.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 현황

2024년 시·도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 시·도(16개)는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통해 성과관리 지표 설정 및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평가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분석하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근거 마련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표의 활용 정도(수준)는 시·도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도가 높은 지자체(매우 그렇다)는 지역사회보장지표를 성과관리 지표로 적극 활용하고 정책 수립 및 평가에 이를 주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활용도가 낮거나 활용 현황을 답하지 않은 지자체도 다수 나타났다.

〈표 2-2〉 2024년 시·도의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 진단 기준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 지표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	응답 지자체 수	특징
① 매우 그렇지 않다	1	활용 정도 미흡
② 그렇지 않다	0	-
③ 보통	8	지역 격차 분석 및 균형발전 전략에 중점 활용
④ 그렇다	2	정책 평가 및 모니터링에 중점 활용
⑤ 매우 그렇다	5	성과관리 및 전략사업 지표로 활용

주: 17개 지자체 중 1개 지자체가 활용 현황을 미응답하여 총 16개 지자체의 응답을 제시함
출처: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위탁운영 실적보고서 [비발간]”, 감가회 외, 2024.의 내용 재
분석.

2024년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 결과 보고서에 제시된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 현황을 분석하여 유형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7개 시·도의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 방식은 ①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② 지역 격차 분석 및 균형발전 전략 ③ 정책 및 계획 수립 근거 자료 ④ 사회보장 인프라 및 취약분야 분석 ⑤ 복지 대상자 및 사업 수혜자 분석 ⑥ 전략사업

및 세부 사업 성과지표 설정의 총 6가지 유형으로 요약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사회보장지표를 성과 모니터링 및 정책 평가에 적극 활용하는 지자체(7개)가 다수 존재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6개)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지역 간 격차 분석을 통한 균형발전 전략 수립(3개), 사회보장 인프라 분석(4개), 복지 대상자 특성 분석 및 정책 보완(3개), 전략사업 성과지표 설정(3개)에 활용하는 정도는 낮게 나타났다.

〈표 2-3〉 2024년 시·도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 현황

활용 방식	내용	해당 지자체 수
①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지역사회보장 성과를 측정, 연차별 시행 결과 평가 및 모니터링에 활용	7
② 지역 격차 분석 및 균형발전 전략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 분석을 통해 정책 조정 및 균형발전 추진에 반영	3
③ 정책 및 계획 수립 근거 자료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근거 자료로 활용	6
④ 사회보장 인프라 및 취약분야 분석	복지 인프라 현황 파악 및 취약계층 지원 대책 마련에 활용	4
⑤ 복지 대상자 및 사업 수혜자 분석	주요 복지 대상자 및 수혜자 현황을 조사하여 정책 보완에 활용	3
⑥ 전략사업 및 세부 사업 성과지표 설정	주요 전략사업 및 세부 사업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정책 추진 방향 설정	3

주: 17개 시도의 2024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 결과를 분석한 결과로 해당 지자체 수는 활용 방식에 따라 중복 포함
출처: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위탁운영 실적보고서 [비발간]”, 김가희 외, 2024.의 내용 재 분석.

즉, 지역사회보장지표는 17개 시·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이행에 있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고,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에 있어 활용도가 높으나, 지표의 활용 정도(수준)에 있어서는 편차가 크며, 지역 격차 및 복지 대상자 분석에 활용하는 정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쟁점

문헌 검토를 통해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 중심의 지표 표준화와 지역 특수성 간의 갈등이다. 현행 지역사회보장지표는 전국 단위에서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10대 지표 336개 영역의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과 복지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도시와 농촌 지역의 복지 환경과 요구는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지표가 적용될 경우, 지역 고유의 문제를 정확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나타난다. 하지만 반대로, 지역 특화 지표를 개발하려는 시도가 전국적 표준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김보영, 2023; 채현탁, 이용수, 2023).

둘째,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지역사회보장계획 내 형식적 활용 문제이다.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를 제시해야 하며,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한 수요와 공급의 다각적 분석을 통해 지역의 정책적 판단을 위한 근거 자료를 산출하고, 사회보장 영역 및 일반적인 정책적 목표별로 지역사회보장 수준이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보장지표는 지자체의 정책 설계와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임에도 실제로는 지표가 정책 설계와 평가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지표가 단순 참고 자료로만 활용되고, 지자체 정책의 평가 기준으로 명확히 사용되지 않아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정책 효과성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나타난다. 이는 지역사회보장지표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며, 지표 개발의 목적이 흐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지영, 박순우, 2017).

셋째, 부처 간 데이터 공유/연계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발생하는 미생산 지표의 관리의 한계이다. 현행 지역사회보장지표의 미생산 지표는 총 81개로 이들 지표를 생산/갱신/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 복지부 간 데이터 공유와 연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관련 부처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고, 데이터 표준화에 한계가 있어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한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어 통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강혜규 외, 2016).

넷째, 주민의 복지욕구와 체감도 반영의 한계이다. 지역사회보장지표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실시되는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의 반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보장조사가 4년 주기로 실시되는 한계로 지역주민의 욕구가 매년 갱신되어 반영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이를 제외하면 지표 개발과 활용에서 주민의 참여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지역사회보장지표가 주민의 욕구와 체감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를 대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제2절 지표체계 및 데이터 활용 관련 사례 분석

본 절에서는 국내·외의 지표체계 및 데이터 활용 사례를 검토하였다. 지표별 개요, 작성 목적, 지표의 구성, 활용 및 개편 노력 등을 통해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고도화 방안에 참고하고자 하였다.

1. 해외의 지표체계 사례

가. OECD Society at a Glance (OECD 한눈에 보는 사회)

1) 지표 개요

‘한눈에 보는 사회(Society at a Glance)’는 2024년 10번째 버전으로 발간되었으며 25개 사회지표에 대한 38개 OECD 회원국 및 주요 파트너 국가(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브라질, 크로아티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페루, 루마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G20 국가(사우디아라비아)의 자료가 담겨 있다(OECD, 2024a). 사회지표(Social Indicator)는 한 사회의 가치와 목표에 비추어 그 사회가 어디에 와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통계를 포함해야 한다(김영미 외, 2010: 225). 이에, 2024 ‘한눈에 보는 사회’는 일반, 자활(Self-sufficiency), 형평성(Equity), 보건(Health status),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이라는 5개 영역의 25개 사회지표와 더불어 출산율에 대한 특별 이슈가 담겨 있다(OECD, 2024a).

8개의 장으로 구성된 ‘한눈에 보는 사회 2024’ 보고서의 제1장에서는 OECD 국가의 출산율 추이와 더불어 원인과 정책적 대응에 대해 다루었고, 제2장에는 한눈에 보는 사회의 목적과 지표 선정에 대한 설명 및 해설이

담겨 있다. 제3장에는 사회적 위험과 정부 효과성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4장~8장에 걸쳐서는 5개 영역에 각각 5개 항목씩 총 25개 사회 지표에 대해 소개했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사회’에 포함된 지표는 사회적 상황을 단순히 제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과 사회적 상태(Social status), 사회적 대응(Societal response)으로 구분한 지표를 통해 정책 효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려고 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2-1] 한눈에 보는 사회 2024(Society at a Glance 2024)



출처: “Society at a Glance 2024”, OECD, 2024a, OECD, 표지; “한눈에 보는 사회 2024”,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2024,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표지.

2) 지표의 작성 목적

OECD의 ‘한눈에 보는 사회’는 사회 발전 수준을 파악하고, 사회적 성과를 변화시키는 정부와 사회의 노력이 효과적인지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OECD, 2024a). 사회지표는 변화하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사회의

현재 상태를 알려주고, 사회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OECD의 ‘한 눈에 보는 사회’는 정책 환경의 맥락과 지출을 포함한 투입, 그리고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된 PSR(압력-상태-대응, Pressure-State-Response) 프레임워크를 변형한 지표의 분류 기준을 사용한다. 지표의 유형은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과 사회적 상태(Social status), 사회적 대응(Societal response)으로 분류된다(OECD, 2024a).

먼저, **사회적 맥락**은 정책 목표에 대한 직접적 내용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일반적인 사항을 말한다. 예를 들어,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이 이러한 지표에 포함된다. 이러한 지표는 정책 목표 그 자체는 아니지만 보건, 조세, 연금 등 정책에 관한 특성을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상태**는 정책의 계획과 집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회적 상황 또는 사회적 성과를 뜻한다. 예를 들어, 빈곤율은 사회적 상태 지표로, 모든 국가는 정책을 통해 빈곤율을 낮추고자 하며, 낮아진 빈곤율은 곧 사회적 성과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대응**은 사회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부를 비롯한 사회 주체(NGO, 가족 및 시민사회)들의 조치와 활동을 뜻한다. 예를 들어서, 복지 지출은 대표적인 사회적 대응의 예이다. 사회적 상태 지표와 사회적 대응 지표의 비교를 통해 대략적인 정책의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사회’의 또 다른 특징은 OECD 회원국 및 주요 협력국의 데이터를 최대한 포괄하는 지표를 다룬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국가별 추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지만 인력이나 자원의 부족으로 국가별로 상이한 자료수집 및 발표 방식을 통합하여 비교 가능한 수치를 만들기 위해 더 구체적인 지표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김영미 외, 2010). 또한, OECD는 현재 발표되는 자료 또한 절대적 수준에서 비교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포괄하는 주요 지표라면 지표 구성에 포함하기 때문에, 일부 항목은 특정 국가가 응답하지 않는 때도 있다.

3) 지표 구성

앞에서 소개한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과 사회적 상태(Social status), 사회적 대응(Societal response)이 지표 구성의 한 축이라면, ‘한눈에 보는 사회(Society at a Glance)’의 다른 한 축에는 광범위한 정책 분야가 포함된다. 사회적 상태(Social status)를 의미하는 일반 지표가 있고, 사회적 대응(Societal response) 지표는 자활(Self-sufficiency), 형평성(equity), 보건(Health status), 사회통합(Social cohesion)에 따라 그룹화된다.

일반 지표에는 가구소득과 출산율, 이민, 결혼 및 이혼, 인구 추이에 대한 사회적 맥락이 포함된다. 일반 지표를 통해 넓은 맥락에서 특정 국가의 지표를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활 지표**는 국민과 그 가족이 사회적, 경제적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한 유급 고용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고용, 실업, 직업과 관련된 기술, 교육(학생 성과) 등의 사회적 상태 지표와 은퇴 후 기대수명이라는 사회적 대응 지표를 통해 제시한다. 자활 지표와 밀접하게 연관된 **형평성 지표**는 전반적인 재원의 불평등과 빈곤에 대한 사회적 상태 지표와 이를 완화하고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알려준다.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 수준으로 공급되면서도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자활 증진 간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 두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보건 지표**는 기대여명, 자살, 흡연 및 음주 등의 사회적 상태와 보건 지출, 보건 및 의료인력 등 사회적 대응으로 구성된다. 더욱 자세한 보건 지표는 ‘한

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를 통해 제공되지만, 기본적으로 보건 문제는 실업, 빈곤, 주거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연관되므로 25개 주요 지표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 지표**는 사회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생활 조건에 영향을 받는 삶의 만족도를 비롯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와 투표를 통한 사회 참여 수준, 여성에 대한 폭력, 사이버 폭력 등 온라인 사용에 대한 지표가 여기에 포함된다.

〈표 2-4〉 한눈에 보는 사회의 5개 영역 25개 지표 구성

일반	자활	형평성	보건	사회통합
가구소득 (C)	고용 (S)	소득 및 자산 불평등 (S)	기대여명 (S)	삶의 만족도 (S)
출산율 (C)	실업 (S)	소득 빈곤 (S)	자살 (S)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S)
이민 (C)	기술 (S)	구매 가능한 주택 (S)	흡연 및 음주 (S)	여성에 대한 폭력 (S)
결혼 및 이혼 (C)	학생 성과 (S)	사회 지출 (R)	보건 지출 (R)	온라인 활동 (S)
인구 추이 (C)	은퇴 후 기대수명 (R)	실업 및 사회안전망 혜택 (R)	보건 및 의료인력 (R)	투표 (R)

주: (C)는 사회적 맥락, (S)는 사회적 상태, (R)은 사회적 대응을 의미함
출처: “Society at a Glance 2024”, OECD, 2024a, OECD.

위의 5개 영역 25개 지표는 각 영역별로 상세한 소개와 함께 차트로 구성된다. 또한, 정의와 측정, 참고문헌 등을 통해서 데이터 작성상의 지침과 근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정의와 측정 항목은 박스 형태로 본문과 구분되게 작성하여 사용된 자료의 정의와 잠재적인 측정 문제를 파악하기 용이하게 만들어 두었다.

[그림 2-2] 한눈에 보는 사회의 고용 영역의 지표 ‘정의 및 측정’

정의 및 측정

질병, 휴일, 노사분규로 인해 일시적으로 결근한 경우에도 주당 1시간 이상 임금, 영리 또는 가족의 이익을 위해 일하면 고용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용의 기본 지표는 15~64세 인구 중 기준 주에 고용된 인구의 비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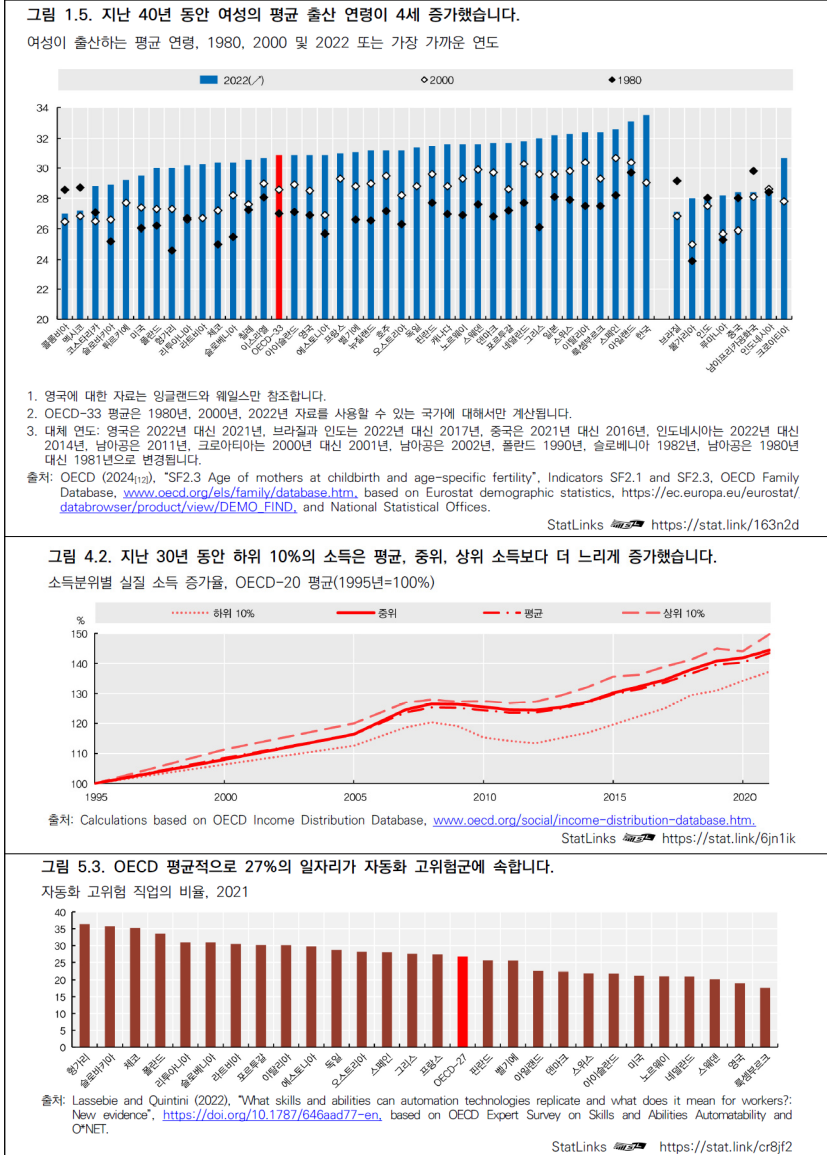
ILO 가이드라인에 따라 25~54세 어머니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며, 특정 기준 기간 동안 유급 고용 상태이거나 1시간 이상 자기 고용 상태였던 모든 사람을 ‘취업자’로 분류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기록된 고용 상태는 다를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법정 출산휴가 또는 유급 육아휴직(법적 또는 계약상) 중인 많은 사람을 고용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유럽 노동력 조사에서는 부모가 업무 관련 소득이나 수당을 받고 있거나 휴직 기간이 3개월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 고용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별 정의는 대체로 이 일반적인 정의와 일치하지만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oecd.org/employment/database의 www.oecd.org/els/emp/LFSNOTES_SOURCES.pdf를 참조하세요.

자동화 고위험 직업의 비중은 98개 기술과 능력에 대한 자동화 정도를 평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2021년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 다음 자동화 위험도는 직업별로 해당 직업에서 사용되는 각 기술 또는 능력에 대해 모든 전문가 응답에 가중치를 부여한 평균 등급 또는 O*NET에서 평가한 해당 직업에서 능력의 중요도에 따라 계산됩니다.

출처: “한눈에 보는 사회 2024”,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2024,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p.74.

[그림 2-3] 한눈에 보는 사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형태의 차트



출처: “한눈에 보는 사회 2024”,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2024,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p.20, p.63, p.75.

보고서의 차트 제목은 사용한 데이터의 명칭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는데, ‘한눈에 보는 사회’에서는 차트의 제목에 핵심적인 주제를 한 문장으로 담아 독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다. 대신, 부제목의 형태로 어떠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는지 연도와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매 차트마다 OECD 평균을 붉은색으로 삽입하여 차트 작성에 고려한 국가의 평균치를 참고로 제시했다. 개별 차트에는 출처와 함께 StatLink라는 링크가 제공되는데, 이를 통해서 지표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엑셀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대부분의 차트는 국가 비교의 형태로 작성되므로 단년도 자료를 활용하지만, 일부 차트는 [그림 2-3]의 두 번째 차트와 같이 지난 30년 간의 시계열 변화를 제시하고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차트 작성에 고려하는 기간은 자료제약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4) 지표의 활용 및 개편

OECD는 ‘한눈에 보는 사회’¹⁾를 출간하기 전인 1973년에 ‘List of Social Concerns Common to Most OECD Countries’라는 제목으로 보건, 개인개발, 고용, 여가 등의 항목이 포함된 원형적 형태의 사회지표를 발간하였다(김영미 외, 2010). 이후 해당 지표를 재구성한 형태의 ‘OECD List of Social Indicators’를 발표하다가 2001년에 이르러 현재와 같은 구성의 ‘한눈에 보는 사회(Society at a Glance)’가 발간되었다.

‘한눈에 보는 사회’와 관련된 간행물에는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이 있는데, 해당 보고서는 광범위한 결과 지표를 사용해 사회적 웰빙과 진보에 집중한 지표를 제시하는 반면에 정책 대응 지표는

1) ‘한눈에 보는 사회 2024(Society at a Glance 2024)’에 포함된 데이터의 상세 목록은 부록을 참고

제외되어 있다(OECDb, 2024). 또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는 보건 분야의 지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OECD/WHO, 2024).

나. OECD Health at a Glance(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1) 지표 개요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는 각국의 건강 상태와 건강 위험 요인, 보건 시스템의 투입과 산출 면에서의 차이에 관한 지표 체계를 보고서의 형태로 발간한 것이다(OECD, 2023). 2001년 첫 발간을 시작으로 격년으로 발간되며, 2023년에 12번째 출간되었다.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는 38개 OECD 회원국 및 주요 파트너국가(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중국, 크로아티아, 인도, 인도네시아, 페루, 루마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보건 시스템 성과와 관련해 다양한 측면에서 최신의 데이터와 동향을 제공한다. 건강 상태와 건강 위험 요인 외에도 의료의 접근성과 질, 보건 시스템 자원 등에 관한 비교 가능한 최신의 통계가 발표되는데, 주로 각국의 공식 통계치를 수집하고 그 외에 기타 출처를 활용해 전반적인 보건의료에 관한 종합적인 지표를 제공한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의 경우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제1장에서는 보고서의 핵심 지표를 기반으로 보건 및 보건 시스템 성과에 대한 개요를 제공했고, 특집호의 형태를 띠는 제2장에서는 2023년의 심층분석으로 디지털 헬스에 초점을 맞추어 OECD 국가의 보건 의료 시스템의 디지털 준비도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해 다루었다. 나머지 8개의 장에서는 각각 제3장 건강 상태, 제4장 건강 위험 요인,

제5장 의료 접근성, 제6장 의료의 질과 성과, 제7장 보건의료 분야의 지출 및 재정, 제8장 보건의료 인력, 제9장 제약 산업, 제10장 고령화와 장기 요양에 대해서 다루었다.

제3장~제10장은 개별 지표별로 먼저 분석된 지표를 정의하고, 데이터가 보여주는 주요 결과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가별 비교 가능한 측면을 설명한 이후, 현재 상태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게 구성된 차트를 제시하고, 경우에 따라 시계열 자료를 함께 제공하였다. 제1장과 제2장의 경우 보다 상세하게 작성된 별도의 보고서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림 2-4] Society at a Glance와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아시아/태평양 판



출처: “Health at a Glance 2023”, OECD, 2023, OECD, 표지;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 아시아/태평양 판”,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2024,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표지.

한편,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가 발간되지 않는 짝수 연도에는 지역별 보고서가 발간되고 있다. 한국이 포함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아시아 태평양 편(Health at a Glance: Asia/Pacific)’의 경우 2024년에 8번째 출간이 이루어졌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27개국을 포함하여 지역의 건강

상태, 건강 결정요인, 보건의료 자원과 이용, 보건의료 지출 및 재정, 돌봄의 질에 대해서 지표를 생산하고 있다. 27개국에는 아시아지역의 22개국(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북한,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과 태평양 지역의 5개국(호주, 피지,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제도)이 포함된다.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와 마찬가지로 특정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특별 챕터를 통해서 2022년에는 COVID-19 이후의 보건의료에 대해서 다루었고, 2024년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신건강 및 신경계 질환 및 약물 사용에 대한 지표를 실었다.

2) 지표의 작성 목적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는 국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건의료 시스템의 성과를 촉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지표를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보건의료 실태와 보건의료 시스템의 전반적인 성과를 평가하고, 각국이 직면한 주요 도전 과제와 개선 방안을 확인한다(OECD, 2023). COVID-19 이후, 위기 상황에도 필수 보건의료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회복성 있는 보건의료 시스템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OECD는 미래의 보건의료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필요한 투자, 노력, 행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는 건강의 결정요인을 폭넓게 고려하는 차원에서 보건의료 시스템의 전반에 걸쳐 성과를 평가한다. 물론, 각국이 직면한 건강 문제와 보건의료체계의 운영 실태는 모두 다르다. 하지만 핵심 지표를 제시하고 그 수준을 제한적이거나 비교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보편적 의료 보장 현황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OECD/WHO,

2022; OECD Korea Policy Centre, 2022). 아래 그림은 국가별 건강 상태에 대한 상태를 요약한 표이며, 초록색은 OECD 평균보다 높은 경우, 파란색은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인 경우, 빨간색은 OECD 평균보다 낮은(Worse) 경우를 의미한다.

[그림 2-5] 건강 상태에 관한 상황판

Table 1.2. Dashboard on health status, 2021 (unless indicated)

	Life expectancy		Avoidable mortality		Chronic conditions		Self-rated health		
	Years of life at birth		Deaths per 100 000 population (age-standardised)		Diabetes prevalence (% adults, age-standardised)		Population in poor health (% population aged 15+)		
OECD	80.3	+	237	+	7.0	-	7.9	+	
Australia	83.3	+	144	+	6.4	+	3.7 ²	+	
Austria	81.3	+	198	+	4.6	+	7.4	+	
Belgium	81.9	+	178 ²	+	3.6	+	8.0	+	
Canada	81.6	+	171 ²	+	7.7	+	2.8	=	
Chile	81.0	+	247 ¹	-	10.8	-	6.8	-	
Colombia	76.8	+	328 ¹	-	8.3	+	1.3 ²	N/A	
Costa Rica	80.8	+	237 ¹	-	8.8	+	3.4 ²	N/A	
Czech Republic	77.2	-	335	-	7.1	-	8.6	+	
Denmark	81.5	+	174 ¹	+	5.3	+	7.7	+	
Estonia	77.2	+	363	+	6.5	+	12.1	+	
Finland	81.9	+	186 ¹	+	6.1	-	6.2	+	
France	82.4	+	160 ²	+	5.3	+	8.9	-	
Germany	80.8	+	195 ¹	+	6.9	-	12.4	-	
Greece	80.2	-	204 ¹	-	6.4	-	6.5	+	
Hungary	74.3	-	404 ²	+	7.0	-	8.2	+	
Iceland	83.2	+	142	+	5.5	-	5.9 ²	+	
Ireland	82.4	+	172 ²	+	3.0	+	5.2	-	
Israel	82.6	+	141 ¹	+	8.5	-	10.9	+	
Italy	82.7	+	146 ²	+	6.4	-	8.1	+	
Japan	84.5	+	134 ¹	+	6.6	+	13.6 ²	+	
Korea	83.6	+	142 ¹	+	6.8	+	13.8 ¹	+	
Latvia	73.1	=	531	-	5.9	+	13.1	+	
Lithuania	74.2	+	481	+	5.8	+	13.1	+	
Luxembourg	82.7	+	147	+	5.9	-	5.9	+	
Mexico	75.4	+	665 ²	-	16.9	-	N/A	N/A	
Netherlands	81.4	+	161 ¹	+	4.5	+	5.2	+	
New Zealand	82.3	+	179 ²	+	6.2	+	2.1	+	
Norway	83.2	+	156 ²	+	3.6	+	9.0 ¹	-	
Poland	75.5	-	344 ¹	-	6.8	+	10.3	+	
Portugal	81.5	+	180 ²	+	9.1	+	13.3	+	
Slovak Republic	74.6	-	321 ¹	+	5.8	-	13.2	+	
Slovenia	80.7	+	221 ¹	+	5.8	+	8.3	+	
Spain	83.3	+	163	+	10.3	-	7.7	-	
Sweden	83.1	+	150 ²	+	5.0	-	6.4	-	
Switzerland	83.9	+	133 ¹	+	4.6	+	3.9	-	
Türkiye	78.6 ²	+	233 ²	+	14.5	-	8.4	+	
United Kingdom	80.4 ¹	=	222 ¹	-	6.3	-	7.4 ²	-	
United States	76.4	-	336 ¹	-	10.7	-	3.1	=	

Better than the OECD average.

Close to the OECD average.

Worse than the OECD aver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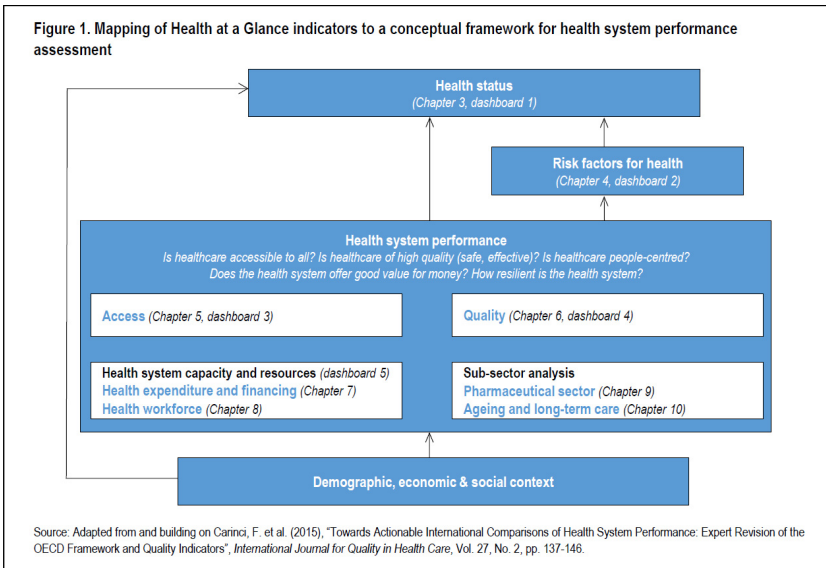
1. 2020 data.
2. 2018/19 data.
3. 2016/17 data.
Note: The symbol + indicates an improvement over time, - a deterioration over time, = no change. Latvia, Lithuania and Mexico are excluded from the standard deviation calculation for avoidable mortality, while Mexico and Türkiye are excluded from diabetes prevalence.

출처: “Health at a Glance 2023”, OECD, 2023, OECD, p.21.

3) 지표 구성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지표는 아래 그림과 같이 보건의료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림 2-6]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지표 체계도



출처: “Health at a Glance 2023”, OECD, 2023, OECD, p.9.

보건의료 시스템의 성과가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보건의료 서비스가 접근(Access) 가능하고, 그 품질(Quality)이 높을 때 국민들의 건강 상태(Health Status)는 더 나아질 것으로 본다. 또한, 접근성과 질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출이 필요하다(Health system capacity and resources). 이러한 지출은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인력과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지원에 활용된다. 다만, 지출은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서 현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동시에 보건의료 시스템 외의 기반 요소 또한 중요하다. 소득, 교육 수준, 물리적 환경 등은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도 건강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Demographic, economic and social context). 그 밖에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선택하는 것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책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게 된다. 이렇듯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지표는 이러한 총체적인 관점에서 관련된 지표에 관해 보고한다.

4) 지표의 활용 및 개편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에서는 가능한 최신 연도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특정 국가에서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어떤 연도의 자료를 활용하였는지 별도 주석으로 설명하고 있다. 개별 차트에는 출처와 함께 StatLink라는 링크가 제공되는데, 이를 통해서 지표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엑셀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인 OECD Health Statistics으로 접속하라고 안내하는데, 현재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OECD Data Explorer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10개의 장으로 구성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의 핵심 지표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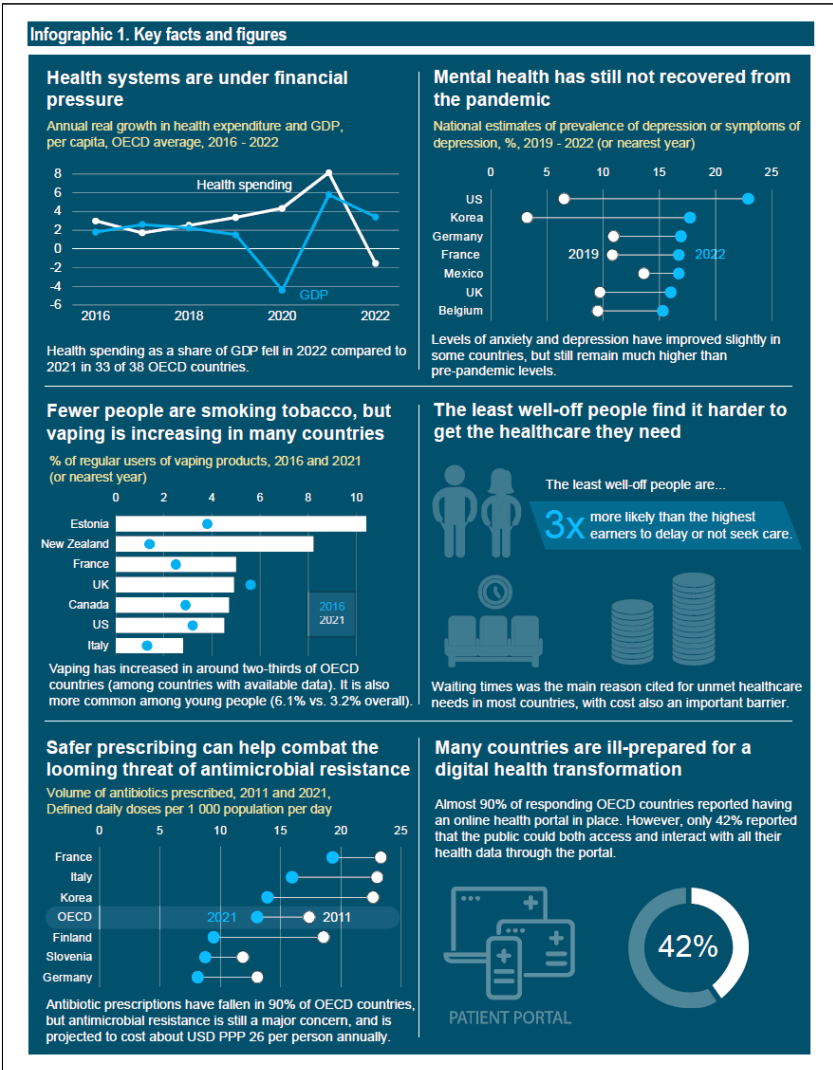
〈표 2-5〉 인구 건강 및 보건 시스템 성과: 핵심 지표

구분	지표
건강 상태 (3장)	• 기대수명 - 출생 시 기대되는 생존 연수 • 피할 수 있는 사망률 - 예방 및 치료 가능한 사망(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 만성질환 - 당뇨병 유병률(% 성인, 연령 표준화) • 자가 평가 건강 상태 -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인구 비율(% 15세 이상 인구)
건강 위험 요인 (4장)	• 흡연 - 매일 흡연하는 사람 비율(% 15세 이상 인구) • 알코올 소비 - 1인당 소비된 알코올 양(L)(15세 이상 인구 기준, 판매 데이터 기반) • 비만 - 체질량지수(BMI)≥30인 인구 비율(% 15세 이상 인구) • 대기 오염 - 대기 중 미세먼지(PM2.5 등)로 인한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의료 접근성 (5장)	• 인구 보장 범위, 자격(eligibility) - 핵심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는 인구 비율(% 인구) • 인구 보장 범위, 만족도 -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가능성에 만족하는 인구 비율(% 인구) • 재정적 보호 - compulsory prepayment schemes로 충당되는 의료비 비율(% 총의료비) • 서비스 보장 범위 - 의료 서비스 이용에 미충족 수요를 경험한 인구 비율(% 인구)
돌봄의 질 (6장)	• 안전한 1차 의료 - 처방된 항생제 수(일일 복용량 기준, 인구 1,000명당) • 효과적인 1차 의료 - 피할 수 있는 병원 입원율(인구 10만 명당, 연령 및 성별 표준화, 피할 수 있는 병원 입원은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울혈성 심부전 및 당뇨병을 포함) • 효과적인 예방 의료 - 최근 2년 내 유방촬영검사를 받은 여성 비율 (% 50~69세 여성) • 효과적인 2차 의료 - 급성 심근경색 및 허혈성 뇌졸중 발생 후 30일 내 사망률(45세 이상, 연령 및 성별 표준화, 입원 100건당)
보건의료 시스템의 역량과 자원 (5장, 7장, 8장)	• 보건의료 지출 - 1인당 총 보건 지출(per capita, USD using purchasing power parities) • 보건의료 지출 - 총 보건의료 지출 비중(% GDP) • 의사 수(인구 1,000명당) • 간호사 수(인구 1,000명당) • 병원 병상 수(인구 1,000명당)

출처: "Health at a Glance 2023", OECD, 2023, OECD, p.18.

제시된 지표는 가능한 경우에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였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데이터를 포함하기도 했다. 주요 지표에 관한 인포그래픽은 다음과 같다.

[그림 2-7] 주요 지표에 관한 인포그래픽



출처: “Health at a Glance 2023”, OECD, 2023, OECD, p.15.

다. 미국의 Healthy People 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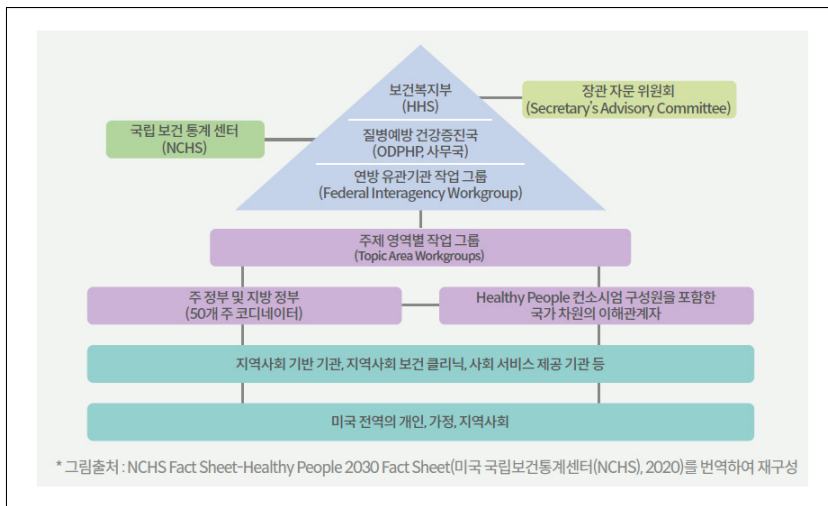
1) 지표 개요

미국의 Healthy People 2030은 10년 단위 국가 건강 목표이다(한국 건강증진개발원, 2024.7.24.). 1981~1990년 처음 시작된 Healthy People 프레임워크는 생애주기별 사망률 감소와 노년기 자립도 증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15개 주제 영역의 200여 개의 목표로 시작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다섯 번째 Healthy People 프레임워크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의 정책 로드맵으로 미국 모든 사람의 건강 증진 및 건강 형평성 달성을 위해 핵심 목표 355개, 개발 목표 114개, 연구 목표 40개를 수립하였다.

Healthy People은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및 산하 기구들과 유관 연방 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공개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4.07.24.). 보건복지부(HHS)의 질병예방 건강증진국(Office of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ODPHP)이 총괄사무국 역할을 맡고, 질병예방 통계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산하의 국립보건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NCHS)가 지표 측정 방법의 연구 및 데이터 통계를 관리하는 역할을 통해서 계획의 중간 및 최종 검토 등 진행상황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그 밖에 장관 자문 위원회(Secretary's Advisory Committee, SAC)에 속한 비연방 전문가들은 Healthy People 프레임워크의 비전-프레임워크-목표 및 대표지표 선정 등 수립에 필요한 정책 자문을 제공하며, 연방 유관기관 작업

그룹(Federal Interagency Workgroup, FIW)에서는 보건복지부(HHS),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ED),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등 부처별, 주제 영역별 작업그룹과 함께 개발을 주도한다.

[그림 2-8] Healthy People 추진체계



출처: “미국 Healthy People”,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4, HP2030 팩트시트 제36호, p.2.

참고로 우리나라에도 국민건강증진법(2023) 제4조에 따라 질병 사전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마련한 국민건강증진종합 계획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부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제5차 계획이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10년 단위 종합계획이 있고, 5년 단위 보완계획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른 성과를 검토하기 위해 성과지표가 생산된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2).

2) 지표의 작성 목적

Healthy People 2030 프레임워크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건강과 웰빙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미국의 모든 사람의 건강증진과 건강 형평성 달성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촉진, 강화, 평가하기 위해서 7가지 기본 원칙과, 총괄 목표 및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4.07.24.).

이에, 건강 격차를 없애고, 건강한 삶을 위한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강 형평성 달성, 건강정보 리터러시(Literacy, 이해력) 제고,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관리를 우선순위로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범국가적인 건강증진 수준을 검토하기 위한 계획은 비단 미국만 수립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발간되고 있다.

3) 지표 구성

미국의 Healthy People 2030은 5개 범주 62개의 주제 영역에 509개 목표로 구성되며, 측정 가능한 핵심 목표는 355개이다. 1차 Healthy People(1981~1990)이 200개 미만의 목표를, 2차 Healthy People(1991~2000)이 300개 미만의 목표를, 3차 Healthy People(2001~2010)이 1,000개 미만의 목표를, 4차 Healthy People(2011~2020)이 1,300개 미만의 목표를 가진 것과 비교할 때, 5차 Healthy People 2030은 목표 수를 눈에 띄게 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표 간의 중복을 피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를 우선시하기 위한 시도였다. Healthy People 2030의 구체적인 주제 영역은 다음과 같다.

〈표 2-6〉 미국의 Healthy People 2030 5개 범주 62개 주제 영역

대분류	주제 영역		
건강 상태	중독	심장질환·뇌졸중	관절염
	감염병	혈액장애	정신건강
	암	구강 상태	만성 신장 질환
	골다공증	만성통증	과체중과 비만
	치매	임신과 출산	당뇨병
	호흡기 질환	식품 매개성 질환	감각 또는 의사소통 장애
	의료 관련 감염	성매개 감염병	
건강행동	아동·청소년 발달	약물 및 알코올 사용	위기 대비
	가족계획	헬스 커뮤니케이션	손상 예방
	영양과 건강한 식생활	신체활동	예방관리
	담배 사용	안전한 식품 취급	예방접종
	수면	폭력 예방	
인구집단	청소년	노인	아동
	부모/보호자	유아	장애인
	성소수자(LGBT)	여성	남성
	근로자		
환경과 체계	지역사회	환경 보건	세계 보건
	헬스 케어	건강보험	헬스 IT
	건강 정책	병원 및 응급서비스	주거
	공중 보건 인프라	학교	교통
	직장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경제적 안정	교육 접근성과 질	의료 접근성과 질
	이웃 및 건축 환경	사회 및 커뮤니티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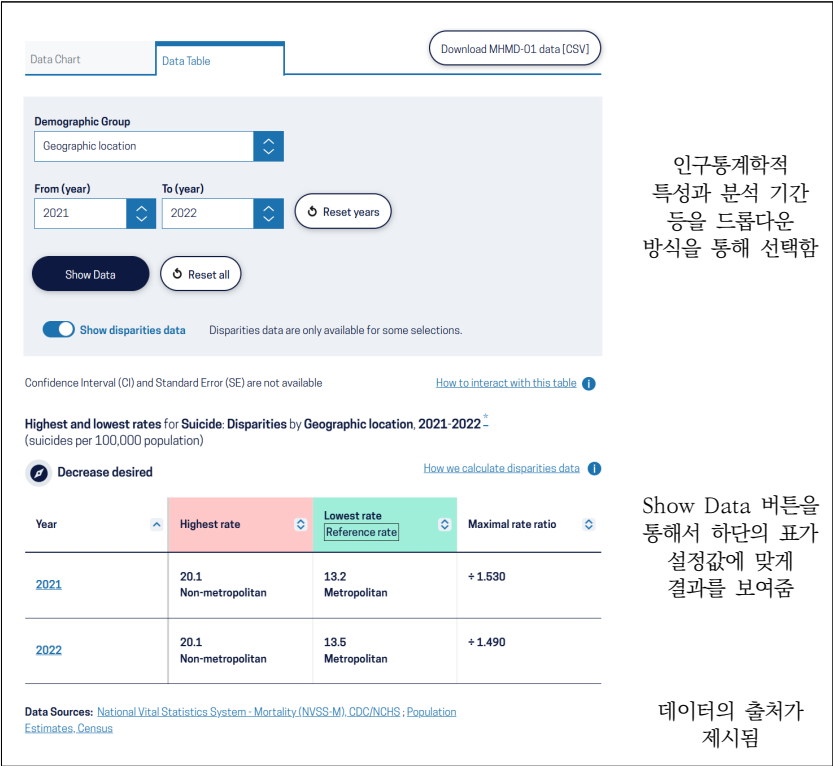
출처: “미국 Healthy People”,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4, HP2030 팩트시트 제36호, p.6.

4) 지표의 활용 및 개편

미국의 Healthy People 2030 핵심 목표 중 23개의 Leading Health Indicators(LHIs)는 데이터 포털(<https://health.gov/healthypeople>)을 통해 제공되며, 지표별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과 메타데이터가 함께 제공된다. 추가적으로 표 또는 그래프 형태로 해당 지표의 변화 추이를 출력하는 기능도 제공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HP2030지표는 보고서 및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https://www.khepi.or.kr/healthplan>). 또한, 자살사망률,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등록률, 암 발생률, 영아사망률 등 일부 지표는 지역별 격차에 관한 상-하위 20%의 정보도 제공된다.

[그림 2-9] 미국의 Healthy People 2030 지표별 상세 페이지: 자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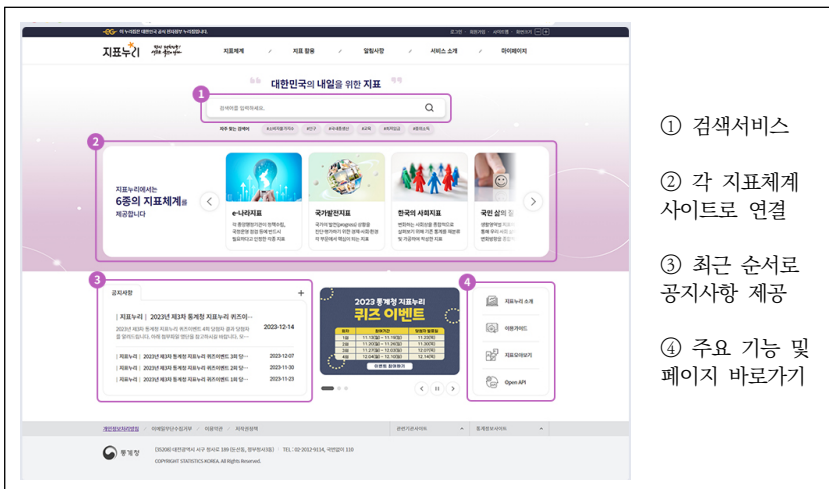


출처: OASH, 2025. 01., Healthy People 2030 웹사이트. <https://health.gov/healthypeople>

2. 우리나라의 지표체계 사례: 통계청의 지표누리 6종 지표

통계청은 지표 통합서비스인 ‘지표누리(index.go.kr)’를 통해서 e-나라 지표(통계청, 2025. 01c), 지속가능발전목표(SDG)(통계청, 2025. 01d), 한국의 사회지표(통계청, 2025. 01d), 국민 삶의 질 지표(통계청, 2025. 01f), 저출생 통계지표(통계청, 2025. 01g), 국가발전지표의 6종 지표를 제공한다. 지표누리란 ‘복잡하고 추상적인 사회 현상을 방향과 목적, 기준에 따라 지수나 척도로 개념화 것’을 뜻하는 지표와 ‘세상 또는 울타리’를 뜻하는 누리의 합성어로, 여러 지표를 주제별로 모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국가의 발전 상황과 국민의 웰빙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경제, 사회, 환경 등 여러 지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표별 그래프와 통계표, 의미분석 메뉴를 제공하여 지표를 직관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림 2-10] 지표누리 메인화면



출처: 통계청, 2025.01b, 지표누리 웹사이트. <https://www.index.go.kr>

지표누리 서비스는 특히 방대한 자료를 큐레이션하여 보기 쉽게 가공하고, 흩어진 지표를 한곳에 모아 접근성을 높이며, 지표의 설명을 명확하게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2024년까지는 저출생 통계지표(안)이 제공되었으나 2025년에는 6개의 지표가 모두 완성되어 제공되고 있다. 지표누리의 메인 화면에서는 6종 지표에 대한 소개와 함께 모든 지표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이용자가 관심 지표를 관리하고, 모아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수록 지표의 원 출처와 연결한 링크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Open API 서비스 기능도 제공한다.

[그림 2-11] 지표누리 메뉴 소개: 통합 지표목록 및 검색

☰ > 지표 활용 > 통합 지표목록

통합 지표목록

전체e-나라지표지속가능발전목표(SDG)한국의 사회지표국민 삶의 질 지표저출생 통계지표국가발전지표

지표명선택어플입력어플검색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치영양/수자지표목록달력다운로드인기순인기순지표명순

번호	지표명	시작시점	종료시점	주기	출처	지표체계	영역
1	가계 지출률	1975	2022/p	년	한국은행, 『국민계정』	한국의 사회지표	소득·소비·자산
2	가계부채비율(가구처분가능소득 대비)	2008	2022	년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국민 삶의 질 지표	소득·소비·자산
3	가계신용 동향	2002	2024/03	분기	『가계신원』 (분기)	e-나라지표	소득·소비·자산
4	가구 순자산	2012	2023	년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의 사회지표	소득·소비·자산
5	가구 유형별 노인가구 구성	1985	2022	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한국의 사회지표	가구·가족
6	가구 인터넷 보급률 및 컴퓨터 보유율	2000	2023	년	『연세중요이동실태조사』 (국가승인 지정통계 제 120005호)	e-나라지표	여가
7	가구 총지출 및 소득 대비 의료비 과부담 연구 비율	2003	2018	년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SDG	건강과 웰빙 증진

출처: 통계청, 2025.01b, 지표누리 웹사이트. <https://www.index.go.kr>

본 장에서는 한국의 사회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저출생 통계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한국의 사회지표

1) 지표 개요

한국의 사회지표(통계청, 2025.01e)는 1975년 10월 사회인구통계 체계화에 대한 UN의 권고에 따라 UNFPA의 자금을 지원받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시행한 연구조사 사업(인구통계 개선: 개발계획 작성을 위한 사회경제지표)의 결과로 만든 350개 지표를 출발점으로, 매년 발간되고 있다(통계청, 2024a).

1979년 이후 매년 발간되어 변화하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적 상태를 종합적이고 집약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민의 삶과 관련된 전반적인 경제·사회 변화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과 통계 작성 기관에서 작성한 기존 통계자료를 재분류하거나 가공하여 지표를 작성하며, 주관적 의식과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사회조사 및 사회통합실태조사 등의 결과도 보여준다(통계청, 2024a).

사회지표의 ‘사회’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아 경제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구, 가족, 노동, 보건, 주거 및 교통, 환경, 안전 등 여러 영역의 지표를 포괄하고 있다. 2023 한국의 사회지표는 2019년의 제5차 개편을 반영하여 12개 영역 총 270개 통계표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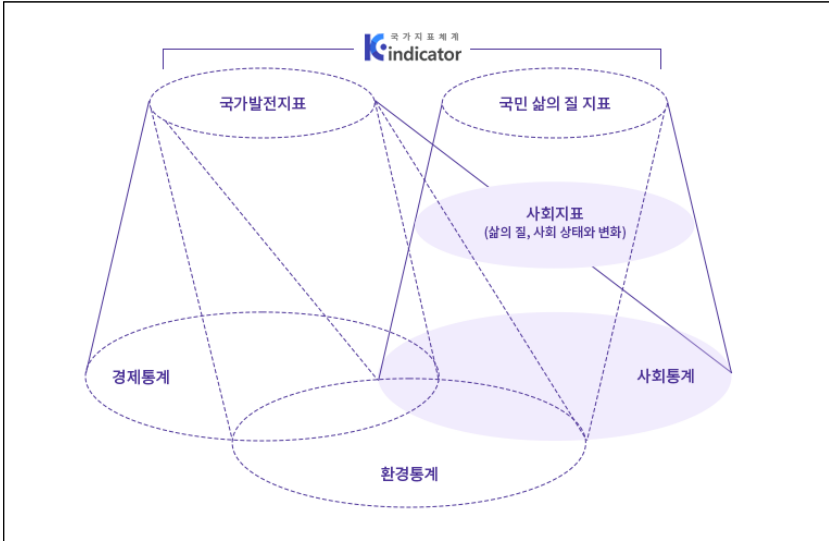
2) 지표의 작성 목적

한국의 사회지표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국민 생활의 전반적인 복지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양적, 질적 측면의 총체적인 사회적 상황을 집약한 척도이다(통계청, 2011). 한국의 사회지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첫째, 현재

사회의 상태를 측정 가능하게 하여 사회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둘째, 사회의 변동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사회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게 하며, 셋째, 규범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사회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넷째, 정책의 성과평가를 통해 효과성을 분석하여 정책의 문제점과 타당성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 및 대안 마련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지표는 종합적이고 균형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규범 지향적인 성격의 통계라 할 수 있다 (통계청, 2024a).

2012년 이전, 한국의 사회지표가 유일한 사회지표였던 것과 달리, 2011년부터 시작된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생산에 대한 논의와 2012년부터 시작된 국가주요지표(현. 국가발전지표)의 개발에 대한 논의가 결실을 보아 2014년에 다양한 지표가 등장함에 따라 지표 간 위상과 관계 재정립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다음 그림과 같이 현재는 사회통계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부분에 한정해 지표를 생산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지표는 사회 상태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사회변화 예측 및 사회정책의 성과 측정을 위한 투입, 과정, 성과지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림 2-12] 한국의 사회지표와 관련 지표체계 간의 작성 범위 비교



출처: 통계청, 2025.01e, 한국의 사회지표 웹사이트.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SocialIndicator.do?cdNo=000&lrgeClasCd=017>

3) 지표 구성

한국의 사회지표는 2014년부터 통계개발원이 주도한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개발에서 제시한 사회통계 영역별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과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한국삶의질학회, 2019).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표 2-7〉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영역

부문	거시 수준	관심 영역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개인	-	건강, 교육·훈련, 노동	관심영역별 태도 및 가치	주관적 웰빙
사회	문화와 제도	범죄와 사법 정의, 사회통합, 가족·가구, 여가인구		
경제	경제구조	소득·소비·자산, 주거		
환경	자연자원	생활환경		

출처: 통계청, 2025.01e, 한국의 사회지표 웹사이트.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SocialIndicator.do?cdNo=000&lrgeClasCd=017>

이러한 구성에 따라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23 한국의 사회지표는 2019년에 개편된 제5차 한국의 사회지표체계의 결과를 반영해 총 12개 부문 50개 하위 영역의 270개 지표로 발표되었다. 각 사회지표 영역별 내용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2-8〉 한국의 사회지표 영역별 내용 구성

영역	내용
인구	사회의 기본적 요소로서 인구의 규모, 구성 및 변동 정도
가구·가족	가족을 통해 서로 부조하고 양육하는 정도
건강	질병이나 장애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는 정도
교육·훈련	교육과 훈련을 통한 개인의 잠재 역량의 실현 정도
노동	경제적 보상이 충분한지, 그리고 비경제적 요소로서 일을 통해 자신의 삶의 실현 정도
소득·소비·자산	충분한 소득을 얻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을 확보하고 윤택한 생활을 위해 소비 정도
여가	쉽고 즐겁고 그리고 어울림을 통한 국민들의 삶의 활력 유지 정도, 공동체적 유대감 증진 정도
주거	안전한 휴식을 위한 사적 공간으로 주거의 확보 정도
생활환경	쾌적한 환경을 누리며, 오염되지 않은 물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
범죄·안전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안전 보장 정도
사회통합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들의 공동체 문제 참여 정도, 정치 과정을 통한 자신들의 의사 관철 정도
주관적 웰빙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긍정적 정서 경험을 많이, 부정적 정서 경험을 적게 하는 정도

출처: “지표체계 통합 관리 및 활용도 제고 방안”, 한국삶의질학회, 2019, p.32.

4) 지표의 활용

한국의 사회지표²⁾ 보고서에는 OECD의 ‘한눈에 보는 사회’에서 주요 분석 결과와 지표의 정의 및 통계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과 달리 지표를 가공 및 분석한 주요 결과가 서두에 간략하게 제시되고, 이후에 별도로 12개의 장에 걸쳐서 영역별 사회지표가 제시된다. 이후, 보고서의 후반부에 사회지표의 개요와 지표체계 및 용어 해설에 대한 부록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는 한국의 사회지표의 자료를 온라인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온라인 간행물(통계청, 2025. 01a),

2) 2023 한국의 사회지표 세부 구성 및 지표 내용은 부록을 참고

지표누리(<https://www.index.go.kr>)에서 서비스(통계청, 2025. 01b)가 제공된다. 지표누리를 통해서 제공되는 한국의 사회지표는 항목별 지표를 간단한 그래프와 통계표, 지표 정의를 포함하여 하나의 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5) 지표의 개편

한국의 사회지표는 지금까지 총 다섯 번에 걸친 개편 과정을 거쳐왔다. UN의 권고를 받아들여 1979년 최초의 사회지표가 발간되었고, 이후 1987년 1차 개편과 1995년 2차 개편, 2004년 3차 개편, 2012년 4차 개편, 2019년에 5차 개편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한국삶의질학회, 2019). 1979년 개발 당시 한국의 사회지표는 350개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것을 토대로 1979년에 128개 지표를 작성하여 최초로 공표하였고, 이후로 점진적으로 지표의 수가 증가하여 2010년 한국의 사회지표는 13개의 주요 항목과 국제비교를 포함해 467개의 지표가 생산되었다(통계청, 2011). 13개의 항목은 ① 인구, ② 가구와 가족, ③ 소득과 소비, ④ 노동, ⑤ 교육, ⑥ 보건, ⑦ 주거와 교통, ⑧ 정보와 통신, ⑨ 환경, ⑩ 복지, ⑪ 문화와 여가, ⑫ 안전, ⑬ 정부와 사회참여이다.

1995년과 2004년의 개편이 새롭게 생산되기 시작한 통계를 추가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2012년의 개편부터는 지표체계 전반을 개선하여 한정된 수의 지표 수 안에서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 지표를 추려내는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에,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매 8~9년마다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지표체계의 개편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2012년 개편에서는 삶의 질, 사회의 질,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논리적 체계에 부합하는 지표체계를 마련해 지표 수가 284개까지 감소하였고, 2019년 개편에서는 2012년 개편과 동일선상에서 사회지표에 부합하는

항목들을 추리면서 동시에 다른 지표와의 관계를 고려한 개편을 추진하여 269개 지표로 그 수가 감소하였다.

〈표 2-9〉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의 변화 추이

1978년 체계개발	1987년 1차 개편	1995년 2차 개편	2004년 3차 개편	2012년 4차 개편	2019년 5차 개편
인구 26	인구 46	인구 44	인구 48	인구 12	인구 13
		가족 43	가구와 가족 50	가구와 가족 26	가구· 가족 13
소득· 소비 11	소득· 소비 30	소득과 소비 41	소득과 소비 51	소득과 소비 22	소득·소 비·자산 26
고용· 인력 67	고용· 노사 103	노동 62	노동 35	노동 21	노동 29
교육 55	교육 64	교육 43	교육 44	교육 27	교육· 훈련 25
보건 59	보건 48	보건 50	보건 67	건강 17	건강 25
주택· 환경 33	주택· 환경 54	주거와 교통 51	주거와 교통 57	주거와 교통 34	주거 22
		정보와 통신 23	정보와 통신 28		
		환경 31	환경 47	환경 31	생활 환경 26
		복지 43	복지 70		
사회 (문화· 여가) (18)	문화· 여가 31	문화와 여가 34	문화와 여가 44	문화와 여가 24	여가 21
공안 34	공안 51	안전 55	안전 66	안전 32	범죄· 안전 24
사회 65	사회 41	정치와 사회 참여 28	정부와 사회 참여 33	사회 통합 35	사회 통합 26
					주관적 웰빙 5
합계 350	합계 468	합계 553	합계 640	합계 281	합계 253

출처: “지표체계 통합 관리 및 활용도 제고 방안”, 한국삶의질학회, 2019, p.8. 재구성.

2019년 5차 개편에는,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외에서는 복지라는 개념이 복지 수준의 변화와 사회 내 불평등을 분석하는 ‘삶의 질’, ‘웰빙’의 관점에서 논의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대상에 대한 ‘복지 급여 및 서비스’ 등 한정된 범위에서 논의된 측면이 있었다(김영미 외, 2010)는 지적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다문화, 일·가정 균형 등 최근의 사회적 현상들도 지표에 반영하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사회지표에는 주관적 웰빙을 포함한 12개 영역의 49개 하위 영역, 253개 지표를 포함한 체계가 마련되었다. 또한 기존에 인쇄물의 형태로 작성되던 지표와 통계자료집을 디지털 웹 기반으로 제공하여 지표의 관리 및 지표 서비스에 있어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표 2-10〉 제5차 한국의 사회지표 주요 개편사항

영역	주요 개편 사항	하위 영역 증감	지표 증감
인구	저출산 및 다문화 반영한 신규 지표 포함	-	+1
가구·가족	지표 분리 및 통합, 일가정 양립을 반영한 신규 지표 포함	-	-13
건강	하위 영역 명칭 변경, 지표 삭제 및 추가	-	+8
교육·훈련	훈련 포함(영역 명칭 및 하위 영역, 지표 변경), 지표 삭제 및 추가	-	+2
노동	하위 영역 재구성, 지표 삭제 및 추가	+4	+5
소득·소비·자산	자산 포함(영역 명칭 및 하위 영역), 지표 분리/통합, 지표 삭제 및 추가	+1	+1
여가	영역 명칭 변경, 하위 영역 재구성, 지표 삭제 및 추가	-1	-3
주거	영역 명칭 변경, 하위 영역 재구성, 교통 관련 거시지표 및 경제지표 삭제, 주택가격 관련 지표 추가	-5	-12
생활환경	자연환경 제외(영역 명칭 및 하위 영역), 거시지표 삭제 및 신규 지표 추가	-2	-5
범죄·안전	범죄 강조(영역 명칭 및 하위 영역 변경), 지표 삭제 및 추가	-1	-8
사회통합	하위 영역 재구성, 주관적 웰빙 및 사회복지 관련 지표 영역 이동, 지표 삭제 및 추가	-4	-9
주관적 웰빙	신규 영역 신설, 기존 지표 영역 이동, 신규 지표 추가	+3	+5

출처: “지표체계 통합 관리 및 활용도 제고 방안”, 한국삶의질학회, 2019.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국민 삶의 질 지표

1) 지표 개요

국민 삶의 질 지표(통계청, 2025.01f)는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삶의 질 제고로 정책적 대응과 사회적 관심을 전환하기 위해 작성된 지표이다(통계청, 2024b). 삶의 질이란 국민이 느끼고 있는 웰빙, 행복, 만족감 등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국제적으로는 1960~70년대부터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삶의 질의 중요성이 주목 받았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한국사회학회와 공동연구를 통해 삶의 질 기본 틀 및 지표체계로 9개 영역 84개 지표를 작성한 것이 출발점이 되었다.

현재는 가족 및 공동체, 건강, 교육, 고용 및 임금, 소득과 소비 및 자산, 여가, 주거, 환경, 안전, 시민참여, 웰빙 영역에서 71개 지표가 생산되고 있으며, 지표별로 전년 대비 ‘개선’과 ‘악화’로 변화 추세를 제시하고 있다. 2011년에 삶의 질 분석 틀 및 지표 개발을 시작했으며, 2014년에는 지표 서비스를 실시하고, 2022년에는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를 작성하였다. 한편, 작성된 지표의 활용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을 2015년부터 매해 개최하고 있다.

2) 지표의 작성 목적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세부 생활 영역별 주요 지표를 측정하고,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통계청, 2025.01f). 이에, 지표를 선정함에 있어서 각각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포함하며, 적절성, 자료의 질, 중립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다.

〈표 2-11〉 국민 삶의 질 지표 선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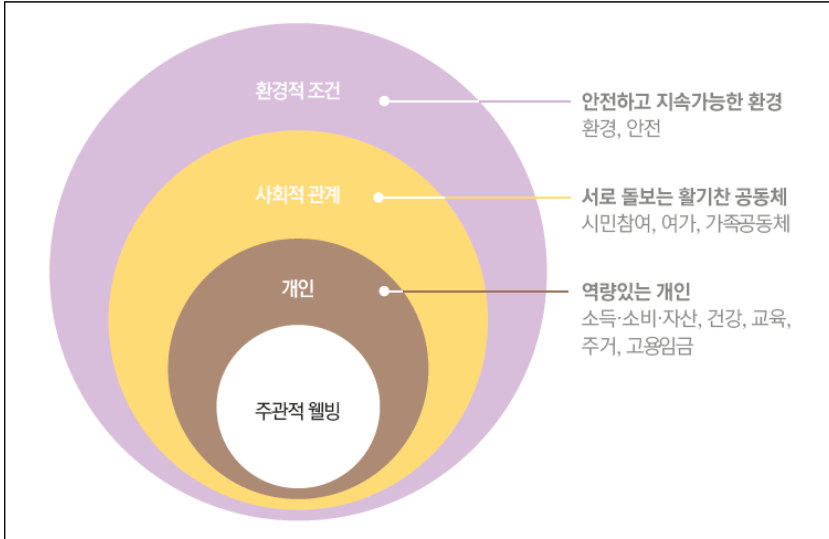
기준	세부 기준	내용
적절성	액면 타당도	본래 의도한 바대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
	산출에 초점	투입·과정보다는 산출에 초점이 맞춰진 지표
	이해 용이성	모호함 없이 쉽게 이해 가능한 지표
	정책 반응성	정책 개입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는 지표
	국내 상황 적합성	우리 사회의 맥락에 부합하는 지표
자료의 질	공식 통계	삶의 질 측정에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공식통계
	포괄 범위	가능한 전체 인구를 포괄하는 지표
	시계열 확보	동일 척도로 반복적인 측정자료가 누적되는 지표
중립성		정치적 편견이 반영되지 않은 지표

출처: “국민 삶의 질 2023”, 통계청, 2024b.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지표 구성

국민 삶의 질 지표는 11개의 영역과 71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된다. 11개 영역은 가족·공동체, 건강, 교육, 고용·임금, 소득·소비·자산, 여가, 주거, 환경, 안전, 시민참여, 주관적 웰빙으로, 각 영역에서 관련성, 데이터 품질,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한 지표가 각각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아울러 선정된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11개 영역은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 형태로 구성된다. 동심원에는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보여주는 주관적 웰빙을 중심으로 ‘개인’ < ‘사회적 관계’ < ‘환경적 조건’이 위치한다. 각 영역별로 총 지표의 수는 71개이다.

[그림 2-13] 동심원으로 표현된 삶의 질 프레임워크



출처: “국민 삶의 질 2023”, 통계청, 2024b, 통계청, p.11.

〈표 2-12〉 국민 삶의 질 지표체계

영역	객관적 지표(42)	주관적 지표(29)
가족·공동체	(-)독거노인 비율 (-)사회적 고립도* (+)사회단체 참여율	(+)가족관계 만족도 (+)지역사회 소속감
건강	(+)기대수명* (+)건강수명 (+)신체활동 실천율 (-)비만율 (-)자살률*	(+)주관적 건강 상태 (-)스트레스 인지율
교육	(+)유아교육 취원율 (+)고등교육 이수율 (+)대학졸업자 취업률	(+)학교교육의 효과 (+)학교생활 만족도* (-)교육비 부담도
고용·임금	(+)고용률* (-)실업률* (+)월평균 임금 (-)근로시간 (-)저임금근로자 비율	(+)일자리 만족도

74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고도화 및 활용방안 연구

영역	객관적 지표(42)	주관적 지표(29)
소득·소비·자산	(+)1인당 국민총소득* (+)가구중위소득 (+)가구순자산 (-)가계부채 비율 (-)상대적 빈곤율*	(+)소득 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여가	(+)여가시간* (+)1인당 여행일수 (+)문화여가 지출률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여가생활 만족도* (+)여가시간 충분도
주거	(+)1인당 주거 면적 (-)통근시간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 비율* (-)주택임대료 비율* (+)자가점유가구 비율	(+)주거환경 만족도
환경	(-)미세먼지 농도(PM2.5)*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기후변화 불안도 (+)대기질 만족도 (+)수질 만족도* (+)토양환경 만족도 (+)소음 만족도 (+)녹지환경 만족도
안전	(-)가해에 의한 사망률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범죄피해율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산재사망률* (-)화재사망자 수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야간보행 안전도*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시민참여	(+)선거투표율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정치적 역량감 (+)시민의식 (+)부패인식지수* (+)대인 신뢰도 (+)기관 신뢰도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긍정 정서 (-)부정 정서

주: *표시된 지표는 영역별 핵심 지표임
부호는 삶의 질과 상관관계의 방향을 의미함
출처: “국민 삶의 질 2023”, 통계청, 2024b, 통계청, pp.14-15.

4) 지표의 활용 및 개편

2011년 시작된 통계청의 한국의 삶의 질 지표(KQoL) 개발은 한국사회 학회와 공동연구를 통해 9개 영역의 84개 지표로 마련되었다. 이후 2012년에는 지표 생산의 보완을 위해 주관적 웰빙 측정방안 연구가 진행되었고, 2013년에는 시민참여 및 주관적 웰빙 지표가 실제로 신규 지표로 포함되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23년 국민 삶의 질 지표에는 11개의 영역과 71개의 세부 지표가 포함되었다.

각 연도 말 기준으로 발간되는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는 71개 지표의 전반적인 개선도와 함께 항목별로 상세 리포트 및 지표의 정의와 측정 방법에 관한 지표 정의서와 지표의 자료 출처가 제공된다. 국민 삶의 질 지표 정의서의 예시는 다음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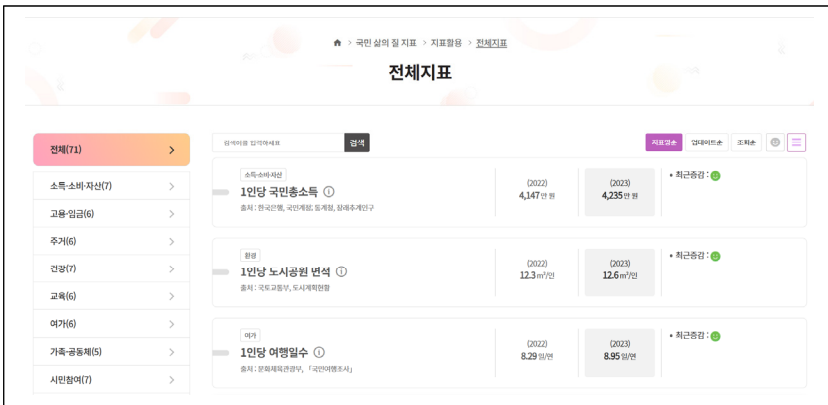
〈표 2-13〉 국민 삶의 질 지표 정의서 예시: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적 고립도

구분	항목	내용
1. 가족·공동체 - 가족관계 만족도	정의	자신의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의의	원만한 가족관계는 삶의 질의 중요한 구성요인의 하나로 가족 관계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주관적 안녕감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 작용하며, 개인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실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속감과 유대, 친밀감의 원천으로 가족을 생각하고 행복한 가족생활을 소망함. 가족관계 만족도는 가족의 관계적 측면에 대한 높아진 기대가 얼마나 충족되었는가를 보여주면서 한국인의 가족 생활의 질과, 더 나아가 구성원의 삶의 질의 중요한 단면의 현 주소를 보여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산출 방법	13세 이상 조사 대상자들의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5점 척도 응답 중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
	작성 주기	2년
1. 가족·공동체 - 사회적 고립도	조사표 항목	7. 전반적인 가족관계: 귀하는 가족 관계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각 항목의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여 주십시오.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⑥ 해당 없다
	정의	신체적, 정신적 위기 상황에서 하나라도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
	의의	사회적 관계와 지지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얼마나 촘촘하며 효율적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사회적 관계와 지지의 유무는 사회적 유대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사회적 관계망 중에서도 특히 인적, 정신적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망이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사회의 질을 높여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산출 방법	19세 이상 조사 대상자들 중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둘 중 하나라도 도움 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
	작성 주기	2년
	조사표 항목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함께 살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1.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① 있다 () 명 ② 없다 3.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① 있다 () 명 ② 없다

출처: “국민 삶의 질 2023”, 통계청, 2024b.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국민의 삶의 질 지표는 다양한 출처에서 작성되는 통계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지표별 작성 주기와 공표 시점, 업데이트 시기가 서로 달라 시의성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업데이트된다. 따라서 각 연도 말 기준으로 보고서가 발간되지만, 웹사이트를 통해서 분기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4] 국민 삶의 질 지표 웹사이트상의 2024년 4분기 업데이트 현황



출처: 통계청, 2025.01f, 지표누리 웹사이트 국민 삶의 질 전체 지표.

또한, 국민의 삶의 질 지표는 작성 주기가 1~3년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지표별로 생산주기와 지표의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최근 측정 값을 전기 대비 측정값과 비교해 삶의 질에 기여하는 방향에 따라 ‘개선’, ‘악화’, ‘동일’로 최근 추세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고용률 지표의 경우 측정값이 증가하면 삶의 질이 개선되므로 ‘개선’으로 판정되고, 실업률 지표의 경우 측정값이 감소해야 삶의 질이 개선되므로 측정값이 증가하면 ‘악화’로 표시된다.

[그림 2-15]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최근 추세 판정 기준

추세표시		
	개선	전기대비* 최근 측정값이 삶의 질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화 $X_t - X_{t-1} > 0$
	동일	전기대비* 최근 측정값 동일 $X_t - X_{t-1} = 0$
	악화	전기대비* 최근 측정값이 삶의 질 개선과 반대 방향으로 변화 $X_t - X_{t-1} < 0$

출처: “국민 삶의 질 2023”, 통계청, 2024b, 통계청, p.12.

한편, 국민 삶의 질 지표체계는 사회변화와 통계 자료의 생산 현황에 따라 지표의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므로 주기적으로 지표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거쳐 변경 절차를 수행한다. 지표의 개발과 발전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내외부 전문가가 타당성 검토를 하여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2014년에는 지표검토위원회가 구성되어 매년 지표체계와 프레임워크의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지표체계 타당성 검토가 행해진다. 지표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 당연직), 12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며, 11개 영역별로 5명씩 자문위원을 위촉해 필요시 개선방안에 관한 자문을 실시한다.

지표의 구성뿐만 아니라 제공 방식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개편이 이루어져 왔는데, 2014년부터는 홈페이지 구축 및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2017년부터는 국민 삶의 질 보고서 발간, 2022년부터는 아동 및 청소년 삶의 질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렇게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장점과 취약점을 확인하고,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영역별 해결 과제 및 개선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2-16] 국민 삶의 질 지표 보고서상에 나온 지표의 최근 추세



출처: “국민 삶의 질 2023”, 통계청, 2024b, 통계청, p.17.

다. 저출생 통계지표

1) 지표 개요

저출생 통계지표(통계청, 2025.01g)는 저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생산되었다. 2023년 12월 26일 23개 주요 지표안을 우선 제공하였고, 2024년 인구·사회·경제 등 각 분야의 학계 및 전문가와 저고위 등 정부기관으로 구성(35명)된 지표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 만에 3대 영역 9개 부문, 61개 지표가 발표되었다. 대표성, 타당성, 포괄성을 고려하여 선정된 최종 지표에는 기존 통계를 활용한 53개 지표와 신규 개발된 5개 지표(코호트 출산율, 코호트 무자녀 비율, 청년층 소득이동성, 저출생 정책 제도 수요, 늘봄학교 이용률), 향후 개발이 예정된 3개 지표(유배우 출산율,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육아휴직 소득대체율)가 포함된다.

[그림 2-17] 지표누리 저출생 통계 자료 웹페이지에서 영역·부문별 지표 조회



출처: "저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저출생 통계지표」 최종 공개", 통계청, 2024, 통계청 보도자료, p.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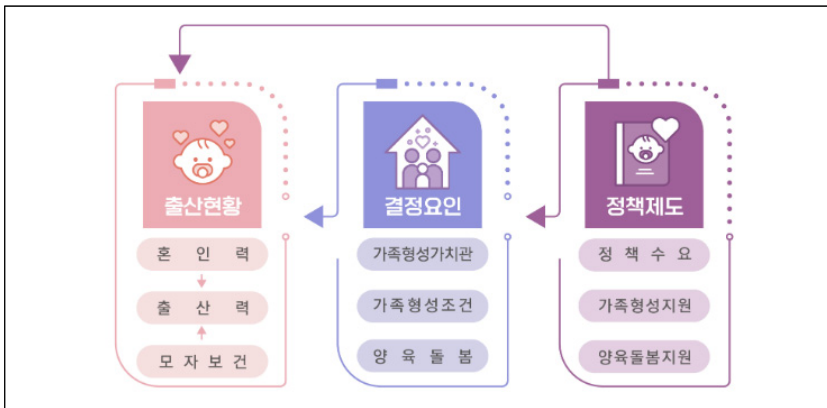
2) 지표의 작성 목적

저출생 통계지표는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로 급격한 저출생 및 고령화가 심각한 경제·사회적 충격으로 다가올 것에 대비하여 저출생 현황을 파악하고, 인구 구조의 변화를 이해하고, 증거 기반 정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저출생 통계지표를 생산하게 되었다(통계청, 2015. 01h).

3) 지표 구성

저출생 통계지표는 아래의 지표체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크게 3개의 축으로 구성된다(통계청, 2024. 12. 24. 보도자료). 출산 현황을 중심으로 결정요인과 정책 제도를 구조화하여 출산과 인과관계를 고려한 다각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지표를 구성하였다.

[그림 2-18] 저출생 통계지표의 지표체계



출처: 통계청, 2015. 01g, 저출생 통계지표 웹사이트 지표 소개.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tro/LowbirthIntro.do?cdNo=110&lrgcClassCd=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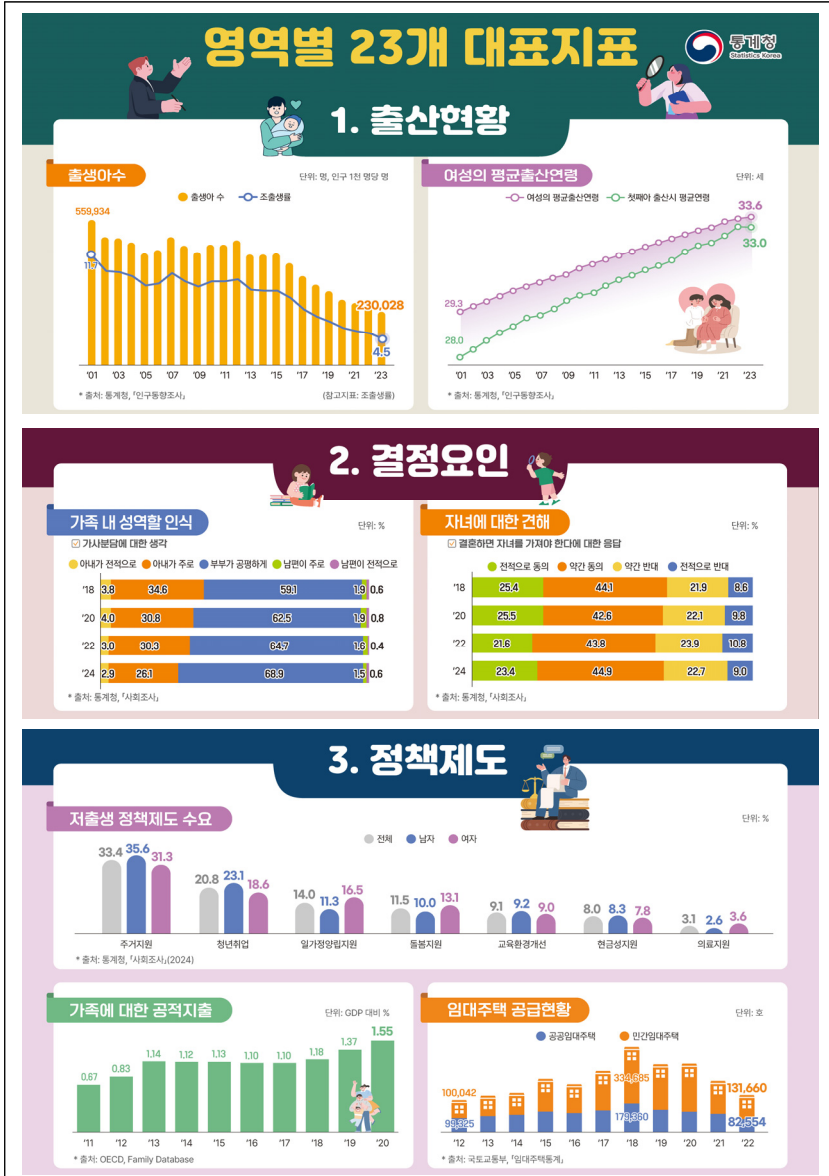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출산 현황은 출산력, 혼인력, 모자보건 관련 18개 지표로 출생아 수, 모의 출산연령, 합계출산율, 혼인 건수 등의 지표를 보여준다. 다음으로 출산 결정요인은 가족 형성 가치관 및 조건, 양육돌봄 관련 24개 지표로 구성하였으며, 가족 내 성 역할 인식과 자녀 출산에 대한 견해를 비롯해 청년층의 고용과 소득 및 주거 현황 및 향후 개발 예정인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등을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 제도 영역에는 가족 형성 및 양육돌봄 관련 정책 제도에 관한 19개 지표가 포함되었으며, 저출생 정책 제도에 대한 수요, 난임시술 지원, 자녀돌봄 수당 및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된 각종 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표를 보여준다.

4) 지표의 활용

저출생 통계지표³⁾는 2024년 12월 24일 이후 통계청 지표누리(index.go.kr)을 통하여 61개 지표의 목록과 세부 지표의 정의 등에 대한 사항이 공개되고 있다. 그 밖에 세부 지표의 통계치를 가공하여 인포그래픽 등을 제공하고 있다.

3) 세부지표의 목록 및 정의는 부록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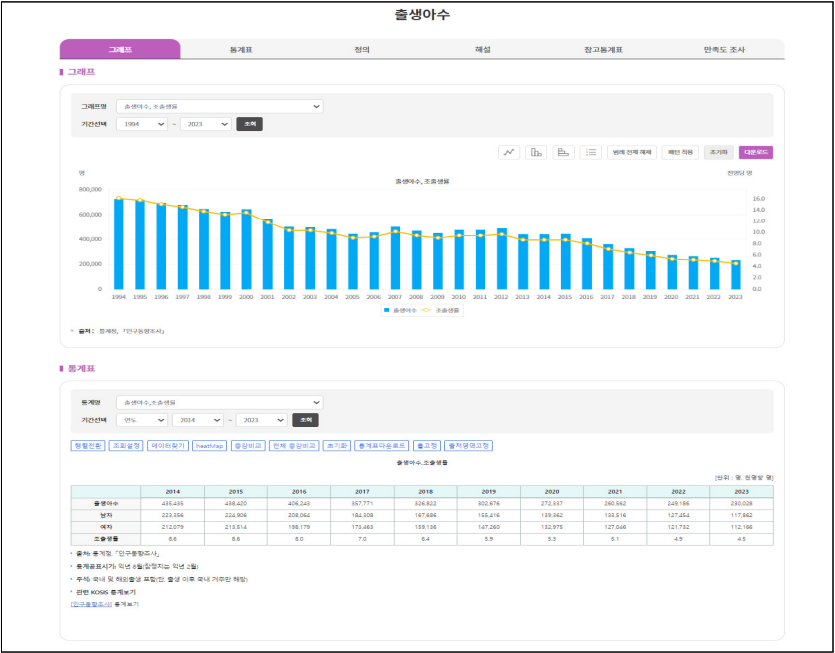
[그림 2-19] 저출생 통계자료의 활용: 지표를 활용한 인포그래픽



출처: “저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저출생 통계지표」 최종 공개”, 통계청, 2024, 통계청 보도자료, pp.8-10.

84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고도화 및 활용방안 연구

[그림 2-20] 저출생 통계자료의 활용: 지표 상세페이지



출처: “저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저출생 통계지표」 최종 공개”, 통계청, 2024, 통계청 보도자료, p.12.

3. 우리나라의 지표체계 사례: 기타

가. 건강도시 지표

1) 지표의 개요

2021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2023) 제6조의 5의 신설에 따라 추진된 건강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하는 과정에 있는

도시이다. 건강도시 지표는 모든 정책에서의 건강(Health in All Policies, HiAP)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건강도시 네트워크 특성을 유지하면서 WHO 건강도시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지자체 건강도시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작성한 지표이다.

건강도시 지표 개발을 위해서 2022년 5월부터 개발협의체 회의와 건강도시협의회 학술위원 등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를 거쳤으며, HiAP 기반 건강도시 지표(안) 최종 검토 후에는 건강도시 지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회원 도시를 대상으로 지표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절차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4).

2) 지표의 작성 목적

보건복지부는 건강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기반 조성 현황과 관계 기관의 협력 정도 및 건강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 수준을 파악하고자 건강도시 지표를 생산하게 되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 5, 2024). 기존에 국내 건강도시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협의체 방식으로 운영되어 지자체 간 추진 내용과 성과에서 편차가 존재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본적인 지침 마련의 필요성에 의해 건강도시 지표가 개발되었다.

건강도시 지표는 1) 건강도시 추진 전반을 모니터링하는 기준으로 건강도시가 갖추어야 할 개념 및 성과를 구체화하고, 2) 지방정부의 실무자들이 건강도시의 정의, 목적, 유형 등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며, 3) 모든 정책에서 건강이 실현되기 위해 지방정부의 보건부서를 포함한 모든 부서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이해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4) 건강도시 정책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부터 자료수집, 사업수행, 모니터링 등 일련의 사업 프로세스를 안내하고, 5) 중장기 비전 설정 및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침으로서 건강도시 지표를 이해하고, 6) 건강도시를 수행하고 있는 혁신적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4).

3) 지표 구성

건강도시 지표(안)에는 건강도시 추진 전반의 논리구조(구조-과정-결과)를 포괄하는 건강도시의 조건과 성과를 담은 지표가 제시되었다. 구조 차원에서 예산, 인력 및 네트워크 등 운영체제, 과정 차원에서 사업기획 수행과 모니터링 평가, 건강도시 프로그램 보유 여부, 결과 차원에서 건강행태, 건강결과의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 및 보건의료자원 및 서비스 등의 수준이 포함되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4).

지표의 선정에는 지표 설정 목적을 고려하였고, 작성의 기술적 측면과 구득 가능성 등을 감안하였다. 1차 선정에서는 10개의 구조 지표와 9개의 과정 지표를 건강도시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제시되었으며, 결과 지표에는 물리적·환경적 상태 등에 대한 결과 지표는 제외하고 건강 결정요인에 따른 건강결과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후 2차 수정 단계에서는 사용자 관점에서 지표의 이해도, 활용도 향상을 위해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조정하였으며, 2개 분야, 4개 영역, 19개 지표를 5개 영역 15개 지표로 통합 및 조정하였다. 5개 영역은 인프라 구축, 부문 간 협력, 지역사회 참여, 사업기획 수행, 도시건강 정보체계이다.

〈표 2-14〉 건강도시 지표 항목 구성

영역	지표	세부 지표	체크리스트
1. 인프라 구축	건강도시 추진 기반, 예산, 조직과 인력, 중장기 계획 수립 등 4개	8개	22개
2. 부문 간 협력	HiAP 실현, 공공 및 민간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활동 등 3개	8개	17개
3. 지역사회 참여	지역주민, 전문가 참여 및 정보제공 등 2개	5개	14개
4. 사업기획 수행	사업계획 수립, 환경 조성 사업 수행, 모니터링 및 평가 등 3개	8개	24개
5. 도시건강 정보체계	도시건강 프로파일 작성, 공개, 업데이트 및 활용 등 3개	5개	19개
5개	15개	34개	96개

출처: “건강도시 지표 활용 가이드라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p.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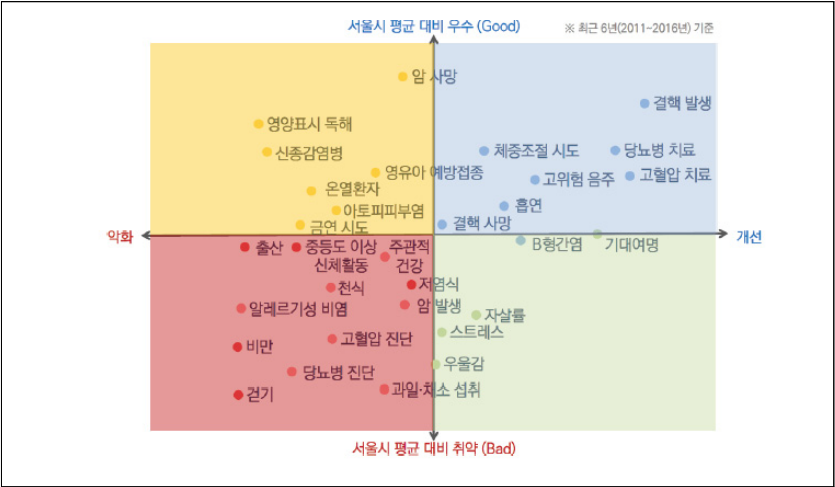
4) 지표의 활용

건강도시 지표는 건강수준의 목표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과정-결과의 체계 속에서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되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를 수행한다. 또한, 지표-세부 지표-체크리스트 외에 가이드라인을 통한 확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제공하여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였다. 건강도시 지표 활용 가이드라인(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4)에 따르면 건강도시 지표는 1) 건강도시 관련 개념 정립에 기반하여 2) 건강도시 지표 모형을 설정하고, 3) 지표(안) 도출 검토 및 선정 단계와 4) 지표 도출 및 활용 방안 구상의 단계를 거쳐서 개발되었다. 현재 제시된 건강도시 지표는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총 5개 영역, 15개 지표, 34개 세부 지표로 구성된다. 가이드라인에는 세부 지표에 관한 96개의 체크리스트도 포함되어 지표별 원칙과 체크리스트별 확인 방법 및 자료원도 제시되어 있다.

건강도시 지표의 도시건강 정보체계 영역에서는 도시건강 프로파일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도시건강 프로파일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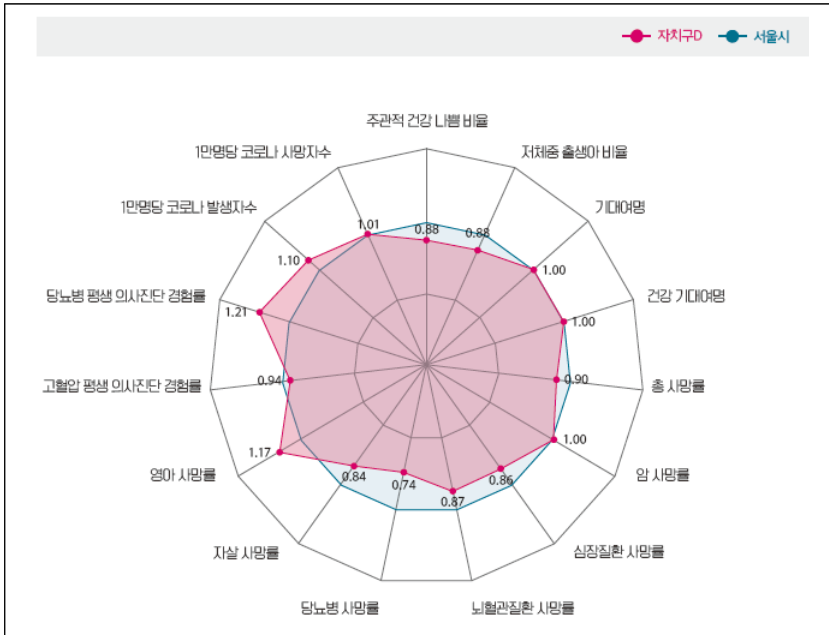
도시의 건강 상태 및 건강 결정요인에 대한 주요 정보를 모아서 해석하고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도시건강 프로파일에는 다음과 같이 건강 상태, 생활환경 및 건강 형평성 등에 관한 세부 지표가 포함된다.

[그림 2-21] 서울시 자치구 C의 건강 프로파일 주요 결과 예시 1: 건강 상태



출처: “건강도시 지표 활용 가이드라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p.71.

[그림 2-22]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건강 프로파일 주요 결과 예시 2



출처: “2020 서울시 지역사회 건강 프로파일”,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p.19(“건강도시 지표 활용 가이드라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p.74에서 재인용).

나. 지역사회균형발전지표

1) 지표 개요 및 작성 목적

균형발전지표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여 균형 발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개발하였다(지방시대위원회, 2025. 01.).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하여 주민 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취지로 각종 사업 추진과 평가에 활용된다.

2) 지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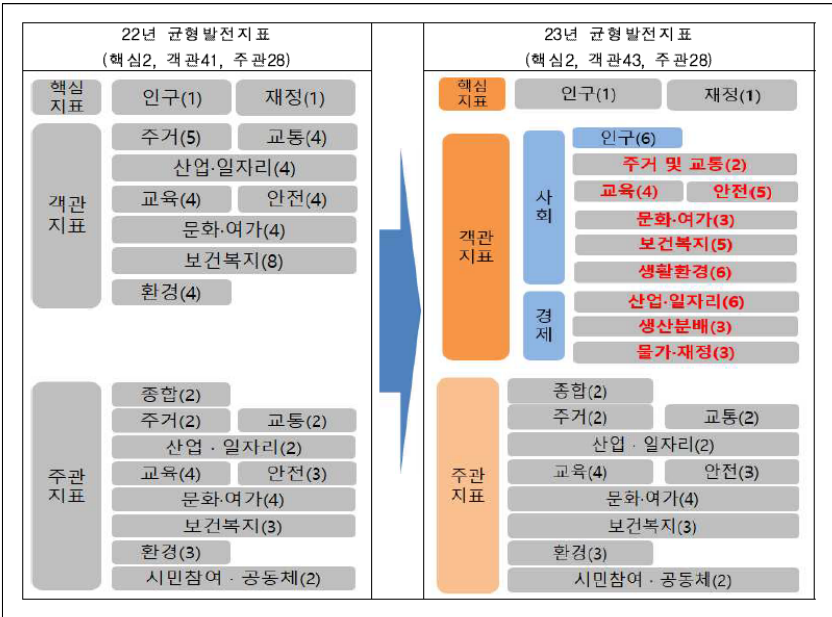
균형발전지표는 핵심 지표, 객관 지표로 구분되어 인구, 교육, 주거·교통, 문화여가, 안전, 생활환경, 보건복지, 산업·일자리, 생산·분배, 물가·재정의 10개 분야에서 43종의 지표가 생산되며, 대부분의 지표는 시군구 수준까지 제공되고 있다. 2019~2020년에는 삶의 만족도, 주거, 교통, 산업·일자리, 교육, 문화·여가 등 10개 분야 28개 항목에 대해 전국 및 시도 단위에 대한 주관 지표도 수집되었으나 현재는 새롭게 수집되지는 않고 있다. 주관 지표는 5점 척도의 항목별 만족도로 조사되었고, 2023년에는 핵심 지표와 객관 지표 간 연계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도를 반영하기 위해 사회 부문에 인구 분야의 6개 항목을 신설하였다.

3) 지표의 활용

균형발전지표의 기초통계 자료는 균형발전 종합정보 시스템(www.nabis.go.kr)에서 제공되며, ‘한눈에 보는 균형발전 현황판’을 통해 시도/시군구/권역별 균형발전지표 분석 자료가 제공된다. 각 지표 별로 종합현황판을 통해 전국 단위의 지표 현황과, 시군구 수준의 비교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통계청과 유관기관의 통계 및 기업통계, 생활인구 및 카드 소비 빅데이터 등의 연계 자료가 균형발전 종합정보 시스템의 현황판에서 제공된다.

하위 분류인 ‘경제’ 부문을 신설하여 사회 부문과 구분하였다. 또한 사회 부문에 인구 분야를 신설하여 핵심 지표와의 연결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표의 전반적인 재배치가 이루어졌다.

[그림 2-24] 2023년 균형발전지표 개선 추진 현황



출처: 지방시대위원회 예산조정평가과, 2024.03, 2023년 균형발전지표 현황.

다. 한국의 교육지표

1) 지표 개요 및 작성 목적

한국의 교육지표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교육지표의 산출 및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행된 ‘국가교육지표 개발 및 관리’ 사업의 결과물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23). 2020년, 유아교육법(2023) 및 초·중등교육법(2024), 고등교육법(2025)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서 산출되는 각종 교육지표를 종합하여 교육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미래의 사회변화에 대응한 교육정책 수립·시행·평가 등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 기관으로서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교육지표의 체계와 세부 지표를 마련하였다.

일례로 유아교육법 제6조의 2에 따르면 교육지표 생산 시에는 지표의 개발, 산출, 관리, 활용, 공개에 관한 사항이 담긴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인적 사항과 관련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하여 결과를 산출해야 한다. 작성된 지표 및 예측통계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하며, 지표 및 예측통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2) 지표 구성

국가교육지표 체계는 국가의 교육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조망하는 지표의 성격을 고려하여 투입-과정-결과 중심의 3단계 체계로 구축되었으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면 3단계, 11영역, 28개 지표로 구성된다. 투입

단계에서는 교육체계 및 학습 환경 형성에 필요한 재정적, 인적, 물리적 자원 및 환경적, 구조적 체계에 관한 지표가 포함된다.

〈표 2-15〉 단계별 국가교육지표 영역과 지표: 투입

단계	영역	지표	자료 출처
투입	교육 여건	[1-1-(가)] 교원 1인당 학생 수	(국내 -교육기본통계)
		[1-1-(나)] 교사 1인당 학생 수	(국제 -OECD 교육지표)
		[1-2-(가)] 학급당 학생 수	(국내 -교육기본통계)
		[1-2-(나)] 학급당 학생 수	(국제 -OECD 교육지표)
		[1-3-1] 주당 수업시수	(국내 -교육기본통계)
		[1-3-2] 연간 순 수업시간	(국제 -OECD 교육지표)
	인적 자원	[2-1-(가)] 소지 학위별 교원 비율	(국내 -교육기본통계)
		[2-1-(나)] 소지 학위별 교원 비율	(국내 -평생교육통계조사)
		[2-2] 전임교원 확보율	(국내 -교육기본통계)
	시설 환경	[3-1-(가)] 정기 안전점검 C등급 이하 학교 건물 비율	(국내 -교육기본통계)
		[3-1-(나)] 정기 안전점검 C등급 이하 학교 건물 비율	(국내 -대학정보공시)
		[3-2-(가)]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보유 비율(인터넷 접속률)	(국내 -인터넷이용 실태조사)
		[3-2-(나)]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보유 비율	(국제 -OECD PISA)
	교육 재정 투자	[4-1]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국제 -OECD 교육지표)
		[4-2]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국제 -OECD 교육지표)
		[4-3] 재원별(정부, 민간, 해외) 공교육비의 상대적 비율	(국제 -OECD 교육지표)
		[4-4] 정부지출 대비 교육지출 비율	(국제 -OECD 교육지표)
		[4-5]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 대비 대학의 연구개발비 비율	(국제 -OECD MSTI)

출처: “한국의 교육지표 2023”, 한국교육개발원, 2023.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과정 단계에서는 학생의 교육 참여 및 교수-학습에 관한 지표, 결과 단계에서는 투입 및 과정의 결과로서 교육 이수, 교육 만족도, 교육성과, 사회적 성과 항목이 포함된다.

〈표 2-16〉 단계별 국가교육지표 영역과 지표: 과정

단계	영역	지표	자료 출처
과정	교수- 학습 과정	[5-1-1] 국어/수학/영어에 대한 자신감/가치/흥미/학습의욕	(국내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5-1-2] 읽기/수학/과학에 대한 태도	(국제 -OECD PISA)
		[5-1-3] 수학/과학에 대한 자신감/흥미/가치 인식	(국제 -IEA TIMSS)
		[5-2] 교사 효능감	(국제 -OECD TALIS)
	구성원 간 관계	[6-1-1] 학생의 교사와의 관계 만족도	(국내 -사회조사)
		[6-1-2] 교사의 지원/정서적 지원/피드백에 대한 학생의 인식	(국제 -OECD PISA)
		[6-1-3] 교사의 교사-학생 간 관계에 대한 인식	(국제 -OECD TALIS)
		[6-2-1] 학생의 교우 관계 만족도	(국내 -사회조사)
		[6-2-2] 학생의 학생 간 협력/경쟁에 대한 인식	(국제 -OECD PISA)
		[6-2-3-(가)] 학생의 집단 괴롭힘 경험	(국제 -OECD PISA)
		[6-2-3-(나)] 학생의 집단 괴롭힘 경험	(국제 -IEA TIMSS)
	학교 운영 참여	[7-1-1] 학부모의 자녀 학교 운영 참여 정도	(국내 -사회조사)
		[7-1-2-(가)] 학부모의 자녀 학교 관련 활동 참여	(국내 -전국보육실태조사)
		[7-1-2-(나)] 학부모의 자녀 학교 관련 활동 참여	(국제 -OECD PISA)

출처: “한국의 교육지표 2023”, 한국교육개발원, 2023.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2-17〉 단계별 국가교육지표 영역과 지표: 결과

단계	영역	지표	자료 출처
결과	교육 이수	[8-1-(가)] 취학(원)율/참여율	(국내 -교육기본통계)
		[8-1-(나)] 취학(원)율/참여율	(국내 -평생학습 개인 실태조사)
		[8-1-(다)] 취학(원)율/참여율	(국제 - OECD 교육지표)
		[8-2-1] 학업중단율	(국내 -교육기본통계)
		[8-2-2] 학교 밖 학생 비율	(국제 -UIS 교육지표)
	교육 만족도	[9-1-1-(가)] 학생의 교육 만족도	(국내 -사회조사)
		[9-1-1-(나)] 학생의 교육 만족도	(국내 -국가 수준학업성취도평가)
		[9-1-2]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	(국내 -전국보육실태조사)
	교육 성과	[10-1-1]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국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10-1-2-(가)] 국제 학업성취도	(국제 -OECD PISA)
		[10-1-2-(나)] 국제 학업성취도	(국제 -IEA TIMSS)
		[10-2-1] 글로벌 역량	(국제 -OECD PISA)
		[10-2-2] 시민역량	(국제 -IEA ICCS)
		[10-3] 성인 비문해율	(국내 -성인문해능력조사)
		[10-4] 성인 역량	(국제 -OECD PIAAC)
		[10-5] ICT 역량 및 태도	(국제 -IEA ICILS)
	사회적 성과	[11-1] 고등교육 이수율	(국제 -OECD 교육지표)
		[11-2-(가)] 취업률	(국내 -직업계고졸일자취업통계)
		[11-2-(나)] 취업률	(국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취업통계)
		[11-3] 교육 수준별 성인의 고용률	(국제 -OECD 교육지표)

출처: “한국의 교육지표 2023”, 한국교육개발원, 2023.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지표의 활용

전반적인 교육 현황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인 국가교육지표를 묶어 자료집의 형태로 발간하였는데, 2021년에 「통계로 보는 한국의 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시범 발간되었고, 2022년부터는 「한국의 교육지표」라는 명칭으로 교육통계지표가 정식 발간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23). 보고서에는 데이터 분석 결과와 시각화, 국가교육지표에 근거한 교육 현황 분석과 관련 전망 및 과제가 제시된다.

4.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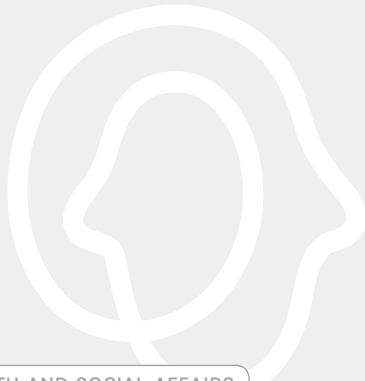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지표체계에 대한 검토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외 지표체계의 개요, 작성 목적, 구성, 활용 및 개편 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고도화 및 활용도 제고에 참고할 만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사례 검토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편의성 향상 노력이 두드러졌다. 지표를 생산하는 주체들은 학술적 목적의 이용자와 정책 결정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한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자 쉽고, 직관적인 형태로 지표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OECD 보고서에서는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를 제목에 명시하여 작성 취지를 밝히려 하였으며, 국내외 여러 보고서에서 인포그래픽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지표를 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 삶의 질 지표의 경우 개선/동일/악화라는 직관적인 추세 표시 방법을 도입해서 지표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운 사례가 있었다.

둘째, 지표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대표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과거에도 지표를 신설 및 도입하는 과정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으나(i.e. 한국의 사회지표), 갈수록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지표체계의 마련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저출생 지표의 경우 지표 설계에 영역별로 소관부처 및 유관 연구기관의 조직도를 제시하였으며, 국민 삶의 질 지표의 경우 지표검토위원회의 구성원이 명시되어 있었다. 해외의 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표 결정과 통계 작성에 있어서 관여한 구성원의 명단을 보고서의 서두에 제시하여(i.e. 한눈에 보는 보건 의료: 아시아/태평양 편 2022), 참여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 표현을 넘어, 지표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다.

셋째, 정확하면서도 신속한 지표체계 관리를 위한 기술혁신의 노력이 있었다. OECD 사례의 경우 보고서 발간 이후에도 그래프 작성에 사용된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치로 제공하고 있었고, 국내 사례의 경우 통계청의 지표누리에서 지표체계 목록과 개별 지표의 통계표와 간략한 분석 그래프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표누리의 경우 동일한 출처에서 생산된 통계치를 다양한 지표체계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출처와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현재 제공 중인 6종 지표에 대해 Open AP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 분석의 결과를 종합할 때, 향후 지표체계 고도화를 위해서는 이용자가 쉽게 사용 가능하도록 직관적인 시각화 규칙을 적용함과 동시에 원자료와의 연결성을 높이는 기술을 적용하여 필요할 경우 특정 지표의 출처를 찾아가 데이터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기존의 지표체계가 가진 일관성을 해치지 않는 가운데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3장

지역사회보장지표 체계의 개선 방향 설정

제1절 영역별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구성 및

세부 지표의 적절성 검토

제2절 지역사회보장지표 관리를 위한 구조 설정

제3장 지역사회보장지표 체계의 개선 방향 설정

제1절 영역별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구성 및 세부 지표의 적절성 검토

1. 전문가 대상 영역별 지표 검토 개요

가. 조사 방향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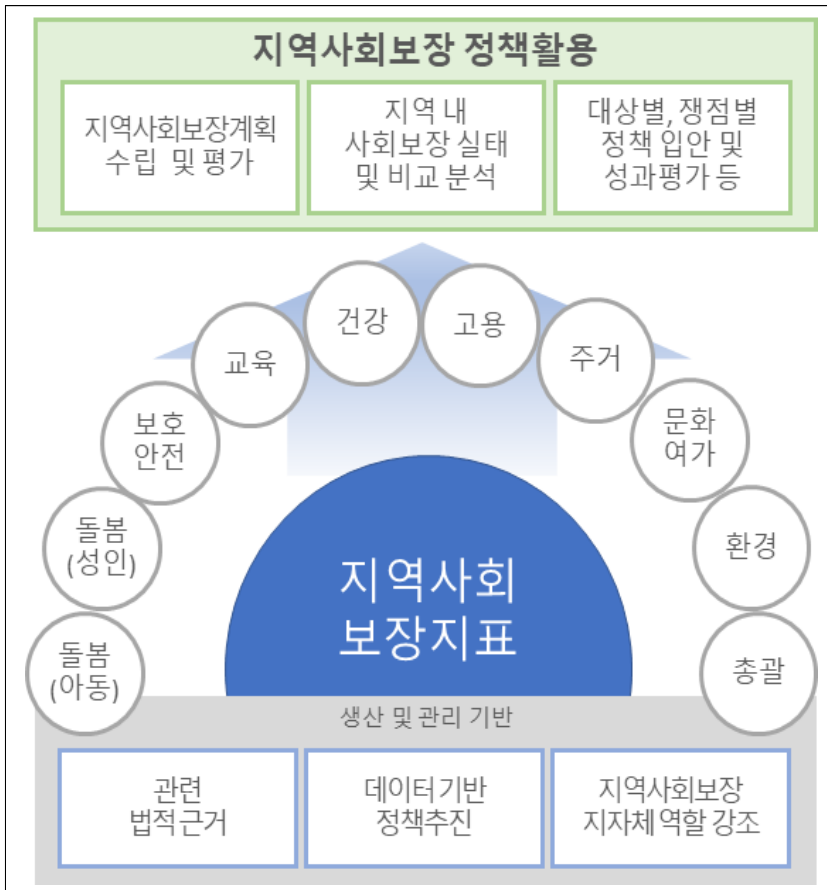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구성 및 세부 지표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 영역 전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영역별 유사성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그에 해당되는 전문가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의 기준은 적절성, 중요도, 활용 가능성이며, 각 기준은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조사의 사전 준비를 위하여 영역별 조사 집단을 설정하였다.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영역이 포괄적인 점을 고려하여 각 영역에 해당되는 전문가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때 본 연구의 목적과 조사의 목표 등에 대한 설명을 사전에 진행하여 조사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다. 영역별 전문가 집단에 대한 설명 외에 개인정보가 연구 결과에서 노출되지 않음을 공지하였다. 이상의 과정은 2024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다.

각 영역에서 조사 참여자가 확정된 이후 영역별 세부 지표에 대한 검토 양식을 배포하였다. 본 조사의 대상 선정은 지역사회보장지표에 대한 인지와 관계없이 해당 영역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조사 참여자에게 지표에 대한 설명과 조사에 대한 안내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조사 참여 양식에 위와 같은 조사의 특성을 설명하여 응답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특성과 목적을 설명하기 위한 문서와 데이터 예시, 지표체계에 대한 안내도 등을 첨부하였다.

[그림 3-1]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체계 및 구성



출처: 저자 작성

나. 지역사회보장지표 영역별 세부 지표의 검토 기준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검토 기준은 크게 적절성, 중요도, 활용 가능성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적절성은 “세부 지표가 해당 영역의 여건 및 성과를 확인·분석하는 데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부가 설명〉

- 지표가 해당 영역에 대한 지역 여건을 확인하기에 적절한가
- 해당 지표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을 확인하기에 적절한 지표인가
- 해당 지표가 관련 분야의 정책 수요를 확인하기에 적절한 지표인가

또한 중요도는 “세부 지표가 해당 영역의 여건 및 성과를 확인·분석하는 데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의미한다.

〈부가 설명〉

- 해당 영역의 사회보장 수준 등 지역 여건을 검토하는 데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지표인가
- 해당 지표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자체 등에 매년 제공될만큼 중요한가

끝으로, 활용 가능성은 “지표를 활용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해당 세부 지표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부가 설명〉

- 지자체의 각종 사회보장정책(예. 지역사회보장정책, 인구정책, 돌봄정책 등)에 해당 지표가 충분히 활용 가능한가
- 해당 지표를 활용한 지역 진단, 정책 결정 및 성과평가 등이 충분히 가능한가

각 기준은 5점 척도로 응답을 하게 되며, 검토 대상은 세부 지표(영역별 각 지표) 또는 10대 영역(지역사회보장지표의 영역 구분)에 해당된다. 또한 지표 응답에 대한 주관식을 추가하여 해당 응답에 대한 부가적 설명이나 보완 방안 등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부 지표에 대한 의견 외에 지역사회보장지표 전체에 대한 의견 또는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주관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다. 조사 대상 집단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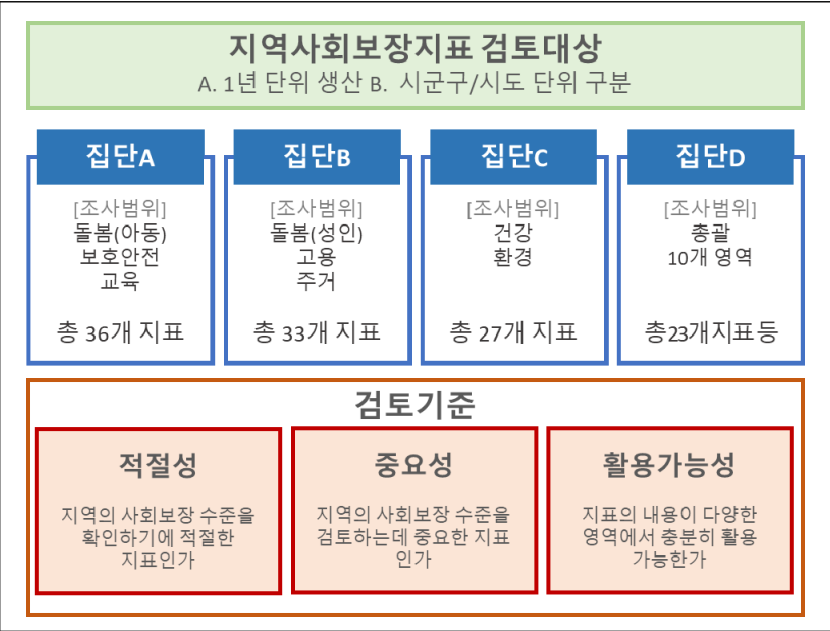
조사 대상을 집단으로 구분했는데, 각 집단을 설정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먼저, A 집단은 아동, 청소년 가족 분야 관련 전문가와 교육 관련 전문가를 조사 참여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B 집단은 노인, 장애인 관련 전문가와 고용 및 자활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지역사회보장 영역에서의 주거 영역은 주거복지와 관련된 영역이라는 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이나 돌봄을 위한 주거 환경 조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아서 별도의 주거 전문가를 포함하지 않았다. C 집단은 지역보건 정책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지역사회보장 영역 내 환경은 지역주민의 거주환경이나 건강 유지와 관련된 사항에 보다 무게를 두기 때문에 별도의 환경 전문가를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환경 변화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상 문제 등에 대한 응답이 필요함을 조사 집단에 공지하였다. D 집단은 문화여가 영역과 총괄 지표, 10대 영역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응답을 하였다. 해당 집단은 지역사회보장 정책 전반에 이해도가 높고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도가 높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지역사회 문화여가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해당 지표에 대한 중요도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표 3-1〉 조사 대상 집단 구분

집단 구분	검토 영역	조사 참여자(명)	구성 설명
A	돌봄(아동) 보호안전 교육	12	아동, 청소년 관련 전문가 교육 분야 전문가
B	돌봄(성인) 고용 주거	14	노인 및 장애인 관련 전문가, 고용 및 자활 전문가
C	건강 환경	10	지역보건 정책 영역 전문가
D	문화여가 총괄 10대 영역	15	지역사회보장 관련 전문가, 문화정책 전문가
합계		51	지역사회보장지표 전 영역에 해당되는 조사 범위 설정

출처: 저자 작성

〔그림 3-2〕 지역사회보장지표를 검토한 집단 및 기준



출처: 저자 작성

라. 분석 결과

각 검토 기준(적절성, 중요도, 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응답(최소: 1, 최대: 5)했고, 이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조사 참여자의 긍정적 응답 수준을 바탕으로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 ratio, CVR)를 확인하였다.

$$CVR = \frac{ne - \frac{N}{2}}{\frac{N}{2}}$$

N: 구성원 수
Ne: “긍정”응답

또한 응답 결과의 안정도와 수렴도를 바탕으로 응답의 집중도 등을 확인하였다. 먼저, 안정도는 변이계수를 바탕으로 확인하였다.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해당 지표가 작을수록 응답의 안정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수렴도는 사분위 수(25%, 75%) 기준으로 수렴 정도를 확인하며, 값이 작을수록 집중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text{수렴도} = \frac{Q_3 - Q_1}{2}$$

Q1: 1분위 수
Q3: 3분위 수

마. 영역별 검토 범위

각 영역에서 지표의 검토 범위를 설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 생산되는 지표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 및 조사의 목적은 실제 생산되는 지표에 대한 검토이므로 2022년 말 기준까지 생산되고 있는 지표에 한 하였다. 둘째, 매년 안정적으로 생산되는 데이터에 국한하였다. 즉, 일시적, 비정기적으로 생산되는 통계, 지역 간 비교가 불가능한 조사 결과 등은 검토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표 3-2〉 영역별 검토 대상 세부 지표 목록

영역	지표 코드	지표명
돌봄(아동)	a1	영유아 인구 천 명당 보육료 지원 영유아 수
돌봄(아동)	a2	영유아 인구 천 명당 유아학비 지원 영유아 수
돌봄(아동)	a3	영유아 인구 천 명당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
돌봄(아동)	a4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여부
돌봄(아동)	a5	만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설립 주체별 어린이집 정원
돌봄(아동)	a6	만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특수보육어린이집 정원
돌봄(아동)	a7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돌봄(아동)	a8	영아(만 0~2세) 보육서비스 충족률
돌봄(아동)	a9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돌봄(아동)	a10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돌봄(아동)	a12	18세 미만 인구 만 명당 지역아동센터 수
돌봄(아동)	a17	등록 발달장애아동 백 명당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률
돌봄(아동)	a23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비율
돌봄(성인)	b1	장애인구 비율
돌봄(성인)	b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인구 비율
돌봄(성인)	b3	장애인 천 명당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
돌봄(성인)	b4	장애인 천 명당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돌봄(성인)	b5	장애인 천 명당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수
돌봄(성인)	b8	장애인 만 명당 지역사회 거주시설 수
돌봄(성인)	b9	장애인 거주시설 총이용자 대비 지역사회 거주시설 이용자 비율

영역	지표 코드	지표명
돌봄(성인)	b16	노인인구 비율
돌봄(성인)	b17	요보호 노인인구 비율
돌봄(성인)	b18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돌봄(성인)	b19	노인 만 명당 노인복지관 종사자 수
돌봄(성인)	b22	노인 만 명당 지역사회 거주시설 수
돌봄(성인)	b23	노인 거주시설 총이용자 대비 지역사회 거주시설 이용자 비율
돌봄(성인)	b27	노인 천 명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
돌봄(성인)	b28	노인 만 명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수
보호안전	c3	아동보호전문기관당 아동 수
보호안전	c4	노인보호전문기관당 노인 수
보호안전	c6	학대아동 발견율
보호안전	c7	학대노인 발견율
보호안전	c9	1인당 안전 및 범죄예방 예산
보호안전	c11	10만 명당 안전신고 건수
보호안전	c12	형법범죄 발생비
보호안전	c15	노인학대 재학대 사례 비율
건강	d3	전체 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 비율
건강	d4	주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건강	d5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률
건강	d6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건강	d7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
건강	d8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건강	d9	건강생활 실천율
건강	d10	현재 흡연율
건강	d11	고위험 음주율
건강	d12	우울감 경험률
건강	d13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건강	d14	비만율(자가보고)
건강	d15	고혈압 진단 경험률
건강	d16	당뇨병 진단 경험률
건강	d17	자살사망률
건강	d18	인구 1만 명당 병상 수
건강	d19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
건강	d20	인구 10만 명당 응급의학 전문의 수
건강	d21	인구 100만 명당 응급의료기관 수

영역	지표 코드	지표명
건강	d22	연간 미충족의료율
건강	d23	응급 시 119 구급차 현장 도착 시간 30분 이내 도달률
교육	e1	1만 명당 평생교육기관 수
교육	e2	학령기 인구 1만 명당 학교 수
교육	e3	특수교육 대상자 수
교육	e4	1인당 평생직업교육 예산
교육	e5	1만 명당 평생교육사 수
교육	e6	1만 명당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교육	e7	1만 명당 평생교육 교강사 수
교육	e8	평생학습 참여율
교육	e10	학생 1인당 교육 투자액
교육	e12	교사 1인당 학생 수
교육	e14	학급당 학생 수
교육	e15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
교육	e16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
교육	e18	특수학교(급)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
교육	e20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고용	f1	고용률
고용	f2	실업률
고용	f3	장애인 의무고용률
고용	f12	경력단절여성 비율
고용	f19	신규 사회적 기업 육성 실적
고용	f20	신규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 실적
고용	f24	사회적 기업 평균 생존 기간
주거	g1	인구 1천 명당 주택 수
주거	g2	주택보급률
주거	g3	자가점유율
주거	g4	공공부문 임대주택 재고
주거	g5	민간부문 임대주택 재고
주거	g6	1인당 주거 면적
주거	g7	상수도 보급률
주거	g8	하수도 보급률
주거	g9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주거	g18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주거	g19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

영역	지표 코드	지표명
문화여가	h2	1인당 문화 관련 예산
문화여가	h4	총예산 대비 문화 관련 예산 비율
문화여가	h5	지역 문화예술법인·단체 및 사회적 기업 수
문화여가	h15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문화여가	h16	도서관 1관당 인구 수
문화여가	h25	1인당 방문 횟수
환경	i1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연간 발령 횟수
환경	i2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연간 발령 횟수
환경	i3	오존 주의보 연간 발령 횟수
환경	i4	1인당 지자체 환경보호 관련 예산
환경	i10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환경	i12	주민 1인당 재활용품 일일 분리배출량
총괄	j1	기초연금 수급률
총괄	j2	장애인연금 수급률
총괄	j3	총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
총괄	j4	인구 1만 명당 공무원 수
총괄	j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총괄	j9	차상위계층 수급자 비율
총괄	j10	근로연령층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10대 영역	k1	“돌봄(아동)” 영역 지표
10대 영역	k2	돌봄(성인) 영역 지표
10대 영역	k3	“보호안전” 영역 지표
10대 영역	k4	“건강” 영역 지표
10대 영역	k5	“교육” 영역 지표
10대 영역	k6	“고용” 영역 지표
10대 영역	k7	“주거” 영역 지표
10대 영역	k8	“문화여가” 영역 지표
10대 영역	k9	“환경” 영역 지표
10대 영역	k10	“총괄” 영역 지표

2. 영역별 분석 결과

분석 결과는 10대 영역, 돌봄(아동), 돌봄(성인),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총괄 순으로 제시되며, 각 기준별 평균 정보를 바탕으로 시각화하여 제시하였다(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부표 참고). 또한 각 영역별 주관식 응답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가. 10대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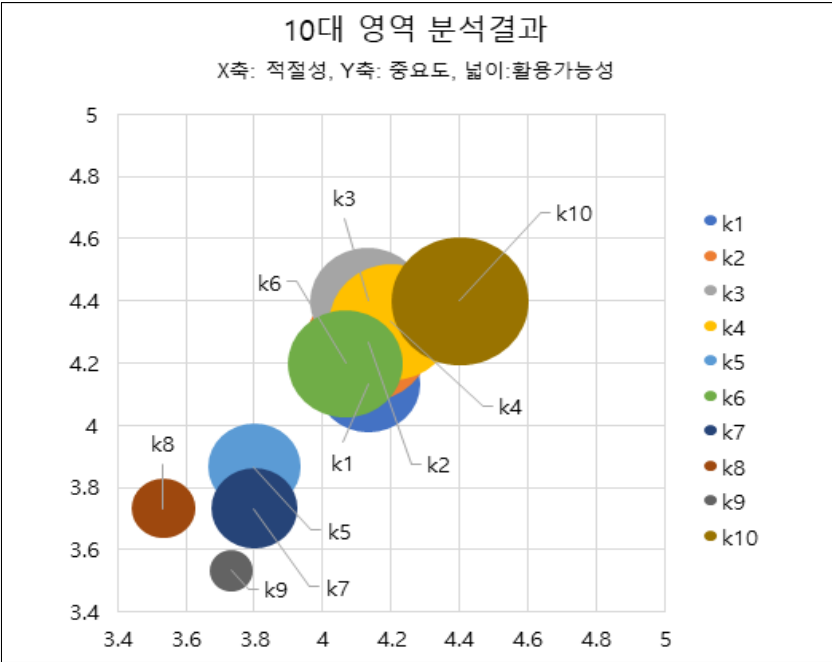
“총괄” 영역 지표의 적절성 평균은 4.400(CVR: 0.733, CV: 0.162, 수렴도: 0.500)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영역 지표의 적절성 평균은 4.200(CVR: 0.467, CV: 0.198, 수렴도: 0.750)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상대적으로 내용타당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돌봄(아동)” 영역 지표의 적절성 평균은 4.133(CVR: 0.467, CV: 0.232, 수렴도: 0.750)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상대적으로 내용타당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돌봄(성인) 영역 지표의 적절성 평균은 4.133(CVR: 0.733, CV: 0.195, 수렴도: 0.500), “보호안전” 영역 지표의 적절성 평균은 4.133(CVR: 0.733, CV: 0.150, 수렴도: 0.250)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의 집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보호안전” 영역 지표의 중요도 평균은 4.400(CVR: 0.867, CV: 0.139, 수렴도: 0.500)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괄” 영역 지표의 중요도 평균은 4.400(CVR: 0.733, CV: 0.162, 수렴도: 0.500)로 보호안전 영역과 마찬가지로 평균이 높고 타당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영역 지표의 중요도 평균은 4.333(CVR: 0.733, CV: 0.161, 수렴도: 0.500), 돌봄(성인) 영역 지표의 중요도 평균은 4.267(CVR: 0.733, CV: 0.159, 수렴도: 0.500), “고용” 영역 지표의 중요도 평균은 4.200(CVR:

0.467, CV: 0.198, 수렴도: 0.750)으로 나타났다.

“총괄” 영역 지표의 활용 가능성 평균은 4.467(CVR: 0.867, CV: 0.138, 수렴도: 0.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돌봄(성인) 영역 지표의 활용 가능성 평균은 4.267(CVR: 0.733, CV: 0.159, 수렴도: 0.500), “건강” 영역 지표의 활용 가능성 평균은 4.267(CVR: 0.600, CV: 0.181, 수렴도: 0.500), “보호안전” 영역 지표의 활용 가능성 평균은 4.133 (CVR: 0.733, CV: 0.150, 수렴도: 0.25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 영역 지표의 활용 가능성 평균은 4.133(CVR: 0.467, CV: 0.232, 수렴도: 0.750)으로 활용 가능성은 높으나 타당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지표 분석 결과: 10대 영역



출처: 저자 작성

돌봄 분야에서는 아동과 성인에 대한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동돌봄에서는 특수 보육 교사 대비 장애아동 비율을 추가하고, 돌봄 서비스의 수혜율과 질적 수준을 함께 측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성인돌봄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율을 추가하고, 고령층의 돌봄 서비스 수혜자 격차를 측정하는 지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호안전 분야에서는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신고율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지역별 보호 대상자 수와 서비스 제공 수준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건강 분야에서는 현재 지표가 주관적인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객관적인 건강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고, 연령대별 건강 상태와 예방의료 서비스 이용률을 추가 분석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육 분야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학교 밖 청소년 통계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지역주민의 교육 수준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반영하는 지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용 분야에서는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지표가 많지만, 고용 안정 지표를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주거 분야에서는 주거비 부담률과 주거 환경 만족도를 포함하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문화여가 분야에서는 문화 바우처와 관련된 통계를 추가하고, 시민의 문화 활동 참여율과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환경 분야에서는 교통 관련 통계를 추가하고, 대기질, 수질, 폐기물 관리 등을 세분화하여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총괄 영역에서는 개별 지표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되었다.

〈표 3-3〉 10대 영역 주관식 응답 요약

영역	주관식 응답 요약
돌봄 (아동)	• 특수 보육(교육) 교사 대비 장애아동 비율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돌봄 서비스 수혜율과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용 만족도 등)을 병행 측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돌봄 (성인)	• 우수 장기 요양기관 지표는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율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령층과 실제 수혜자 간의 격차를 측정하는 지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보호 안전	• 지금도 충분하다고 판단하나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신고율도 추가되면 좋을 듯 • 지역별 보호 대상자의 수와 실제 서비스 제공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건강	• 건강지표 일부는 여건이라기보다 결과의 측면이 있음. 객관적인 건강이 아닌 주관적 건강을 측정하고 있음. • 객관적인 건강 상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함. 하지만 관련 지표가 생산되고 있는지 의문임. 주민의 연령대별 건강 상태를 추가 분석하고, 예방의료 서비스 이용률을 별도 지표로 설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음.
교육	• 노인 대상 평생학습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음. • 65세 이상 평생학습 참여율 필요. • 학교 밖 청소년 통계 추가 필요. • 여건이 아닌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지역주민의 평균적인 교육 수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등)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고용	• 사회적 기업 관련 세부 지표가 많은 것으로 보임. 고용 안정 지표를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등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주거	• 주거비 부담률, 주거 환경 만족도 등 지표도 함께 고려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음.
문화 여가	• 문화 바우처 관련 통계 추가 필요. 시민의 문화 활동 참여율 및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환경	• 교통 관련 통계 추가 필요. 환경 지표를 대기질, 수질, 폐기물 관리 등으로 세분화하여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총괄	• 개별 지표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출처: 저자 작성

나. 돌봄(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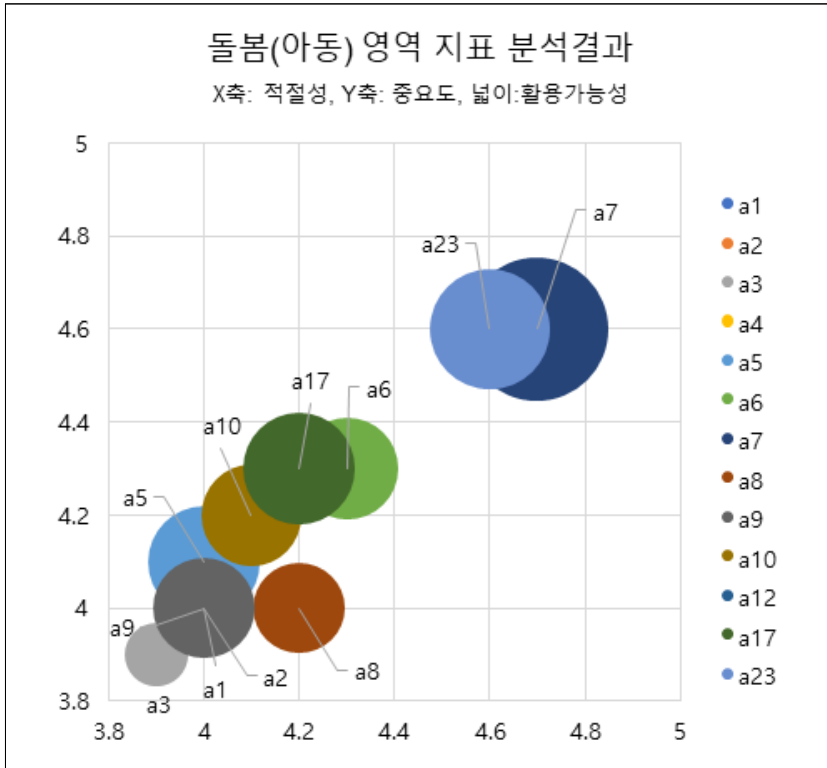
‘돌봄(아동)’ 영역 내 세부 지표의 적절성을 살펴보면, a7 지표(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의 적절성 평균이 4.700(CVR: 1.000, CV: 0.097, 수렴도: 0.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뒤이어 a23 지표(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비율)의 적절성 평균은 4.600(CVR: 0.600, CV: 0.174, 수렴도: 0.000), a6 지표(만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특수보육어린이집 정원)의 적절성 평균은 4.300(CVR: 0.800, CV: 0.149, 수렴도: 0.50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영역 내 세부 지표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a7 지표(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의 중요도 평균은 4.600(CVR: 0.800, CV: 0.144, 수렴도: 0.37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a23 지표(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비율)의 중요도 평균도 4.600(CVR: 0.600, CV: 0.174, 수렴도: 0.000)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해당 영역 내 세부 지표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면, a7 지표(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의 활용 가능성 평균은 4.600(CVR: 1.000, CV: 0.107, 수렴도: 0.5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a23 지표(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비율)의 활용 가능성 평균은 4.300(CVR: 0.400, CV: 0.209, 수렴도: 0.875), a5 지표(만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설립 주체별 어린이집 정원)의 활용 가능성 평균은 4.200(CVR: 0.800, CV: 0.143, 수렴도: 0.3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해당 영역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비율이 주요 지표로 선정될 수 있다.

[그림 3-4] 지표 분석 결과: 돌봄(아동)



출처: 저자 작성

a1 지표는 전국 단위 사업으로 지자체의 재량이 제한적이며, 보편적 대상에 대한 이용자 수를 활용한 정책 개선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보육 서비스의 경제적 접근성을 평가하고, 보육료 지원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정책적 개입과 자원 배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a2 지표는 유아교육 지원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진단하고, 경제적 이유로 인한 유아교육 참여 제약을 판단하는 데 유용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다만, 단순 학비 지원 인원만으로 실질적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유아교육

참여율 같은 보조 지표와 함께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a3 지표는 지역 내 가정양육 비율을 확인하거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적절하며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있었다. 다만, 영유아교육, 보육, 돌봄 전반을 포괄하는 지표는 아니므로 a1~a3 지표와 연계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a4 지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여부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지만, 운영 실태를 반영하지 못해 단독으로 지역사회의 육아 지원 수준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이용 아동 수, 프로그램의 다양성 등을 포함하는 추가 지표가 필요하며, 설치 여부 외에 센터의 역할과 설립 목적을 반영한 평가 기준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a5 지표는 어린이집 정원의 설립 주체별 수급 상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단순 정원 수만으로는 서비스 품질과 이용률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운영 실적 및 부모 만족도 같은 질적 지표와 결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a6 지표는 특수보육 어린이집을 별도로 지정하기보다 통합 운영하는 것이 아동 발달에 더 적절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또한, 특수보육 정원은 지역별로 차이가 클 수 있어 해당 서비스의 공급 부족 지역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정원만으로 서비스 품질이나 아동의 요구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보조 지표와 함께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a7 지표는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로,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 간 지역별 격차를 분석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졌다.

a8 지표는 영아 보육 충족률을 측정하는 자료이지만, 영아의 발달 특성과 가정보육 및 어린이집 이용 선호가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 충족률만으로 보육 서비스의 적절성이나 질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a9 지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률을 반영해 보육시설의 서비스 품질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인증률만으로 아동돌봄 수준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보조 지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a10 지표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충족률을 반영하여 장애아동 보육 서비스의 적정성과 접근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로, 지역별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 질의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a12 지표는 특정 돌봄 인프라인 지역아동센터의 분포를 나타내는 데 유용하지만, 초등 돌봄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 내 다양한 아동돌봄 인프라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아동돌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과 서비스를 포함한 추가 지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a17 지표는 중증 장애아동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보고된 점을 고려하여, 중증 장애아동과 경증 장애아동 간 돌봄 서비스 이용률을 비교하는 자료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재활 서비스의 접근성과 수급 상황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이용률이 낮은 지역에 대한 정책적 개입과 서비스 확대 필요성을 도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a23 지표는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비율을 반영하지만, 해당 기준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령별로 규정되어 있어 단독으로는 유의미한 평가 지표가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보육 서비스의 질과 아동 안전을 평가하는 핵심 자료로서, 보육 환경의 적정성과 교사의 업무 부담 수준을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표 3-4〉 돌봄(아동) 주관식 응답 요약

영역	주관식 응답 요약
a1	- 전국 사업이라 지자체 재량이 크지는 않고, 대상이 보편이라 이용자 수를 활용해 정책을 개발 및 개선할 일이 많지 않음. - 지자체 보육 서비스의 경제적 접근성을 진단하고, 보육료 지원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정책적 개입과 자원 배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a2	- 전국 사업이라 지자체 재량이 크지는 않고, 대상이 보편이라 이용자 수를 활용해 정책을 개발 및 개선할 일이 많지 않음. - 이 지표는 유아교육 지원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진단하고, 경제적 이유로 인한 유아교육 참여 제약 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지표라고 판단됨. 다만, 단순 학비지원 인원만으로는 지원의 실질적 효과 등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아교육 참여율과 같은 보조 지표와 함께 분석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함.
a3	- 전국 사업이라 지자체 재량이 크지는 않고, 대상이 보편이라 이용자 수를 활용해 정책을 개발 및 개선할 일이 많지 않음. - 이 지표는 지역 내 가정양육 비율을 확인하거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며,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음. 다만, 해당 지표는 영유아교육, 보육, 돌봄 전반을 아우르는 지표는 아니므로 a1~a3 지표와 연계하여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a4	- 설치운영 여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센터별 이용 아동 수, 프로그램의 다양성 등 실제 운영과 관련된 지표가 있으면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에 모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설치운영 여부에 관한 지표 외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나 설립 목적에 따른 평가항목이 반영될 수 있는 지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여부는 육아지원 인프라의 기초적인 제공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 가능하나, 설치 여부만으로 지역사회의 육아지원 수준을 전반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지자체별 특성과 운영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단독지표로 활용하기보다 보완적인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a5	이 지표는 지역 내 어린이집 정원의 수급 상황을 설립 주체별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진단하는 데 유용함. 다만, 단순 정원 수만으로는 서비스 품질이나 이용률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운영 실적과 부모 만족도 등 질적 지표와 결합해 활용할 경우 더 유용성이 높아질 수 있음.
a6	- 특수보육 어린이집으로 특별 지정되기보다는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아동 발달상 더 의미 있을 수 있음. - 특수보육 정원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표를 통해 해당 서비스의 공급 부족 지역을 파악하고 자원분배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용함. 다만, 정원만으로는 서비스 품질이나 아동의 요구 충족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보조 지표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영역	주관식 응답 요약
a7	지역 내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보육 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진단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임. 특히, 해당 지표는 민간 어린이집에 의존하는 지역과 국공립 어린이집 중심의 지역 간 격차를 파악할 수 있게 하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어 유용함.
a8	영아는 발달 초기의 민감한 시기로, 가정보육과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선호가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한 충족률만으로 보육서비스의 적절성이나 질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a9	어린이집 평가인증률은 보육시설의 서비스 품질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지역 내 보육서비스의 표준화와 신뢰도를 나타냄. 다만, 인증률만으로 아동돌봄 수준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 지표들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a10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충족률은 장애아동 보육서비스의 적정성과 접근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지역별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함.
a12	- 초등돌봄시설 및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함 - 지역아동센터 이외에 다양한 지역돌봄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역아동센터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 보임. - 지역아동센터의 신고지원아동의 유형별(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아동, 차상위계층가정 아동·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아동 등) 비율 등에 관한 지표 고려 - 이 지표는 지역아동센터라는 특정 돌봄 인프라의 분포를 나타내는 데 유용하지만, 지역 내 아동돌봄 인프라(초등돌봄, 다함께돌봄센터 등)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아동돌봄서비스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과 서비스를 포함한 추가지표가 보완되어야 함.
a17	- 중증 장애아동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고가 있어 중증 장애아동과 경증 장애아동 간 돌봄서비스 이용률 비교를 넣을 수 있을까 생각해봄. - 이 지표는 발달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재활서비스의 접근성과 수급 상황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발달재활서비스가 실제로 필요한 아동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함. 해당 지표를 통해 이용률이 낮은 지역에 대한 정책적 개입과 서비스 확대 필요성을 도출하는 등으로 활용 가능함.
a23	-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비율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수는 연령별로 규정되어 있어 유의미한 지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비록 일부 지역에서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법정 기준보다 줄이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는 함. -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비율은 보육서비스의 질과 아동안전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보육환경의 적정성과 교사의 업무부담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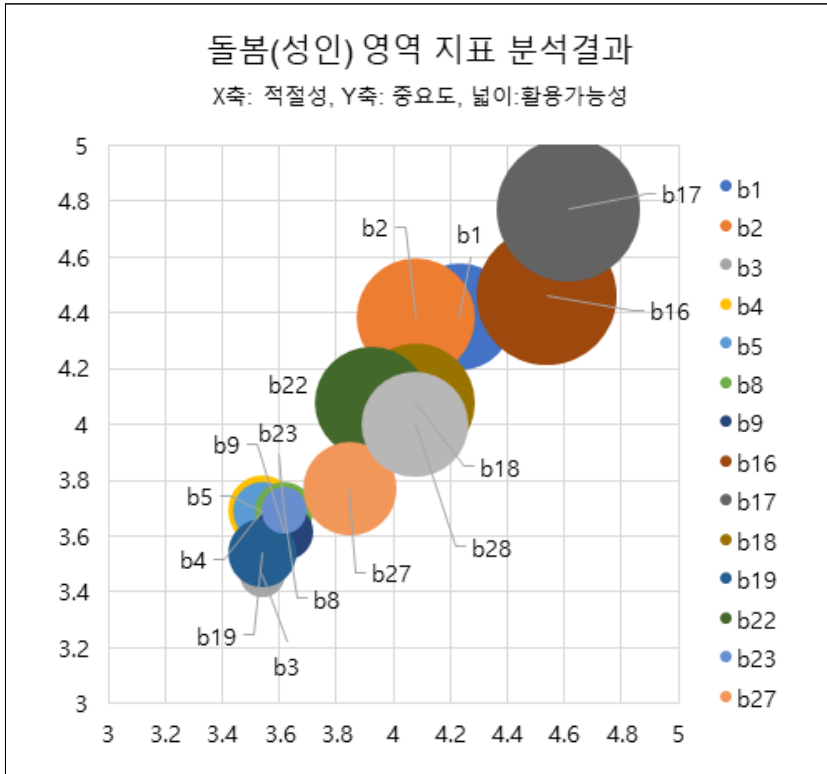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다. 돌봄(성인)

‘돌봄(성인)’ 영역 내 세부 지표의 적절성을 살펴보면, b17 지표(요보호 노인인구 비율)의 적절성 평균은 4.615(CVR: 0.846, CV: 0.135, 수렴도: 0.500), b16 지표(노인인구 비율)의 적절성 평균은 4.538(CVR: 0.846, CV: 0.140, 수렴도: 0.500), b1 지표(장애인구 비율)의 적절성 평균은 4.231(CVR: 0.692, CV: 0.210, 수렴도: 0.500), b2 지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인구 비율)의 적절성 평균은 4.077(CVR: 0.692, CV: 0.203, 수렴도: 0.500), b18 지표(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의 적절성 평균은 4.077(CVR: 0.538, CV: 0.225, 수렴도: 0.50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영역 내 세부 지표의 중요도는 적절성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b17 지표(요보호 노인인구 비율), b16 지표(노인인구 비율), b1 지표(장애인구 비율)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지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당 영역 내 세부 지표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면, b17 지표(요보호 노인인구 비율)의 활용 가능성 평균은 4.615(CVR: 0.846, CV: 0.135, 수렴도: 0.500), b16 지표(노인인구 비율)의 활용 가능성 평균은 4.538(CVR: 0.846, CV: 0.140, 수렴도: 0.500), b2 지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인구 비율)의 활용 가능성 평균은 4.231(CVR: 0.692, CV: 0.165, 수렴도: 0.500), b18 지표(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의 활용 가능성 평균은 4.231(CVR: 0.846, CV: 0.189, 수렴도: 0.500), b22 지표(노인 만 명당 지역사회 거주시설 수)의 활용 가능성 평균은 4.154(CVR: 0.538, CV: 0.185, 수렴도: 0.50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지표 분석 결과: 돌봄(성인)



출처: 저자 작성

b1 지표는 장애인구 비율을 돌봄 영역과 사회보장 수준을 평가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보다 정교한 분석을 위해 복지예산 비율, 장애인 1인당 복지 지출, 장애인 고용률 등의 지표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장애 유형(신체장애·발달장애)을 구분하고, 65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을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b2 지표는 노인보호 인프라와 서비스 적정성을 평가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시·군·구 단위의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중증 장애인 비율이 반드시 사회보장 수준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중증 장애인 비율만 고려하면 경증 장애인과 만성질환자 등 타 취약계층의 돌봄 수요를 간과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b3 지표는 종사자 수를 기반으로 지역 사회보장 수준과 재활서비스 접근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지만, 단순 종사자 수만으로 시설 운영 환경이나 인력의 전문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범위를 확장해 거주시설과 의료재활시설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b4 지표는 지역사회 재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을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며,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재활시설(현재 거의 없음)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b5 지표는 근로 가능한 장애인과 불가능한 장애인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근로 가능한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을 포함하면 활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장애인의 취업 지원, 직업훈련, 일자리 제공 등 직업재활서비스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b8 지표는 거주시설의 수가 접근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시설의 충분성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수용 가능 인원수를 활용하면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며, 탈시설 정책을 고려할 때 거주시설보다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있었다.

b9 지표는 장애인의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통합 수준을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나, 단순히 거주시설 이용 비율이 높다고 해서 지역사회 통합이 원활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장애 유형, 연령, 중증도 등 다양한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b16 지표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순 연령 구분이 아닌 10세 또는 5세 단위의 세분화된 연령 구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b17 지표는 요보호 노인인구 비율이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추정하는 데 유용하지만, 65세 미만 돌봄 대상 노인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돌봄 수요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85세 이상 노인과 독거 노인만으로 요보호 노인을 정의하는 데 대한 반대 의견이 있어, 활용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b18 지표는 시설의 접근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지만, 시설 개수만으로 충분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용 가능 인원을 함께 분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 다양성, 운영 시간, 시설 규모 등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추가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여가복지시설 지표는 경로당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노인복지관과 노인 교실의 영향을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시설 유형별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b19 지표는 노인복지관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별도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인력(담당자·생활지원사) 포함 여부에 따라 노인복지관 종사자 수가 크게 변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b22 지표는 지역사회 노인 주거복지 인프라의 양적 수준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지만, 시설의 질적 수준과 노인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추가 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요양서비스업이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체계(잠정안)에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이 제외된 점을 고려해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b23 지표는 거주시설 이용자 대비 지역사회 거주시설 이용자 비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지역사회 기반 돌봄이 원활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이는 지역 간 자원 불균형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노인 거주시설이 지역사회 거주시설의 하위 개념인지 독립된 개념인지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지표명이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b27 지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를 활용하여 지역별 학습 인프라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지만, 종사자 수보다는 병상 수(가능하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b28 지표는 노인의 재가 서비스 접근성과 분포도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나, 시설 수만으로는 실제 이용률을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표 3-5〉 돌봄(성인) 주관식 응답 요약

영역	주관식 응답 요약
b1	• 장애인구 비율은 돌봄 영역과 관련하여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을 검토할 수 있는 유용한 기초 지표임. 다만 지역의 돌봄 영역과 관련하여 다차원적인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수준(장애인을 위한 복지예산 비율, 장애인 1인당 복지지출 등), 장애인고용률 등을 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 있음. • 장애인구에서 성인-장애인 종류를 분류할 때 최소한 신체장애와 정신지체(발달장애)는 구분이 필요함. • 65세 이후 장애가 발생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는 65세 이상 인구 대비 65세 이상 장애인구 비율 등 연령대를 세분화한 지표 산출도 검토
b2	• 노인보호 인프라와 서비스 적정성을 판단하는 유용한 자료이며, 지역 간 불균형을 확인하고 기관 확충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음. 다만, 세부적 지역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 분석이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중증 장애인 비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또한 중증 장애인 비율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경증 장애인 또는 타 취약계층(만성질환자 등)의 돌봄 필요성을 간과할 수도 있음. 또한 농촌 및 특정 도시의 경우 고령화와 중복장애 출현율이 높아짐에 따라 지표가 과대평가될 가능성도 있음.

영역	주관식 응답 요약
b3	• 종사자 수는 지역의사회보장 수준과 재활서비스의 접근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즉 해당 지역이 장애인을 위한 재활서비스의 적정 수준을 파악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종사자 수는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운영 환경이나 서비스지원 인력의 전문성, 재정적 여건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분자에 들어가는 지역사회재활시설의 범위를 장애인복지시설로 확장할 수 있겠습니다.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중에서 거주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돌봄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보임.
b4	•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각각을 제시하면 의료재활시설(현재는 거의 없음)도 일관성을 위해 추가할 것을 검토함.
b5	• 등록장애인 중에는 근로가 가능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을 것으로 보여, 근로 가능한 자 중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 정의한다면 활용 가능성이 제고될 가능성이 있어 보임(예를 들어, 발달장애인 중에는 증상이 심각하여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임). • 장애인이 해당 지역에서 취업지원, 직업훈련, 일자리 제공 등 직업재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적합한 지표임에 따라 중요하며, 향후 정책 수립 시 활용 가능성도 클 것으로 판단됨.
b8	• 거주시설의 수는 접근성 측면에서의 적절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으나, 시설의 충분성은 보여주지 못할 것으로 보임. 거주시설 수용 인원 수를 사용하는 경우 활용 가능성이 제고될 가능성이 있음. • 장애인돌봄에서 탈시설을 지향하는 정책 방향에서 지역사회거주시설보다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이 더 실효성 있어 보임.
b9	• 해당 지표는 향후 장애인의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통합 수준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보이나, 단순히 지역사회거주시설 이용 비율이 높다고 해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개인의 삶의 질 수준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또한 장애 유형, 연령, 중증도 등 이용자의 다양한 특성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음(중증장애인의 경우 지역사회거주시설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다수 존재).
b16	• 앞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65세 이상 전체와 더불어 65세 이상 연령대를 세분화(예: 10세, 5세별)해서 제시하는 것도 고려
b17	• 요보호 노인인구 비율은 지역사회돌봄 서비스 수요 수준을 유추할 때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 다만 65세 미만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 또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만 돌봄이 필요한 노인 수 등은 추계에서 빠짐에 따라 실제 지역사회 돌봄 수요가 과소평가될 수도 있음. • 85세 이상 인구, 독거노인만으로 요보호 노인을 정의, 산출하는 데 반대가 많아서 활용 가능성이 떨어질 것임.

영역	주관식 응답 요약
b18	• 접근성 측면에서는 시설의 수가 중요할 수 있으나, 시설이 얼마나 충분하게 제공되고 있는가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용가능 인원의 수'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시설의 질적 수준(예: 프로그램의 다양성, 운영시간, 시설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표개발 필요 • 여가복지시설로만 하면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중에서 경로당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경로당 수에 따라 좌우되고, 노인복지관, 노인교실이 미치는 정도는 거의 없어져서 이를 세분화해서 산출함.
b19	• 노인복지관을 노인여가복지시설과 구분하여 별도의 지표로 조사되는 부분이 적절한가 고려해야 함. • 분자의 숫자가 노인복지관 수가 아니라 종사자 수라는 점에서 조심스러움. 그 이유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인력(담당자, 생활지원사) 포함 여부에 따라서 노인복지관 종사자 수가 2~3배 이상으로 달라지는데, 지역에 따라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제공하긴 하는 데 다른 별도의 기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임.
b22	• 지표명이 의미하는 바가 다소 불명확함. 거주시설 '이용 가정 수' 등으로 구체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지역사회 노인거주복지 인프라의 양적 수준을 평가하는 데는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시설의 질적 수준과 개별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보완이 필요함. •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체계(잠정안)에서 요양서비스업 전체가 들어가야 할 것 • 노인거주복지 시설 중에서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이 빠져 있고, 노인의료복지 시설 중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만 있고 노인요양시설은 빠져 있어서 이 모든 것을 포함시키거나 설명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b23	• 거주시설 총이용자 대비 지역사회거주시설 이용자 비율이 높다고 해서 지역사회 기반 돌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우려. 즉 노인 대상 지역사회기반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발생할 시, 이는 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이지 해당 지역의 지역사회보장이 미흡한 것은 아님. • 노인 거주시설이 지역사회 거주시설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지, 독립된 개념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지표명만으로는 어떻게 산출되는지 파악되지가 않아서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게 수정해야 함.
b27	• 종사자 수보다 병상 수(정보 접근이 가능하다면)가 더 적절할 것 같음.
b28	• 지표를 통해 지역별로 노인들의 재가서비스 접근성 및 분포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시설 수가 많더라도 실제 이용률이 낮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표가 이러한 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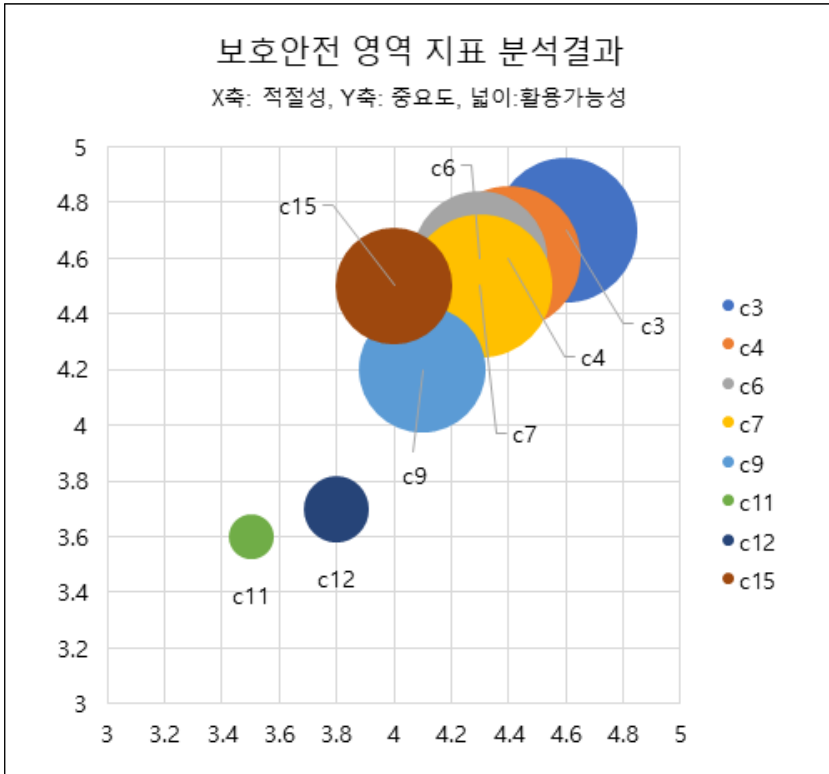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라. 보호안전

‘보호안전’ 영역 내 세부 지표의 적절성을 살펴보면, c3 지표(아동보호전문기관당 아동 수)의 적절성 평균은 4.600(CVR: 1.000, CV: 0.107, 수렴도: 0.500), c4 지표(노인보호전문기관당 노인 수)의 적절성 평균은 4.400(CVR: 0.800, CV: 0.208, 수렴도: 0.500), c6 지표(학대아동 발견율)의 적절성 평균은 4.300(CVR: 0.600, CV: 0.182, 수렴도: 0.500), c7 지표(학대노인 발견율)의 적절성 평균은 4.300(CVR: 0.600, CV: 0.182, 수렴도: 0.5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각 지표의 중요도 분석결과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편,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c3 지표(아동보호전문기관당 아동 수)의 활용 가능성 평균은 4.300(CVR: 0.800, CV: 0.149, 수렴도: 0.500), c4 지표(노인보호전문기관당 노인 수)의 활용 가능성 평균은 4.300(CVR: 0.600, CV: 0.182, 수렴도: 0.500), c7 지표(학대노인 발견율)의 활용 가능성 평균은 4.300(CVR: 0.600, CV: 0.182, 수렴도: 0.500), c6 지표(학대아동 발견율)의 활용 가능성 평균은 4.200(CVR: 0.600, CV: 0.233, 수렴도: 0.50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6] 지표 분석 결과: 보호안전



출처: 저자 작성

c3 지표는 아동보호 서비스의 적정성과 지역 간 격차를 평가하고,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지역을 식별하는 데 유용하지만, 시·군·구 단위의 세부적 차이를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보완적 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이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대응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아동인구수당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비율’ 지표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었다. 더불어, 아동인구수당 학대예방경찰관(APO) 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c4 지표는 아동보호 체계의 운영 실태와 취약성을 평가하고, 신고 체계 개선 및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c6 지표는 아동학대 발견율에 장애아동 학대 사례가 포함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 학대는 별도의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서 신고 및 통계를 관리하므로, 보호안전 영역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장애아동 학대 사례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c7 지표는 노인보호 체계의 운영 실태와 취약성을 평가하고, 신고 체계 개선 및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단순 신고 건수만으로 지역사회의 안전성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신고 건수와 함께 지역별 사고 발생률, 범죄율, 신고 후 처리율 등의 보조 지표를 병행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c9 지표는 지역 간 안전 관련 재정 격차를 평가하고, 재정 투입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하지만, 특정 재정 항목만 포함되어 실제 안전 수준이나 예방 활동의 질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단순 범죄 발생 건수만으로는 중대 범죄와 경미한 범죄를 구분하지 못하며, 신고율이나 처리율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검거율, 재범률, 주민 체감 안전도 등의 보조 지표를 함께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c11 지표는 안전 신고 건수뿐만 아니라 안전 신고 처리 비율도 함께 분석하면 보다 효과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특수교육의 적정성과 교사 배치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한편, c12 지표는 범죄 발생뿐만 아니라 범죄 해결과 관련된 지표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c15 지표는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지역을 식별하는 데 유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재학대 비율은 신고율과 사례 수집의 정확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피해 노인 지원 체계와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보조 지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또한, 초고령 인구 비율 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학대 재학대 사례 비율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3-6〉 보호안전 주관식 응답 요약

영역	주관식 응답 요약
c3	- 이 지표는 아동보호 서비스의 적정성과 지역 간 격차를 파악하고, 인프라 확충 및 전문 인력 배치 등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지역을 식별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 가능함. 다만, 시도 단위 지표는 지역 내 세부적인 차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시·군·구 단위의 보완적 지표와 함께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이후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를 담당하고 있으니, 대응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인구수당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비율’ 지표가 포함되면 좋겠음. 현재 전국 229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음. - 아동인구수당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수를 추가할 것을 고려해야 함.
c4	아동보호 체계의 운영 상황과 취약성을 진단할 수 있는 핵심 자료로, 지역 간 비교를 통해 발견율이 낮은 지역에 대해 신고 체계 개선 및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임.
c6	아동학대 발견율에 장애아동의 학대 사례가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함. 장애아동학대를 포함하여 장애인학대는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에서 신고부터 담당하고 따로 통계가 나옴. 보호안전 영역이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잘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포함되는 것을 제안함.
c7	- 노인보호 체계의 운영 상황과 취약성을 진단할 수 있는 핵심 자료로, 지역 간 비교를 통해 발견율이 낮은 지역에 대해 신고 체계 개선 및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임. - 주민의 안전 인식과 신고 체계 활용도를 평가하는 유용한 지표이나, 단순 건수만으로 지역사회의 안전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신고 건수와 함께 지역별 사고 발생률이나 범죄율, 신고 후 처리율과 같은 양적 지표를 병행 분석하면 지역사회 안전성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영역	주관식 응답 요약
c9	- 지표를 통해 지역 간 안전 관련 재정 격차를 확인하고, 재정 투입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음. 다만, 특정 재정 항목만 포함되므로 지역별 실제 안전 수준이나 예방 활동의 질을 완전히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발생비는 단순히 범죄 발생 건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범죄의 유형(중대 범죄 vs 경미한 범죄)이나 범죄 신고율, 처리율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발생비와 함께 검거율, 재범률, 주민 체감 안전도 등 보조 지표 등을 보완지표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함.
c11	- 안전신고 건수와 더불어 안전신고 처리 비율을 함께 보면 어떨지 제안함. -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특수교육의 적정성과 교사 배치의 효율성을 진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판단됨.
c12	발생뿐 아니라 범죄 해결과 관련된 지표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c15	- 이 지표는 노인 학대 예방과 사후 보호의 질을 진단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식별하는 데 유용함. 다만, 재학대 비율은 신고율과 사례 수집의 정확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 노인 지원 체계와 보호 조치의 실효성 등의 지표를 보조 지표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전체 인구 중 7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초고령인구 비율 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 재학대 사례 비율도 추가할 것을 제안함.

출처: 저자 작성

마.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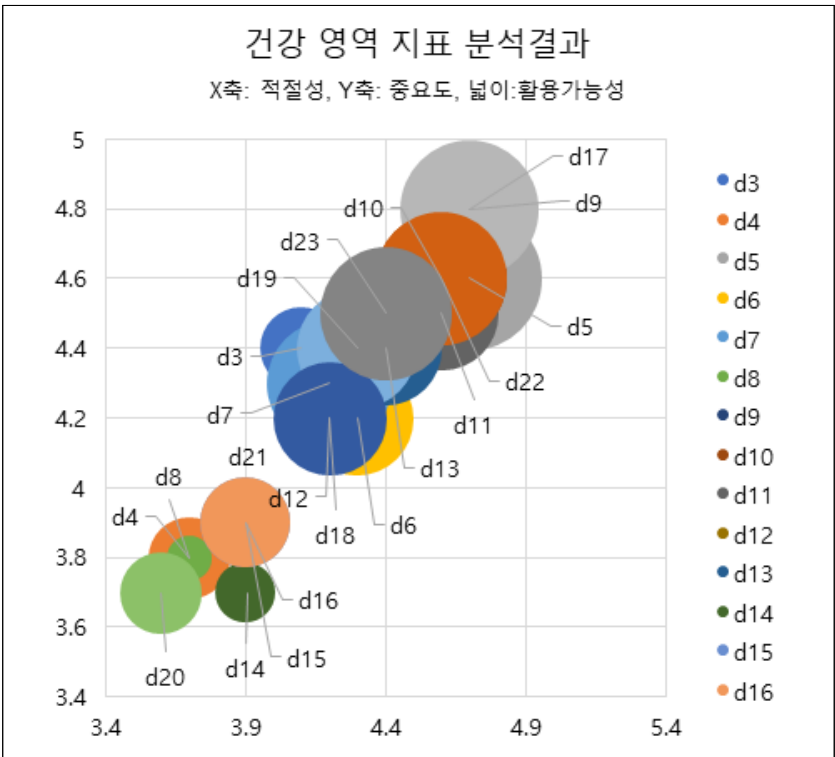
‘건강’ 영역 내 세부 지표의 적절성을 살펴보면, d5 지표(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률)의 적절성 평균은 4.700(CVR: 1.000, CV: 0.097, 수렴도: 0.375), d9 지표(건강생활 실천율)의 적절성 평균은 4.700(CVR: 1.000, CV: 0.097, 수렴도: 0.375), d17 지표(자살사망률)의 적절성 평균은 4.700(CVR: 1.000, CV: 0.097, 수렴도: 0.37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영역 내 세부 지표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d9 지표(건강생활 실천율)의 중요도 평균은 4.800(CVR: 1.000, CV: 0.083, 수렴도: 0.000), d17 지표(자살사망률)의 중요도 평균은 4.800(CVR: 1.000, CV: 0.083, 수렴도:

0.000), d5 지표(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률)의 중요도 평균은 4.600(CVR: 1.000, CV: 0.107, 수렴도: 0.50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해당 영역 내 세부 지표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면, d5 지표(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률)의 활용 가능성 평균은 4.700(CVR: 1.000, CV: 0.097, 수렴도: 0.375), d17 지표(자살사망률)의 활용 가능성 평균은 4.600(CVR: 1.000, CV: 0.107, 수렴도: 0.500), d9 지표(건강생활 실천율)의 활용 가능성 평균은 4.500(CVR: 1.000, CV: 0.111, 수렴도: 0.50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7] 지표 분석 결과: 건강



출처: 저자 작성

d4 지표는 주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보다는 지역주민의 신체건강 증진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견해가 있었다. 이에 따라, 건강지표에서 제시된 '신체건강 시군구 노력 정도'를 대안 지표 또는 추가 지표로 선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시도 단위보다 시군구 단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d6 지표는 65세 이상 노인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을 반영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d14 지표는 자가보고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되므로 신뢰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d15 지표는 고혈압 유병률이 아닌 자가 보고 진단 경험률을 반영하고 있어 한계가 있으며, 지역사회건강조사를 기반으로 산출되지만 실측 자료가 아니므로 지표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d16 지표는 당뇨병 유병률이 아닌 자가 보고 진단 경험률을 반영하고 있어 신뢰도에 한계가 있으며, 실측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수치의 높고 낮음을 해석하는 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d18 지표는 보다 적절한 분석을 위해 진료권역 단위 또는 시도 단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d19 지표 또한 시도 단위보다 시군구 단위로 조정하는 것이 보다 정밀한 지역별 분석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d20 지표는 응급의학 전문의뿐만 아니라 급성기 치료를 담당할 필수의료 배후과 전문의 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시군구 차원의 지표로는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표 3-7〉 건강 주관식 응답 요약

영역	주관식 응답 요약
d4	• 주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의 물리적인 지표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신체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 정도가 필요해 보여 건강지표에 작성되어 있는 ‘신체건강 시군구 노력 정도’로 대안 지표 또는 추가 지표로 선정되었으면 함. • 시도 단위보다 시군구 단위 조정 검토
d6	• 65세 이상 노인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로 조정 검토
d14	• 자가보고 자료라 한계가 있음.
d15	• 고혈압 유병률이 아닌, 자가보고 진단 경험률이라 한계가 있음. •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산출되는 지표이긴 하나, 실제 실측 자료가 아니기에 이 지표의 높고/낮음에 대한 의미 해석이 어려움.
d16	• 당뇨병 유병률이 아닌, 자가보고 진단 경험률이라 한계가 있음. •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산출되는 지표이긴 하나, 실제 실측 자료가 아니기에 이 지표의 높고/낮음에 대한 의미해석이 어려움
d18	• 진료권역 단위 또는 시도 단위 자료로 조정 검토
d19	• 시도 단위보다 시군구 단위 조정 검토
d20	• 응급의학 전문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급성기 치료를 할 수 있는 필수의료 배후과 전문의 수도 함께 중요함. • 시군구 차원의 지표로는 큰 의미를 갖기가 어려움.
d21	• 시군구 차원의 지표로는 큰 의미를 갖기가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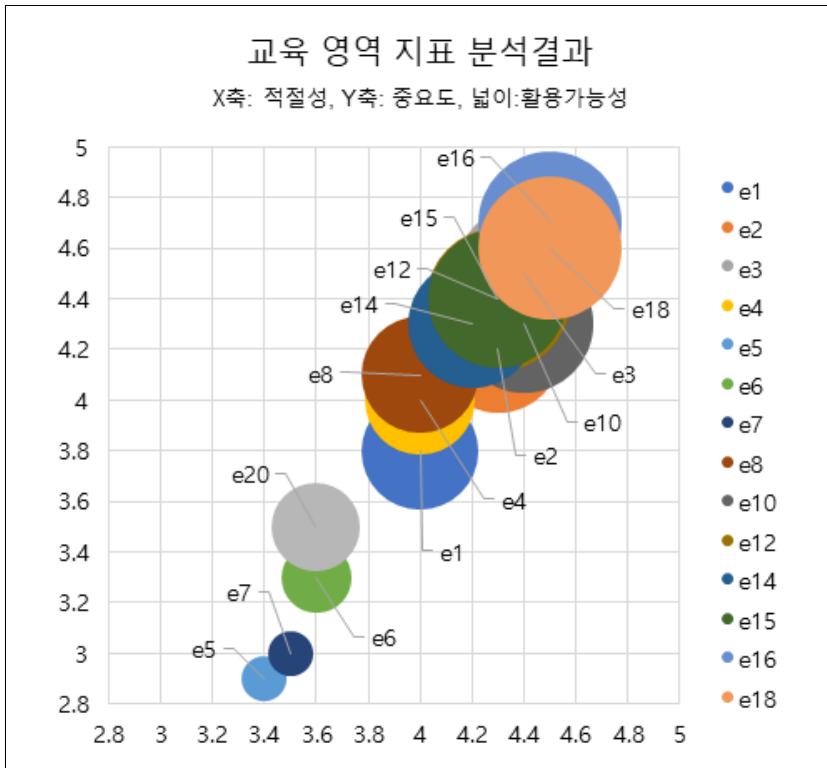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바. 교육

‘교육’ 영역 내 세부 지표의 적절성을 살펴보면, e16 지표(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의 적절성 평균은 4.500(CVR: 1.000, CV: 0.111, 수렴도: 0.500), e18 지표(특수학교(급)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의 적절성 평균은 4.500(CVR: 1.000, CV: 0.111, 수렴도: 0.500), e3 지표(특수교육 대상자 수)의 적절성 평균은 4.400(CVR: 1.000, CV: 0.111, 수렴도: 0.50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영역 세부 지표의 중요도는 적절성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한편, 해당 영역 내 세부 지표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면, e12 지표(교사 1인당 학생 수)의 활용 가능성 평균은 4.500(CVR: 0.800, CV: 0.149, 수렴도: 0.500), e16 지표(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의 활용 가능성 평균은 4.500(CVR: 1.000, CV: 0.111, 수렴도: 0.500), e18 지표(특수학교(급)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의 활용 가능성 평균은 4.500(CVR: 1.000, CV: 0.111, 수렴도: 0.50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8] 지표 분석 결과: 교육



출처: 저자 작성

e2 지표는 학령기 인구 대비 학교 배치 현황을 평가하고,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교육 환경 개선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하지만, 학교 수만으로는 학급당 학생 수, 시설 수준 등 질적 요소를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보조 지표와 함께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e3 지표는 특수교육 서비스 수요 및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지만, 단순히 대상자 수만으로 특수교육 수준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특수학교 정원 비율, 교사 1인당 학생 수, 프로그램 참여율 등의 보조 지표를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e4 지표는 지역 직업교육의 재정적 기반과 주민 접근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지만, 단순히 예산 규모만으로 직업교육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취업률, 자격증 취득률 등의 보조 지표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e5 지표는 평생교육 인력의 지역별 배치를 평가하고, 인력 부족 지역에 대한 지원 방향을 설정하는 데 유용하지만, 평생교육사 수만으로 실제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나 주민 참여율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 건수, 참여율, 평생교육사 1인당 담당 인구 등의 보조 지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e6 지표는 1만 명당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를 통해 지역별 학습 인프라를 파악하고,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데 유용하지만, 참여율, 프로그램 만족도 등의 보조 지표와 결합하여 분석할 때 정책적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e8 지표는 지역주민의 학습 참여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자료로, 평생교육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참여율이 낮은 지역에 맞춤형 지원을 설계하는 데 유용하다는 견해가 있었다. e12 지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반영하여 교육 환경의 적정성과 교사 배치의 형평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며,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여 교사 확충 및 교육 여건 개선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e14 지표는 학급당 학생 수를 통해 학습 환경과 교사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최근 서울 기준으로 특정 자치구(강남 3구 등)에서만 과밀 학급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학령 인구 감소로 학생 수는 줄어드는 반면, 교원 수급 감소로 인해 학급당 학생 수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 지표 해석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e15 지표는 특수교육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e16 지표는 교·강사 수를 활용하여 평생교육 제공 역량을 평가하는 기초 자료로 유용하지만,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나 주민 참여 수준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어, 보조 지표와 함께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e18 지표는 특수교육 학급 배치와 운영의 적정성을 진단하는 데 유용하며, 과밀 학급 문제 해소 및 적정 학급 규모 유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e20 지표는 지역 내 교육 여건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개인 수준의 상황과 목적에 따른 변수가 크게 작용하여 적절성, 중요성,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3-8〉 교육 주관식 응답 요약

영역	주관식 응답 요약
e2	• 학령기 인구 대비 학교 배치 현황을 비교하고,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교육 환경 개선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자료임. 다만, 단순히 학교 수만으로는 학교의 규모, 학급당 학생 수, 시설 수준 등 질적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 같은 보조 지표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음.
e3	• 해당 지표는 특수교육 서비스 수요 파악이나 지역 간 교육 격차 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지표임. 다만, 단순히 대상자 수만으로는 특수교육 수준을 포괄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상자 대비 특수학교 정원 비율, 교사 1인당 학생 수, 프로그램 참여율 등의 보조 지표 등을 함께 활용 가능함.

영역	주관식 응답 요약
e4	이 지표는 지역 직업교육의 재정적 기반과 주민 접근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함. 다만, 단순히 예산 금액만으로 직업교육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취업률, 자격증 취득률 등의 보조 지표를 함께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함.
e5	이 지표는 평생교육 인력의 지역별 배치를 파악하고,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 방향을 제시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다만, 단순 평생교육사 수만으로는 실제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나 주민 참여율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프로그램 운영 건수, 참여율, 평생교육사 1인당 담당 인구와 같은 보조 지표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e6	1만 명당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는 지역별 학습 인프라를 파악하고,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데 유용하며, 참여율, 프로그램 만족도 등 보조 지표와 결합하여 활용할 때 정책적 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음.
e8	평생학습 참여율은 지역주민들의 학습 참여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평생교육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참여율이 낮은 지역에 맞춤형 지원을 설계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판단됨.
e12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교육환경의 적정성과 교사 배치의 형평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지역별 차이를 통해 교사 확충 및 교육 여건 개선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14	- 최근 서울 기준 학급당 학생 수의 특성을 살펴보면 특정 자치구(강남 3구 등)에서만 과밀 학급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음. 다만, 이와 연계하여 교원의 수급도 감소하고 있어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는 형태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지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연계하여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유사한 의견임). - 학급당 학생 수는 학습 환경과 교사 배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판단됨.
e15	특수교육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판단됨.
e16	교강사의 숫자가 많더라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나 주민 참여 수준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을 수 있음. 따라서 교강사 수는 평생교육 제공 역량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나, 적절성 측면에서는 보조 지표와의 결합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교육 효과성을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음.
e18	특수교육학급 배치와 운영의 적정성을 진단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과밀 학급 문제 해소와 적정 학급 규모 유지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지표로 판단됨.
e20	해당 지표의 경우 지역 내 교육 여건을 파악하는 정보로 사용되기에는 개인 수준의 상황이나 목적에 따른 결과적인 측면이 크게 반영된다고 보임. 따라서 적절성, 중요성, 활용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보통 미만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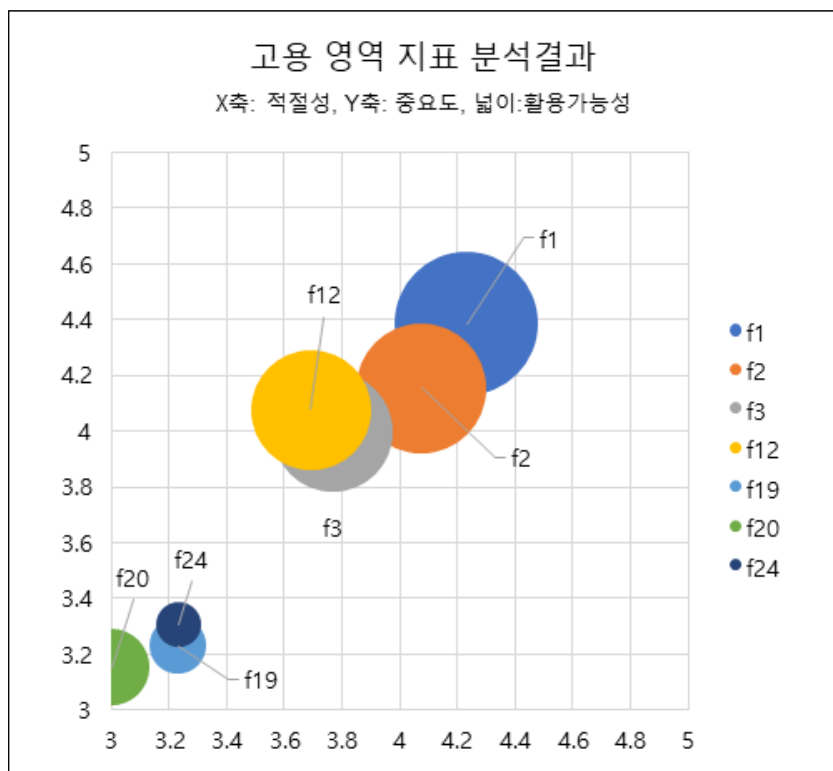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사. 고용

‘고용’ 영역 내 세부 지표의 적절성을 살펴보면, f1 지표(고용률)의 적절성 평균은 4.231(CVR: 0.692, CV: 0.165, 수렴도: 0.500), f2 지표(실업률)의 적절성 평균은 4.077(CVR: 0.538, CV: 0.179, 수렴도: 0.500), f3 지표(장애인 의무고용률)의 적절성 평균은 3.769(CVR: 0.231, CV: 0.236, 수렴도: 0.500), f12 지표(경력단절여성 비율)의 적절성 평균은 3.692(CVR: 0.077, CV: 0.246, 수렴도: 0.50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세부 지표의 활용 가능성은 적절성 분석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한편, 해당 영역 세부 지표의 중요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f1 지표(고용률)의 중요도 평균은 4.385(CVR: 0.846, CV: 0.143, 수렴도: 0.500), f2 지표(실업률)의 중요도 평균은 4.154(CVR: 0.692, CV: 0.159, 수렴도: 0.500), f12 지표(경력단절여성 비율)의 중요도 평균은 4.077(CVR: 0.385, CV: 0.203, 수렴도: 1.000), f3 지표(장애인 의무 고용률)의 중요도 평균은 4.000(CVR: 0.692, CV: 0.139, 수렴도: 0.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9] 지표 분석 결과: 고용



출처: 저자 작성

f1 지표는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 인원을 포함하는 별도의 통계를 생성할 필요가 있으며, 65세 이상 고용률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f2 지표는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 인원을 반영한 실업률 통계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15세 이상 연령 기준을 보다 현실적인 연령대로 조정하거나 세분화하여 산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f3 지표의 경우, 지표명에 따라 상시근로자 기준이 아니라 의무고용 대상 장애인 근로자 대비 실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를 반영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경제적 자립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이지만, 장애인 고용 유지율 역시 중요한 요소이므로, 임금 수준과 장애 유형별 의무고용 비율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의 고용률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f12 지표는 고용 영역에서 자영업자 비중 등의 추가적 활용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여성과 경력단절 여성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률을 반영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고용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또한, 15~54세라는 연령대 설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지표 산식에서 시군구 단위로 측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도 단위로 측정되고 있다면 시군구 단위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f19 지표는 단순 신규 기업 수만으로는 각 기업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가치 창출 정도, 경제적 성과 등을 평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사회적 기업 관련 지표들은 지역 고용 여건을 분석하거나 고용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적절성, 중요성, 활용 가능성이 낮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f20 지표는 기존 사회적 협동조합 숫자가 포함되는지, 신규 설립 인가만을 반영하는지에 따라 활용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만약 신규 설립 인가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활용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지표 전반이 지역 고용 여건 분석이나 정책 설계 시 적절성, 중요성, 활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견해가 있었다.

f24 지표는 정확한 평균 생존 기간에 대한 공식 통계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 관련 지표들은 지역 고용 여건 분석이나 정책 설계 시 활용성이 낮아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3-9〉 고용 주관식 응답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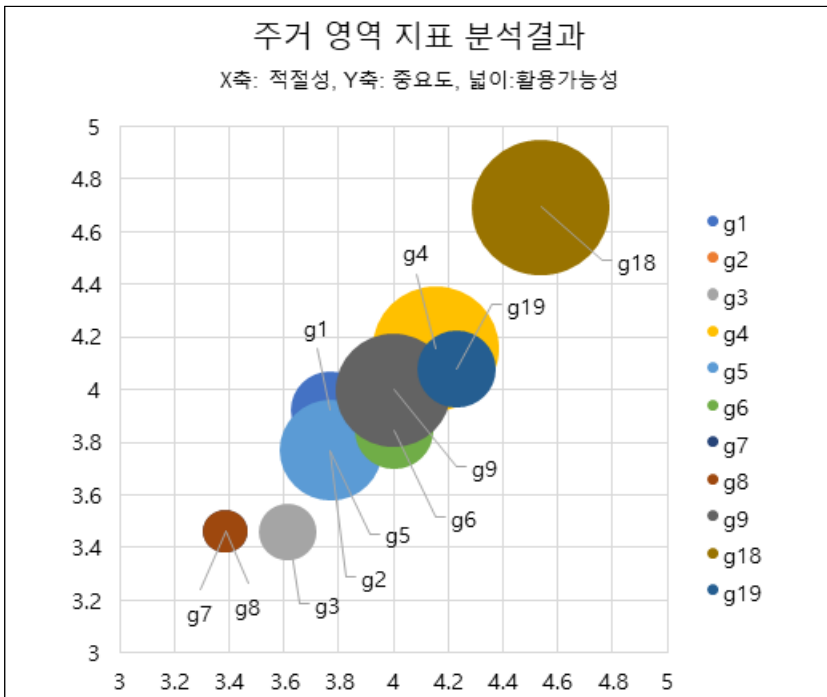
영역	주관식 응답 요약
f1	• 실제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 인원을 포함하는 통계를 별도 생성 필요 • 65세 이상 고용률
f2	• 실제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 인원을 포함하는 실업률 생성 필요 • 장기적으로는 15세 이상을 현실적인 연령대로 올리거나 세분화해서 산출할 필요가 있음.
f3	• 지표명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아닌 의무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근로자 대비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수가 조금 더 적합할 수 있어 보임. •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고용촉진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척도이나 의무고용률만큼 중요한 부분이 장애인고용유지율임. 따라서 장애인고용유지율 및 임금 수준, 장애 유형별 의무고용 비율 지표 등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민간기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고용률을 별도 관리 필요
f12	• 고용 영역에서 자영업자 비중 등 추가 활용 가능 •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여성과 실제 경력이 단절된 여성 구분할 수 있는 지표 개선 필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률이 더 고용지표에 적합할 것임. • 통계청에서 이렇게만 제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54세라는 연령대가 납득되는 건 아니라서 분모에 해당하는 연령대는 통계청에서 재검토하거나 가능하면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임. • 지표 산식에는 시군구 단위로 측정되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어, 확인이 필요함. 만약 시도 단위로 측정되고 있다면, 시군구 단위로 측정이 필요함(답변은 측정 산식을 기준으로 작성).
f19	• 단순 신규 기업 수만으로는 각 기업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가치창출 정도, 경제적 성과 등을 평가하기 어려움.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표들은 지역의 고용 여건을 파악하거나, 지역고용 관련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지표로서의 적절성, 중요성, 활용 가능성 모두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됨.
f20	• 기존 사회적 협동조합 숫자가 포함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신규 설립 인가만으로 계산이 되는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는데, 신규 설립 인가만으로 산출이 된다면 활용도가 낮다고 보임.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표들은 지역의 고용 여건을 파악하거나, 지역고용 관련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지표로서의 적절성, 중요성, 활용 가능성 모두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됨.
f24	• 정확한 평균 생존 기간에 대한 공식 통계는 현재 제공되지 않고 있음.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표들은 지역의 고용 여건을 파악하거나, 지역고용 관련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지표로서의 적절성, 중요성, 활용 가능성 모두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됨.

출처: 저자 작성

아. 주거

주거 영역 세부 지표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g18 지표(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의 적절성 평균은 4.538(CVR: 1.000, CV: 0.110, 수렴도: 0.500), 중요도 평균은 4.692(CVR: 1.000, CV: 0.098, 수렴도: 0.500), 활용 가능성 평균은 4.308(CVR: 0.846, CV: 0.191, 수렴도: 0.50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지표들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 지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절성, 중요도, 활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0] 지표 분석 결과: 주거



출처: 저자 작성

g2 지표는 지역 내 주택 공급 상황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 유용하지만, 주거복지 관점에서 주택 문제가 가지는 복합적이고 질적인 요소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었다.

g3, g5 지표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군구 단위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g4 지표는 주거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지만, 주택의 물리적 상태, 설비, 안전성이 반영되지 않아 단순 재고량만으로 주거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재고량이 많더라도 입지 요건이 취약하거나 주택 유형이 수요와 맞지 않는 경우 주거 안정성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으며, 활용도를 높이려면 시군구 단위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g7, g19 지표는 산식상 시군구 단위로 측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도 단위로 측정되고 있다면 시군구 단위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g9 지표에서 ‘재고’는 단순히 등록된 임대주택의 총량을 의미할 뿐, 실제 임대 여부나 공실 상태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대 또는 과소 추정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또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군구 단위로 측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g18 지표는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보도자료에서 청년 및 노인 수치가 따로 제공되고 있어 전체, 청년, 노인으로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보다 세밀한 분석을 위해 시군구 단위 측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g19 지표는 기존 정의에 새로운 유형의 비주택 거처(예: 차량 거주, 쉼터 등)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지표 산식상 시군구 단위로 측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측정 단위가 시도 단위일 경우 시군구 단위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표 3-10〉 주거 주관식 응답 요약

영역	주관식 응답 요약
g2	• 주택보급률을 통해 지역 내 주택 공급 상황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지만, 주택 문제(주거복지 차원)가 가지고 있는 복합적이고 질적인 측면을 실질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g3	•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군구 단위로 측정이 필요함.
g4	• 주거 안전성 평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지표이기는 하나, 주택의 물리적 상태, 설비, 안전성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단순히 재고가 많다고 해서 주거 안정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가령 재고량이 많아도 입지 요건이 취약하거나 주택 유형이 수요와 맞지 않는 경우 주거 안정성 효과는 낮을 수 있음. •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군구 단위로 측정이 필요함.
g5	•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군구 단위로 측정이 필요함.
g7	• 지표 산식에는 시군구 단위로 측정되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어, 확인이 필요함. 만약 시도 단위로 측정되고 있다면, 시군구 단위로 측정이 필요함.
g9	• “재고”는 단순히 등록된 임대주택의 총량을 의미할 뿐, 실제 임대 중인지, 공실 상태인지 등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과대 및 과소 추정의 위험이 있음. •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군구 단위로 측정이 필요함.
g18	•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는 없지만 보도자료에 청년, 노인 수지도 따로 제공하고 있어서 전체, 청년, 노인으로 세분화함. •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군구 단위로 측정이 필요함.
g19	• 새로운 유형의 비주택 거주(예: 차량 거주, 쉼터 등)를 정의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지표 산식에는 시군구 단위로 측정되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어, 확인이 필요함. 만약 시도 단위로 측정되고 있다면, 시군구 단위로 측정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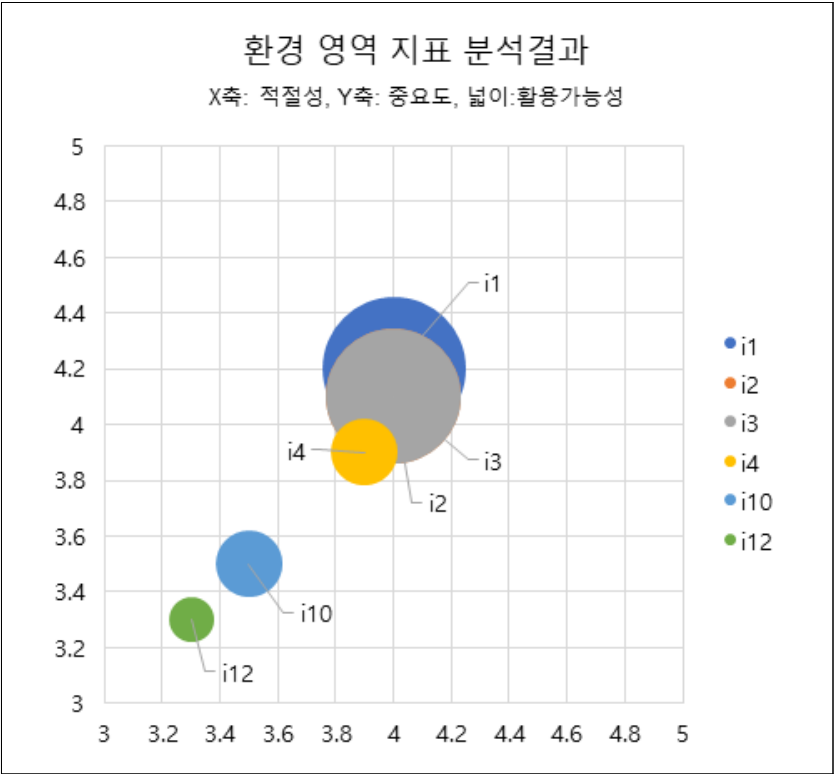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아. 환경

환경 영역 세부 지표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i1 지표(미세먼지 주의보·경보 연간 발령 횟수)의 적절성 평균은 4.000(CVR: 0.400, CV: 0.194, 수렴도: 0.750), 중요도 평균은 4.200(CVR: 0.800, CV: 0.143, 수렴도: 0.375), 활용 가능성 평균은 3.900(CVR: 0.400, CV: 0.242, 수렴도: 0.750)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i2 지표(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연간 발령 횟수)의 적절성 평균은 4.000(CVR: 0.400, CV: 0.194, 수렴도: 0.750), 중요도 평균은 4.100(CVR: 0.600, CV: 0.171, 수렴도: 0.375), 활용 가능성 평균은 3.800(CVR: 0.200, CV: 0.258, 수렴도: 0.87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지표는 상대적으로 적절성, 중요도, 활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 지표 분석 결과: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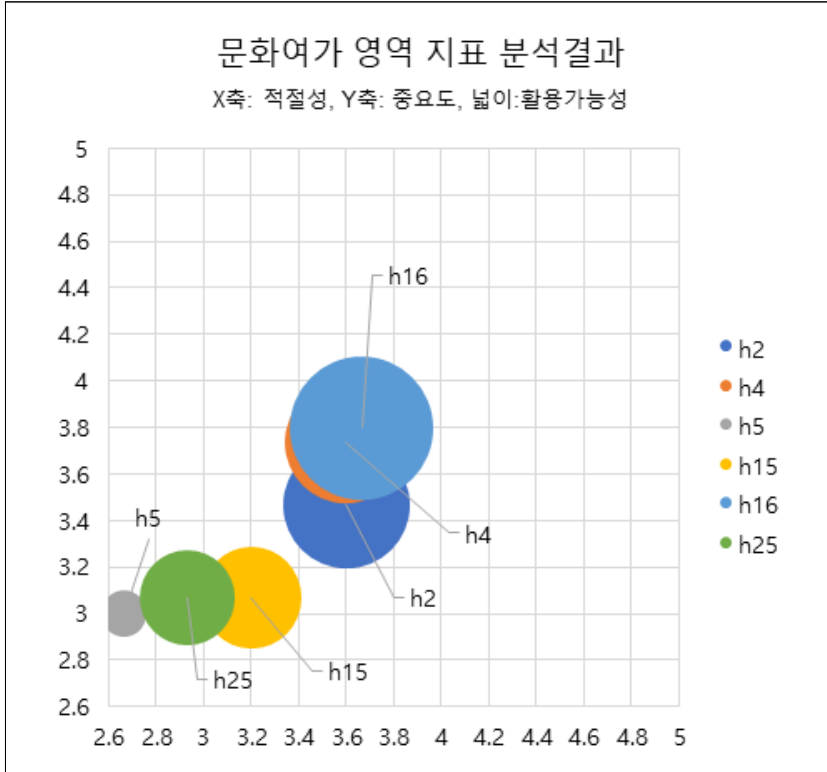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자. 문화여가

‘문화여가’ 영역 내 세부 지표의 적절성을 살펴보면, h16 지표(도서관 1관당 인구 수)의 적절성 평균은 3.667(CVR: 0.200, CV: 0.215, 수렴도: 0.500), h2 지표(1인당 문화 관련 예산)의 적절성 평균은 3.600(CVR: 0.200, CV: 0.198, 수렴도: 0.500), h4 지표(총예산 대비 문화 관련 예산 비율)의 적절성 평균은 3.600(CVR: 0.200, CV: 0.244, 수렴도: 0.50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영역 세부 지표의 활용 가능성 분석 결과는 적절성 분석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한편, 해당 영역 내 세부 지표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h16 지표(도서관 1관당 인구수)의 중요도 평균은 3.800(CVR: 0.333, CV: 0.219, 수렴도: 0.500), h4 지표(총예산 대비 문화 관련 예산 비율)의 중요도 평균은 3.733(CVR: 0.200, CV: 0.267, 수렴도: 0.750), h2 지표(1인당 문화 관련 예산)의 중요도 평균은 3.467(CVR: 0.200, CV: 0.232, 수렴도: 0.50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2] 지표 분석 결과: 문화여가



출처: 저자 작성

h2 지표는 지역별 문화 예산 수준을 비교하는 데 적절하며, 시군구별 비교를 통해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있었다. 다만, 특정 분야의 1인당 예산액을 활용해 중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1인당 예산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단순 금액 지표를 넘어 예산 활용률이나 주민당 문화 혜택의 체감도를 측정하는 추가 지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h4 지표는 총예산 규모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 비교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각각 집행되는 문화 예산을 고려해야 하며, 1인당 예산보다는 총예산 대비 문화예산 비율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문화예산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h5 지표는 지역의 문화정책 추진력과 문화활동 활성화 정도를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나,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한 비교 가능한 모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단순히 단체 수나 기업 수를 활용하기보다는 이들의 활동 수준과 예산 규모를 포함한 통계가 보다 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문화시설(영리·비영리 포함)과 공공문화서비스 제공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또한, 지역 내 문화예술인의 규모와 활동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필요하지만, 관련 자료의 생산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비공식 단체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h15 지표는 도서관 장서 수보다 도서관 자리 수와 같은 공간 관련 지표가 더욱 적절하다는 견해가 있었다. 정보 접근 방식이 변화하면서 단순 보유 장서량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전자책이 활성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전자자료 포함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도서관 인프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1관당 인구수보다 1인당 장서 수가 적절하지만, 1인당 지표 특성상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값이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h16 지표는 지역 내 작은 도서관을 포함한 시설 현황을 반영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시군구별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은 지표로 평가되었다. 다만, 물리적 인프라 확보 수준을 측정하는 데 유용하지만, 도서관 규모를 고려하지 않으면 작은 도서관이 많은 지역이 과대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도서관 규모를 반영한 지표로 수정이 필요하며, 추가 지표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또한, 단순 인구 대비 수치 외에도 지역 내 교통망 및 인프라와의 연계를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h25 지표는 작은 도서관이 포함된 지표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문화 활동 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해당 지표만으로 직접적인 정책 의사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우며, 단순 방문 횟수 외에 도서 대출 수나 행사 참여율 같은 추가 지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또한, 지역주민의 문화여가 활동 활성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존하는 지표 중 문화여가 활동과 관련된 지표로서 의미가 있지만, 특정 지역의 문화 수준을 대표하는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3-11〉 문화여가 주관식 응답 요약

영역	주관식 응답 요약
h2	• 기본적인 지역의 문화 관련 예산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적절해 보임. 시군구별 비교 등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표임. 지자체의 총예산을 총인구수로 나눌 경우(1인당 예산 총액) 지역별로 차이가 날 것임. 따라서 특정 분야의 1인당 예산액을 활용하여 그 분야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 이 지표를 활용할 경우, 인구 밀집 지역의 1인당 예산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됨(1인당 예산 총액도 낮을 것으로 예상됨). 단순 금액 지표에 그치지 않고, 예산의 실제 활용률, 또는 주민당 문화적 혜택의 체감도를 측정하는 추가 지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h4	• 총예산 수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 비교 가능한 지표로 활용이 제한적으로 보임. 총예산 중 일반회계로 집행되는 문화 관련 예산이 있을 수 있고, 특별회계로 집행되는 예산이 있을 수 있어서 정확한 지표로 보기 힘들.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은 이유로 1인당 예산보다는 총예산 대비 특정 분야 예산의 비율을 활용하여 중요도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타 지자체와의 비교를 위해 문화예산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h5	• 지역의 문화 관련 정책의 능동성이나 문화 관련 활동 활성화 정도를 볼 수 있는 지표로 보이나 인구 규모 기준 등 비교 가능한 모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단순 단체 수, 기업 수는 의미가 없음. 법인 단체보다는 이들의 활동 및 예산에 관련된 통계가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공공문화서비스 제공인력이 더 타당해

영역	주관식 응답 요약
	보임. 시군구 자료 있음(지역문화지표). 전문예술법인/단체, 사회적 기업보다는 문화시설(영리이든 비영리이든)이 더 중요함. 지역의 문화여가 관련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의 규모와 활동의 활성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하지만 문화예술인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가 생산되고 있는지 의문임. H5 지표는 이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보임. 하지만 이 지표가 특정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 정도를 대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데이터 수집 시, 비공식 단계까지 고려하여 실제 현황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h15	디지털 등의 발달로 도서관 장서 수보다는 도서관 자리 수와 같은 공간에 대한 지표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됨. h15, h16, h25 중 제일 조사가 쉬운 h15는 조사 필요. 다양한 형태의 장서가 있을 텐데 단순 보유 양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음. 정보 접근이 도서관만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대가 지나 정보의 수를 의미하는 지표의 중요성이 다소 낮아짐. 전자책이 활성화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도서관 장서가 전자책을 포함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 도서관 인프라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도서관 1관당 인구수보다는 1인당 장서 수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장서 수에 도서관 규모가 반영될 것이기 때문임. 하지만 이 지표 역시 1인당 지표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함. 전자도서관이나 디지털 자료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를 포함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h16	- 지역 내 작은 도서관 같은 지역사회 도서관 시설 포함 확인 필요. 시군구별 비교 등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표임. 문화여가 부분에서 도서관 이외의 시설들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함. 물리적 인프라의 확보 정도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지표라고 생각함. 하지만 도서관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작은 도서관이 많은 지역의 상황이 과대 평가될 수 있음. 도서관의 규모를 고려한 지표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관련 지표가 생산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함. - 장서보다는 도서관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도서관 규모를 고려한 인프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면, 1인당 장서 수 지표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함. 단순 인구 대비 외에도 지역 내 교통망 및 인프라와의 연계성을 함께 분석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h25	- 위와 마찬가지로 작은 도서관이 포함된 지표인지 확인 필요. 문화 생활 활동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임. 해당 지표를 근거로 직접적인 정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도서관이 현재 3개인데, 이 가운데 방문자 수가 가장 중요함. 현재 생산되고 있는 지표 중 지역주민의 문화여가 활동 활성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많지 않아, 생산되고 있는 지표 중 문화여가 활동과 관련된 지표로 선택된 것으로 보임. - 도서관 이용 활성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라고 보이지만, 이 지표를 특정 지역의 문화여가 수준을 대표하는 지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활용 가능성은 높지만, 적절성이 낮아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단순 방문 횟수만이 아니라, 도서 대출 수나 행사 참여 수와 같은 부가적인 지표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출처: 저자 작성

차.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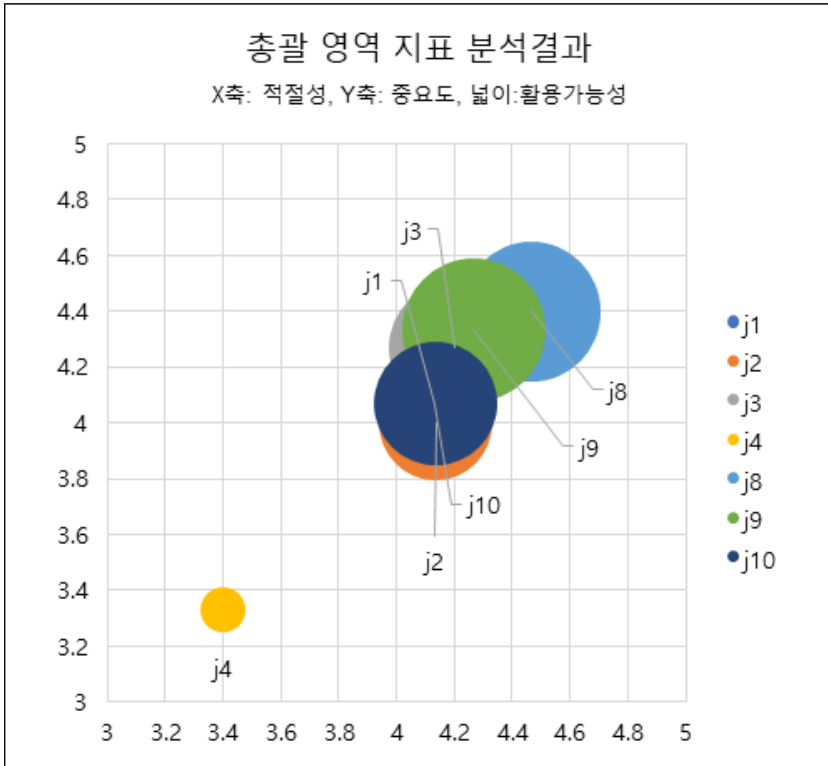
총괄 영역 세부 지표의 적절성, 중요도, 활용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비율, 차상위계층 수급자 비율, 총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j8 지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의 적절성 평균은 4.467(CVR: 0.867, CV: 0.138, 수렴도: 0.500), 중요도 평균은 4.400(CVR: 0.867, CV: 0.139, 수렴도: 0.500), 활용 가능성 평균은 4.333(CVR: 0.867, CV: 0.182, 수렴도: 0.500)인 것으로 나타났다.

j9 지표(차상위계층 수급자 비율)의 적절성 평균은 4.267(CVR: 0.733, CV: 0.159, 수렴도: 0.500), 중요도 평균은 4.333(CVR: 0.733, CV: 0.161, 수렴도: 0.500), 활용 가능성 평균은 4.400(CVR: 0.867, CV: 0.139, 수렴도: 0.500)인 것으로 나타났다.

j3 지표(총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의 적절성 평균은 4.200(CVR: 0.733, CV: 0.155, 수렴도: 0.500), 중요도 평균은 4.267(CVR: 0.733, CV: 0.159, 수렴도: 0.500), 활용 가능성 평균은 4.200(CVR: 0.733, CV: 0.198, 수렴도: 0.50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13] 지표 분석 결과: 총괄



출처: 저자 작성

j1 지표는 사회보장 급여 접근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나, 노인의 70%가 수급반도록 설계되어 있어 절대적인 수급률 자체는 비교적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었다. 다만, 시군구별 비교를 위해 활용할 수 있으며, 비수급 고령층의 소득 기준, 신청 여부 등 세부 원인을 분석하는 보완적 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j2 지표는 사회수당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한 공공부조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의미가 크다는 견해가 있었다. 수급률을 연령대, 장애 정도, 장애 유형별로 세분화할 경우 자료의 활용

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j3 지표는 중앙정부 보조금 매칭 비율이 높아 자체사업 예산 등의 보조적 지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었다. 예산보다는 결산이 더 정확한 자료이나, 결산 자료 생산 시기가 늦기 때문에 별도로 활용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 복지 예산의 실제 집행률과의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j4 지표는 중앙정부의 총액 인건비제에 의해 인력 운영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인구 대비 사회복지 인력이나 돌봄 인력 등의 보조적 지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었다. 또한, 전체 공무원 수보다는 사회복지 공무원 수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공무원 수 중 사회복지직 비율을 반영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더불어,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지표 값이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순 비교를 지양하고 도시화 수준, 행정구역 면적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j8 지표는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을 평가하는 데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비수급 빈곤층 규모를 반영하는 보조 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급여 유형별 세분화가 필요하며, 수급자의 연령대 및 가구 형태별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j9 지표는 지역의 복지정책 적극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는 의견과 법정 차상위 계층의 종류별 통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실질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자산계층에 대한 지원 방식(현금, 서비스 등)과 그 효과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j10 지표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며, 근로연령층 수급자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근로연령층의 비율보다는 근로능력 판정별 수급자 비율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근로연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비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표 3-12〉 총괄 주관식 응답 요약

영역	주관식 응답 요약
j1	• 사회보장 급여 접근성을 볼 수 있는 지표이나 대체적으로 높아 비교 의미가 크지 않을 수도 있음. 노인 중 70%가 수급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사실 수급률은 큰 의미가 없지만, 그럼에도 시군구별 비교 측면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음. 비수급 고령층에 대한 세부 원인 분석(소득 기준, 신청 여부 등)도 필요해 보임.
j2	• 사회수당으로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부조로 운영되고 있기에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큼. 연령대, 장애 정도, 장애 유형별로 수급률을 세분화하면 자료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j3	• 중앙정부 보조금 매칭 비율이 높아 자체사업 예산 등 보조적인 지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예산보다는 결산이 더 정확한 자료이나 결산 자료 생산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기에 별도로 활용 가능성이 높음. 사회복지 예산의 실제 집행률과 비교 분석도 필요해 보임.
j4	•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총액 인건비제에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어 인구 대비 사회복지 인력이나 돌봄 인력 등의 보조적 지표가 필요해 보임. • 공무원 수 중 사회복지직 비율이 필요함. 전체 공무원 수보다는 사회복지 공무원 수가 더 필요함. 공무원 전체 수보다 지역사회보장에 한정된 인력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인구수 대비 지표는 언제나 주의가 필요함. 인구가 많은 지역의 지표가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지표 해석 시 지역별 특성(도시화 수준, 행정구역 면적 등)을 반영하여 단순 비교의 오류를 줄일 필요가 있음.
j8	• 기본적인 지역의 사회보장 데이터로 의미는 있으나 비수급 빈곤층 규모 등 보조적 지표 필요성이 있음. • 급여별로 세분화해야 함. 수급자의 연령대 및 가구 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데이터도 함께 볼 필요가 있음.
j9	• 지역의 복지정책 적극성을 볼 수 있는 지표로 보임. 법정 차상위 종류별 통계가 필요함. 실질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자산계층에 대한 지원 방식(현금, 서비스 등)과 그 효과를 함께 볼 필요가 있음.
j10	• 이 지표가 의미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으며 근로연령층 수급자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보임. 근로연령층의 비율보다는 근로능력 판정별 수급자 비율이 더 필요함. 근로연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율과 비교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보임.

출처: 저자 작성

3. 지표 개선 관련 기타 의견

지역사회보장지표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돌봄(아동) 영역에서는 대안적 돌봄 차원에서 그룹홈, 아동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는 아동 비율을 지표에 포함할 필요가 있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돌봄(성인) 영역에서는 장기요양재가급여 이용자 비율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보호안전 영역에서는 아동인구수당 보호전담요원 비율과 가정폭력 발생 비율을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보호체계가 지역 내 보호 대상 아동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건강 영역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건강 관리 지표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는 복수의 의견이 있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활동 장애율, 노쇠 상태, 구강 건강, 치매 진단율 등의 지표를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취약계층의 건강에 대한 지표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영역에서는 학교 1인당 교육비 외에도 평생교육 지원 대비 이용률과 학교생활 적응 지원 대비 이용률을 지역별로 반영한 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지역사회보장 정책과 관련된 지표의 보완이 요구되었는데, 예를 들어 다문화 학생 관련 지표를 제안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고용 영역에서는 취약계층의 고용 관련 지표가 요구된다. 사회적 기업 내 취약계층의 고용 유형 비율과 취약계층 고용률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주거 영역에서는 주택 임대료 비율과 주거 환경 만족도를 지표에 추가하여, 주거 안정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문화여가 영역에서는 문화 바우처 수급률과 시민의 문화 활동 참여율을 측정하는 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예술시설 수를 기반으로

지역의 문화 여가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환경 영역에서는 지역별 환경 지표를 세분화하여 대기질, 수질, 폐기물 관리 등을 포함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교통 관련 통계를 추가하고, 환경 변화에 맞는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다만, 해당 영역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지표의 추가가 큰 의미를 가질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총괄 영역에서는 각 영역의 지표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 단위에서 집행 가능한 정책과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지표를 중심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제2절 지역사회보장지표 관리를 위한 구조 설정

1. 세부 지표에 대한 위계 설정

제3장 제1절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세부 지표의 위계를 시범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때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1) 영역별로 검토 기준에서 평균 이상인 지표, 2) 검토 기준별 내용 타당도가 0.4 초과, 변이계수가 0.3 미만, 수렴도가 0.75 미만인 지표, 3) 세 기준 중 1개 이상 1-2 조건에 해당되는 지표.

10대 영역의 중요도를 검토한 결과, 총괄 영역, 돌봄(성인), 돌봄(아동), 건강, 보호안전 영역이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핵심 지표를 선정할 때, 이들에서 중요 영역에 해당되는 지표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표 3-13〉 세부 지표 간명화 결과

영역 전→후	지표 코드	지표명
돌봄(아동) 13→7	a5	만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설립 주체별 어린이집 정원
	a6	만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특수보육어린이집 정원
	a7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a9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a10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총족률
	a17	등록 발달장애아동 백 명당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률
	a23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비율
돌봄(성인) 15→7	b1	장애인구 비율
	b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인구 비율
	b16	노인인구 비율
	b17	요보호 노인인구 비율
	b18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b22	노인 만 명당 지역사회 거주시설 수
	b28	노인 만 명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수
보호안전 8→6	c3	아동보호전문기관당 아동 수
	c4	노인보호전문기관당 노인 수
	c6	학대아동 발견율
	c7	학대노인 발견율
	c9	1인당 안전 및 범죄예방 예산
	c15	노인학대 재학대 사례 비율
건강 21→13	d3	전체 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 비율
	d5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률
	d6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d7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
	d9	건강생활 실천율
	d10	현재 흡연율
	d11	고위험 음주율
	d13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d17	자살사망률
	d19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
	d21	인구 100만 명당 응급의료기관 수
	d22	연간 미충족의료율

영역 전→후	지표 코드	지표명
	d23	응급 시 119 구급차 현장 도착 시간 30분 이내 도달률
교육 15→8	e2	학령기 인구 1만 명당 학교 수
	e3	특수교육 대상자 수
	e10	학생 1인당 교육 투자액
	e12	교사 1인당 학생 수
	e14	학급당 학생 수
	e15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
	e16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
	e18	특수학교(급)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
고용 7→3	f1	고용률
	f2	실업률
	f3	장애인 의무고용률
주거 11→5	g4	공공부문 임대주택 재고
	g6	1인당 주거 면적
	g9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g18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g19	주택 이외의 거주 가구 비율
환경 6→3	i1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연간 발령 횟수
	i2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연간 발령 횟수
	i3	오존 주의보 연간 발령 횟수
문화 6→1	h16	도서관 1관당 인구 수
총괄 7→6	j1	기초연금 수급률
	j2	장애인연금 수급률
	j3	총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
	j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j9	차상위계층 수급자 비율
	j10	근로연령층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출처: 저자 작성

2. 데이터 특성에 따른 구조 설정

기존 지역사회보장지표 원자료는 생산 지표/미생산 지표가 혼합된 형태이며, 조사통계와 행정·가공통계가 통합되어 관리되었다. 특히 각 지표의 결과와 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통계가 통합되어 관리·제공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데이터 이용 및 관리의 편의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구 비율과 노인인구 비율을 연도별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연도별 지표값을 각각 선택하여 추출, 이를 별도의 스프레드시트에 옮겨 새로운 표를 작성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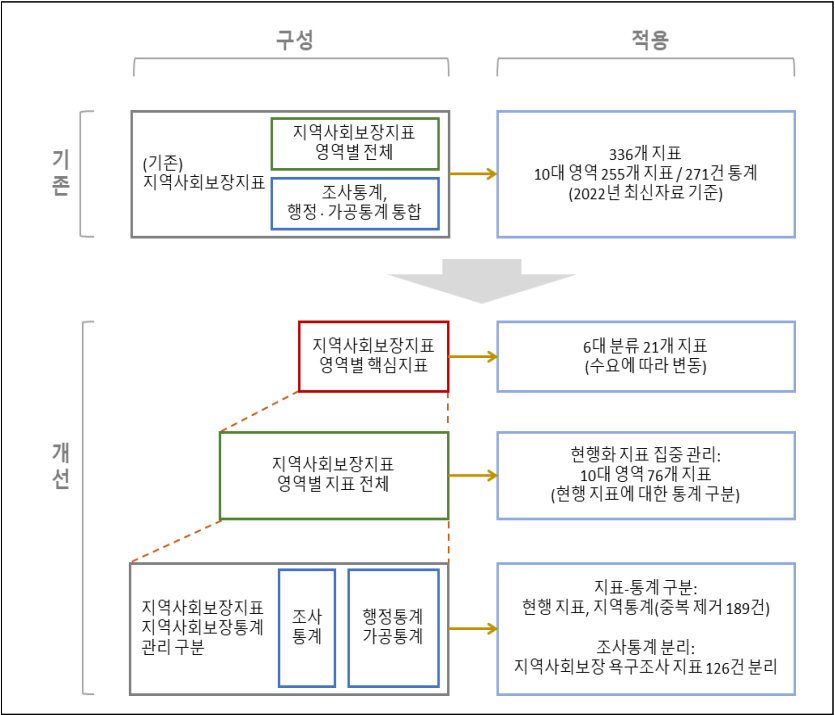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표체계의 구조적 변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검토할 수 있다. 첫째, 지표의 지속성과 연속성, 비교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사통계와 행정통계·가공통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보장지표 중 지역사회보장 욕구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지표는 매년 생산되는 지표가 아니며 지표를 생산하기 위해 수행된 조사가 공통된 표집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내-지역 간 비교가 불가하다. 그 외에 일부 영역(문화 등)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조사통계 또한 지표 관리의 차원에서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통계로 설정될 수 있는 일부의 조사통계(예.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하여 생산된 통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 지표체계에서는 지표 산출 결과와 지표 산출을 위한 각종 통계가 혼합되어 제공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표 산출을 위하여 활용되는 통계의 중복(예. 지역별 인구수)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표 외에 산출 통계에 대한 관리 및 활용의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통계를 별도로 분리, 통계에 대한 고유 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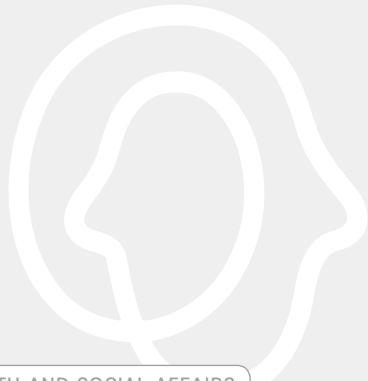
둘째, 각 영역 및 세부 지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현행화 등 관리와 제공 및 활용 촉진 전략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2022년 말 기준 336개 지표 가운데 매년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지역 내 -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하며, 시군구 단위에서 산출되는 지표는 총 76개이다. 결과적으로 지표의 정책적 활용과 관리의 측면에서 이 지표 데이터(지표 결과와 통계를 포함)가 중점적으로 관리되고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라 판단할 수 있다. 특히 해당 데이터들은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생산하는 지표가 아닌, 타 출처를 통하여 수집된 지표이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 및 가공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관리 범위를 설정하고 지표 관련 업무(생산, 가공, 제공 등)를 이러한 범위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활용도가 높은 지표들을 선정하여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데이터 관리의 측면에서 강점을 가진다. 현재는 지표 결과에 대한 원자료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지표 데이터를 활용하는 주체들은 이를 별도의 가공을 통하여 활용한다. 특히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역 진단 등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게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의 노인인구 비율,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비율 등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지표이다. 이러한 지표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가칭)핵심 지표로 설정하여 공통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표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표 데이터 활용에 대한 문의 빈도를 축소할 수 있고 활용 결과에 산출이나 비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림 3-14] 지역사회보장지표 데이터 특성에 따른 구조 재설정(안)



출처: 저자 작성



제4장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 방향 설정

제1절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 범위 설정

제2절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 수요 검토

제3절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성 확대 방향

제4장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 방향 설정

제1절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 범위 설정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복지정책의 수립 및 성과 평가에서 점차 근거 기반(evidence-based) 의사결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법제도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 모두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법제도적 차원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여 정책 수행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복지정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실천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주민의 실질적 복지 욕구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보장지표’를 활용해 정책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지역 단위에서의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즉, 단체위임사무, 기관 위임사무) 외에도 자치사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조사와 통계작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인구 분포와 생활 여건을 분석하여 도시 계획 및 복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이나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지역의 보건 데이터를 수집·활용하여 지역에 특화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자치사무 및 관련 기반은 지역 차원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근거 기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통계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체계적 관리와 데이터의 활용성 확대를 이의 중요한 과제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보장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 차원의 사회보장 데이터는 단순히 사회보장 영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이나 정책적 수요를 보여준다거나 여타의 정책 영역에서의 성과 또는 영향과 긴밀하게 연관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 범위를 탐색적으로 설정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보장지표의 10가지 영역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계획)을 살펴보고, 해당 정책(계획)과 연관성이 높은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세부 지표는 무엇인지를 탐색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지역 사회보장 영역에 국한되어 활용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지역사회보장지표 영역별 지자체의 주요 정책 현황

지역사회보장지표는 돌봄(아동), 돌봄(성인),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총괄(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의 총 10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영역 구분은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 정의를 반영한 것으로(보건복지부, 2023.09.13.), ‘사회서비스’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제3조 4항).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표를 지역주민의 삶의 질 및 사회보장 관련 정책적 판단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사회복지) 영역을 아동 돌봄 및 성인돌봄, 보호·안전 등으로 보다 세분화·구체화함으로써, 총 10가지 영역을 도출하였다.

지역사회보장지표의 도입 및 활용 취지와 관련하여, 이의 영역 구분 및 영역별 세부 지표는 정책 산출이 아니라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설정되며, 각 정책 전략별로 지자체의 사회보장 수준 파악이 가능한 지표(수준 지표)와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노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역량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보건복지부, 2023. 9.13.). 이 때문에, 투입(input)-산출/결과(output)-영향(outcome) 간 엄밀한 논리적 연결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특성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지자체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외에 여타 정책 계획의 수립이나 이의 시행 및 평가에서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할 여지를 제공한다.

정책 분야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계획) 현황, 그리고 지역사회보장지표 영역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4-1>과 같다. 예를 들어, 인구/청년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변화(청년층 인구 포함)와 관련한 정책계획을 포함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영역에서는 돌봄(아동), 돌봄(성인),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총괄 등이 관련되는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아동정책이나 청소년정책과 관련한 정책계획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 분야는 돌봄(아동), 교육 등의 영역이, 그리고 주거/문화/환경 분야는 주거, 문화여가, 환경, 총괄 등의 영역이 관련될 것으로 예상한다.

〈표 4-1〉 지자체 주요 정책(계획) 현황

구분	지자체 주요 정책(계획)	지역사회보장지표 영역 관련
인구/청년	•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 청년정책 시행계획 등	돌봄(아동), 돌봄(성인),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총괄
아동/ 청소년	• 아동정책 시행계획, • (지자체별) 보육 기본/시행계획, • 청소년 시행계획 등	돌봄(아동), 보호안전, 교육, 문화여가
장애인	• (지자체별) 장애인정책 기본/시행계획, • 장애인친화도시 등	돌봄(아동), 돌봄(성인), 고용, 총괄
노인	• (지자체별) 노인복지 기본/시행계획, • 고령친화도시 등	돌봄(성인), 보호안전, 건강, 고용, 총괄
여성/가족	•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 건강가족 시행계획, • 여성친화도시 등	돌봄(아동), 돌봄(성인), 보호안전, 고용
보건	• (지자체별) 지역보건의료계획, • 건강도시 인증 등	돌봄(아동), 돌봄(성인), 건강, 총괄
경제/지역	• 지방시대 시행계획 등	돌봄(아동), 돌봄(성인), 건강, 환경, 총괄
주거/문화/ 환경	• (지자체별) 주거종합계획, • (지자체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 (지자체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주거, 문화여가, 환경, 총괄
기타 지역복지	•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2024년 1차 예정), • (지자체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등	돌봄(성인), 교육, 고용 총괄

출처: 저자 작성

2. 정책 영역별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 가능성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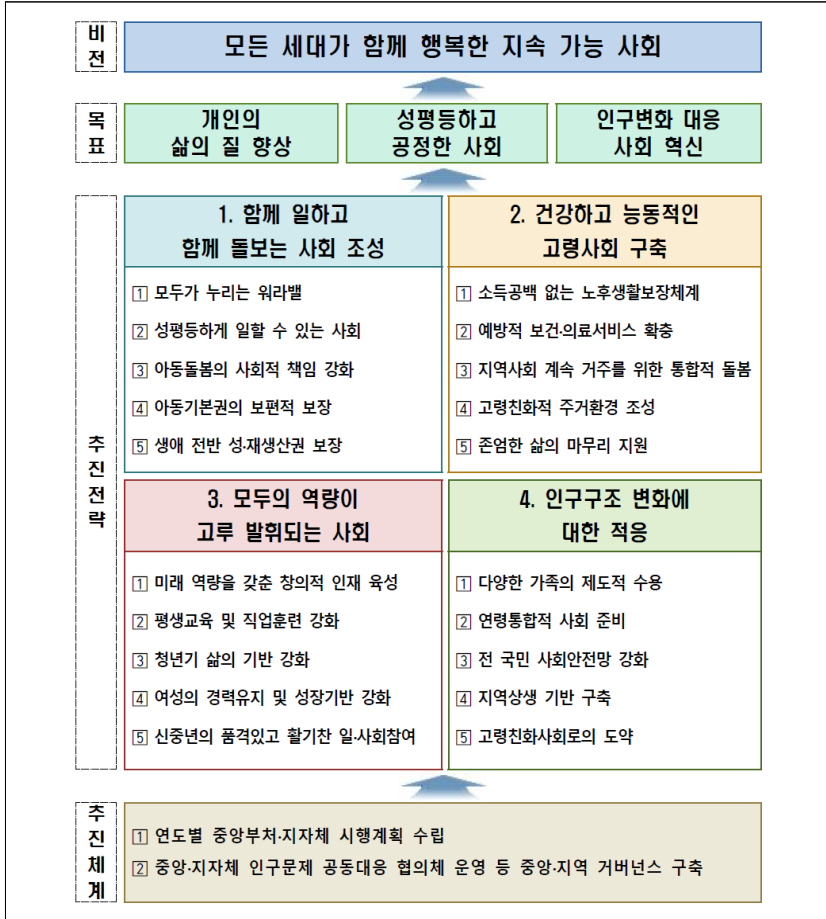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계획)과 지역사회보장지표 간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책 영역별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정책(계획)의 추진 방향이나 세부 사업을 수립하거나 이의 결과 및 영향을 고려하는 데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어떠한 세부 지표가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1) 인구/청년

인구/청년 영역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표 4-2〉 참조).

우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의 4대 추진전략(①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②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③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④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해당 시행계획의 정책 추진 방향이나 세부 사업을 고려했을 때(〈그림 4-1〉 참조), 돌봄(아동), 돌봄(성인), 건강, 교육, 고용, 총괄 등의 영역에서의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

[그림 4-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체계도



출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2020a, 보건복지부, p.38.

예를 들어, 서울시의 ‘서울형 돌봄체계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속 확충’ 과제는 ‘영유아 인구 천 명당 보육료 지원 영유아 수’(a1) 지표를, 부산의 ‘영영아반 운영 지원’ 과제는 ‘영유아 인구 천 명당 유아학비 지원 영유아 수’(a2) 지표를, 그리고 부산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또는 세종의 ‘지역사회 내 돌봄 여건 확충(지역아동센터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및 자녀

돌봄 품앗이 운영,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 과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여부’(a4) 지표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의 5대 정책 방향 ① 일자리: 청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② 주거: 청년의 주거 부담이 줄어듭니다, ③ 교육: 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그려갑니다, ④ 복지·문화: 청년의 생활이 나아집니다, ⑤ 참여·권리: 청년의 삶을 청년이 직접 결정합니다)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해당 시행계획의 정책 추진 방향이나 세부 정책과제 등을 고려했을 때,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총괄 등의 영역에서의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24a, 2024b, 2024c).

다만, 지역사회보장지표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표 영역이나 세부 지표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 지역사회보장지표는 지역의 일반적인 복지 기반이나 여타 정책 대상(예를 들어, 아동이나 노인 등)과의 비교 등과 같이 다소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청년 매입임대 주택 사업’이나 ‘청년안심 주택 매입’ 등 과제는 이의 설계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재고 현황, 즉 ‘공공부문 임대주택 재고’(g4), ‘민간부문 임대주택 재고’(g5) 같은 지표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청년주거안정 지원사업’ 서울형 돌봄체계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속 확충’ 과제는 ‘영유아 인구 천 명당 보육료 지원 영유아 수’(a1) 지표를, 부산의 ‘영영아반 운영 지원’ 과제는 ‘영유아 인구 천 명당 유아학비 지원 영유아 수’(a2) 지표를, 그리고 부산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부산) 또는 세종의 ‘지역사회 내 돌봄여건 확충(지역아동센터 운영, 공동육아 나눔터 및 자녀돌봄 품앗이 운영,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

과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여부’(a4) 지표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상북도의 ‘경북 사회적경제 ESG 청년일자리’ 과제는 ‘신규 사회적 기업 육성 실적’(f19)이나 ‘사회적 기업 고용률’(f23) 등이 긴밀한 연관성을 가질 것이다.

〈표 4-2〉 인구/청년 분야 활용 가능 지표

지자체 주요 정책(계획)	지역사회보장지표	
	영역 구분	세부 지표(예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돌봄(아동)	• 영유아 인구 천 명당 보육료 지원 영유아 수(a1) • 영유아 인구 천 명당 유아학비 지원 영유아 수(a2)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여부(a4) 등
	돌봄(노인)	•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율(f8) 등
	건강	• 환자 거주지 기준 의료 이용률(d2) • 전체 회계 중 보건 의료 예산 비율(d3) 등
	교육	• 1만 명당 평생교육기관 수(e1) 등
	고용	• 실직 중장년 재취업률(f11) 등
	총괄	• 총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j3) 등
청년정책 시행계획	건강	•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d7) • 정신건강 시군구 정책 노력 정도(d26) 등
	교육	• 평생교육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e29) 등
	고용	• 지자체 내 직업상담사 배치 비율(f6) • 신규 사회적 기업 육성 실적(f19) • 사회적 기업 고용률(f23) 등
	주거	• 공공부문 임대주택 재고(g4) • 민간부문 임대주택 재고(g5) 등
	문화여가	• 취약계층 1인당 문화복지 예산(h3) 등
	총괄	• 1인당 사회보장 자체사업 예산(j13) • 빈곤인구 1인당 취약계층 대상 자체사업 예산 등

2)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영역에서 아동정책 시행계획, (지자체별) 보육 기본/시행 계획, 청소년 시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표 4-4〉 참조).

우선,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의 4대 추진전략①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②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 지원, ③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④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해당 시행계획의 4대 추진과제 및 30가지 중점 추진과제 등을 고려했을 때(〈표 4-3〉 참조), 돌봄(아동), 보호안전, 교육 등의 영역에서의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0b; 조소연 외, 2022).

〈표 4-3〉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추진전략	하위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 마련	① 아동 중심 정책 반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② 아동정책 영향평가 전면실시 ③ 지역 아동복지사업 품질 제고
	생활 속 아동권리 실현	① 행정·사법 절차상 아동 의견표명권 보장 ② 아동이 중심에 있는 아동 권리 보호 ③ 아동권리 사각지대 해소
2.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 지원	놀이와 학습이 조화로운 학교와 지역사회	① 아동에게 친숙한 놀이·여가 환경 조성 ② 지역, 연령 등 안전한 맞춤형 놀이·여가 지원 ③ 지나친 학습 경쟁 완화,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
	아동신체와 마음건강 관리 강화	① 아동의 신체건강 관리 강화 ② 아동의 마음건강 관리 강화 ③ 새로운 건강 위협요인 대응 강화
	폭력과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	① 아동 성범죄 및 ‘유아 성행동 문제’ 관리 강화 ② 교통, 학교, 식품·공산품 등 생활 속 안전관리 강화 ③ 정보연계-협력 등을 통한 아동학대 근절
3.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아동 중심 공적 보호·돌봄체계 구축	①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 인프라 구축 ② 입양·가정위탁 등 가정형 보호 활성화 ③ 입양 사후 서비스 및 실종아동 찾기·지원 확대 ④ 아동복지 정보 연계 및 통합

추진전략	하위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⑤ 아동돌봄 확충 및 운영 내실화 ⑥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저소득가구 등 취약아동 지원 강화	① 취약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연속성 확보 ② 다양한 배경의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③ 취약계층 교육 등 지원 강화
4.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가정의 양육 역량 강화	① (소득) 아동수당 역할 강화 ② (시간) 아동-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 보장 ③ (양육자 역량) (학)부모 교육 강화
	재난 상황에 대응 가능한 돌봄체계 마련	① 보호·돌봄시설의 감염병 재난 대응 역량 강화 ② 긴급돌봄지원체계 구축 ③ 비대면 아동보호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출처: “2022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총괄 분석보고서”, 조소연 외, 2022, 아동권리보장원, pp.101-102.

예를 들어, 돌봄(아동) 영역과 관련하여, 거의 모든 지자체의 시행계획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나 ‘아동양육시설 운영’,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등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과제의 설계 또는 성과 평가에서 ‘18세 미만 인구 만 명당 지역아동센터 수’(a12)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a10) 등 지표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든 지자체의 공통 과제 중 하나인 ‘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이나 ‘기초 학력 향상 지원’과 관련하여, 보호안전 영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당 아동 수’(c3)와 ‘학대아동 발견율(c6)’ 등 지표를, 그리고 교육 영역의 ‘기초 학습능력 증진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e24)와 ‘기초학습능력 증진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e25) 등의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자체별 보육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23~2027년)’은 이의 기본 방향으로 ①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실현, ② 보육교직원 권리존중 및 역량 강화, ③ 모든 양육자의 육아 역량 강화, ④ 공공보육 기반 확대 및 보육의 질 제고를 설정하고 있다.⁵⁾

5) 보육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경우, 개별 지자체마다 보육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본 연구의 초점은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기 때

이의 2024년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분석한 결과, 돌봄(아동), 보호안전 등 영역의 지표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경기도, 2024a).

지자체별 보육기본계획의 주된 정책 대상이 영유아(0~5세) 가정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역사회보장지표에서 활용 가능한 세부 지표는 대부분 돌봄(아동) 영역에 속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여부’(a4), ‘만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설립 주체별 어린이집 정원 교육’(a5),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a7)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5대 대과제(①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 ②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 ③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 ④ 청소년의 참여·권리 보장 강화, ⑤ 청소년정책 총괄 조정 강화)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해당 시행계획의 5대 대과제, 14개 중과제, 39개 소과제 및 108개 세과제 등을 고려했을 때, 돌봄(아동), 교육 등의 영역에서의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3a, 2023b, 2023c, 2023d).

예를 들어, 서울 성북구의 ‘저소득층 어린이 건강 과일바구니 사업’이나 ‘신체활동 늘리기 캠페인’, ‘청소년 비만예방 교육’ 과제는 이의 대상으로 관내 지역아동센터 또는 초등돌봄 어린이가 포함된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과제의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는 데 ‘초등돌봄교실 수’(a11), ‘18세 미만 인구 만 명당 지역아동센터 수’(a12), ‘아동 1인당 지역아동센터 예산’(a13) 등의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종시의 ‘사이버 및 학교폭력 피해자 회복지원(학교폭력 상담사 배치 지원 사업 운영)’ 과제는

문예, 모든 지자체의 보육 기본/시행계획을 대상으로 살펴보기보다 특정 지자체의 보육 기본/시행계획을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보호안전 영역에서의 ‘학대·폭력 예방교육 실적’(c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된 학교폭력 발생 건수’(c8) 등 지표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모든 지자체의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서 취약계층 가정(조손 및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의 청소년에 관한 과제를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이들 과제의 성과 평가와 관련하여 문화여가 영역의 ‘취약계층 1인당 문화 복지 예산’(h3) 또는 교육 영역의 ‘취약계층 1인당 교육 지원 예산(교육 복지사업)’(e11)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표 4-4〉 아동/청소년 분야 활용 가능 지표

지자체 주요 정책(계획)	지역사회보장지표	
	영역 구분	세부 지표(예시)
아동정책 시행계획	돌봄(아동)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여부(a4),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a10), • 초등돌봄교실 수(a11), • 18세 미만 인구 만 명당 지역아동센터 수(a12) 등
	보호안전	• 아동보호전문기관당 아동 수(c3), • 학대아동 발견율(c6) 등
	교육	• 기초학습능력 증진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e24), • 기초학습능력 증진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e25) 등
(지자체별) 보육정책 기본/시행계획	돌봄(아동)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여부(a4), • 만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설립 주체별 어린이집 정원 교육(a5), • 만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특수보육어린이집 정원(a6)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a7) 등
	보호안전	• 학대·폭력 예방교육 실적(c5) 등
청년정책 시행계획	돌봄(아동)	• 초등돌봄교실 수(a11), • 18세 미만 인구 만 명당 지역아동센터 수(a12), • 아동 1인당 지역아동센터 예산(a13) 등
	보호안전	• 학대·폭력 예방교육 실적(c5),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된 학교폭력 발생 건수 (c8) 등
	교육	• 취약계층 1인당 교육 지원 예산 (교육복지사업)(e11) 등
	문화여가	• 취약계층 1인당 문화복지 예산(h3)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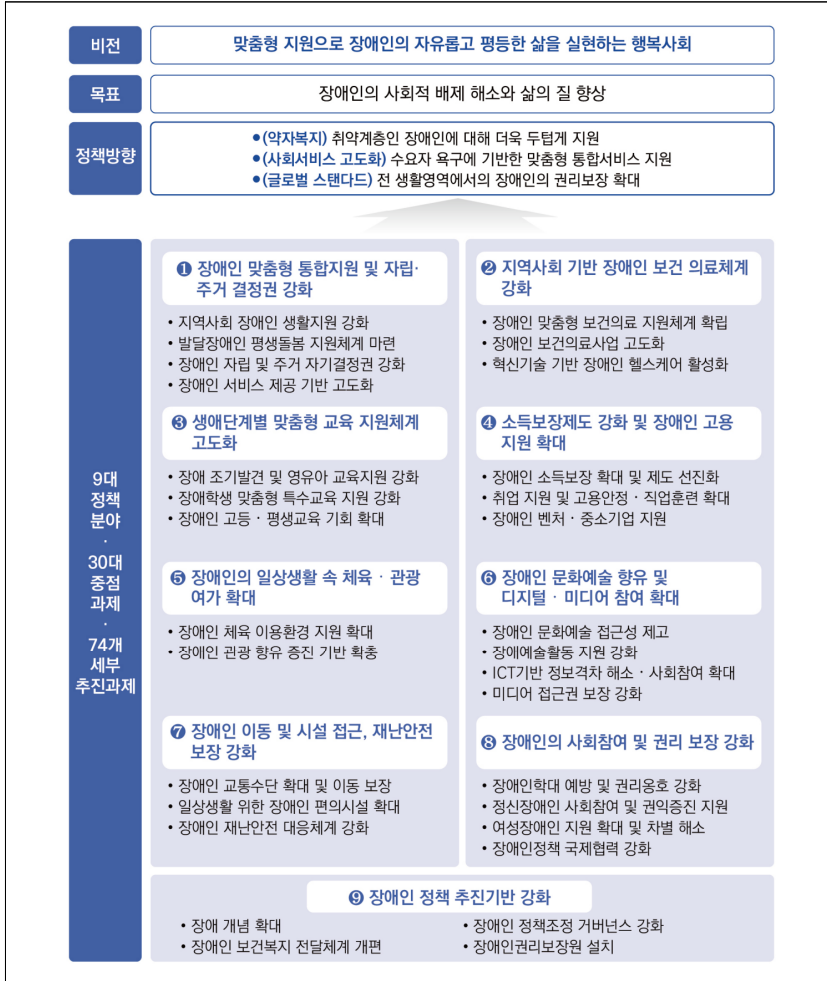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3) 장애인

장애인 영역에서 (지자체별) 장애인정책 기본/시행계획, 장애인친화 도시 등을 중심으로,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표 4-5〉 참조).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립된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2023~2027)’을 반영하여(〈그림 4-2〉 참조), 각 지자체는 장애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제5차 경기도 장애인 정책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의 정책 목표로 ①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스스로 일해서 소득이 증대되는 경기, ② 교육·문화·체육·관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경기, ③ 장애를 이유로 사회적 차별과 불편이 없는 경기, ④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기, ⑤ 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경기, ⑥ 언제·언디서나 사회적 돌봄이 강한 경기를 제시하고 있다(경기도, 2024b). 이상의 정책 목표 및 관련 세부 사업 등을 고려했을 때(〈그림 4-3〉 참조), 돌봄(아동), 돌봄(성인), 고용, 총괄 등의 영역에서 지역사회 보장지표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4-2]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2027) 정책체계도



출처: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2027)”, 보건복지부, 2023, 보건복지부, p.36.

[그림 4-3] 제5차 경기도 장애인정책 기본계획(2024~2028) 비전 체계도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						
비전	1 장애인 인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스스로 일해서 소득이 증대되는 경기	2 교육·문화·체육·관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경기	3 장애를 이유로 사회적 차별과 불평이 없는 경기	4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기	5 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경기	6 언제 어디서나 사회적 돌봄이 강한 경기
중점 과제	① 장애인일자리의 지원 (공약+기회) ②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공약+기회) ③ 권리와심 중증장애인 맞춤형일자리 (공약+기회) ④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 장애인 기회수당 (공약+기회) ⑤ 도비 장애인수당 지급 (공약) ⑥ 경기도 장애인 누림률향 (공약+기회)	①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확대 (공약+기회) ②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강화 ③ 스포츠 소외계층 프로스포츠 관람 기회 확대 (기회)	①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②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③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통합체계 구축 (공약)	① 장애인 기회소득 (기회) ②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장학금 지원 (공약) ③ 경기도 장애인 자립주택	①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운영 추진 ② 장애인 소방안전 지원체계 구축 ③ 고령장애인 선택 ④ 농아노인센터 운영	③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중증전담 포함) 운영 확대 ④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운영 및 확산 ⑤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정위탁 지원사업 ⑥ 뇌병변장애인 대스런 흡수용을 구입지원 ⑦ 장애인돌봄 아간루일 프로그램 운영 ⑧ 최중증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양육지원 (공약+기회) ⑨ 최중증 장애인 가족돌봄 수당 지원
일반 과제	⑤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⑦ 저소득장애인의 의료비 지원 ⑧ 저소득장애인 보조 기기 지원 ⑨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⑩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① 장애인장애인 장애인 평생 교육체계 구축 ②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③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 지원 ④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지원 ⑤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원 ⑥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기회) ⑦ 장애인예술인 전문예술 활동 지원 (기회) ⑧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④ 경기도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 운영 강화 ⑤ 장애인차별 장애인차별개선 감사장상 및 파견 ⑥ 장애인 이해 및 인식 개선 사업 ⑦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 ⑧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⑨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⑥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 확대 ⑦ 장애인단체 조직발전 지원 ⑧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확충을 위한 지원 ⑨ 장애인복지지원금 지급 ⑩ 장애인복지지원금 지급 ⑪ 장애인 양육형 지원 (도우미) 운영	①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운영 확대 ②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③ 장애인돌봄 서비스 지원 ④ 장애인돌봄 서비스 지원 ⑤ 장애인돌봄 서비스 지원 ⑥ 장애인돌봄 서비스 지원 ⑦ 장애인돌봄 서비스 지원 ⑧ 장애인돌봄 서비스 지원 ⑨ 장애인돌봄 서비스 지원 ⑩ 장애인돌봄 서비스 지원 ⑪ 장애인돌봄 서비스 지원	① 최중증 장애인 가족돌봄 수당 지원 ② 장애인 365선택 운영 ③ 뇌병변장애인종합지원 센터 건립

출처: “경기도 장애인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5개년 계획 및 24년 사업계획”, 경기도, 2024b, 경기도청, p.6.

예를 들어, 장애아동 관련 사업(‘장애인보육 어린이집 지원’,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은 돌봄(아동) 영역에서의 세부 지표, 즉 ‘영유아 인구 천 명당 특수보육어린이집 정원’(a6),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a10), ‘등록 발달장애아동 1인당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액’(a14), ‘등록 발달장애아동 백 명당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률’(a17)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거주시설 관련 사업(‘장애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장애인 자립주택’ 등)이나 편의시설 관련 사업(‘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 등)은 돌봄(성인) 영역의 세부 지표, 즉 ‘장애인 만 명당 지역사회 거주시설 수’(b8), ‘장애인 거주시설 총이용자 대비 지역 사회 거주시설 이용자 비율’(b9),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b6) 등의 활용을, 그리고 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 관련 사업(‘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 기회수당’ 등)은 ‘장애인 천 명당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수’(b5) 등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외에, 장애인 일자리 관련 사업이나 장애인 생활안정 관련 사업에서 고용이나 총괄 영역에서의 여러 세부 지표 역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장애인 친화도시와 관련하여, 2019년 대구광역시의 「대구광역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24년 기준 총 15건의 조례가 제정되었다(전동일·이강준, 2024). 대구시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 친화도시는 “장애 인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의미하며(제2조 제3호),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기준으로 ① 도시 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안전성·편리성·접근성, ② 교통수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③ 여가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성, ④ 장애인의 자아실현성, ⑤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⑥ 기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개선 등을 포함한다(제5조). 관련 조례의 장애 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고려했을 때, 돌봄(성인) 등의 영역에서의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도시 기반시설 접근성,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여가 및 사회활동 접근성, 그리고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은 ‘장애인 가사 활동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필요 대비 이용률’(b48/49), ‘장애인 이동 및 외출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필요 대비 이용률’(b50/51), ‘장애인 응급상황 대처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필요 대비 이용률’(b52/53), ‘장애인 돌봄 비용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필요 대비 이용률(b54/55)’ 등의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5〉 장애인 분야 활용 가능 지표

지자체 주요 정책(계획)	지역사회보장지표	
	영역 구분	세부 지표(예시)
(지자체별) 장애인정책 기본/시행계획	돌봄(아동)	• 영유아 인구 천 명당 특수보육어린이집 정원(a6),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a10), • 등록 발달장애아동 1인당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액(a14), • 등록 발달장애아동 백 명당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률(a17) 등
	돌봄(성인)	• 장애인 천 명당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수(b5), •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b6), • 장애인 만 명당 지역사회 거주시설 수(b8), • 장애인 거주시설 총이용자 대비 지역사회 거주시설 이용자 비율(b9) 등
	고용	• 등록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액(f4),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율(f7), •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훈련 프로그램 참여율(f9), • 장애인 고용률(f10) 등
	총괄	• 장애인연금 지급률(j2) 등
장애인 친화도시	돌봄(성인)	• 장애인돌봄 시군수 정책 시급성(b34), • 장애인돌봄 시군수 정책 노력 정도(b35), • 장애인 가사 활동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필요 대비 이용률(b48/49), • 장애인 이동 및 외출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필요 대비 이용률(b50/51), • 장애인 응급상황 대처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필요 대비 이용률(b52/53), • 장애인 돌봄비용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필요 대비 이용률(b54/55) 등

출처: 저자 작성

4) 노인

노인 영역에서 (지자체별) 노인복지 기본/시행계획, 고령친화도시 등을 중심으로,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표 4-7〉 참조).

우선, 지자체별 노인복지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 증진의 책임)에서 노인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는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원 특별자치도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고려하여 ‘강원도 노인복지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였으며, 이의 중장기 추진목표로 ① 소득 공백 없는 안정된 노후생활, ② 건강한 노년을 위한 안심 돌봄, ③ 고령친화 환경 조성, ④ 활기찬 노후생활을 제시하고 있다(강원도, 2022). 이상의 정책 목표 및 관련 과제를 고려했을 때(〈그림 4-4〉 참조), 돌봄(성인), 보호안전, 건강, 고용, 총괄 등의 영역에서의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4-4] 강원도 노인복지 기본계획(2023~2027) 비전체계도



출처: “강원도 노인복지 기본계획(2023~2027)”, 강원도, 2022, 강원여성가족연구원, p.304.

예를 들어, 총괄 영역의 세부 지표(‘기초연금 수급률’(j1)) 및 돌봄(성인) 영역의 세부 지표(‘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b18) 등)는 노후 소득보장 관련 사업(‘기초연금 미수령자 적극 발굴’ 등)이나 사회참여·여가 문화 활동지원 관련 사업(‘노인여가프로그램 운영 지원’, ‘노인여가복지 시설 기능 보강’ 등)의 현황이나 성과를 평가하는 데 고려 가능하다. 또한, 보호안전 영역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당 노인 수’(c4), ‘학대노인 발견율’(c7), ‘노인학대 재학대 사례 비율’(c15) 등의 세부 지표는 노인학대 관련 사업(‘효(孝)지킴센터 운영 지원’,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등)과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건강 영역의 ‘응급 시 119 구급차 현장 도착 시간 30분 이내 도달률’(d23) 지표는 노인의 응급상황 관련 사업(‘독거노인응급 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4시간 콜센터 구축’ 등), 그리고 고용 영역의 세부 지표인 ‘만 60세 이상 노인 1인당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액’(f5)이나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율’(f8) 등은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취업형/인턴형/특화형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 사업 등)의 현황이나 성과를 점검하는 데 활용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고령친화도시와 관련하여, 2023년 기준 80여 개의 지자체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조종도, 2023.12.26.),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국내 지자체는 65개에 이른다.⁶⁾ 특히,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적 고령화 및 도시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 Communities, GNAFCC)라는 범세계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여기에는 ① 외부환경과 시설, ② 교통수단 편의성, ③ 주거환경 안정성, ④ 여가 및 사회활동, ⑤ 사회참여 및 일자리, ⑥ 사회적 존중 및 통합, ⑦ 의사소통 및 정보, ⑧ 건강 및 지역사회돌봄이 포함된다.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8대 영역 및 내용을 고려했을 때(〈표 4-6〉 참조), 돌봄(성인), 고용 등의 영역에서의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6)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 웹사이트(<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 검색(2025.01.06. 기준).

〈표 4-6〉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8대 영역	주요 내용
① 외부환경과 시설 (Outdoor spaces and buildings)	야외 환경과 공공건물 등을 포괄하며, 도시 기반 시설의 안전성, 편리성, 접근성 향상으로 삶의 질 제고
② 교통수단 편의성 (Transportation)	이용이 쉽고 저렴한 대중교통 편의 환경 구축을 통해 고령자의 사회 참여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③ 주거환경 안정성 (Housing)	고령 친화적 주거시설의 구조, 디자인, 위치, 비용 및 공공서비스 설계를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삶 구현
④ 여가 및 사회활동 (Social participation)	고령자의 가족, 사회·문화, 종교, 여가활동을 위한 접근성, 행정·정보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 소속감 증대
⑤ 사회참여 및 일자리 (Civic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고령자의 욕구에 따른 인적 자원 개발, 자원봉사 및 취업 기회의 제공·확대를 통한 시민 참여활동 독려 및 지역사회 공헌 구현
⑥ 사회적 존중 및 통합 (Respect and social inclusion)	고령자 공공이미지 향상을 위해 초중등 교육내용 반영 및 대중언론 매체 활용, 지역사회 내 고령자 욕구에 따른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세대 간 통합 제고
⑦ 의사소통 및 정보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보제공체계 구축 및 접근성 강화를 통해 사회적 활동 및 인간관계 활성화
⑧ 건강 및 지역사회 돌봄 (Community support and health services)	고령자를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및 의료서비스의 충분성, 적절성, 접근성, 질적 강화를 통해 고령자의 건강 및 자립 증대

출처: 세종시 웹사이트(https://www.sejong.go.kr/citizen/sub05_0402.do).

특히, 5가지 영역에서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을 다음과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통수단 편의성은 ‘교통복지 수준 평가점수(시도)’(b21)나 ‘노인 이동 및 외출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b41)을, 주거환경 안정성은 ‘노인 만 명당 지역사회 거주시설 수’(b22)나 ‘노인 거주시설 총 이용자 대비 지역사회 거주시설 이용자 비율’(b23)을, 여가 및 사회활동은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b18)나 ‘노인 만 명당 노인복지관 종사자 수’(b19), 사회참여 및 일자리는 ‘만 60세 이상 노인 1인당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액’(f5)이나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율’(f8) 등을, 그리고

건강 및 지역사회돌봄은 ‘노인돌봄 시군구 정책 노력 정도’(b33), ‘노인 돌봄 비용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b45), ‘노인 천 명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b27), ‘노인 천 명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수’(b28)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7〉 노인 분야 활용 가능 지표

지자체 주요 정책(계획)	지역사회보장지표	
	영역 구분	세부 지표(예시)
(지자체별) 노인복지 기본/시행계획	돌봄(성인)	•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b18) 등
	보호안전	• 노인보호전문기관당 노인 수(c4), • 학대노인 발견율(c7), • 노인학대 재학대 사례 비율(c15) 등
	건강	• 응급 시 119 구급차 현장 도착 시간 30분 이내 도달률(d23) 등
	고용	• 만 60세 이상 노인 1인당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액(f5) •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율(f8) 등
	총괄	• 기초연금 수급률(j1) 등
고령친화도시	돌봄(성인)	•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b18) • 노인 만 명당 노인복지관 종사자 수(b19) • 교통복지 수준 평가점수(시도)(b21) • 노인 만 명당 지역사회 거주시설 수(b22). • 노인 거주시설 총이용자 대비 지역사회 거주시설 이용자 비율(b23) • 노인 천 명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b27) • 노인 천 명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수(b28) • 노인돌봄 시군구 정책 노력 정도(b33) • 노인 이동 및 외출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b41) • 노인 돌봄 비용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b45) 등
	고용	• 만 60세 이상 노인 1인당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액 (f5), •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율(f8)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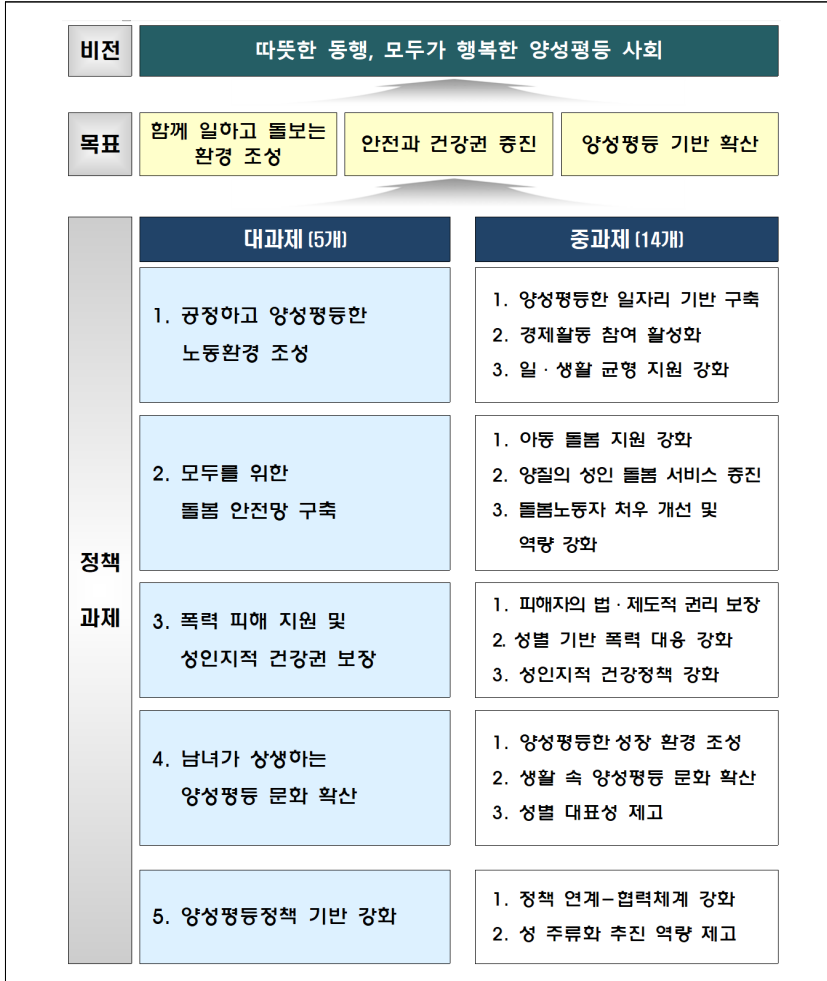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5) 여성/가족

여성/가족 영역에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건강가족 시행계획, 여성 친화도시 등을 중심으로,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표 4-8〉 참조).

우선,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5대 대과제(①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②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③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④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발전, ⑤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에 따라(〔그림 4-5〕 참조),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양성평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해당 시행계획의 정책과제(5대 대과제, 14대 중과제, 43개 소과제)를 고려했을 때(〔그림 4-5〕 참조), 돌봄(아동), 보호안전, 고용 등의 영역에서의 지역사회 보장지표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4a, 2024b).

[그림 4-5]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체계



출처: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여성가족부, 2024, 여성가족부, p.2.

예를 들어, 돌봄(아동) 영역의 세부 지표와 관련하여, 지역돌봄과 관련한 지자체 사업(예를 들어, 서울 서대문구의 ‘지역돌봄시설 운영지원 및 아동 돌봄체계 강화’, 부산광역시의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 경기도의 ‘아동 언제나(긴급) 돌봄센터 운영’ 등)은 보통 아동돌봄뿐만 아니라 초등

돌봄 등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초등돌봄교실 수’(a1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a15), ‘아동돌봄 시군구 정책 시급성/노력 정도’(a24/25) 등의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보호안전 영역에서 가정폭력이나 학대피해와 관련한 사업(예를 들어, 대구광역시의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체계 강화’, 광주 남구의 ‘학대피해아동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충청남도의 ‘가정폭력 재발 방지 통합지원 시스템 운영’ 등)은 ‘가족 외부의 안전유지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c21)나 ‘가족 외부의 안전유지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c22) 등의 지표를 통해 해당 사업의 현황이나 성과를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용 영역에서 여성의 일가정/일생활 양립이나 경력단절과 관련한 사업(예를 들어, 경북 포항시의 ‘여성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부산광역시의 ‘경력단절여성 취·창업지원’, 광주광역시의 ‘여성의 내일을 위한 내 일 찾기 프로젝트’ 등)은 ‘경력단절여성 비율’(f12),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f41), ‘일·가정 양립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f42) 등의 세부 지표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은 ‘모든 가족,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①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 구축, ②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 여건 보장, ③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④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의 4개 영역별 정책과제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건강가정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해당 시행계획의 정책과제를 고려했을 때, 돌봄(아동), 돌봄(성인), 보호안전, 고용 등의 영역에서의 지역 사회보장지표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4c, 2024d).

구체적으로, 돌봄(아동) 영역에서 아돌돌봄서비스 지원과 관련한 지자체 사업(예를 들어,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지역 아동센터 긴급일시 돌봄’ 등)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여부’(a4)나 ‘초등돌봄교실 수’(a11), ‘18세 미만 인구 만 명당 지역아동센터 수’(a12), ‘아동돌봄 시군구

정책 시급성/노력 정도'(a24/25) 등과 같은 세부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의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에서 이의 대상으로 보육 교직원을 포함한 경우(예를 들어, 부산광역시의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 인천광역시의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등),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로서 '보육교직원 1인당 처우 개선비 및 근무환경 개선비 자체 (추가) 지원 수준'(a22) 지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호안전 영역의 세부 지표(예를 들어, '1인당 학대/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예산'(c2), '보호·안전 시군구 정책 노력 정도'(c18), '가족 외부의 안전유지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필요 대비 이용률'(c21/22) 등)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와 관련한 지자체 사업(예를 들어, 부산시의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및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경기도의 '아동학대 조기발견·현장 대응 체계 구축', '가정폭력 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의 현황이나 성과를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하여, 2009년 전북 익산시와 전남 여수시 등 2개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래로, 2023년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138곳에 이르며(오세라비, 2023.06.20.), 2024년 12월 현재 여성가족부는 총 106개 지자체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한 바 있다(여성가족부, 2025.01.03.).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여성친화도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한다.

현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지자체의 조례 대부분에서 여성친화도시의 조성 또는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을 명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조성계획 수립 등)에 따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은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추진체계, ③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주요 정책과제, ④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 목록, ⑥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⑦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2단계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2022~2026년)’에서 ① 시민참여로 양성평등 실현, ②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 ③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④ 지속가능한 안전 도시 조성, ⑤ 빈틈없는 돌봄 추진체계 강화라는 5대 역점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세종특별자치시, 2022). 이상의 정책 목표 및 추진 과제를 고려했을 때([그림 4-6] 참조), 앞에서 살펴본 양성평등 시행계획이나 건강가족 시행계획과 유사하게 돌봄(아동), 보호안전, 고용 등의 영역에서의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4-6] 세종특별자치시 제2단계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비전체계도



출처: 세종여성플라자 웹사이트(<https://sj-equity.or.kr/sub06040201>) 참조.

〈표 4-8〉 여성/가족 분야 활용 가능 지표

지자체 주요 정책(계획)	지역사회보장지표	
	영역 구분	세부 지표(예시)
양성평등 시행계획	돌봄(아동)	- 초등돌봄교실 수(a11). 18세 미만 인구 만 명당 지역아동센터 수(a12). - 아동 1인당 지역아동센터 예산(a13).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a15). - 아동돌봄 시군구 정책 시급성/노력 정도(a24/25) 등
	보호안전	- 가족 외부의 안전유지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c21). - 가족 외부의 안전유지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c22) 등
	고용	- 경력단절여성 비율(f12). -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f41). - 일·가정 양립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f42) 등
건강가족 시행계획	돌봄(아동)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여부(a4). - 초등돌봄교실 수(a11). 18세 미만 인구 만 명당 지역아동센터 수(a12). - 보육교직원 1인당 처우 개선비 및 근무환경 개선비 자체(추가) 지원 수준(a22) - 아동돌봄 시군구 정책 시급성/노력 정도(a24/25) 등
	돌봄(성인)	-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b18) - 노인 만 명당 지역사회 거주시설 수(b22) - 노인 거주시설 총이용자 대비 지역사회 거주시설 이용자 비율(b23) - 노인 천 명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수(b28) - 노인돌봄 시군구 정책 노력 정도(b33) 등
	보호안전	1인당 학대/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예산(c2) - 보호·안전 시군구 정책 노력 정도(c18) - 가족 외부의 안전유지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필요 대비 이용률(c21/22) 등
	고용	-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f41) - 일·가정 양립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f42) 등
여성친화도시	돌봄(아동)	- 초등돌봄교실 수(a11) 18세 미만 인구 만 명당 지역아동센터 수(a12) - 아동돌봄 시군구 정책 시급성/노력 정도(a24/25) 등
	보호안전	1인당 학대/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예산(c2) - 가족 외부의 안전유지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필요 대비 이용률(c21/22) 등
	고용	- 경력단절여성 비율(f12) -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f41) - 일·가정 양립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f42) 등

출처: 저자 작성

6) 보건

보건 영역에서 (지자체별) 지역보건의료계획, 건강도시 등을 중심으로,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표 4-8〉 참조).

우선,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관련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와 제8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서 지자체장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4년 단위의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①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②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③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④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⑤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경기 수원시의 ‘제8기(2023~2026) 수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① 건강돌봄 체계 확충, ② 미래세대 성장 지원, ③ 시민행복 정신건강 증진, ④ 생활안전 건강마을 조성이라는 4대 추진전략과 함께, 12개 추진과제 및 3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수원시, 2023). 이상의 추진전략 및 관련 과제를 고려했을 때(〈그림 4-7〉 참조), 건강, 총괄 등의 영역에서의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4-7] 제8기(2023~2026) 수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별 세부과제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과제	담당부서
I. 건강돌봄 체계 확충	① 마을 건강돌봄체계 구축	①-1. 수원형 건강서비스 전달체계 활성화	복지협력팀
		①-2. 방문 건강돌봄 강화	지역보건팀 의약물관리팀
	② 건강취약층 의료접근성 확보	②-1. 건강취약층 건강검진 지원	건강증진팀
		②-2. 중증 및 희귀질환 의료 지원	보건기획팀
	③ 치매 안심지원	③-1. 치매 예방 및 조기검진 ③-2. 치매 환자 및 가족 지원	치매관리팀
II. 미래세대 성장 지원	① 임신부 지원	①-1. 임신부 건강 관리 ①-2. 난임부부 및 산모 의료비 지원	지역보건팀
		②-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② 신생아 및 영유아 지원	②-2.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②-3. 임신부·영유아 맞춤형 영양 지원	건강증진팀
		③-1. 수원시 아동 담당의 의료지원 ③-2. 청소년 척추건강 관리 ③-3. 마음건강학교 운영	
III. 시민행복 정신건강 증진	① 시민 정신건강 지원	①-1. 마음건강 돌봄 ①-2. 스마트 마음건강 로드맵	정신건강정책팀
		②-1. 조기개입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②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지원체계 구축	②-2.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및 자립 촉진	정신건강관리팀
		③-1. 정신건강 초기대응 시스템 구축 ③-2. 자살예방 안전돌봄 체계 구축 ③-3. 중독관리 통합 지원	
IV. 생활안전 건강마을 조성	① 감염병 위기대응 및 예방	①-1. 감염병 대응 및 감시체계 ①-2. 감염병 예방 ①-3. 결핵환자 관리	감염병총괄팀 감염병대응팀 감염병총괄팀 지역보건팀 감염병관리팀
		②-1. 구강건강 관리	건강증진팀
		②-2.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활동 ②-3. 건강식생활 지역주민 영양관리	
	② 시민 건강생활 실천	③-1. 건강도시 수원 활성화 ③-2. 시민 안전환경 조성	보건기획팀 의약물관리팀

출처: “제8기(2023~2026) 수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원시, 2023, 수원시보건소, p.80.

예를 들어, 지자체의 보건의료 관련 정책적 수요나 대응 수준을 평가하는 데 건강 영역의 ‘정신건강 시군구 정책 시급성/노력 정도’(d25/26), ‘신체 건강 시군구 정책 시급성/노력 정도’(d27/28)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만성질환과 관련한 사업(예를 들어, ‘방문 건강돌봄 강화’)은 ‘고혈압 진단 경험률’(d15), ‘당뇨병 진단 경험률’(d16) 등의 지표를 통해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정책 수요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정신건강 또는 중독과 관련한 사업(예를 들어, ‘마음건강 돌봄’, ‘스마트 마음건강 로드맵’),

‘정신건강 초기대응 시스템 구축’, ‘자살예방 안전돌봄 체계 구축’, ‘중독 관리 통합 지원’ 과제)의 경우, ‘현재 흡연율’(d10), ‘고위험 음주율’(d11), ‘우울감 경험률’(d12), ‘정신건강 증진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필요 대비 이용률’(d29/30),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필요 대비 이용률’(d33/34), ‘자살 예방 및 상담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필요 대비 이용률’(d35/36) 등의 지표를 고려할 수 있다. 한편, ‘건강취약층 의료 접근성 확보’(‘건강취약층 건강검진 지원’, ‘중증 및 희귀질환 의료 지원’ 등) 과제와 관련하여, 총괄 영역의 ‘의료비 부족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j39)나 ‘의료비 부족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j40) 지표의 활용 역시 고려할 수 있다.

다음으로, 건강친화도시와 관련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 5(건강 도시의 조성 등)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하는 도시(이하 “건강도시”라 한다)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 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는 다음의 [그림 4-8]과 같이 건강도시 지표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① 건강도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전, 조직, 예산, 중장기 계획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 ② 공공·민간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과 지역주민 참여가 보장되어 있는지, ③ 건강도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④ 건강도시 관련 정보 수집·공개·환류가 이루어지는지 등을 확인한다(보건복지부, 2023.12.22.). 건강도시 지표의 영역 및 관련 세부 지표를 고려했을 때, 돌봄(아동), 돌봄(성인), 건강, 총괄 등의 영역에서의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4-8] 보건복지부의 건강도시 지표

영역	지표	세부 지표
1. 인프라 구축	1-1 건강도시 추진 기반	1-1-1 조례
		1-1-2 비전
		1-1-3 부서 간 가치 공유
	1-2 건강도시 예산	1-2-1 예산 형태
	1-3 건강도시 조직과 인력	1-3-1 조직
		1-3-2 인력
2. 부문 간 협력	1-4 건강도시 중장기 계획 수립	1-4-1 기간에 따른 계획 수립
		1-4-2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2-1-1 운영 협력 및 지원체계
	2-1 모든 정책에서의 건강 실현 (Health in All Policies, HiAP)	2-1-2 부문 간 협력활동
		2-1-3 건강영향평가
	2-2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	2-2-1 공공기관과의 협력
		2-2-2 민간기관과의 협력
	2-3 건강도시 네트워크 활동	2-3-1 건강도시 국내 네트워크 활동
		2-3-2 건강도시 국외 네트워크 활동
		2-3-3 기타 건강을 목적으로 한 도시 간 교류활동
3. 지역사회 참여	3-1 지역사회 참여	3-1-1 지역주민 참여
		3-1-2 전문가 참여
	3-2 건강도시 정보제공	3-2-1 건강도시 주민교육
		3-2-2 건강도시 홍보와 소통
4. 사업기획 및 수행	4-1 건강도시 사업계획 수립	3-2-3 지역사회 건강 환경 정보제공
		4-1-1 데이터 수집 및 활용
		4-1-2 근거기반 사업계획
	4-2 건강도시 환경 조성	4-1-3 건강형평성을 고려한 계획
		4-2-1 물리적 환경 조성 사업
		4-2-2 생활터 중심의 건강도시 사업
		4-2-3 지역 특화 건강도시 사업
5. 도시건강 정보체계	4-3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4-3-1 모니터링
		4-3-2 성과평가
	5-1 도시건강 프로파일 작성	5-1-1 도시 건강 프로파일링
		5-2-1 지자체 내 공유
	5-2 도시건강 프로파일 공개	5-2-2 의회 공유
		5-2-3 주민 공개
	5-3 도시건강프로파일업데이트및활용	5-3-1 도시건강프로파일업데이트및활용

출처: “건강도시 지표 활용 가이드라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4, p.8.

특히, 건강도시 지표의 ‘인프라 구축’과 ‘사업기획 및 수행’ 영역에서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강도시의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건강 영역의 ‘전체 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 비율’(d3)이나 ‘정신 건강/신체건강 시군구 정책 노력 정도’(d26/28) 지표를 통해 해당 지자체의 추진 기반이나 예산을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건강도시의 사업기획 및 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에 보건의료 및 돌봄 관련 지자체 사업이나 공공·민간 자원 현황을 점검하는 데 돌봄(아동)(‘아동 돌봄 시군구 정책 노력 정도’(a25)), 돌봄(성인)(‘노인돌봄 시군구 정책 노력 정도’(b33), ‘장애인돌봄 시군구 정책 노력 정도’(b35)), 건강(‘인구 10만 명당 응급의학 전문의 수’(d20), ‘인구 100만 명당 응급의료기관 수’(d21)), 그리고 총괄(‘지역사회 생활환경 전반적 만족도’(j24)) 등의 세부 지표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⁷⁾

〈표 4-9〉 보건 분야 활용 가능 지표

지자체 주요 정책(계획)	지역사회보장지표	
	영역 구분	세부 지표(예시)
(지자체별) 지역보건의료계획	건강	• 현재 흡연율(d10), • 고위험 음주율(d11), • 우울감 경험률(d12), • 고혈압 진단 경험률(d15), • 당뇨병 진단 경험률(d16), • 정신건강 증진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필요 대비 이용률(d29/30), •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필요 대비 이용률(d33/34), • 자살 예방 및 상담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필요 대비 이용률(d35/36) 등

7) ‘건강도시 지표 활용 가이드라인’(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4: 21)에 따르면, ‘4-3. 건강도시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주요 체크리스트 중 하나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시설, 돌봄시설, 사업장, 의료기관 등과 관련한 사업을 기획 및 수행하는지를 묻고 있다.

지자체 주요 정책(계획)	지역사회보장지표	
	영역 구분	세부 지표(예시)
건강도시	총괄	• 의료비 부족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j39), • 의료비 부족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j40) 등
	돌봄(아동)	• 아동돌봄 시군구 정책 노력 정도(a25) 등
	돌봄(성인)	• 노인돌봄 시군구 정책 노력 정도(b33), • 장애인돌봄 시군구 정책 노력 정도(b35) 등
	건강	• 전체 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 비율(d3), • 인구 10만 명당 응급의학 전문의 수(d20), • 인구 100만 명당 응급의료기관 수(d21), • 정신건강/신체건강 시군구 정책 노력 정도(d26/28) 등
	총괄	• 지역사회 생활환경 전반적 만족도(j24) 등

출처: 저자 작성

7) 경제/지역

경제/지역 영역에서 지방시대 시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표 4-10〉 참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조(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발표되었다. 지난 20년간 개별적으로 수립·추진되어 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포괄하는 첫 통합계획으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①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②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③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④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⑤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라는 지방시대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22대 핵심과제 및 68개 실천과제)뿐만 아니라 17개 광역지자체의 시·도 지방시대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 등까지 포괄한다(지방시대위원회, 2023.11.02.).

특히, ‘지방시대 시행계획’에서 시·도 지방시대 계획은 5가지 전략(①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②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③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④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⑤ 삶의 질 높이는 생활복지) 차원에서 17개 시·도의 다양한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표 4-10〉 참조).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의 17개 시·도별 추진전략 및 관련 과제를 고려했을 때, 돌봄(아동), 돌봄(성인), 건강, 환경, 총괄 등의 영역에서의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지방시대위원회, 2024).

〈표 4-10〉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시·도 지방시대 계획 예시

전략	시·도 지방시대 계획	
	핵심과제(예)	세부과제(예)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자치분권 강화	• (울산) 스마트 재난관리체계 고도화 및 중대재해 없는 안심도시 조성 • (세종) 세종 특화형 지방 주도적 발전모델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시민 주도의 주민자치 활성화	• (광주) 시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시민광장 광주 ON’ • (충남) 도민 참여예산 운영 등 주민참여 기반 주민주도 민주주의 강화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혁신인재 양성	• (서울) 공적 플랫폼 ‘서울린’ 운영 및 서울 시내 우수 대학 자원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인재를 양성하는 캠퍼스타운 운영 • (대전)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혁신성장 서점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	• (부산) 센텀시티 연계한 도심융합특구 • (대구) 소프트웨어 의료산업, 전기차 혁신산업 클러스터 등 5대 미래 신산업 성장거점 구축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 발전	지역 특화 전략산업 육성 및 창업 생태계 강화	• (인천) 글로벌 기업 및 금융자본 유치를 위한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추진 • (충남) 환황해 수소에너지 메카 조성 등의 국가 탄소중립경제 선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지방 소멸·나후지역 활성화	• (경기) 경기 북부 저발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 북부 인프라 집중 투자 • (충북)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추진
	의료·복지 확충·강화 및	• (대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를 통한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전략	시·도 지방시대 계획	
	핵심과제(예)	세부과제(예)
	사각지대 해소	응급의료 기능 강화 • (세종) 공동육아 나눔터 및 암 치료센터 설립 등 세종형 보건-복지체계 강화 및 의료 허브도시 도약
	지역 환경생태계 보전 및 주거환경 개선	• (경북) 동해안 산불방지·산지생태원 등의 산림 대전환 및 산림전환 역발상 프로젝트 •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및 자원클러스터 조성

출처: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지방시대위원회, 2023, 지방시대위원회, pp.149~151.
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우선,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5가지 전략(즉,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이 지역의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각 지자체의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는 데 총괄 영역의 세부 지표(즉, ‘타 시군구 대비 지역사회 만족도’(j26), ‘타 시군구 대비 거주 지역의 균형발전 인식’(j27~j34))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거주지역의 균형발전 인식에 소득 및 자산, 주거, 일자리, 교육시설 및 서비스, 사회 복지시설, 의료시설 및 서비스, 생활편의시설, 문화·여가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사회경제적 삶 전반에 관한 인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시대 시행계획 내 정책과제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5가지 전략 중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이나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전략과 관련하여,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분권 전략의 ‘지방의 자치역량 제고’ 관련 과제(광주광역시의 ‘약자 맞춤형 치안복지 플랫폼 희망티움 통합지원단 구축·운영’, 전라남도의 ‘복지안전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강화’ 등)의 현황이나 성과는 총괄 영역의 세부 지표인 ‘통합사례관리 수행 실적’(j14)이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 조사 기간 내 처리율’(j15) 등을 통해 평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생활복지 전략에서 ‘저출생·고령화 대응’, ‘삶의 질 높이는 지역 의료·보건·복지 확충’, ‘지역 환경·생태자원의 보전 및 활용 지원’ 관련 과제는 각각 돌봄(아동) 및 돌봄(성인), 건강, 환경 등의 영역에서 지역사회 보장지표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의 지역환경·생태자원 관련 과제(‘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자동차),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나 ‘조림, 숲 가꾸기, 지자체 도시숲 조성, 신천 정비 및 유지·관리’ 등)는 환경 영역에서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연간 발령 횟수’(i1/2)나 ‘탄소포인트제 참여율’(i10), ‘1인당 도시숲 조성 예산’(i13) 등과 같은 세부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표 4-11〉 경제/지역 분야 활용 가능 지표

지자체 주요 정책(계획)	지역사회보장지표	
	영역 구분	세부 지표(예시)
지방시대 시행계획	돌봄(아동)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여부(a4)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a7) • 초등돌봄교실 수(a11) • 18세 미만 인구 만 명당 지역아동센터 수(a12) 등
	돌봄(성인)	•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b18) • 노인 만 명당 지역사회 거주시설 수(b22) • 노인 천 명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수(b28) 등
	건강	• 전체 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 비율(d3) • 인구 10만 명당 응급의학 전문의 수(d20) • 인구 100만 명당 응급의료기관 수(d21) 등
	환경	•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연간 발령 횟수(i1) •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연간 발령 횟수(i2) • 탄소포인트제 참여율(i10) • 1인당 도시숲 조성 예산(i13) 등
	총괄	• 통합사례관리 수행 실적(j14),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 조사 기간 내 처리율 (j15) • 타 시군구 대비 지역사회 만족도(j26) • 타 시군구 대비 거주지역의 균형발전 인식: 소득 및 자산/주거/일자리/교육시설 및 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의료시설 및 서비스/생활편의시설/문화·여가시설(j27/28/29/30/31/32/33/34) 등

출처: 저자 작성

8) 주거/문화/환경

주거/문화/환경 영역에서 (지자체별) 주거종합계획, (지자체별)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 (지자체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등을 중심으로,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표 4-11〉 참조).

우선, 주거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주거기본법」은 국가 차원에서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시행(제5조) 외에 지역 차원에서 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시행(제6조)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17개 광역지자체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시·도 주거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제6조 제1항). 구체적으로, 경기도는 10년 단위의 ‘2030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서 이의 비전으로 ‘모든 도민이 쾌적하고 안전한(decent) 주택에 거주하고 적당한(affordable) 주거비를 부담하며 주거권이 보장된 행복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제시하였으며, 4대 정책 방향에 ①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 ② 균형 잡힌 주택 공급, ③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 ④ 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이 포함되었다(경기도, 2018).

또한, 1년 단위의 ‘2024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서 9가지 중점 추진 과제(수요자 중심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사회 초년생을 위한 내 집 마련 기회 제공, 타운매니지먼트 운영체계 구축, 사회주택 기반 마련 추진, 일 자리와 주거가 연계된 지역 맞춤형 택지공급 추진,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노후 원도심 도시재생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개선,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등 추진, 전세 피해 지원·예방 대책 추진)를 제시한다(경기도, 2024c). 이상의 주거종합계획의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를 고려했을 때(〈그림 4-9〉 참조), 주거 영역에서의 지역사회보장 지표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4-9] 2030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방향과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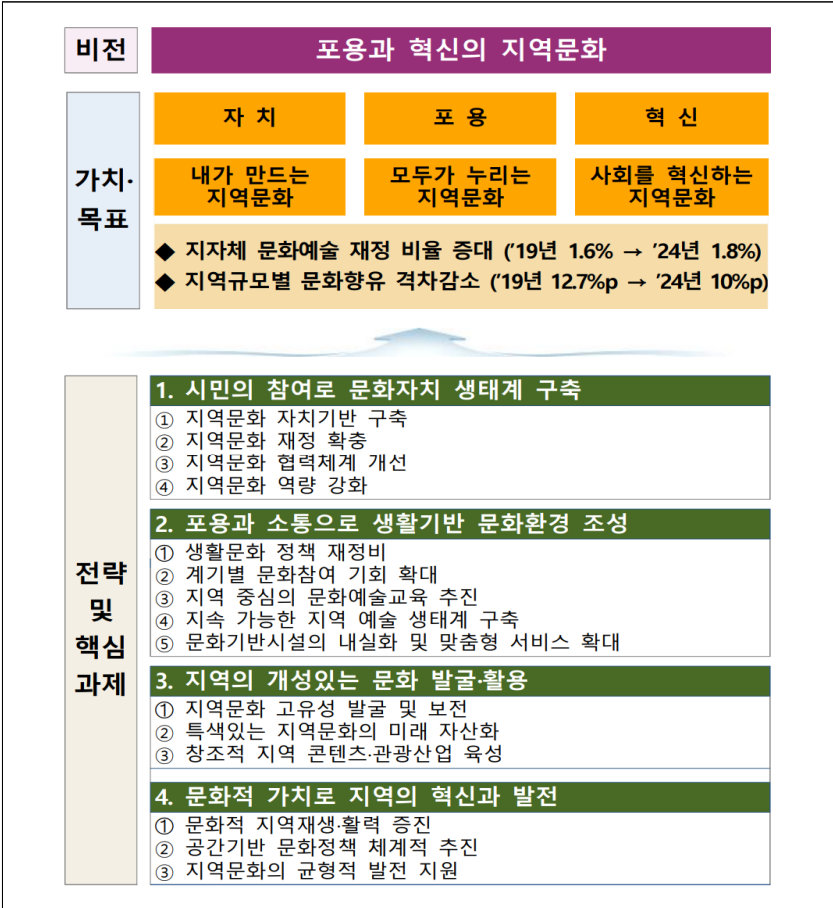


출처: “2030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경기도, 2018, 경기도, p.97.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 관련 과제(즉,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2.9만 호 공급’이나 ‘경기도 사회주택 시범사업 등 추진’ 등)는 주거 영역의 세부 지표인 ‘공공부문 임대주택 재고’(g4),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g9) 등을, 그리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이나 주거비 지원 관련 과제는 각각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 가구 비율’(g16) 및 ‘주택개선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g25) 또는 ‘주거급여 지원 예산’(g10) 및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g13)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은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라는 비전하에 4대 추진전략(①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②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③ 지역의 개성 있는 문화 발굴·활용, ④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5년 단위의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해당 시행계획의 정책과제(4대 전략, 15개 핵심과제, 36개 정책과제)를 고려했을 때([그림 4-10] 참조), 문화여가 영역에서의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4-10]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비전 체계도



출처: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2024)”, 문화체육관광부, 2020, 문화체육관광부, p.6.

예를 들어, 지역의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관련 과제의 경우, 문화정책 예산에 관한 세부 지표(‘1인당 문화 관련 예산’(h2), ‘총예산 대비 문화 관련 예산 비율’(h4) 등)나 생활문화 인프라에 관한 세부 지표(‘1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h13), ‘10만 명당 생활문화시설 수’(h14) 등)를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 콘텐츠산업 육성 관련 과제는 ‘지역 문화예술법인·단체 및 사회적 기업 수’(h5) 같은 세부 지표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여가시설 및 서비스 접근성 관련 과제(즉, ‘사회적 약자를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박물관·미술관 열린 환경 조성’,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정책기능 강화’ 등)의 필요성이나 성과를 평가하는 데 문화 여가 영역의 세부 지표(즉, ‘취약계층 1인당 문화복지 예산’(h3), ‘문화 소외계층 천 명당 문화 소외계층 대상 문화 프로그램 진행 건수’(h12),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 인증 비율’(h18), ‘공연장·전시장·공공도서관 내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비율’(h19) 등)를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와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그리고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그리고 기초지자체의 장은 10년 단위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도약’이라는 전략 목표하에 3대 정책 방향(경제·사회구조 모든 영역에서 책임 있는 탄소중립 실천, 소통·공감·협력을 통해 질서있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으로 녹색성장을 이끌어 가는 혁신주도), 그리고 4대 전략 및 12대 과제로 구체화되었다(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23).

또한, 서울특별시의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은 이의 비전으로 ‘시민과 함께 내일을 키우는 2050 탄소중립

도시'로 설정하였으며, ① 과학에 기반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② 시민, 기업,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실천, ③ 혁신으로 선도하는 기후테크 활성화, ④ 자원이 순환하는 생태도시 조성, ⑤ 포용적이고 안전한 삶의 질 고양이라는 5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서울특별시, 2024). 이상의 정책전략 및 세부 시행계획 등을 고려했을 때([그림 4-11] 참조), 주거, 환경 영역에서의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4-11]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 비전 체계도



출처: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2024, 서울특별시, p.154.

예를 들어, 온실가스 감축 부문에서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과제(특히, 저소득층 지원)는 주거 영역의 세부 지표(‘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예산’(g11),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가구 비율’(g16) 등)를, 그리고 수송부문(친환경 차량, 탈내연기관), 탄소흡수(도시숲), 폐기물(재활용), 시민협력 등 과제는 각각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i18), ‘1인당 도시림 면적’(i15) 또는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률’(i17), ‘주민 1인당 재활용품 일일 분리배출량’(i12), ‘탄소포인트제 참여율’(i10) 등과 같이 환경 영역의 세부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기후위기 적응대책 부문 역시 시민건강 및 취약계층 보호 관련 과제(에너지취약계층 보호 등)는 주거 영역이나 총괄 영역의 세부 지표(‘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가구 비율’(g17), ‘냉난방비 부족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j43), ‘냉난방비 부족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j44) 등)를, 그리고 도시숲 확충 관련 과제(생활권 주변 공원녹지 확대 등)는 환경 영역의 세부 지표인 ‘생활권 도시림 면적률’(i16)이나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률’(i17) 등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표 4-12〉 주거/문화/환경 분야 활용 가능 지표

지자체 주요 정책(계획)	지역사회보장지표	
	영역 구분	세부 지표(예시)
(지자체별) 주거종합계획	주거	• 공공부문 임대주택 재고(g4) •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g9) • 주거급여 지원 예산(g10) •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g13)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가구 비율(g16) • 주택개선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g25) 등
(지자체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문화여가	• 1인당 문화 관련 예산(h2) • 취약계층 1인당 문화복지 예산(h3) • 총예산 대비 문화 관련 예산 비율(h4) • 지역 문화예술법인·단체 및 사회적 기업 수(h5) • 문화 소외계층 천 명당 문화 소외계층 대상 문화 프로그램 진행 건수(h12) • 1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h13) • 10만 명당 생활문화시설 수(h14) •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 인증 비율(h18) • 공연장·전시장·공공도서관 내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비율(h19) 등
(지자체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주거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예산(g11)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가구 비율(g16) •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가구 비율(g17) 등
	환경	• 탄소포인트제 참여율(i10) • 주민 1인당 재활용품 일일 분리배출량(i12) • 1인당 도시립 면적(i15) • 생활권 도시립 면적률(i16) • 1인당 생활권 도시립 면적률(i17) •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i18) 등
	총괄	• 냉난방비 부족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j43) • 냉난방기 부족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j44) 등

출처: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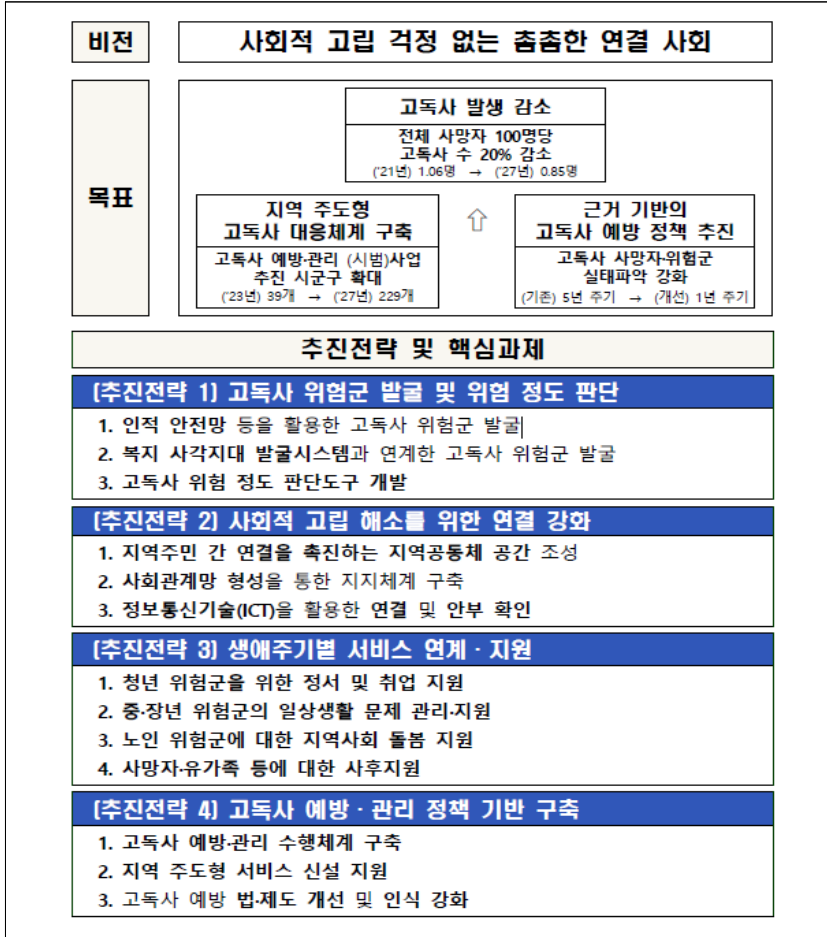
9) 기타 지역복지

기타 지역복지 영역에서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지자체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등을 중심으로,⁸⁾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보장 지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표 4-12〉 참조).

우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의미한다.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은 고독사 발생 감소, 지역 주도형 고독사 대응체계 구축, 근거 기반의 고독사 예방 정책 추진의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추진전략(①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②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③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④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과 13개 핵심과제, 그리고 39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한다(보건복지부, 2023b).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관련 정책과제를 고려했을 때(〈표 4-12〉 참조), 돌봄(성인), 교육, 고용, 총괄 등의 영역에서의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8)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경우, 2025년 1월 현재 지자체별 시행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관계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역시 매년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어서 ‘2024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안내’를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4-12]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 비전 체계도



출처: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 보건복지부, 2023b, 보건복지부, p.15.

예를 들어, ‘고독사 위험군 발굴’이나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 같은 정책과제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민간 자원봉사자 같은 지역의 인적 안전망을 중심으로 취약가구를 발굴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총괄 영역의 세부 지표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j19)이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j20) 등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지자체 업무수행 기반 강화’ 과제에서 고독사 위험군 사례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사례관리사의 단계적 증원 및 권한 확대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통합 사례관리 수행 실적’(j14)이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 조사 기간 내 처리율’(j15) 등과 같은 세부 지표 역시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다.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과제의 세부 추진과제인 ‘고독사 취약 지역 내 지역공동체 공간 조성’이나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사회 관계망 형성 지원’ 등은 총괄 영역의 ‘지역 복지공동체 육성 지원’(j21) 지표를 통해 관련 현황이나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과제는 청년, 중·장년, 노인 등 다양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먼저, ‘조기 퇴직한 중·장년 대상 재취업 지원 강화’나 ‘중·장년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강화’ 같은 중·장년 위험군 관련 세부 추진과제는 지역사회보장지표에서 교육 영역(‘평생학습 참여율’(e8), ‘평생교육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e29))이나 고용 영역(‘실직 중장년 재취업률’(f11))의 세부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노인 위험군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의료·건강관리·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 등 연계·제공’ 등)는 ‘노인 1인당 노인돌봄 예산’(b26)이나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b29) 등 돌봄(성인) 영역의 세부 지표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자체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수립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2024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안내’에 따르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3대 목표는 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의 신속한 발굴, ② 위기가구에 대한 지역 내 복지자원 연계·지원 확대, ③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인프라 강화이며, 이의 3대 추진전략으로 ① 신속·정확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 ② 민·관협력 복지자원 연계·제공 강화, ③ 읍면동 보건복지서비스 인프라 강화를 제시한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2024). 해당 가이드라인에서의 추진전략 및 주요 내용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분석한 결과 ([그림 4-13] 참조), 총괄 영역의 지표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추진전략은 지역 내 위기가구를 발굴할 뿐 아니라 이들 가구에 지역 복지자원을 연계·제공하는 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읍면동 복지전달체계 전반에 걸쳐 있다. 이에 따라, 총괄 영역에서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 수’(j12), ‘통합사례 관리 수행 실적’(j14),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 조사 기간 내 처리율’(j1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j19),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j20) 등을 통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전반에 관한 현황이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그림 4-1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요 내용(요약)

구분	종합상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통합사례관리	복지+건강 기능 강화
시도	· 시군구 모니터링 · 시군구 성과평가	· 시군구 모니터링 · 시군구 성과평가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총괄지원	· 사례관리 총괄 지원	· 시군구 모니터링 · 시군구 성과평가
시군구	· 계획수립 및 역량강화 지원 - 교육계획 수립 · 읍면동 모니터링 · 읍면동 성과평가 ·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	·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 기획 · 읍면동 모니터링 · 읍면동 인적 안전망 구축 지원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 관리 및 교육 ·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 계획 수립 (대상 선정 및 업무프로세스 등)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지원 · 복지와 보건의 협력체계 구축	· 사례관리사업 총괄 수행·관리 - 고년도 사례관리, 슈퍼비전 및 솔루션회의 운영 등 ·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 및 역량강화 ※ 지역고용복지플러스 센터 사례관리협의체 협력체계 구축 운영	· 계획수립 및 역량강화 지원 - 교육계획 수립 · 읍면동 모니터링 · 읍면동 성과평가 ·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
읍면동	· 종합상담 실시 - 돌봄서비스 접수 및 통합안내 등 · 주민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 · 다 기관 서비스 필요시 해당 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 읍면동 특성에 맞는 위기가구 발굴 체계 구성 · 주민교육·홍보 실시 · 대상자 발굴 후 체계적 지원 및 관리 수행 · 주민의 주도적 참여 촉진	· 기존 복지대상자 및 신규대상자 (노인가구 등) 방문 및 상담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지원 ·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 지속적인 사후관리 (모니터링)	· 게이트웨이 및 사후관리 역할강화 -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발굴, 초기상담, 통합사례관리, 종결가구에 대한 사후관리 등 수행 - 고년도 사례, 솔루션회의는 시군구에 의뢰 ※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민간 사례관리 전문기관 (지역사회복지관 등)과 통합사례관리 협력 체계 구축 운영	· 건강의 욕구가 있는 대상자 상담 및 관리 · 읍면동 간호직 공무원 역할 체계 확립 - 지역사회 현황 파악 - 지역 주민 건강상태 파악 및 건강사례관리 - 건강관련 지역역량 파악 - 지역건강돌봄 자원과 연계·협업 네트워크를 마을건강복지를 위한 업무계획 수립 - 건강전문가로서 행정 내 협업 주도

출처: “2024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안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2024, 보건복지부, p.32.

한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궁극적 목적은 위기가구에게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내 (위기가구의) 다양한 보건복지 수요가 얼마나 충족되었는지 역시 해당 정책의 성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총괄 영역의 세부 지표(예를 들어, ‘생계비 부족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j36), ‘주거비 부족(주택 구입비 제외)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j38), ‘의료비 부족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j40), ‘교육비 부족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j42), ‘냉난방기 부족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j44), ‘가계 재정 관리 어려움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j46), ‘가족 관계에서의 어려움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j48),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j50) 등) 역시 활용 가능할 것이다.

〈표 4-13〉 기타 지역복지 분야 활용 가능 지표

지자체 주요 정책(계획)	지역사회보장지표	
	영역 구분	세부 지표(예시)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돌봄(성인)	• 노인 1인당 노인돌봄 예산(b26)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b29) 등
	교육	• 평생학습 참여율(e8) • 평생교육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e29) 등
	고용	• 실직 중장년 재취업률(f11) 등
	총괄	• 통합사례관리 수행 실적(j14)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 조사 기간 내 처리율(j15)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j19)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j20) • 지역 복지공동체 육성 지원(j21) 등
(지자체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총괄	•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 수(j12) • 통합사례관리 수행 실적(j14)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 조사 기간 내 처리율(j15)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j19)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j20) • 생계비 부족/주거비 부족(주택 구입비 제외)/의료비 부족/교육비 부족/냉난방기 부족/ 가계 재정 관리 어려움/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j36/38/40/42/44/46/48/50) 등

제2절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 수요 검토

1.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 수요 검토

가. 전문가 대상의 지표활용 수요 조사 개요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 영역 전문가 대상의 서면 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 참여자 정보 생략). 조사에 응답한 전문가는 총 9인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관리 등의 경험을 가진 관련 기관 연구자 및 교수 등으로 조사 대상을 구성하였다.

서면 조사의 내용은 크게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의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과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 관련 영역에서의 지역사회보장 지표 활용 경험으로 구분된다.

〈표 4-14〉 지표 수요 조사지 구성 1

	활용 여부	활용 예시
지역사회 보장계획 활용	복지 수요·공급·지역자원 현황 분석	해당 영역 작성 시 지표 데이터 활용
	주요 사회보장 욕구 및 핵심과제 도출	해당 영역 작성 시 지표 데이터 활용
	전략체계 수립 배경 및 목표설정 근거	지표 결과 등을 활용한 근거 제시
	전략 및 세부 사업 성과지표 설정	전략 및 세부 사업의 성과지표에 해당 데이터 활용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 (평가체계, 통계관리 등)	모니터링 및 평가 과정 중 지표 데이터 활용, 통계관리 측면에서의 데이터 수집 및 제공
	(주관식)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관리 시 지역사회보장지표가 활용되는 주요 사례와 그 사유	
	(주관식)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관리 시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	
	(주관식)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관리 시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개선사항	

출처: 저자 작성

〈표 4-15〉 지표 수요 조사지 구성 2

	활용 여부	활용 예시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 활용	지역 복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관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사회서비스 정책 관련
	인구 청년 등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관련 청년정책 관련 평생교육 관련 계획
	아동	보육계획(영유아보육법 등) 아동 관련 계획(아동복지법 등) 아동돌봄체계 구축 등 아동친화도시 인증
	노인	노인복지계획 지역사회통합돌봄 관련 고령친화도시 인증
	여성 가족	양성평등기본법 관련 다문화/한부모 관련 계획 수립 여성(가족)친화도시 인증
	장애등	장애인 복지 관련 정책 장애친화도시(무장애도시 등) 교통약자 기본계획 등
	보건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계획 건강도시 인증
	(주관식) 지역사회보장계획 외에 지역사회보장지표가 활용되거나 활용될 수 있는 주요 정책 영역과 그 사유	
	(주관식) 지역사회보장계획 외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주관식) 지역사회보장지표가 다양한 분야 및 영역에서 활용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	

출처: 저자 작성

나. 전문가 대상의 지표 활용 수요 조사 결과: 지역사회보장계획 활용

〈표 4-16〉 지역사회보장계획 내 지표 활용 영역별 결과

활용 여부	활용 구분			세부 활용 사례
	활용	미활용	해당 없음	
복지 수요·공급·지역 자원 현황 분석	8	1	-	(활용) 각종 지역사회 현황에 대한 기술 (미활용) 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지표의 활용 어려움, 데이터 생산 시점상 계획지표로 활용 한계
주요 사회보장 욕구 및 핵심과제 도출	4	5	-	(활용) 지역 현황 분석, 과제도출 배경으로 활용 (미활용) 지역사회보장조사가 상대적으로 활용도 높음
전략체계 수립 배경 및 목표설정 근거	3	6	-	(활용) 지역 간 비교 등 (미활용) 계획 내 목표에 부합하는 지표 내용 부재
전략 및 세부 사업 성과지표 설정	3	6	-	(활용) 관련 성과에 대한 확인 등 간접적 활용 (미활용) 데이터 생산 시점상 문제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 (평가체계, 통계관리 등)	4	5	-	(활용) 관련 성과에 대한 확인 등 간접적 활용, 타 지역 변화 검토 등 (미활용) 데이터 생산 시점상 문제, 특히 모니터링 특성에 맞지 않음

출처: 저자 작성

지역사회보장지표가 활용되는 주요 사례 및 그 사유와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지역사회보장지표가 주로 지역사회 현황 분석과 전략체계 수립에 활용된다고 답했다. 특히, 복지 수요·공급·지역자원 현황 분석, 성과지표 설정, 전략과 과업의 목표 도출 등에서 지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타 지역과 비교하여 지역사회 수준을 파악하거나, 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보장 영역에서 주요 지표로 활용된 사례도 언급되었다. 또한, 사회보장 욕구 및 지역 여건 진단과 같이 정책 수립의 기반 자료로 쓰인다고도 언급되었다.

지표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지표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데이터의 최신성 부족과 지역 특성 반영의 한계를 꼽았다. 예를 들어, 필요한 지표가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거나(1인 가구 비율, 청소년 문제 등), 전국 단위 지표가 지역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일부 데이터의 완결성이 미흡하고 미생산 지표가 많아, 활용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언급하였다.

지표 활용에서의 불편 사항 관련, 지표 활용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으로는 자료의 시의성 부족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예를 들어, 지표가 2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발표되기 때문에 현재의 복지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지표 데이터가 다양한 자료로 분산되어 있어 자료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한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를 모두 찾기 어려운 구조가 문제로 제기되기도 했다.

지표 활용 개선 방안 관련, 응답자들은 지표 활용을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의 세분화와 생애주기별 구성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고용률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지표 구성이 필요하며, 성과 중심의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투입, 과정, 산출을 연계한 체계적 지표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데이터의 시기적 업데이트를 강화하고, 통합적 관리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4-17〉 지역사회보장계획 내 지표 활용에 관한 세부 응답 결과

활용 여부	주요 내용
(주관식)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관리 시 지역사회보장지표가 활용되는 주요 사례와 그 사유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주요 활용 사례” - 추진전략 및 성과지표 활용 - 지역사회보장지표는 추진전략, 대표 과업, 세부 사업의 성과지표로 활용됨. - 예를 들어, 전북자치도 장애인 고용률 증가와 같은 주요 성과를 확인하고 목표지표를 설정하는 데 사용됨. - 현황 분석 및 정책 수립 - 복지 수요·공급·지역자원 현황 분석에 기초하여 전략체계 수립과 목표 설정에 근거로 활용됨. - 지역사회 현황 및 사회보장 욕구를 파악하고 핵심 과제를 도출하는 데 유용함. - 타 시도 및 지역 간 비교 - 지역사회보장지표는 타시도와와의 수준 비교를 통해 돌봄,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현황과 욕구를 분석하는 데 사용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차상위계층 수급자 비율 등을 통해 지역별 격차를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함. - 정책 근거 자료 - 기초생활비 부족 등 주민의 복지 수요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됨. - 이를 통해 신설, 변경, 폐지 등 정책적 결정을 내릴 때 설득력 있는 근거로 활용됨.
(주관식)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관리 시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의 이유” - 객관적 현황 파악 및 비교 - 통계 자료를 통해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연도별 변화 추이를 추적할 수 있음. - 타 시도 및 지역 간의 사회보장 수준 비교를 통해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음. - 전략 수립과 성과 평가 - 명확한 사업목표와 성과목표를 도출하고 지역별 현황을 기반으로 추진 성과를 점검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체계적인 사회보장 계획을 검토하고 관리할 수 있음. - 취약계층 지원 및 근거 확보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초 보장 영역에서 활용됨. - 근거 기반의 데이터로 신설, 변경, 폐지 등의 정책적 결정을 뒷받침하며, 사회보장위원회 등에서 설득력 있는 자료로 사용됨. “데이터 내용상의 제약사항” - 필요한 데이터 부족 - 지역사회보장지표에 1인 가구 비율, 청소년자살률, 청년고용률, 지역별 출산율 등 현재 이슈가 되는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음. - 지역 현안이나 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표가 부족하며, 전국적 비교 자료 구축도 미흡함.

활용 여부	주요 내용
	2. 데이터의 최신성 부족 - 데이터의 생산주기가 길어(예: 4년), 실시간 활용이 어려움. - 65세 이상 인구수, 시설 수 등의 데이터가 발표 시점보다 2~3년 이상 늦게 제공됨. 3. 데이터 제공의 분절성 - 학령별 학업중단률 등 세부적이고 필요한 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하지 않아 별도 데이터 수집 필요. - 광역 단위 데이터는 있으나, 읍면동이나 시군 단위 데이터는 부족함. “데이터 활용상의 불편사항” 1. 시기적 한계 - 데이터가 시의적절하지 않으며, 23년도 지표가 24년 말에 공개되는 등 실시간 데이터 활용이 어려움. -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리하는 데 변화의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움. - 편의성 부족 - 데이터가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어 필요한 자료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 데이터 제공 플랫폼의 접근성이 낮고, 균형발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데이터 관리가 미흡함. 2. 구조적 문제 - 지표의 영역 구분이 불명확하여, 일부 영역은 잘못된 위치에 포함되거나 “기타” 항목으로 처리됨. -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센터 같은 플랫폼의 자료 접근성과 관리 부족으로 데이터 활용이 제한적임. “개선 필요 사항” - 데이터 통합 및 세분화: 필요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된 데이터 제공 필요. - 생산주기 단축: 데이터의 최신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주기를 단축해야 함. - 접근성 강화: 데이터 검색과 접근성을 높이고, 플랫폼 내 자료 관리를 개선해야 함. - 지역 특화 데이터 반영: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해야 함.
(주관식)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관리 시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개선사항	“지표 내용 및 구성 관련” 1. 세분화 필요 - 생애주기별 구분(청년, 중장년, 노인 등) 및 고용률, 실업률 등의 항목을 세부적으로 구성해야 함. - 빈곤율, 탈빈곤율 등 연령대별로 세분화된 지표 필요. 2. 성과 중심 지표 - 단순한 현황보다 성과 중심 지표가 더 필요하며, 투입, 과정, 산출로 연계된 지표체계를 구성해야 함.

활용 여부	주요 내용
	- Outcome 지표를 활용하도록 구성 필요. 3. 지역 특수성 반영 - 지표는 지역별로 고유한 특수성을 반영해야 함. - 지역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 활용도가 낮음. 4. 통합적 관리 필요 - 지역 내 기관에서 조사한 데이터도 통합적으로 관리 및 제공되어야 함. - 재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하여 유연한 활용 가능성 확보 필요. “접근성 및 편의성 관련” 1. 데이터 최신화 - 데이터 생산주기가 길어 최신 자료 활용이 어려움. (예: 2023년 지표가 2024년 하반기에 제공됨) - 최신 데이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 업데이트 필요. 2. 편리한 제공 형식 - 엑셀 파일 제공 등 데이터 정렬 및 활용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식 필요. - 데이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그래픽 자료 및 보고서 형태로 제공해야 함. 3. 플랫폼 개선 -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모든 데이터를 쉽게 검색 및 접근 가능하게 해야 함. - 예를 들어, KOSIS에서 모든 지역사회보장지표를 접근할 수 있는 통로 마련 필요. 4. 일반 사용자 고려 - 일반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가공 및 제공 필요. - 시도 평균을 제시하여 데이터 해석의 직관성을 높임

출처: 저자 작성

다. 전문가 대상의 지표 활용 수요 조사 결과: 지역사회보장 정책 영역

〈표 4-18〉 지역사회보장 정책분야 지표 활용 영역별 결과

활용 여부	활용 구분			세부 활용 사례
	활용	미활용	해당 없음	
지역 복지	5	2	1	(활용) 취약계층 위기가구 등 관련 정보 활용, 시군구 지표 데이터 제공 등 (미활용) 해당 정책 미추진 또는 해당 지표 활용 여부에 대한 확인 한계
인구 청년 등	2	2	4	(활용) 청년 고용 등 관련 실태 확인 (미활용) 해당 정책 미추진 또는 해당 지표 활용 여부에 대한 확인 한계
아동	2	3	3	(활용) 보육 등 아동 관련 정책 현황 검토 (미활용) 해당 정책 미추진 또는 해당 지표 활용 여부에 대한 확인 한계
노인	4	1	3	(활용) 노인인구 현황, 관련 자원 수준, 고령친화도시 관련 지표 활용, 지역사회통합돌봄 관련 데이터 활용
여성 가족	1	4	3	(미활용) 해당 영역 정책에서의 활용도 낮음
장애 등	4	2	2	(활용) 장애인 인구, 장애인 관련 자원 현황, 장애인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 시에 활용
보건	2	2	4	(미활용) 자살률, 건강 상태 등 일부 지표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나 보건 영역 정책에 대한 직접적 활용도는 떨어짐

출처: 저자 작성

지역사회보장지표가 활용되거나 활용될 수 있는 주요 정책 영역과 사유 관련, 응답자들은 아동, 장애인, 노인, 돌봄, 고용, 평생교육, 문화여가 등 사회복지 및 지역발전 전반의 정책에서 지표가 활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사회보장 10대 영역이나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 같은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지표의 유용성을 강조했다. 지자체 사업계획서와 성과목표 설정, 특정 지역 전략 계획 수립에도 사용 가능하며, 고령친화도시 인증이나 국제적 기준에 맞춘 정책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 실태와 이유 관련, 많은 응답자들이 지역사회 보장계획 외에는 지표 활용이 활발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인지도 부족, 활용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 구체적 활용방안 미흡 등이 꼽혔다. 일부 응답자는 돌봄 관련 지표 등 특정 영역에서는 데이터를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다고 평가했다. 이는 사용자 교육 부족 및 정책에 대한 이해도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분석되었다.

지표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지표 활용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데이터의 시의성 부족과 미생산 지표의 존재를 언급했다. 일부 응답자는 지표의 인지도가 낮아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 담당 부서 외에는 지표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또한, 지표 항목의 다양성과 상세성 부족으로 인해 구체적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표 활용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지표 개선 방안으로 성과 중심의 지표 개발, 생애주기별 지표 구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항목을 제안했다. 특히, 다른 지표 사례 등을 참고하여 성과 기반의 지표 개발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정책 동향에 부합하는 신규 지표 개발과 기존 미생산 지표의 정리를 통해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표 관리 시스템 구축 역시 중요한 개선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표 4-19〉 지역사회보장 정책 영역 지표 활용 세부 응답 결과

활용 여부	주요 내용
(주관식) 지역사회보장계획 외에 지역사회보장지표가 활용되거나 활용될 수 있는 주요 정책 영역과 그 사유	- 지역사회보장지표는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사회복지 전반의 정책, 고용, 평생교육, 문화여가,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함. - 특히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 신규 사업 발굴, 복지 인프라 확충 등에 유용하며, 시·군·구별 전략과 계획 수립 시에도 활용됨. - 고령친화도시 인증이나 특정 사회보장 영역(아동, 노인 등)에 관계없이 폭넓게 사용 가능함. - 현행 지표는 형식적이며, 미생산 데이터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지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미생산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생산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표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비교하고 적정 수준의 목표량 설정이 가능하므로, 데이터의 체계적 생산 및 관리를 요구함. - 지역사회보장지표는 정책연구보고서의 출처로 활용될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사용 가능함. - 시도 및 시군구 단위에서 지표의 변화 추이를 산출하고 평균 데이터를 통해 각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음. - 사회서비스 7대 영역이 포함되어 있어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관련 계획수립에서 활용 가능함. - 지역 주민 설문조사 대신 지역사회보장조사의 결과를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음. - 시도 및 시군 간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됨. - 사업 및 과업의 성과 목표 설정에 활용 가능하며, 지표 활용 교육이 병행된다면 공무원들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데이터의 세부 성과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계획 수립이 가능함. - 돌봄 영역과 관련된 지표는 돌봄 욕구 및 필요성을 파악하여 통합돌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 가능함.
(주관식) 지역사회보장계획 외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 실태 및 문제점” - 지역사회보장계획 외에는 지표 활용이 활발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 있음. - 정책연구에서 현황 및 실태 파악 시 보조 자료로 사용되며, 일부 지속가능발전계획이나 시도의 자체 계획 수립에서 활용됨. - 신규 사업 개발 과정과 시군 간 복지 격차 진단 및 균형발전 구상에 중요한 지표로 간헐적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있었음. - 하지만 지표 활용이 활발하지 못하거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음. - 돌봄 관련 지표는 일부 지역에서 복지 수요 판단의 근거 자료로 사용되기도 했으나, 전반적인 활용도는 낮음. - 공유 부족: 지역사회보장지표가 지역사회보장계획 담당부서로만 전달되고, 타 부서로는 공유되지 않아 활용이 제한되고 있음.

활용 여부	주요 내용
	- 인지도 문제: 지역사회보장지표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접근성이 떨어져 활용도가 제한됨. - 생산 지표 제한: 생산되는 지표 수가 적고, 일부 분야에서는 활용 가능한 지표의 수가 더욱 줄어들어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움. - 생산주기 문제: 생산주기가 길어 최신 정보를 활용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짐. - 인지 부재: 일부에서는 지표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지표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개선 방향” - 공유 확대: 지역사회보장계획 외에도 타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표를 공유해야 함. - 인지도 향상: 지표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사용자의 인식을 높여야 함. - 생산주기 개선: 지표 생산 속도를 높여 실시간 활용성을 강화해야 함. -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용: 지역사회보장계획의 10대 영역 확대로 인해 다양한 정책 수립에 지표를 적용 가능함. - 정책 자료로의 활용성 강화: 통계 자료 기반으로 단기적인 정책 수립 시 공식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주관식) 지역사회보장지표가 다양한 분야 및 영역에서 활용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	“생산 및 활용 과정 개선” - 지표의 생산 시점이 너무 늦어 활용에 어려움이 많으며, 통계포털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미생산 지표는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지표만 포함하여 신뢰도를 높여야 함. “내용 및 지표 다양화” - 생애주기 대상별 삶의 만족도 같은 지표 구성 및 행복지표 개발 필요. - 은둔형 외톨이, 중장년 고독사 등 새로운 정책 이슈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체계 구축 필요. - 영국의 Multiple Deprivation Index 같은 성과 중심 지표 개발 및 읍면동 수준의 데이터로 세분화 필요. “지역 특성 반영” - 지역사회보장지표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 지역별로 다양한 정책 요구와 사회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 다양화 필요. “외국인 및 기타 특별한 집단 반영” - 외국인 주민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한 지표 개발 필요. - 외국인 인구 증가와 관련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자료 구축 필요.

활용 여부	주요 내용
	“지표 통합 및 세분화” - 지표 영역별 구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고, 지역보건의료 계획 등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함. - 실태조사 데이터를 포함하고 시군, 읍면동 단위로 데이터를 세분화하여 제공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여야 함. “지표 생산 및 보급” - 미생산되고 있는 사회보장지표를 적극적으로 생산하여 보급해야 함. - 특히, 시군 단위에서는 미생산된 지표가 많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지표 홍보 및 접근성 향상” - 지역사회보장지표가 다양한 정책 및 연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함. - 사회보장지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 시스템 구축 필요. 예를 들어, 미국 인구 센서스나 한국 통계청처럼 선택적으로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플랫폼이 요구됨. - 시민과 타 분야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표 생산 및 관리 체계 홍보 강화 필요. “최신성 확보” - 시도 홈페이지의 통계 자료처럼 최신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지표 생산주기를 조정해야 함. - 최신성을 기반으로 한 자료는 정책 개발과 기본 계획 수립에서 높은 활용도를 가질 수 있음. - 광역 및 기초 단위 활용 확대 - 광역 차원에서는 시군별 복지 수요와 공급 데이터를 통해 정책 논거를 마련할 수 있음. - 기초 단위(읍면동)의 수요와 공급 데이터를 제공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을 지원해야 함. “통합 플랫폼 구축” - 모든 데이터가 통합된 플랫폼을 구축하여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야 함. - 지역 연구기관에서 생산한 데이터도 통합 플랫폼에서 제공되어야 함. - 해외 사례 참고, 영국의 3년 주기 데이터 제공 사례를 참고하여 주기적인 데이터 생산 및 독립적인 포털을 통해 공개해야 함. - 지방정부와 민간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출처: 저자 작성

제3절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성 확대 방향

본 절에서는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명확화, 정책적 활용 확대, 수요자 중심의 지표 구성 및 조사데이터 활용 확대 그리고 지표 제공 체계 및 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앙부처에서는 지역복지 수준 분석,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을 위해 표준화된 지역사회보장지표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표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통계와 지표를 산출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근거 부족과 지자체 스스로 관리 또는 활용 주체로서 한계, 그리고 통계 및 지표를 제공하는 방식도 해당 자료의 이용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성 확대 방향은 다음과 같다.

〈표 4-20〉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성 확대 방향

핵심 목표	활용성 강화 부문	세부 방향
지역사회보장 지표 활용성 강화 방향	→ 법·제도적 측면 통계지표 활용 기반 및 범위 확대	→ ① 사회보장통계 및 지표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사회보장급여법 지표 관리 및 활용 명확화 - 사회보장통계 및 지표 관련 지침 마련 - 사회보장기본법 등 타 법과 연계 확대 → ② 지역사회보장 통계 및 지표 활용 확대 강화 - 지역사회보장계획 점검(모니터링) 지표 활용 - 지역사회보장 정책 설계 활용 강화
	→ 통계지표 구성체계 및 제공 등 관리 방식 개선	→ ③ 수요자 중심 지표 설계 및 조사데이터 활용 확대 - 지역 주관 지역사회보장통계 관리체계 - 조사통계와 행정통계 통합적 활용 - 지역 수요 중심 지역사회보장통계지표 제공 확대 → ④ 지표 데이터 제공체계 개선 및 교육 확대 - 지역사회보장통계 플랫폼 기반 마련 - 사회보장통계와 지역사회보장지표 간 연계 - 지역사회보장통계지표 인식개선 및 교육

출처: 저자 작성

1. 지역사회보장통계 및 지표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사회보장급여법에 명시한 지역사회보장지표의 목적은 지역사회보장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를 점검하는 데 있다. 이때 지표는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목표에 대한 표지이며 복합적이고 추상적인 지역사회보장의 수준과 현상을 명료하게 보여주기 위한 지수나 척도로 이해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지역별로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 10개 영역을 중심으로 총 230개 지표를 산출하였고, 2022년 기준 총 254개 지표, 2023년 기준 336개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법에서 명시한 지표의 수립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해당 지자체의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보장 관련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사회보장지표를 제공하고 있어, ‘중앙 중심의 지표 산출 및 제공’, ‘지자체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지표 구성 체계’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에 따라 형식적인 지표 활용이 만연하고 주민의 복지 욕구를 반영하는 데이터로서도 한계를 갖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무엇보다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지표(시군구의 경우 제36조 1항의 2, 시도의 경우 제36조 2항의 2)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 자료(시군구의 경우 제36조 1항의 7, 시도의 경우 제36조 2항의 5)가 서로 역할과 기능이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성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사회보장급여법에서는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도록 제시되어 있으나, 지표 설정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과 적용 범위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범위를 지역사회보장 목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보장의 세부 사업으로 확대하고, 지표 설정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보장급여법에는 지자체 스스로 지표 작성 주체, 산정 방식, 활용하는 데이터 통계 자료 등 작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지표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보장 지표는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역사회보장의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하고 이를 환류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데 환류할 뿐만 아니라, 지역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지침에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한 점검뿐만 아니라 점검 결과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동법 제36조의 2항에는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의 설정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 수준의 점검뿐만 아니라 점검 결과에 관한 내용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결과보고서에 담길 필요성이 있다.

둘째, 지역사회보장통계의 관리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동법 제40조에서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을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광역자치단체는 관할 시군구 관련 사회보장 통계 및 지표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시군구는 관련 통계 및 지표 산출에 협조하고 적극적인 활용 주체로서 역할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보장통계와 지표를 위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지표의 활용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시자료, 관리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보장통계 수집, 활용 및 관리 방안에 관한 근거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표 4-21〉 지역사회보장통계 및 지표 고도화를 위한 법 근거 개편 방향

사회보장급여법(지역사회보장통계 관련 조항 개정 및 신설)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①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 설정 및 목표 7.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5.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 자료의 수집 및 관리 방안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①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 설정 및 결과 7.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활용 및 관리 방안 수립 ② 제35조 제3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결과. 5. 관할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통계를 포괄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통계 수집, 활용 및 관리 방안 수립
〈신설〉	지역사회보장통계 수집, 활용 및 관리 방안 ①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는 지역사회보장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제36조 1항과 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 자료의 수집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장은 수집한 지역 사회보장통계를 종합하여 시도사회보장위원회(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보장통계를 활용하여 계획수립 및 점검, 정책 설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1.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보장통계를 활용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보장에 관한 통계를 활용하여 지역 여건 및 정책 필요성을 분석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복지 수준을 분석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통계지표를 수립 및 관리해야 한다. ③ 지역사회보장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또는 지침으로 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보장통계 및 지표의 고도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통한 교육, 관리 등 활용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정책적 측면 개선 방향

사회보장급여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지역사회보장지표는 지역사회보장 목표를 점검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수범 사례 제시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사회보장통계와 지표를 활용하여 근거 기반형 지자체 자체 복지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표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복지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지자체가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협의 요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표 활용의 필요성이 있음을 제언한다.

가. 지역사회보장 목표 점검

모니터링은 프로그램 집행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로, 집행 모니터링과 성과 모니터링으로 나눌 수 있다. 모니터링은 프로그램 투입 또는 프로그램 활동들을 측정값과 비교함으로써,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지정된 대상 모집단 또는 지역에 도달되고 있는지, 프로그램 활동들은 프로그램 설계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그대로 수행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성과 모니터링은 투입 활동 및 산출물을 측정하고 프로그램의 성과들을 사전에 설정되었거나 또는 기대되었던 목표와 비교하는 평가이다. 이는 변화 모델(Theory of Change, ToC) 또는 결과 모델(Results Model)로 이해할 수 있다. 변화 모델과 결과 모델은 변화를 이루기 위한 원인과 결과의 메커니즘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변화이론은 1990년대의 이론 주도 평가(theory-driven evaluation)이다.

결과 모니터링은 장기 목표(long-term outcome)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중간 및 단기 성과(preconditions)를 거꾸로 추적하는 백워드 매핑(backwards mapping)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계획의 올바른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며, 목표와 성과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개입 활동도 명시한다. 각 목표와 사전 조건에는 평가할 수 있는 지표(indicators)가 설정되며, 이는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로, 다양한 연구 방법에 따라 측정된다. 마지막으로 모든 요소와 가정을 과거 경험과 연구에 기반해 명확히 하며, 여전히 검토가 필요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데이터에 기반해 수정된다(김기환 외, 2009; 황혜신 외, 2021).

모니터링 지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된 세부과제에 대한 대표성을 충족하는 동시에 세부과제의 상위 중점과제를 통해 어떠한 정책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모니터링 지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추진되는 4년 동안 매년 중점과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세부과제의 포괄적인 성과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게 된다. 즉, 모니터링 지표의 실적이 낮을 경우에는 해당 모니터링 지표의 중점과제에 포함되는 세부과제들의 성과지표의 실적 달성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원인을 파악하고, 어떠한 정책적 개입을 통해 모니터링 지표의 성과를 높이고, 나아가 전략별 성과 지표와 지역사회보장계획 총괄 지표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윤수재, 2017).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계획을 평가하는 데 있어, 모니터링 지표의 수립 및 활용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모니터링 지표의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전반적인 계획 추진의 성과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행계획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정책을 모니터링 지표와 연계하여

판단했을 때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성과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모니터링 지표 설정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지표군(pool)을 수집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활용할 수 있는 지표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역사회 보장지표를 염두에 둘 수 있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회 보장통계지표를 고려할 수 있고, 통계청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회지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사회보장 부문의 기본계획에 수록되어 있는 성과지표뿐만 아니라 정부 부문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책 성과지표를 모니터링 지표군(pool)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지역사회보장 목표와 정합성이 높은 지표 후보군을 도출한다. 즉, 지표군(pool)을 설정하였다면, 지역사회보장 관련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 후보군을 추려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략단위, 또는 목표 단위로 전문가를 구성하여 지역사회보장 목표와 추진과제, 세부과제 간 정합성이 높은 지표군을 도출한다. 이때 정합성이 높은 지표가 어떤 지표 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과지표의 요건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지표 개발은 SMART 기준을 적용해 성과지표를 점검하고 최종 지표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친다(기획재정부, 2012, p.24). 이 과정에서 SMART 기준은 명확성(Specific), 측정 가능성(Measurable), 원인성(Attributable), 신뢰성(Reliable), 적시성(Timely)을 요구한다. 명확성은 성과지표에 모호한 용어를 피하고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 가능성은 핵심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원인성은 사업성과의 변화와 성과지표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기획재정부, 2012: 25-27). 신뢰성은 누구나 일관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적시성은 성과 측정 이전에 해당 연도의 성과 정보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기획재정부, 2012, pp. 28-29).

〈표 4-22〉 지역사회보장 목표 점검지표 설정을 위한 SMART 확인 점검 사항

전략 목표	확인 점검 사항
S: 명확성	성과지표는 명확하게 표현되고 쉽게 이해되는가?
M: 측정 가능성	성과를 측정할 데이터가 존재하는가?
	성과 측정 데이터가 있다면 사용에 제약이 없는가?
	현재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지만 필요시 수집·생산 가능한가?
	데이터 수집·생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적절한 수준인가?
A: 원인성	성과지표는 사업의 영향력 내에서 측정되는가?
R: 신뢰성	성과지표 데이터는 객관적이며 신뢰성이 있는가?
T: 적시성	평가 전에 성과 측정이 가능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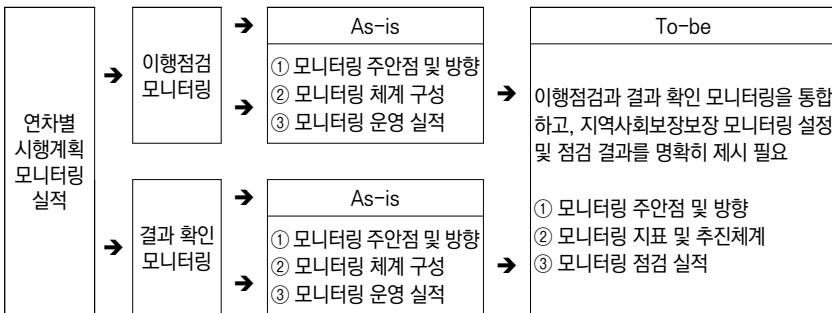
출처: “재정사업 성과지표개발 매뉴얼”, 기획재정부·한국조세연구원, 20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30.

셋째, 지역사회보장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 후보군이 도출되면, 이를 중심으로 전문가 대상의 조사를 통해 최종 점검지표를 도출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델파이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모니터링 지표의 적합도와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할 수 있다. 지표의 적합도는 Lawshe (1975)가 제안한 CVR(Content Validity Ratio) 값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의 합의도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는 방식도 유사하며, 수렴도 결과와 CV(변이계수)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최종 점검지표를 확정할 수 있다. 이때 지역의 특성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는 단계에서 이행 점검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결과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 특히 이행점검 모니터링 결과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 실적은 이행점검 모니터링과 결과 확인 모니터링으로 구분되어 있다. 향후 이를 통합하여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한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목표의 이행점검 결과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편해야 한다.

〈표 4-23〉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보고서의 이행점검 모니터링 작성 부분 매뉴얼 개편



출처: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보고서 작성 매뉴얼”, 보건복지부, 2024b.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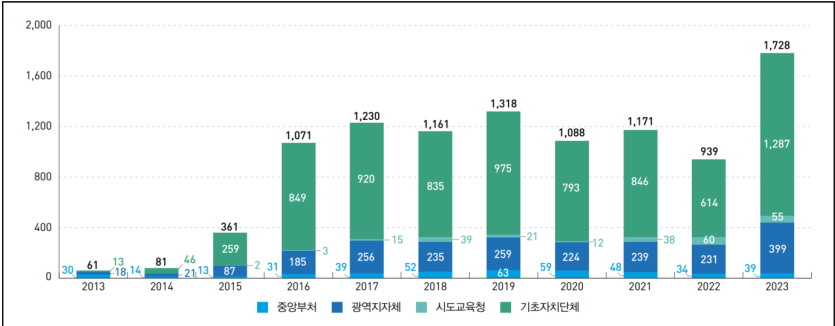
나. 지역사회보장 정책 수립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설계할 때, 지역의 복지 수준과 특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지역사회보장지표를 살펴보면 다양한 지역 사회보장 관련 통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활용하여 지역에서 해당 복지사업의 필요성과 특수성 그리고 시급성에 대한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지역 복지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설계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자체 복지사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보장 관련 특성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 이때 지역사회보장통계와 지표의 활용성이 높다.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운 복지사업을 설계하거나 기존 사업을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지자체는 지역사회보장통계와 지표를 활용하여 제도 신설의 필요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에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되어 2013년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가 도입되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에 61건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지만, 사회보장 영역의 확대로 2023년에는 1,728건의 사전협의를 이뤄졌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변경 사업보다는 신설 사업의 비중이 크며, 신설 사업의 경우는 2023년 기준 1,200건을 웃도는 수준이다(함영진·이원천, 2024).

[그림 4-14]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추진 경과



출처: “2024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결과”,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사전협의제도의 협의 기준을 살펴보면,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과 성과지표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에서는 협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로 송부하여야 하며, 작성 내용 중 ‘지역문제의 시급성’, ‘지역 내 우선순위’, ‘지역 특수성’과 ‘지역 복지 수요 반영’, ‘성과지표 활용’ 등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보장지표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표 4-24〉 사회보장 사전협의 신청서 작성 내용 중 통계 및 지표 활용 가능 부분

제도설계 기준	통계 및 지표를 활용한 작성 가능 부분
제도 신설의 필요성	- 제도의 신설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사항 및 시급성 - 사업 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 및 성과 - 제도(사업) 도입 취지; 목적과 사업내용 간의 연계성
지역의 특수성	- 제도 신설과 관련된 지역적 문제 및 수요 (타지역과의 차별점 등)

출처: “2024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보건복지부, 2024c.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복지의 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비슷한 유형의 지자체와 비교하거나 지역 내 다양한 사회보장 관련 문제 가운데 시급한 지역문제나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문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신설하려는 복지사업이 지역의 복지 수요를 반영하고 있는지도 분석할 수도 있다. 복지사업을 설계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3. 수요자 중심 지표 설계 및 조사데이터 활용 확대

지표체계를 구성하는 방법은 개념적 접근과 정책적 접근으로 이원화된다 (UN, 2009; 박영실 외, 2017 재인용). 개념적 접근 방법은 원인에 따른 결과를 기준으로 지표를 조직화하는 방식이며, 정책적 접근은 목표(goal)나 이슈를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지역사회보장지표는 지역의 이슈(아동, 노인 등)를 중심으로 이에 부합하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적 접근법에 가깝다. 그리고 지역주민 개인의 삶의 질과 지역 수준의 정책 관점에서 지표가 구성되어 있다. 다만, 정책 지표의 경우 투입, 과정, 결과 지표가 구분 없이 나열되어 있으며,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지표값의 정확성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보장 지표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삶의 질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와 지역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통계와 지표 설정 및 관리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리고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해당 통계 및 지표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지자체 스스로 지역사회

보장통계를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하고,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하기 위해 지표를 설정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서 지역사회보장 관련 통계 수집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보장통계를 수집하고 관리하거나,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를 점검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지표를 설정하는 시도와 시군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사회보장통계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설정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행정데이터와 조사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부처에서 일괄된 조사 매뉴얼을 작성하지만, 광역자치단체별, 기초자치단체별 자체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해당 데이터의 정합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구성을 살펴보면, 총 지표 수는 336개이지만, 이 중에서 공개하는 지표는 255개이고, 지역사회보장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지표는 106개이다. 주요 영역을 살펴보면 돌봄 36개, 보호안전 6개, 건강 18개, 교육 8개, 고용 18개, 주거 3개, 문화여가 6개, 총괄 31개로, 이 106개 지표는 지역사회보장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산하고 있다.

〈표 4-25〉 2023 지역사회보장지표 산출 현황 및 조사데이터 활용 지표

(단위: 개)

구분	돌봄 (아동)	돌봄 (성인)	보호 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 여가	환경	총괄	계
소계	33	49	22	41	27	42	22	30	19	51	336
미생산	8	8	6	2	4	16	8	8	8	13	81
조사 데이터	12	24	6	18	8	18	3	6	-	31	106

출처: “2023년 지역사회보장지표 개괄 및 구축현황 설명자료”, 보건복지부, 2024a.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위 표에 제시된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구성을 보면 행정데이터와 조사 데이터 간 연계가 강화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시행한 조사 표본 설계와 조사 시기, 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시군구 간 비교하기가 어렵고, 해당 자료를 일괄적으로 취합하더라도 활용에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 시군구 단위로 표준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만약 전국 단위 조사가 어렵다면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와 데이터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수행하되, 최소한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표준화된 조사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2015년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면서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하고 분석한 뒤, 이것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조사의 표본 규모는 400개로 설정하였고, 조사 범위는 시군구 단위이다. 따라서 통계청 승인을 위한 시군구별 800~1,000개 표본 수를 충족하는 것이 어렵고 일괄 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시군구 간 비교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본 연구의 인터뷰에 따르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조사가 이뤄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형식적인 행정 관례로 전락하였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시도 단위의 일괄 시행을 통해 시도 내 관할 시군구 간 분석이 가능하도록 독려가 이뤄지고 있어, 광역자치단체 단위별로 복지 욕구를 살펴보고, 관할 시군구 간 비교분석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광역자치단체 주관의 조사 설계이다. 각 시군구 단위의 조사 예산을 통합하여 각 시군구 단위에서 가구 수, 인구수, 저소득층 등을 고려하여 조사 대상 표본을 추출하고, 통계청 지정 조사구 방식에 근거하여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중앙부처에서 제공한 공통 조사지를 활용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통계 산출이 가능하도록 조사지의 설문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광역자치단체 주관으로 조사 설계 및 시행 그리고 분석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회보장조사 설계 단계에서 데이터의 통계적인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계청의 승인을 받는 절차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보장지표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생산을 쉽게 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지표 설정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보장 관련 지표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중앙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 지표는 336개이지만, 이 중 현재 미생산하는 지표가 81개이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조사 데이터는 106개이며, 지역문화실태조사 10개 등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양적 지표 수가 중요하기보다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지표를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지표는 지속적으로 생산하되, 지역에서 활용도가 높은 지표를 선별하여 해당 지표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표를 제공할 때 단순 열거식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 플랫폼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모해야 할 것이며, 지역에서 활용도가 높은 지표의 활용 방식에 대한 표본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지역사회보장지표를 제공하고 있고,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사회보장지표를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지표를 단순히 알려주는 수준이라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편이 요구된다.

244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고도화 및 활용방안 연구

[그림 4-15]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를 통한 지역사회보장지표 공유 방식

지역사회보장지표 홈페이지 공개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Korea Center for Community Welfare Policy

연혁소개 | 지역사회보장계획 현황 |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 사업추진 분석 | 지역사회보장지표 | 커뮤니티

지역사회보장지표

돌봄 아동	돌봄 성인	건강	교육
국립돌봄 아카데미 이용자 만족도 비율	일자리알리미 이용 만족도	일반 국민 보건 의료 접근성	유초중등 학생 1인당 교육 예산
		중장년 건강수준 인식률	고령자 1인당 학업률

주거	문화 여가	환경	총합
민간 주택 공급률	문화인프라 포화도	주거 환경 개선률	1인당 사회복지 예산
		국립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지역사회보장지표 자료실 공유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Korea Center for Community Welfare Policy

연혁소개 | 지역사회보장계획 현황 |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 사업추진 분석 | 지역사회보장지표 | 커뮤니티

자료실

공시자료	자료실	FAQ	문의처
------	-----	-----	-----

↓

번호	제목	작성일	등록일	조회
30	2023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공개	2024-10-10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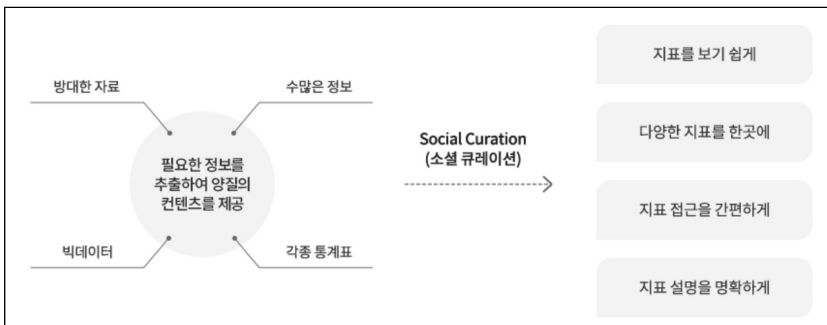
출처: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http://www.kccwp.or.kr/>, 검색일 2025.01. 31)

이를 개편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통계지표는 다음과 같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 통계지표는 비정형 및 정형 통계 방식으로 제공하되, 제공되는 통계는 활용성이 높은 지표를 중심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사회보장급여법에서 명시한 지역사회보장 목표를 점검하기 위한 지표 설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표의 설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전략과 목표 설정을 위한 성과지표와 목표 지표 설정이 중요하다. 즉, 현재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계지표, 목표 및 성과 지표, 목표를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표 등 지표의 특성과 적용 목적에 따라 시의 적절한 제공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의 수범 사례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4. 관리적 측면 개선 방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계지표는 활용 목적, 활용 주체, 지표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통계청은 지표누리를 통해 e-나라지표, 지속가능발전지표, 한국의 사회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저출생 통계지표, 국가발전지표 관련 지표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다양한 지표를 제공하는 데 있어 주안점을 두는 것은 지표를 쉽게 이해하고, 다양한 지표를 한곳에서 제공하고, 접근 및 활용을 간단하게 하고, 설명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이의 핵심 지향점을 고려하면 (1) 지표를 보기 쉽게, (2) 다양한 지표를 한곳에, (3) 지표 접근을 간편하게, (4) 지표 설명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통계청, 2025. 01b).

[그림 4-16] 지표누리의 목적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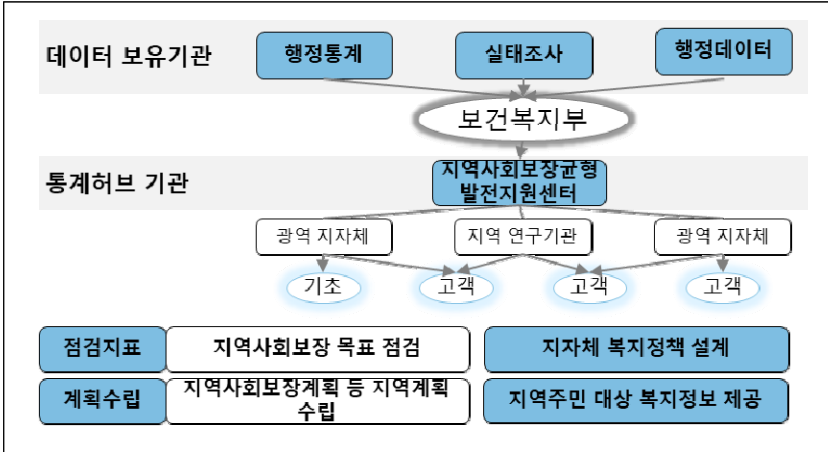
출처: 지표누리 소개 (통계청, 2025. 01b)

<https://www.index.go.kr/unity/potal/PotalMainIntro.do?sessionId>, 접속일: 2025.01.18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보장지표 관리를 위한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 연계, 통계관리 주체, 통계 인식 제고, 데이터 활용 인프라 조성이 주요한 과제이다.

첫째, 지역의 통계요구도에 근거한 지역사회보장 관련 데이터 연계가 필요하다.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제시하는 지역사회보장 목표를 점검하거나, 지역사회보장 관련 행정통계 자료, 실태조사 자료 그리고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를 수집 및 연계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 통계 연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의 통계요구도에 근거한 핵심 통계 확충이 중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사회보장지표 336개 중 지역사회보장조사 데이터의 활용이 106개에 이르지만 해당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보장 관련 행정통계 기초 자료의 수집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역할이 중요하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보건복지부 간 범정부 협업이 중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적절한 통계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때 지역사회보장통계 및 지표 관리의 허브로서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사회보장지표를 둘러싼 중앙부처와 지역 연구기관과 협력적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연구기관과 협업하여 지역사회보장통계 및 지표를 구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정형화된 통계지표를 활용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커스터마이징 시도가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한 통계 자료를 스스로 관리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사회보장 목표를 점검하고, 자체 복지사업을 설계할 때 분석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부처는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매년 지역사회보장통계 및 지표를 제공하기에 앞서 지역에서 어떠한 통계 및 지표를 필요로 하는 지에 대해 분석하고, 그간 제공하고 있는 통계와 지표에 대한 수용성 및 활용도를 분석해야 한다.

[그림 4-17] 지역사회보장지표 데이터 연계체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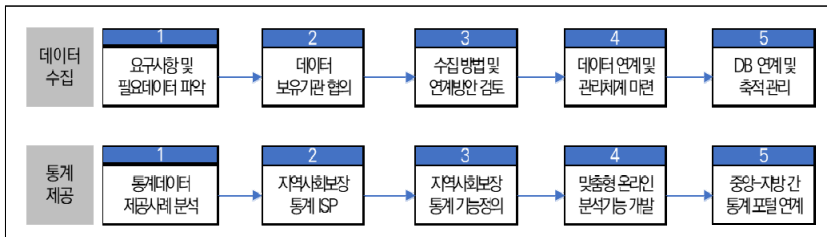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둘째,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통계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지표 간 연계가 필요하다. 국무총리 주재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매년 사회보장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작성 관리하는 보고·조사·가공통계 전체를 수집하여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2013년에 11개 영역(가족, 보육, 노동, 빈곤, 건강, 주거, 문화, 에너지, 환경, 노인/장애인, 사회재정)의 166개 핵심 지표를 선정하여 발간하였으며, 2018년에 13개 영역(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근로, 소득보장과 빈곤, 건강, 보육 및 교육, 문화, 주거, 에너지, 환경, 사회재정) 260개 지표, 2019년 이후 14개 영역(가족, 아동, 청년, 노인, 장애인, 근로, 소득보장과 빈곤, 건강, 보육 및 교육, 문화, 주거, 에너지, 환경, 사회재정) 269개 지표로 구성하여 발간하였다. 2024년 기준 사회보장통계는 254개 지표, 317개 표, 362개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지역사회보장지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2023년 기준 지표분류는 10개 영역(돌봄아동, 돌봄성인,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총괄)으로 구분하여 336개 지표를 생산하고 있다. 다만, 두 지표 간 분류체계 및 데이터 그리고 지표 간 연계를 시도하여 국제 지표, 전국 지표, 시도 및 시군구 지표 간 통합적인 연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보장통계 및 지표를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보장통계 및 지표의 목적은 근거 기반 지역사회보장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통계관리 시스템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한 중장기 관리 방안 마련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지역 단위 데이터 요구사항 및 필요데이터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하여 데이터 보유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며, 행정통계와 지역사회보장조사 자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태조사 자료와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등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 수집 및 연계를 수행해야 한다. 통계 제공 단계에서는 통계포털 수범 사례 등 통계데이터 제공 사례를 분석한 다음 지역사회보장통계 및 지표의 ISP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보장통계 기능을 정의하고, 맞춤형 통계 제공을 위한 중앙 데이터 포털과 지자체 통계 포털 간 연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림 4-18] 지역사회보장지표 데이터 관리체계(안)



출처: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보장통계 및 지표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보장지표를 생산하여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지만, 해당 지표의 활용과 지표 품질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산출 취지와 활용 목적 및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보장지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사회보장 목표를 점검하고 근거 기반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성을 높이고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즉,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수요에 맞는 통계 생산 및 제공,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제5장

지역사회보장지표 고도화 전략

제1절 지역사회보장지표 구성 및 관리

제2절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 활성화 방안

제5장 지역사회보장지표 고도화 전략

제1절 지역사회보장지표 구성 및 관리

1. 지역사회보장지표 데이터 구조 개편 전략 설정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고도화 전략을 위한 접근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여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지속적 생산과 관리가 가능한 데이터의 통합을 강조하였으며, 각 지표 및 통계의 신뢰도와 지역별 시기별 비교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각 지표가 가지는 가치와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이 고려된 지표 구성이 데이터의 관리와 활용의 차원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으로 인하여 기존 지표체계의 축소와 각 영역별 지표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전략이 추진될 경우에 그에 상반되는 효과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첫째, 지표체계 개편전략을 데이터의 활용을 중심으로 설정할 경우, 지표 데이터에 대한 생산과 관리, 각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과 적절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활용 가능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데이터 생산과 체계적인 관리를 전제로 한다. 제2장에서 검토된 각종 지표체계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데이터의 생산 및 수집, 관리의 주체가 지표체계의 신뢰성과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지표 데이터나 가공 자료 등은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정보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부 사례에서 지표체계 구축 이후 지표의 영역별 세부 지표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경우에도 지표 개편을 통하여 실제 활용 및 관리가 가능한 데이터 중심으로 재구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사회보장지표 또한 지표에 대한 데이터 생산 및 수집의 단계를 넘어서 정확도 및 신뢰도 높은 데이터 중심의 체계 구성과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 중심의 재편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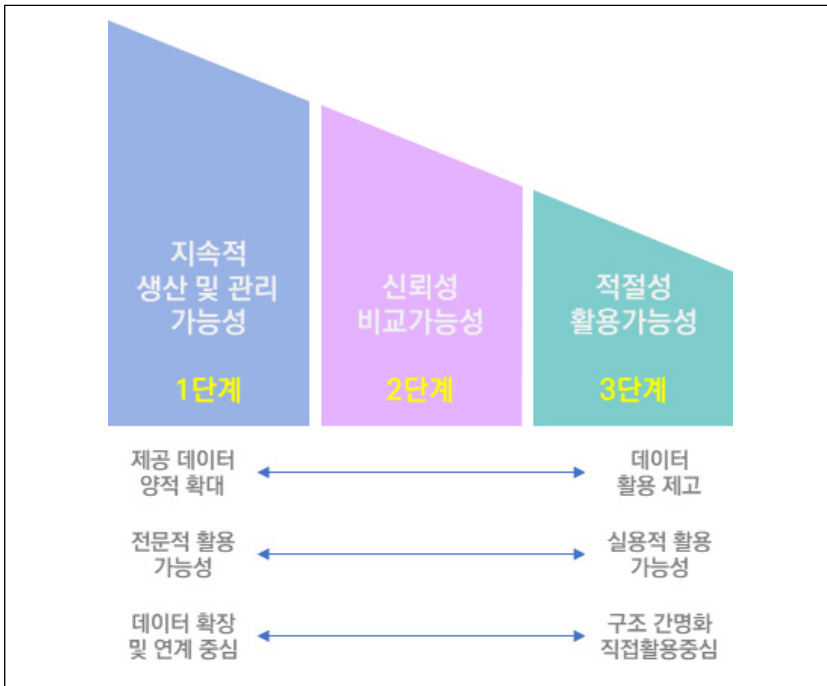
둘째, 데이터의 확장 전략에서 데이터 활용 전략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기존 지역사회보장지표는 체계 구축 이후 지속적으로 영역별 지표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데이터의 확장이 강조된 전략으로, 초기 지표 구성 이후 각 영역별 지표 데이터의 확대와 관련 통계와의 연계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각 영역별로 수집 및 생산 가능한 데이터가 증가하였으며, 지표 생산을 위한 데이터 수집 출처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지역사회보장지표가 포괄하고 있는 데이터의 신뢰성, 활용 가능성 등은 각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의 지표들이 선별적으로 활용되었으며, 신규 발굴된 지표보다는 인구 및 자원 분포와 같은 기존 지표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지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존 전략에 비해 변화되는 측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접근에서는 데이터의 확장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지표체계 내에 다양한 정보를 담는 것이 주요 목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활용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는 데이터의 확대와 연계보다는 지표의 선별과 구조의 간명화가 강조된다. 이 경우 각 영역과 세부 지표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른 우선순위를 부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각 지표가 지역 및 정책 환경을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지, 타지역과의 비교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지, 지역별 특성을 분석할 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수준의 신뢰성을 보장하는지 등이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제3장에서 수행된 분석과 같이 각 영역 및 지표에 대한 중요도, 적절성, 활용 가능성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주기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지표는 지표 생산 및 제공 시점에 맞는 적절한 형태의 지표체계로 변화될 수 있다. 위 절차를 통하여 구성된 지표체계의 결과물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데이터 생산 환경과 수요, 정책 현안 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림 5-1] 지역사회보장지표 개편 전략별 특성 비교



출처: 저자 작성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3장에서 검토했던 체계 구조의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표 구조의 변화는 지표관리체계의 효율화 외에도 데이터 수요에 따른 대응의 세분화 전략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기존의 지역사회보장지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라는 권고 외에 확장적 활용 범위를 설정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는 데이터의 이용 목적에 대한 검토, 수요층에 대한 분석 등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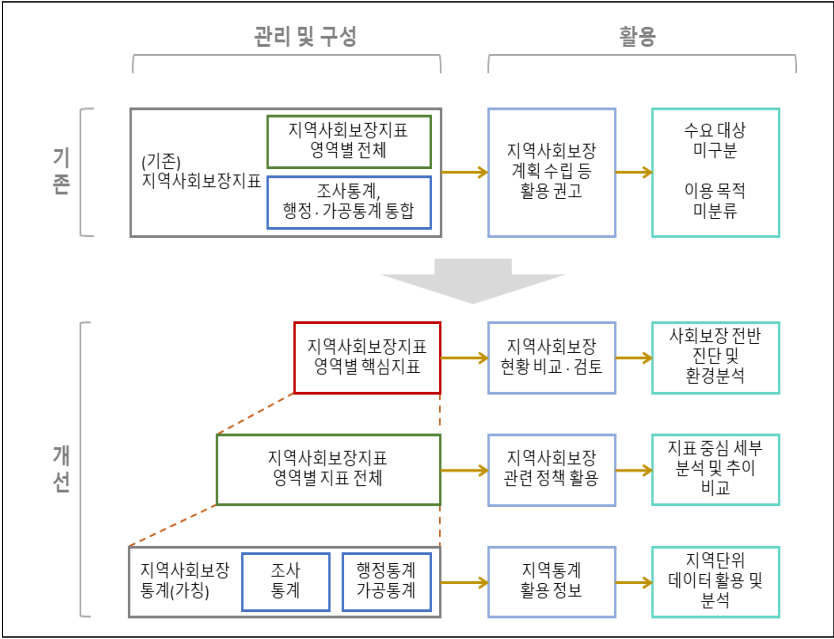
향후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구조 개편은 데이터 수요와의 매칭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데이터 수요에 대한 구조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제4장 제1절과 제2절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은 제한적이지만 다양한 지역사회보장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지표의 활용 양상을 구분해보면, 첫째, 지역의 사회보장 전반에 대한 진단과 정책 환경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지표가 활용된다. 이때 해당 지역의 사회보장 전반에 대한 개괄적 정보를 수집하게 되며, 그 예로 사회보장정책의 대상 규모나 관련 자원 현황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수요는 해당 지역의 현 상황을 진단하는데 활용되기 때문에 타지역과의 비교가 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의 인구 고령화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근 지역이나 유사 지역의 고령화 수준을 비교하여 진단하는 방식, 해당 지역 내 복지시설의 충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구 대비 시설 수를 산출하고 이를 인근 지역과 비교하는 방식 등이 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활용도가 높은 지표에 대한 지역 비교가 용이하도록 데이터를 가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보장정책 추진 및 평가를 위한 기초분석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데이터 수요층(예. 지자체 정책 입안자 및 사업 담당자 등)과 내용(예. 사업 대상

정보, 자원 분포 등)이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활용 가능성이 높은 영역과 세부 지표 중심의 데이터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사회보장 관련 지표의 변화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5년간 인구 구성의 변화, 주요 정책 대상의 연도별 추이 등을 검토하는 데 지역사회보장지표 데이터가 활용된다. 특히 지역 사회보장 환경에 대한 진단을 할 때 관련 지표의 추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망을 제시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역사회보장지표는 각 세부 지표를 종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데이터 수요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데이터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높은 데이터가 주기적으로 수집, 현행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데이터의 안정성(생산 및 산출 기준의 명확성, 주기적 생산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지표가 구성될 수 있다.

셋째, 지역단위에서 데이터 분석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생산·관리되고 있는 데이터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지역사회보장 지표 데이터는 지역단위에서 실증적 분석을 위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설정하는 경우나 지역단위에서 생산된 통계치가 분석 모형의 변수로 활용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서는 타 데이터와의 결합을 위한 고유값(예. 지역코드, 지역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지표나 통계 데이터가 분석 모형의 변수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변수가 가지는 특성에 맞게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각 지표별 고유값을 부여하기 위한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각 세부 지표와 해당 지표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통계에 대한 코드 부여 기준 설정, 분석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중심의 데이터셋 구성 등이 있다.

[그림 5-2] 지역사회보장지표 구성별 활용 세분화



출처: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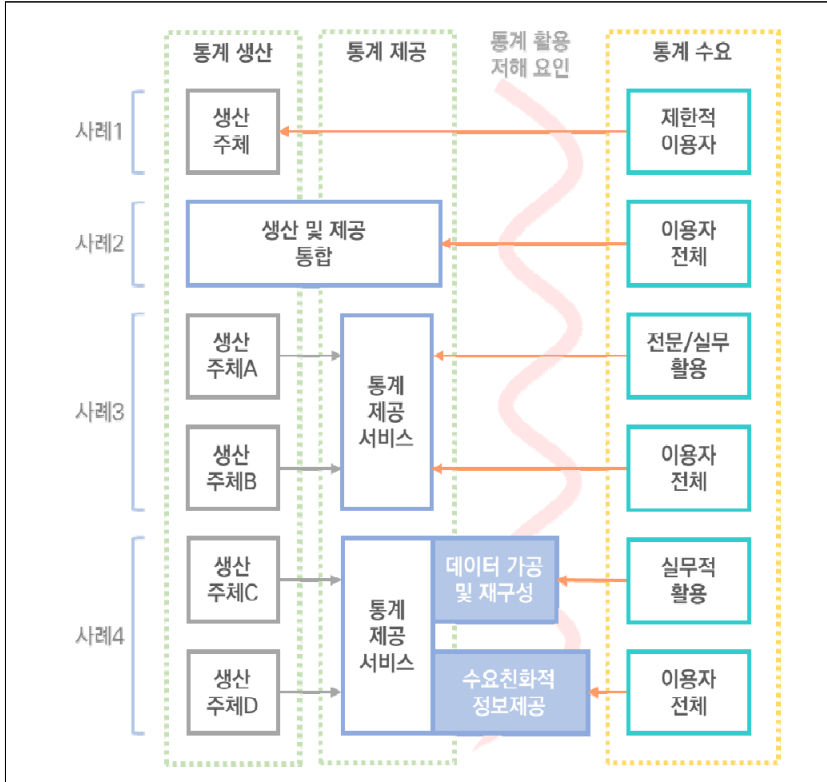
2.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제

지역사회보장지표와 지역사회보장통계는 지역단위의 통계데이터라는 특성을 가진다. 기존 연구(박성준 외, 2024)에서 제시된 지역단위 통계 데이터의 수요-공급 특성을 살펴보면, 지역사회보장지표와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지원센터의 데이터 제공 형태는 “통계제공 서비스”에 해당되며, 이는 실질적인 데이터 생산 주체와 분리된 특성을 가진다. 다시 말해 지역사회보장지표를 제공하는 주체는 각 세부 통계데이터를 생산하지는 않으며, 관련 데이터를 수집과 가공한 다음, 목적에 맞는 지표를 산출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아래 그림을 바탕으로 현재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제공체계를 검토한다면 사례 3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지표 생산을 위한 다수의 생산 주체가 존재하고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센터에서 이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데이터 제공 방식은 데이터 수요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데이터 이용자의 역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통계 제공 서비스 주체는 데이터의 접근성 제고(통계 활용 저해 요인의 감소)를 위하여 데이터에 대한 가공과 재구성, 수요 친화적 정보 제공의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지역사회보장지표를 관리·제공하는 주체는 데이터 수요를 고려하여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데이터 수요와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접근성 제고 전략 또한 구분될 필요가 있다.

[그림 5-3] 지역단위 보건복지통계데이터의 수요-공급 특성 도식화



출처: “지역단위 보건복지 통계데이터 활용 및 관리 방안 연구”, 박성준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48.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수요-공급 특성을 도식화 하면 [그림 5-3]과 같다. 지역사회보장지표는 기존 지표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하여 데이터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를 보완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 데이터(지표, 통계 포함)에 대한 가공 및 재구성을 통하여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수요 친화적 데이터 제공 환경을 조성하여 데이터 활용 관련 역량과 관계없이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요의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데이터 수요는 크게 주체와 목적을 기준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먼저, 데이터 수요의 주체는 실무적·연구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와 해당 지역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데이터 활용의 목적이 명확하며, 그 목적에 따라 활용되는 지표의 내용 또한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후자는 해당 지역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표에 대한 별도의 해설이 필요하지 않고 직관적 정보를 중심으로 활용하게 된다. 다음으로 데이터 수요의 목적에 따라 구분할 경우에 지역사회보장지표의 법적 근거(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에 따른 활용과 그 외의 활용을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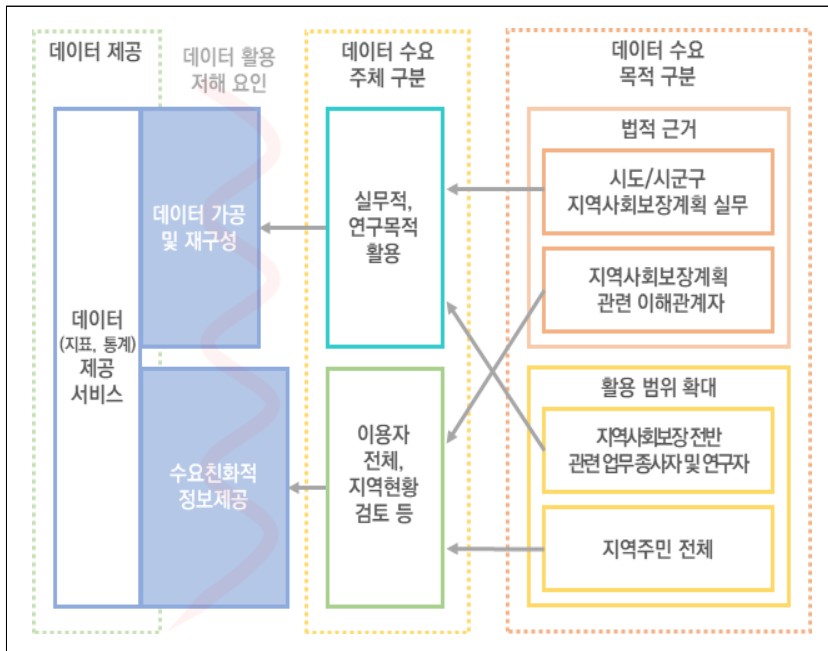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표의 법적 근거에 따라 실무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는 주로 시도/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관리하는 주체, 혹은 해당 정책과 직간접적 관련성을 가지는 이해관계자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수요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편, 법적 근거 외의 목적으로 지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는 지역사회보장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영역의 종사자나 지역사회보장 분야의 연구자 등이 해당된다. 관련 분야의 종사자들은 각각 정책 특성에 부합하는 데이터(제4장 제1절 참고)를 선별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데이터 수요의 빈도에 따라 특정 목적의 하위 지표 구성을 검토해볼 수 있다(예를 들어, 고독사 관련 하위 지표 구성, 아동친화도시 관련 하위 지표 구성 등). 그 외에 지역사회보장 분야의 연구자들은 지표 데이터를 활용한 직·간접적 분석이나 타 데이터와 결합하는 것 등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데이터 가공과 재구성을 위한 기반(예. 특성별 세트 구성, 고유값 관리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보장지표의 데이터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는 수요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특정 정책에 목적을 둔 수요나 데이터 분석을 위한 수요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이 경우는 해당 지역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의 지역사회보장 현황을 알고자 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이해관계자, 지역사회보장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지역주민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 밖에 타지역에 비하여 우리 지역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알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수요에는 지역사회보장지표 데이터의 원자료 보다는 시각화 자료나 비교 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정보나 추가적인 가공이 요구되지 않는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림 5-4]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전략



출처: 저자 작성

제2절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 활성화 방안

1.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수요 친화적 데이터 제공 방안 도입

지역사회보장지표의 데이터를 수요 친화적으로 제공할 방안을 도입하고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을 통한 제공 서비스를 제안한다. 해당 지표를 생산하는 주체(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가 아닌 타 플랫폼을 활용한 데이터 제공 방안을 제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 활용의 확장을 위해서는 특정 목적을 가진 제공체계보다는 범용적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센터는 지역사회보장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지, 매뉴얼 배포 등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원자료 제공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이해관계자에 국한된 데이터 제공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외에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 수요에 대응하는 플랫폼을 통하여 지역사회보장지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는데 효과적이라 볼 수 있다.

둘째, 데이터 제공을 위한 결과물은 다양한 수요에 맞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데이터 수요에 맞는 형태의 다양한 가공물이 제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데이터 수요에 맞는 데이터세트 구성, 지역 간 비교 정보, 시각화 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데이터 제공 플랫폼으로서의 강점을 가진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활용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다.

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서 지역사회보장지표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수요 친화적 데이터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제공 방식은 [그림 5-5]와 같다. 첫째, 지역사회보장지표에 대한 소개와 활용 방법에

대한 안내 등이 필요하다. 특히 지표 구성에 대한 설명과 타 데이터와의 연계 방안, 특정 목적에 따라 활용될 수 있는 예시 등이 제안⁹⁾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해당 지역의 개괄적 정보를 보여주는 시각화 자료를 제시한다. 핵심 지표(활용도가 높은 영역 및 지표)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사회보장 여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각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정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특정 정책적 목적과 관계없이 각 지역의 수준을 비교 검토¹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정책 대상에 대한 정보, 지역 여건 분석에 공통적으로 검토되는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해당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 전반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

셋째, 세부 지표의 추이 분석을 위한 시계열적 분석 결과를 산출할 수 있게 한다. 각 세부 지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이를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변화 양상을 검토하는 데 활용도 높은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지역사회보장지표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데이터(제3장 분석 대상 지표)의 시계열적 분석 결과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표를 검토할 수 있다.

넷째, 각 세부 지표의 직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지리정보에 기반을 둔 시각화 결과를 제공한다. 이는 세부 지표에 대한 인근 지역과의 비교를 보다 직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특히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인근 지역과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활용 가치를 가진다.

9)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을 통하여 지역사회보장지표에 대한 설명에 초점을 두어 페이지를 작성하였으나 향후에는 데이터 활용 예시나 연계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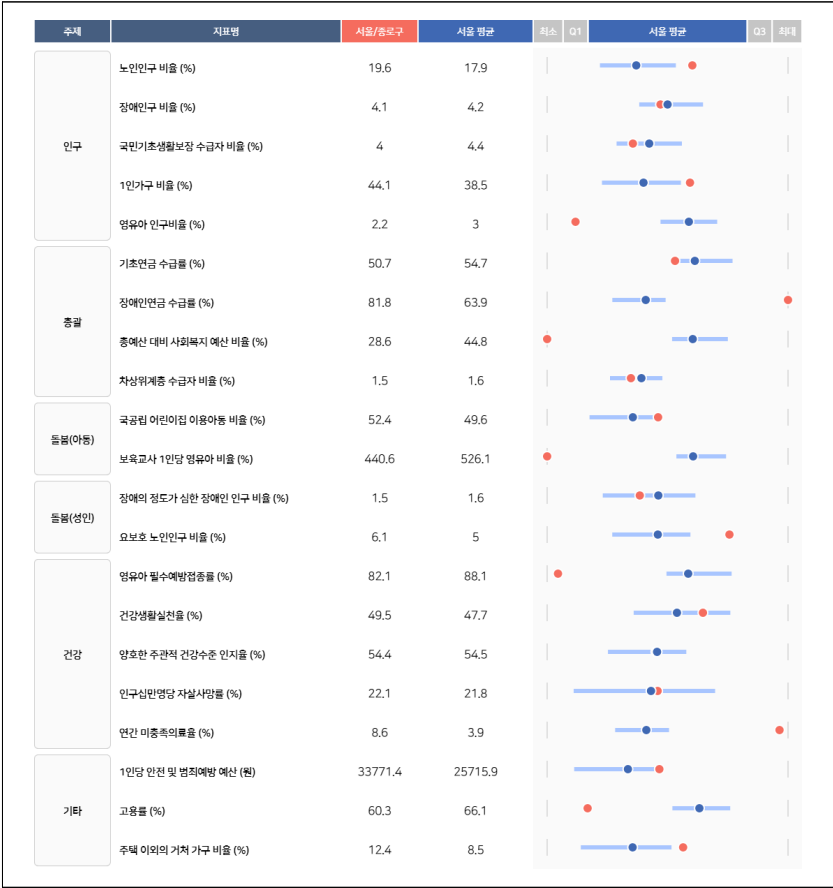
10) 지역 비교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1) 해당 광역 시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2) 시/군/구 유형별 평균, 3) 유사 지역(이하 설명 참고)

[그림 5-5] 지역사회보장지표 데이터 제공 방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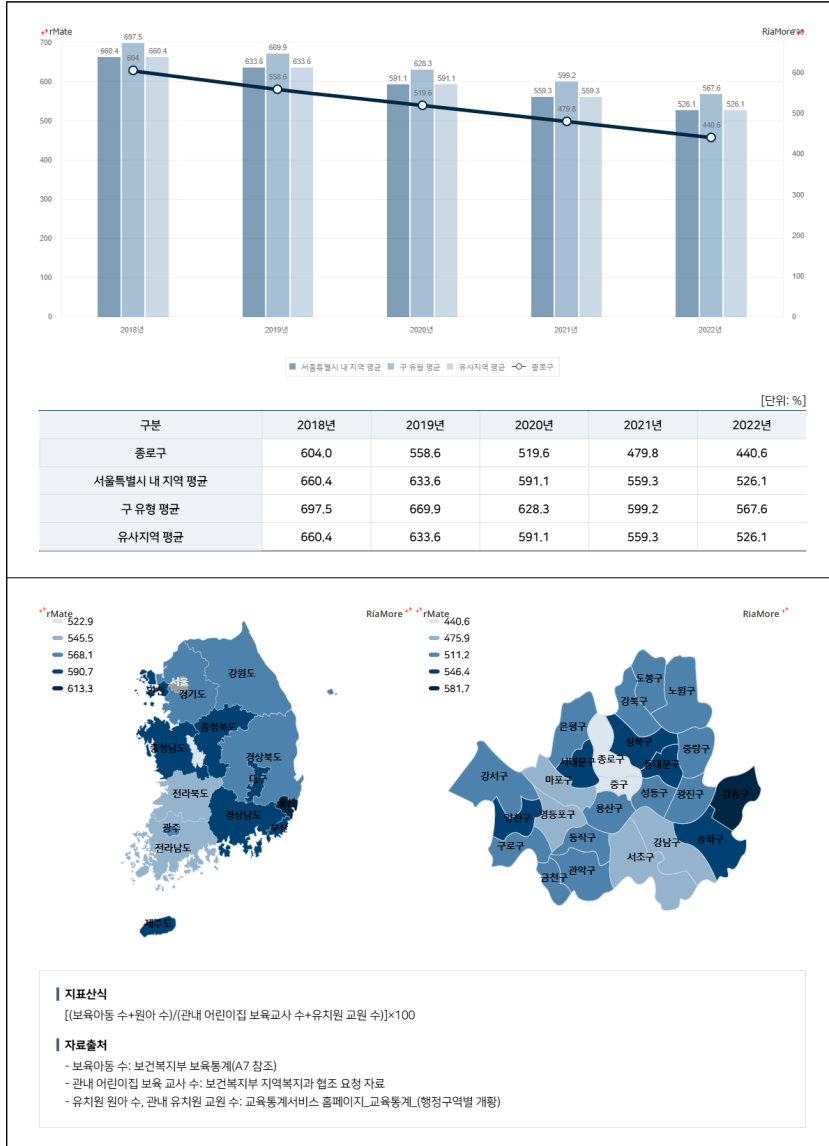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그림 5-6]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서비스 예시(종합 분석)



주: 해당 통계 수치는 임의의 값이므로 해당 예시 지역의 결과와 다를 수 있음
출처: 보건복지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제공 예시

[그림 5-7]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서비스 예시(추이 분석, 현황 지도)



주: 해당 통계 수치는 임의의 값이므로 해당 예시 지역의 결과와 다를 수 있음
 출처: 보건복지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제공 예시

한편 유사 지역 간 비교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유사 지역 구분에 대한 기준을 개편하였다. 기존 지표체계에서는 기초자치단체를 7개 유형(광역도시형, 일반 도시형, 대규모 제한 도시형, 소규모 제한 도시형, 도농 복합형, 대규모 농촌형, 소규모 농촌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는 해당 지역의 인구수와 시/군/구 여부 등에 따라 구분되었다.

그러나 지역사회보장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 지역을 구분한다면 해당 지역의 인구 구성이나 주요 정책 대상의 규모, 해당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데이터포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FY2022)(행정안전부, 2023)’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 기준을 도입하였다. 여기서 설정하고 있는 유형 분류는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특성(인구 규모, 인구증감률, 고령인구 비율, 조출생률)과 재정 특성(재정력 지수, 세출 규모, 사회복지비 비율, 자치단체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된 값을 바탕으로 구분한다. 이때 기준 변수를 활용하여 지수¹¹⁾를 산출하게 되며, 그 결과는 매년 변동되어 기존 분류 체계에 비해 유연한 접근이 가능하다.

11) 기준 변수에 대한 표준점수를 산출한 후 이를 평균 75, 표준편차 5인 변환 점수를 활용함. 각 지표별 환산점수는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된 값을 활용

〈표 5-1〉 2023년(FY2022) 지방재정분석 유형 분류 기준 변수 현황

구분	유형 분류 기준 (가중치)	자료
인구 (50%)	① 인구 규모(30%)	(설명) 2022년 1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② 인구증감률(8%)	(산식) (2022년 인구 규모 - 2021년 인구 규모) / 2021년 인구 규모 * 100
	③ 고령인구 비율(7%)	(산식) 2022년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전체 인구 * 100
	④ 조출생률(5%)	(산식) 2021년 출생아 수/ 2021년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
재정 (50%)	⑤ 재정력 지수(30%)	(설명) 최근 3개년(2020.~2022.) 재정력지수 평균 (산식) 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 ※ 자치구: 최근 3개년(2020~2022) 재정자립도 평균(세입과목 개편 후)
	⑥ 세출 규모(8%)	(설명) 2022년 결산 기준 세출 규모(일반회계, 총계 기준)
	⑦ 사회복지비 비율(7%)	(산식) 사회복지 분야 2022년 결산액/세출결산액(일반회계)
	⑧ 자치단체 면적(5%)	(산식) 2021년 12월 말 기준 행정구역 면적

출처: “2023년(FY2022)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행정안전부, 2023. p.131.

위 지방자치단체 유형 구분¹²⁾을 적용하면, 시 4개 유형, 군 4개 유형으로 구분되고, 자치구는 서울시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2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그 결과는 〈표 5-2〉와 같다.

12) 각 지역별 유형 분류 방법은 ‘FY2022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참고

〈표 5-2〉 2023년(FY2022) 지방재정분석 유형 분류 결과

유형		자치단체명									
시 (75개)	I (17개)	경기 수원시 경기 안산시 경기 시흥시 경남 창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안양시 충북 청주시 경남 김해시	경기 고양시 경기 남양주시 충남 천안시	경기 용인시 경기 화성시 전북 전주시	경기 부천시 경기 평택시 경북 포항시					
	II (20개)	경기 의정부시 경기 광주시 경기 의왕시 전남 여수시	경기 파주시 경기 이천시 경기 하남시 경북 구미시	경기 광명시 경기 양주시 경기 과천시 경북 경산시	경기 김포시 경기 오산시 강원 원주시 경남 진주시	경기 군포시 경기 구리시 충남 아산시 경남 양산시					
	III (19개)	경기 안성시 강원 강릉시 전북 군산시 전남 광양시	경기 포천시 충북 충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	경기 여주시 충남 서산시 전남 목포시 경북 김천시	경기 동두천시 충남 계룡시 전남 순천시 경남 거제시	강원 춘천시 충남 당진시 전남 나주시					
	IV (19개)	강원 동해시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경북 문경시	강원 태백시 충남 보령시 경북 안동시 경남 통영시	강원 속초시 충남 논산시 경북 영주시 경남 사천시	강원 삼척시 전북 정읍시 경북 영천시 경남 밀양시	충북 제천시 전북 남원시 경북 상주시					
군 (82개)	I (21개)	부산 기장군 경기 가평군 충남 홍성군 전남 영광군 경남 고성군	대구 달성군 경기 연천군 충남 예산군 경북 칠곡군	인천 강화군 충북 증평군 충남 태안군 경북 예천군	울산 울주군 충북 진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울릉군	경기 양평군 충북 음성군 전남 무안군 경남 함안군					
	II (20개)	인천 옹진군 충남 금산군 전남 담양군 경북 성주군	강원 홍천군 충남 부여군 전남 화순군 경북 울진군	강원 횡성군 충남 서천군 전남 해남군 경남 창녕군	강원 인제군 전북 고창군 전남 영암군 남해군	충북 옥천군 전북 부안군 전남 장성군 거창군					
	III (20개)	강원 영월군 강원 고성군 전북 임실군 경북 고령군	강원 평창군 강원 양양군 전남 고흥군 경남 의령군	강원 정선군 충북 보은군 전남 완도군 경남 하동군	강원 철원군 충북 영동군 전남 신안군 경남 산청군	강원 양구군 충남 청양군 경북 군위군 경남 함양군					
	IV (21개)	강원 화천군 전북 장수군 전남 장흥군 경북 청송군 경남 합천군	충북 괴산군 전북 순창군 전남 강진군 경북 영양군	충북 단양군 전남 곡성군 전남 함평군 경북 영덕군	전북 진안군 전남 구례군 전남 진도군 경북 청도군	전북 무주군 전남 보성군 경북 의성군 경북 봉화군					
자치구 (69개)	서울 (25개)	서울 종로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노원구 서울 강서구 서울 관악구	서울 중구 서울 중랑구 서울 은평구 서울 구로구 서울 서초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북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금천구 서울 강남구	서울 성동구 서울 강북구 서울 마포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송파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도봉구 서울 양천구 서울 동작구 서울 강동구					
	광역시 (44개)	I (22개)	부산 부산진구 대구 북구 인천 연수구 광주 서구 울산 남구	부산 동래구 대구 수성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울산 북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부산 강서구 인천 중구 인천 계양구 대전 서구	대구 중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서구 대전 유성구				
II (22개)		부산 중구 부산 북구 부산 사상구 광주 동구 울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사하구 대구 동구 광주 남구 울산 동구	부산 동구 부산 금정구 대구 서구 대전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연제구 대구 남구 대전 중구	부산 남구 부산 수영구 인천 동구 대전 대덕구					

출처: “2023년(FY2022)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행정안전부, 2023. p. 133.

2. 지역사회보장지표 관리 및 제공체계 설정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체계적 관리와 제공, 점진적 고도화를 위해서는 지표에 대한 관리 절차가 적절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기존의 지표 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지표 및 통계 1차 구성, ② 데이터 검증, ③ 데이터의 제공(각 지자체별 직접 송부 및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센터 홈페이지에 원자료를 업로드), ④ 포괄적인 지표 데이터 의견수렴, ⑤ 의견 검토 후 반영 여부 결정 및 적용.

그러나 향후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수요 친화적 데이터 제공과 지표 및 통계 데이터에 대한 활용도 제고, 관련 데이터와의 연계, 정기적인 체계 개편 등을 고려한다면 보다 개선된 형태의 지표 관리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그림 5-8]과 같이 데이터 수요 대응 방안과 함께 지표의 고도화를 위한 절차를 제시하였다.

먼저, 기존 지표 수집 과정과 동일하게 해당 지표 및 통계 데이터의 1차적 수집이 이루어지고, 이후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게 된다. 기존 지표 정보는 담당자의 검토를 통하여 검증이 이루어지지만, 지표의 추가 및 변경, 삭제 등의 쟁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담당자 외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검증이 완료된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때 원자료(지표/통계 데이터세트 전체, 스프레드시트 등 파일 형태 제공) 제공과 가공자료(포털을 통한 제공정보, 시각화 자료 등) 제공을 구분한다. 또한 앞에서 제시한 데이터 수요의 목적에 맞는 데이터 제공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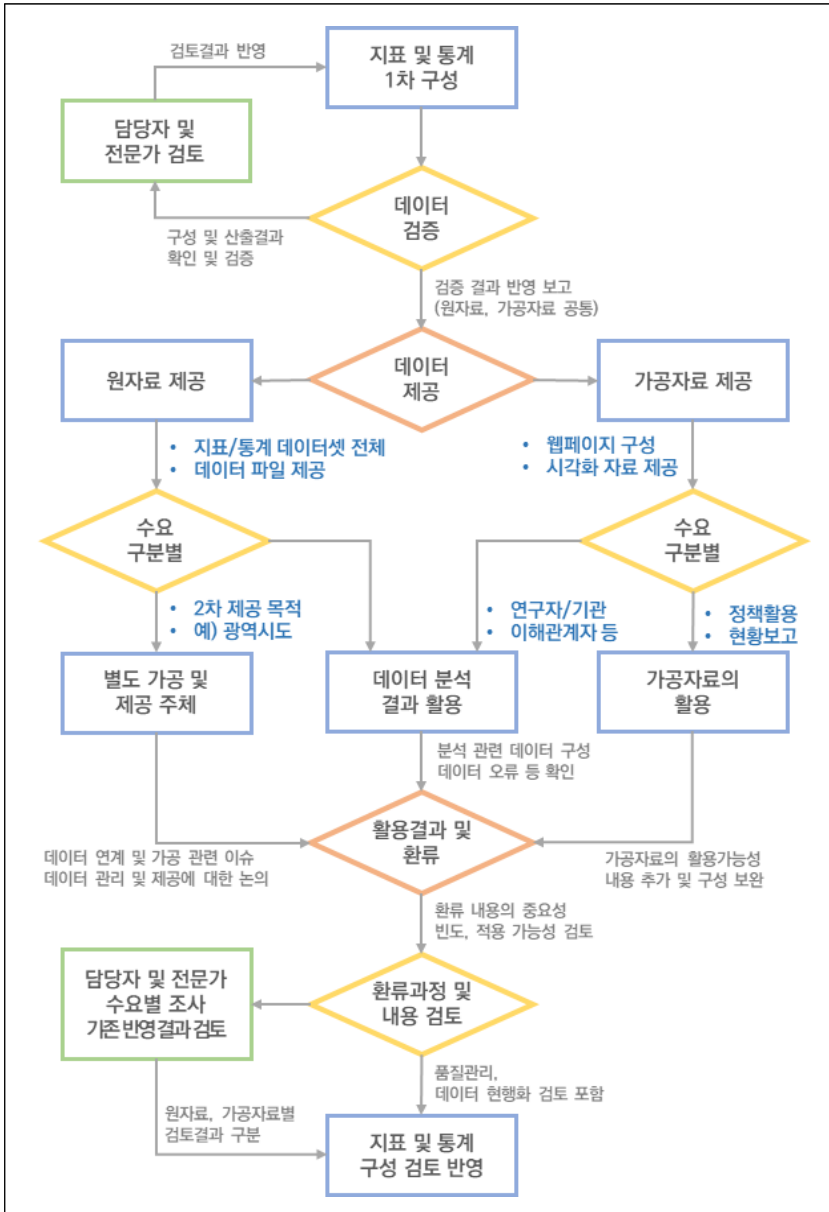
이때 각 데이터 수요에 따라 다른 형태의 환류가 발생할 수 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외의 정책 자료로 활용되는 가공 자료의 수요는, 다양한 형태의 활용 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가공 형태 및 구성에 대한 의견, 내용의 추가 및 보완 등에 대한 의견이 수집될 수 있다. 한편, 각 광역

시도에는 지역 내 기초자치단체의 여건에 대한 분석이나 광역 시도 내부적인 가공자료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지표 데이터의 원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원자료를 통한 2차 자료 생성, 타 데이터와의 결합 등에 대한 의견이 수집될 수 있다. 그 밖에 데이터 분석이나 교육 등의 목적으로 지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성, 데이터 내 오류 등에 대한 의견 등이 수집될 수 있다.

지표 데이터에 대한 수요별 활용 결과와 환류 절차가 진행된 이후, 이에 대한 내부적 검토가 이루어진다. 다만, 환류체계에 따른 의견수렴은 내용의 중요성과 빈도, 적용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의 현행화와 품질관리 등을 고려하여 지표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개편 등을 검토할 수 있다. 환류 과정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는 지표 담당자 및 전문가의 검토가 요구된다. 데이터 수요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의견의 경우, 각 의견에 맞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표 추가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신규 데이터 출처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지표의 수정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표체계를 검토하였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데이터의 제공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는 데이터 품질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등 데이터 관리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이 필요할 수 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지표 및 통계 구성이 확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한 데이터 수집과 현행화, 내부적 품질관리 절차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림 5-8] 지역사회보장지표 관리 및 제공 체계 설정(안)



출처: 저자 작성



제6장

결론

제1절 주요 연구 결과의 시사점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제언

제6장 결론

제1절 주요 연구 결과의 시사점

본 연구는 데이터에 기반한 지역사회보장정책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실태와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고도화 방향을 검토하였다. 둘째,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영역 및 세부 지표를 검토하고, 데이터 구성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하여 지표 관리 측면에서의 과제를 도출하였다. 셋째,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데이터 수요에 대한 대응 전략과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방향 등을 검토하였다.

각 연구 내용별로 도출된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현황을 검토한 결과, 지표 개발 이후 지표체계의 확대가 이루어졌으나 데이터의 표준화, 일부 지표의 미생산, 데이터 연계 및 활용의 한계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한편, 사회정책 분야의 타 지표 사례를 검토한 결과, 지표 생산 목적에 부합하는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표체계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보장지표 또한 해당 지표의 생산 목적에 맞는 활용과 데이터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한 정보 제공 등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지역사회보장지표 영역별 세부 지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각 영역 및 지표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적절성, 중요도, 활용가능성을 기준으로 각 영역 및 세부 지표를 검토하였으며, 이때 각 영역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지표체계를 간명화하였으며 핵심 지표를 선별하였다. 그 밖에 세부 지표에 대한 추가적 의견과 영역별 추가 검토가 요구되는 정보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확인된 데이터의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보장지표가 활용될 수 있는 세부 정책 영역에 대한 검토, 데이터 수요에 대한 검토, 법·제도적 기반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 범위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넘어 지역사회 정책 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수요자들은 지표의 구조적·내용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데이터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보장지표와 관련된 법 근거의 개편과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 조성, 수요 기반의 데이터 제공 전략 마련 등이 요구되었다.

넷째,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고도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모색하였다. 세부적으로, 지역사회보장지표 데이터의 구조 개편 전략,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접근 방안, 수요 친화적 데이터 제공을 위한 전략 구성, 관련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제공 방안 도입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접근성이 강화되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 영역 지역 통계의 생산과 관리는 작은 지역 단위일수록 취약하며, 각 데이터는 생산 주체별로 제한적 상황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통계청을 통하여 제공되는 보건복지 관련 분야의 통계데이터나 지역 통계 모두 시군구 단위에서의 통계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정책적 활용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정책 추진의 주체인 기초자치단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 통계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일부 지역 통계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위한 플랫폼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보건복지 영역에 특화된 통합적 관리 및 제공 서비스, 관련 지역 정책을 주요 대상으로 한 데이터셋 구성 등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둘째, 정책 주체와 통계 생산 간, 정책 활용을 위한 통계 수요와 공급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이자 지역 통계 생산의 기본 단위라 볼 수 있다. 지방자치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이 강조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다수의 정책에서 그에 대한 통계 생산 및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진되는 정책에 비하여 생산·활용되는 통계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주민의 삶과 직접적 관련성을 가지는 지역사회보장 정책이나 지역보건의료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지역 통계 데이터의 활용이 필수적이거나 이에 대한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지역단위 보건복지 통계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정책적 수요를 파악한 결과, 지역단위 통계 데이터의 양적 부족과 질적 제한점 등이 지적되었다. 지역 간 비교, 지역 격차 분석 등의 분석적 활용을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지역 구분과 품질 높은 통계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축적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역 통계가 가지는 한계로 인하여 실질적인 정책 활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 통계의 분절적 관리로 인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자의 역량에 따라 활용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이상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 또는 광역 단위에서 지역 통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수요 친화적 데이터 제공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지역단위 보건복지 데이터의 양적 부족과 질적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국내외에서 소지역 단위의 조사통계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여 지역 간 비교나 격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을 검토·시행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 영역에서는 작은 단위의 지역 사회나 특정 집단에 대한 특성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역단위 데이터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이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 다만, 각 데이터에 맞는 적절한 모형을 설정하고 충분한 보조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노력, 보완적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 방법 등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하여 주요 인구 집단의 통계 결과를 추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통계에 대한 수요와 관련 정보의 충분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데이터나 주제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제공·활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역단위 보건복지 통계데이터의 활용 및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요 친화적인 데이터 관리 환경을 조성하고 활용 목적에 부합하는 통계 제공 및 구성 체계를 순차적으로 마련해나가야 한다. 지역단위 통계 데이터의 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통계의 발굴 및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단위 통계 생산의 가능성과 데이터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검토, 지속적인 생산·관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데이터의 접근성 강화와 활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역 통계의 확장은 정책적 수요에 맞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 영역에서 지역 단위 통계의 수요 특성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보의 수준별 이용 대상, 이용 대상별 활용 역량 정도, 다빈도 활용 통계 및 연관 정책 현황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지역 통계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의 도입과 다른 지역 통계와의 연계 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관리와 활용, 수요 친화적 데이터 제공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단순히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개선과 활용 촉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정책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지역단위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 전략은 법적 근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지역 여건 및 성과평가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약을 벗어나 해당 지표의 활용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추진되는 각종 지역사회 정책에 있어서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표의 효율성 제고와 활용의 활성화를 지표체계의 고도화로 설정하여 그에 해당되는 과제를 도출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표체계의 고도화는 기본적으로 지표체계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생산 목적에 대한 검토, 10개 영역에 대한 구성의 적절성, 각 세부 지표에 대한 재분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세부 지표 산출에 활용되는 원자료 출처에 대한 재검토와 데이터 생산 및 수집의 효율성 강화 전략 등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표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지표의 간명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향후에는 활용 외에도 여러 이론적·경험적 근거에 기반을 둔 지표체계의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표 생산 및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성에 대한 논의가 다소 부족하였다. 지표 및 통계 생산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생산 주체와 관리·제공 주체와의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존 지역사회보장지표는 다수의 원자료 출처를 통하여 지표 생산에 필요한 통계를 수집하고 있지만, 이러한 과정이 관련 주체와의 협력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데이터 수집 및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기적·비정기적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지표체계의 점진적 개편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지표체계 및 세부 지표의 안정성이 저해될 위험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데이터 생산 주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데이터 수집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통계의 생산 주체가 해당 지표의 생산과 제공 주체의 역할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통계 생산 결과의 일부가 가공을 통하여 세부 지표 또는 정책 활용자료로 재생산되고 있음에 대하여 생산 주체와 관리 주체 간에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고도화와 정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언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 범위 확대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4장 제3절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표 생산 및 활용 근거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해당 지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별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지표군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안정적 생산 체계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통하여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터에 대한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데이터 수요의 기대에 맞게 안정적으로 생산되지 못하는 경우는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문제이다. 수요 친화적 데이터 제공 전략이 충분히 수립되었다 할지라도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와 안정성이 낮을 경우에는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없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지표 생산의 안정성과 정기적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타 데이터와의 연계 가능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 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지표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의 구성과 이에 대한 정례화, 그 밖에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등이 전반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사회보장지표에 대한 인식 개선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기존에 해당 지표 데이터를 활용하는 대상은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이해관계자 일부 또는 관련 연구자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지역사회보장지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외에 지역단위 데이터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중앙 및 광역 시도 단위에서의 통계 데이터는 통계청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지역 통계는 통합적으로 확인하는 데 제약이 따랐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지역사회보장지표는 지역단위 데이터의 통합적 제공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역사회보장지표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근거 기반 정책 추진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지역단위 데이터 제공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정책이 추진될 시에 이러한 지역단위 데이터가 적극 활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역 내 정책 수요에 맞는 데이터 제공을

통하여 데이터 활용 역량에 따른 지역 간 차이를 완화하는 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고도화와 활용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이러한 결과는 향후 데이터에 기반한 지역사회 정책을 강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보건복지 영역에서 중앙-지역의 데이터 격차, 지역 간 데이터 격차를 완화하고 근거 기반 지역사회 정책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을 기대해본다.



- 강혜규, 박세경, 정해식, 김보영, 안혜영, 성은미, 조미형, 주은수, 이민경, 이정은. (2015).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 및 지역간 균형발전지원체계 마련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혜규, 함영진, 정해식, 강은나, 안수란, 오욱찬, 김보영, 주은수, 채현탁, 유정원, 명성준, 김경준, 김태은, 이정은, 김진희, 이주민, 안정기. (2016). 지역사회 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2) 지역사회보장 현황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경기도. (2024). 경기도 장애인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5개년 계획 및 24년 사업계획.
- 김가희 외. (2024). 2024년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 지원센터 실적보고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비발간].
- 김기환 외. (2009). 국내외 통계제도 및 통계작성현황 비교분석, 통계개발원.
- 김보영. (2023). 분권과 돌봄에 기반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전환 모색. 보건복지포럼, 326, 53-67.
- 김영미, 안상훈, 최영준. (2010). 한국의 복지지표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0(2), 219-253.
- 김필. (2022).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새 통계지표체계 모색.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부산.
- 박영실, 김석호, 김인겸. (2017). 한국의 주요 지표체계 비교연구. 통계개발원.
- 윤수재. (2017). 정부 성과관리 프로세스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8, 19.
- 함영진, 이원천. (2024).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 수립에 따른 협의 양상 변화. 보건복지포럼. DOI: 10.23062/2024.1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황혜신 외. (2021). 분야별 성과지표 개선방안 연구 III: 보건복지분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 강원도. (2022). 강원도 노인복지 기본계획(2023~2027).

경기도. (2018). 2030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경기도. (2024a). 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23~2027년): 2024년도 시행계획(안).

경기도. (2024b). 2024년~2028년 경기도 장애인정책 기본계획 및 2024년 사업별 시행계획.

경기도. (2024c). 2024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재정사업 성과지표개발 매뉴얼.

문화체육관광부. (2020).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2024).

박성준 외. (2024). 지역단위 보건복지 통계데이터 활용 및 관리 방안 연구.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p.248.

보건복지부. (2020a).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보건복지부. (2020b).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

보건복지부. (2021).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

보건복지부. (2023a).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보건복지부. (2023b).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

보건복지부. (2024a). 2023년 지역사회보장지표 개괄 및 구축 현황 설명 자료.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보건복지부. (2024b).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보고서 작성 매뉴얼.

보건복지부. (2024c). 2024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서울특별시. (2024).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세종특별자치시. (2022). 2단계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2022~2026).

수원시. (2023). 제8기(2023~2026) 수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여성가족부. (2023a).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여성가족부. (2023b).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3년도 시행 계획(I) -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2023c).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3년도 시행 계획(II) - 지방자치단체.

- 여성가족부. (2023d).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3년도 시행 계획(III) - 지방자치단체.
- 여성가족부. (2024a).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4년 시행계획 (I).
- 여성가족부. (2024b).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4년 시행계획 (II).
- 오세라비. (2023.06.20.). 양성평등정책 역행하는 여성친화도시 확대. 펜N마이크.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5264>.
- 오영민. (2020). 사회보장사업의 성과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 이재용, 고경훈, 김정숙. (2021). 데이터기반행정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관리 체계 정립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지영, 박순우. (2017). 기초자치단체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분석 및 평가 체계 개선방안. 비판사회정책, (54), 453-486.
- 이현주, 오욱찬, 이원진, 이윤경, 성재민, 이길제, 박형준, 이병재. (2020). 사회 보장정책 효과성 분석을 위한 행정데이터 연계·활용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3년도 지자체 시행계획.
- 전동일, 이강준. (2024). 장애인친화도시 조례 분석. 사회복지법제연구, 15(2): 159-177.
- 정해식, 강혜규, 안수란, 오욱찬, 이태진, 김근혜. (2018). 지역단위 사회서비스 기초통계 개발 및 관리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소연, 남연정, 이태인, 최세나, 황혜신. (2022). 2022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총괄 분석보고서. 아동권리보장원, 101-102.
- 조종도. (2023.12.26.). ‘고령친화도시’ 지정의 법적 근거 마련. 백세시대.
[https://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712](https://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712&utm_source=chatgpt.com)
 &utm_source=chatgpt.com.
- 지방시대위원회. (2024).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 채현탁, 이용수. (202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성과와 한계에 관한 연구 -제4기 계획의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86, 191-219.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24a).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1 (지방자치단체 과제).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24b).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2 (지방자치단체 과제).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24c).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3 (지방자치단체 과제).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4). 건강도시 지표 활용 가이드라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의의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326, 2-4.
- 함영진, 이원천. (2024).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 수립에 따른 협의 양상 변화. 보건복지포럼. DOI: 10.23062/2024.1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2024). 2024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안내.
- 행정안전부. (2023). 2023년(FY2022)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 황혜신, 윤수재. (2018). 분야별 성과지표 개선방안 연구 II: 외교안보분야를 중심으로. 기본연구과제, 2018, 927-1390.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23).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 Lawshe, C. H.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4).
- UN(2009), Mea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New York/Geneva

[보고서 및 정책자료]

- 기획재정부. (2012). 2012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 보건복지부. (2023.09.13.). 2022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 안내.
- 보건복지부. (2023.12.22.).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79442&tag=&nPage=1.
- 여성가족부. (2025.01.03.).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2024 12월 기준).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bbtSn=70

- 4970&mid=plc500&utm_source=chatgpt.com.
- 지방시대위원회. (2023.11.02.).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발표. 대한민국 대통령실. <https://www.president.go.kr/download/654303d23cdca>.
- 지방시대위원회 예산조정평가과. (2024. 03) 2023년 균형발전지표 현황.
- 통계청. (2011). 2010 한국의 사회지표.
- 통계청. (2024). 2023 한국의 사회지표.
- 통계청. (2024b). 국민 삶의 질 2023.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2).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1~2030) (개정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4.07.24.). HP2030 팩트시트 제36호. 국외건강정책. 미국 Healthy People.
- 한국교육개발원. (2023). 2023 한국의 교육지표. 한국교육개발원 .
- 한국삶의질학회. (2019. 11). 지표체계 통합 관리 및 활용도 제고 방안. 통계개발원 연구용역 보고서.
- OECD. (2023). Health at a Glance 202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7a7afb35-en>.
- OECD. (2024a). Society at a Glance 2024: OECD Social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18d8db3-en>.
- OECD. (2024b). How's Life? 2024: Well-being and Resilience in Times of Crisi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0ba854a-en>.
- OECD/WHO. (2022). Health at a Glance: Asia/Pacific 2022.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c7467f62-en>.
- OECD/WHO. (2024). Health at a Glance: Asia/Pacific 2024.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51fed7e9-en>.
- OECD Korea Policy Centre. (2022).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2 아시아/태

평양 판 (번역본).

OECD Korea Policy Centre. (2024). 한눈에 보는 사회 2024. OECD 사회지표 (번역본).

[보도자료]

통계청. (2024. 12. 24). 저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저출생 통계지표」 최종 공개-61개 지표를 3대 영역 하위 9개 부문으로 구성 [보도자료].

[웹사이트]

세종특별자치시. (2025.01.). 세종특별자치시 웹사이트. https://www.sejong.go.kr/citizen/sub05_0402.do.

세종여성플라자. (2025.01.). 세종여성플라자 웹사이트. <https://sj-equity.or.kr/sub06040201>.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2025.01.). <http://www.kccwp.or.kr/>

지방시대위원회. (2025. 01.). 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 웹사이트 균형발전 현황판. <https://www.nabis.go.kr/atlantisDetailView.do>

통계청. (2025.01a).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온라인 간행물. <https://kosis.kr>

통계청. (2025.01b). 지표누리 웹사이트. <https://www.index.go.kr>

통계청. (2025.01c). e-나라지표 웹사이트. <https://www.index.go.kr/unity/potal/eNara/main/EnaraMain.do?cdNo=000>

통계청. (2025.01d). 지속가능발전목표 웹사이트. <https://www.index.go.kr/unity/potal/sdg/SDGMain.do?cdNo=10&lrgClasCd=013>

통계청. (2025.01e). 한국의 사회지표 웹사이트.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SocialIndicator.do?cdNo=000&lrgClasCd=017>

통계청. (2025.01f). 국민 삶의 질 지표 웹사이트.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LifeIndicator.do?cdNo=000&lrgClasCd=018>

- 통계청. (2025. 01g). 저출생 통계지표 웹사이트.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tro/LowbirthIntro.do?cdNo=110&lrgCd=016>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5. 01.).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웹사이트. <https://www.khepi.or.kr/healthplan>
- OASH(Office of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2025. 01.). Healthy People 2030 웹사이트. <https://health.gov/healthypeople>
- OECD. (2025. 01). OECD Data Explorer. <https://data-explorer.oecd.org/>
- WHO GNAFCC. (2025.01.).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 웹사이트. <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

〔법률 및 조례〕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716호 (2023).
- 고등교육법, 법률 제20662호 (2025).
-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9645호 (2023).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27호 (2024).
-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17호 (2008).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제20514호 (2024).
- 노인복지법, 법률 제19814호 (2023).
- 대구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조례 제5268호 (2019).
- 보건의료기본법, 법률 제20216호 (2024).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90호 (2024).
-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18215호 (2021).
-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9893호 (2025).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075호 (2023).
-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8099호 (2021).

유아교육법, 법률 제19737호 (2023).

주거기본법, 법률 제18561호 (2021).

지방자치법, 법률 제19951호 (202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514호 (2023).

지역보건법, 법률 제19903호 (2024).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9740호 (2024).

부록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부표 1〉 한눈에 보는 사회 2024에서 고려한 출산율 지표의 상세 목록

지표 구분	내용	데이터	기준 연도	StatLinks
출산율 지표	출생아 수 감소와 늦은 출생의 동시 추세	합계출산율과 (첫) 출산 시 산모의 평균 연령	1990년 또는 2000년부터 2022년까지	https://stat.link/vxdlnnc
	1980년 이후 거의 모든 OECD 회원국의 출산율이 감소	합계출산율	1980년, 2000년, 2022년(또는 최근 연도)	https://stat.link/ofa9z6
	많은 국가에서 젊은 여성 집단에서 무자녀 출산이 현저하게 증가	영구적으로 자녀가 없는 여성의 비율	1935년, 1955년, 1975년 코호트	https://stat.link/mvkw3b
	한국은 첫째 자녀의 비중이 가장 높고 둘째 자녀의 비중은 가장 낮음	출생 순서	1980년, 2000년, 2022년	https://stat.link/kf84v6
	지난 40년 동안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이 4세 증가함	여성이 출산하는 평균 연령	1980, 2000 및 2022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https://stat.link/163n2d
	2021년 OECD 전체에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에 근접	출생, 사망, 순 이민 및 인구	1960~2021년	https://stat.link/t3jsrz
	노동시장 성과와 출산율 간의 연관성	클러스터 표준 오차를 사용한 OECD 전체 이원 고정 효과 회귀 분석의 요약 결과	2002년부터 2019년까지	https://stat.link/8zu7m3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서서히 증가함	0~14세 자녀가 1명 이상인 부부 중 맞벌이(전일제 및 풀타임/파트타임)의 비율	2005년, 2021년	https://stat.link/tpdb82
	2022년, 많은 근로자가 실직에 대해 걱정함	향후 1~2년 동안 본인 또는 직계 가족에게 가장 큰 3대 위험 중 하나로 '실직 또는 자영업 소득 상실'을 꼽은 응답자 비율(%)	2022년	https://stat.link/wedtbi

지표 구분	내용	데이터	기준 연도	StatLinks
	아동 소득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	“부모가 되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정부가 나와 내 가족에게 적절한 소득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의 비율	2022년	https://stat. link/egoux8
	대다수의 많은 국가는 오늘날의 어린이들이 발전의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생각함	현재 자녀가 성장했을 때 부모보다 경제적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	2013년 2022년	https://stat. link/5vng9t
	아동기 전반에 걸친 가족 지원의 연속성	아동 및 연령별 중위 가구 가치분소득(근로 연령) 대비 정책 수단(intervention)별 평균 사회 지출(PPP 달러 기준)	2019년	https://stat.l ink/p2sg9m
	공공 지출 가족 지원은 OECD 회원국별로 매우 다양함	지출 유형별 가족 혜택에 대한 공공 지출, GDP 대비 비율	2019년	https://stat. link/5z76xg
	가족 정책과 출산율 결과 사이의 연관성	클러스터 표준 오차를 사용한 OECD 전체 양방향 고정 효과 회귀 분석의 요약 결과	2002년부터 2019년까지	https://stat. link/ois3k8
	2000년 이후 가계 지출의 변화	가계 예산 항목별 지출 비중의 백분율 포인트 변화	2000년대 2019년	https://stat. link/2nrxsh
	많은 국가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의 비율이 증가함	부모와 함께 사는 20~29세 청년의 비율	2006년, 2022년	https://stat. link/8izn31

출처: “한눈에 보는 사회 2024”, OECD Korea policy Centre, 2024.

〈부표 2〉 한눈에 보는 사회 2024에서 고려한 일반 지표의 상세 목록

지표 구분	내용	데이터	기준연도	StatLinks
가구소득 (C)	OECD 회원국 간 중위 소득의 8배 차이	연간 균등화 가처분 소득 중위	2021년	https://stat.link/1or2b8
	지난 30년 동안 하위 10%의 소득은 평균, 중위, 상위 소득보다 더 느리게 증가함	소득분위별 실질 소득 증가율, OECD-20 평균	1995년~2020년	https://stat.link/6jn1ik
	2022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앞질렀음	연간 물가(인플레이션) 및 1인당 명목 가계소득 성장률	2021-4분기~2022-4분기	https://stat.link/y8dbzu
출산율 (C)	OECD 전체의 출산율은 일반적으로 인구 대체율보다 낮음	15~49세 여성 1인당 자녀 수	1980년, 2000년, 2022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https://stat.link/6h1btc
	젊은 여성의 출산율은 감소했지만 30~49세 여성의 출산율은 증가함	5년 연령대별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https://stat.link/w8uoz9
	여성의 첫 출산 평균 연령은 20년 동안 3세 증가함	첫 출산 여성의 평균 연령	2000년과 2022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https://stat.link/afg357
이민 (C)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연간 이민자 수는 전체 인구의 1% 미만을 차지함	전체 인구 대비 OECD 회원국의 영구 이민자 수	2022년	https://stat.link/wsl9hg
	OECD 인구의 10명 중 1명은 해외 출생임	전체 인구 대비 외국 태생 비율	2012년 및 2022년	https://stat.link/zgy3h9
		15~64세 최근 이민자 비율	2020년	
	OECD 회원국 중 3분의 2에서 이주민의 출산율이 대체율보다 낮음	국내 및 해외 출생 여성의 합계 출산율(TFR)	2020년 또는 최근 연도	https://stat.link/g8xp5n

지표 구분	내용	데이터	기준연도	StatLinks
결혼 및 이혼 (C)	지난 수십 년 동안 이혼율은 안정된 반면 결혼율은 감소함	인구 1,000명당 조혼인율 및 이혼율	1990년과 2022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https://stat.link/vxuy5j
	1990년 이후 여성과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모두 6세 증가함	성별 평균 초혼 연령	1990년 및 2021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https://stat.link/9asbw8
	2022년 OECD 회원국 25개국에서 동성 결혼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비율	OECD 회원국의 동성 결혼에 대한 기본 통계	2022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StatLinks는 미제공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인구추이 (C)	향후 40년 동안 노동 연령 대비 인구 고령화 비율은 두 배로 증가할 것임	생산연령인구 (20~64세) 100명당 은퇴연령인구 (65세 이상) 수	1980년, 2020년, 2060년	https://stat.link/uqrmty
	청년인구 대비 생산연령인구 비율의 급격한 감소세가 멈췄음	생산연령인구 (20~64세) 100명당 청년(20세 미만) 수	1980년, 2020년, 2060년	https://stat.link/kjlawc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체 인구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전체 인구 중 청년(15~29세) 수	1980년, 2020년, 2060년	https://stat.link/41vwit

주: (C)는 사회적 맥락, (S)는 사회적 상태, (R)은 사회적 대응을 의미함
출처: OECD Korea policy Centre. (2024). 한눈에 보는 사회 2024

〈부표 3〉 한눈에 보는 사회 2024에서 고려한 형평성 지표의 상세 목록

지표 구분	내용	데이터	기준연도	StatLinks
소득 및 자산 불평등 (S)	OECD 국가 간 소득 불평등 수준에는 큰 차이가 있음	가계 가처분 소득의 지니 계수와 부유층 10%와 빈곤층 10% 사이의 격차	2021년	https://stat.link/3f18vc
	소득보다 자산이 상위층에 더 집중되어 있음	가계 가처분 소득 상위 10% 및 가계 순자산 상위 10% 비중	2010년대 후반	https://stat.link/s6mipk
	응답자의 60% 이상이 평균적으로 소득 및 자산 격차가 너무 크다고 답함	소득과 자산에 대해 자국의 불평등이 너무 높거나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	2022년	https://stat.link/5pnka4
소득 빈곤 (S)	OECD 국가 간 상대적 빈곤 수준에는 큰 차이가 있음	성별 균등화 가처분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백분율	2021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https://stat.link/ula4dt
	OECD 평균적으로 빈곤은 노년층에서 가장 높고 근로 연령 성인에서 가장 낮음	연령대별 균등화 가처분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	2021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https://stat.link/xk07y5
	OECD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빈곤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음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개인의 비율	2018년 또는 최근 연도	https://stat.link/g87iq2
구매 가능한 주택 (S)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임대보다 훨씬 더 일반적임	다양한 임차 유형에 속한 가구의 비율(백분율)	2022년 또는 최근 연도 사용 가능	https://stat.link/lx8iym
	저소득층은 상당한 주거비 부담에 직면해 있음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모기지 및 임대료로 지출하는 소득 분포 하위 5분위 인구의 비율, 주택점유 형태, (백분율)	2022년 또는 최근 연도	https://stat.link/9s8lpe
	청년들의 주요 걱정거리인 주거 문제	연령대별로 저렴한 주택 마련/유지에 대해 다소 또는 매우 우려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	2022년	https://stat.link/f9qths

지표 구분	내용	데이터	기준연도	StatLinks
사회 지출 (R)	2022년 공공 사회 지출은 OECD 평균적으로 GDP의 21%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가별로 그 수준은 크게 다름	GDP 대비 공공 사회 지출 비율	2000년, 2019년, 2020년 및 2022년	https://stat.link/8l09xh
	대부분의 지출이 연금과 보건에 사용됨	GDP 대비 광범위한 정책 분야별 공공 사회 지출 및 전체 순 사회지출	2019년	https://stat.link/ybxras
	현금 지원이 항상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님	저소득 및 고소득 그룹의 근로 연령 개인이 받은 공공 현금 이체 비율	2020년	https://stat.link/kemgdb
실업 및 사회안전 망 혜택 (R)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업 기간이 길수록 급여 소득이 크게 감소함	실업 시 순소득, 취업 시 순소득의 비율 “실업 시 순 대체율”, 이전 소득이 평균 임금과 동일한 독신자	2023년	https://stat.link/qetyb2
	사회안전망 혜택만으로는 소득 빈곤을 예방할 수 없음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사회안전망 혜택으로 제공되는 순 소득 수준(중위 가처분 소득 대비 백분율)	2023년	https://stat.link/xiqc6l
	배우자가 실직 상태인 두 자녀를 둔 부부는 일반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신자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 시간이 필요함	사회안전망 급여 수급자의 빈곤 탈출에 필요한 주당 근로 시간(중위 균등화 가처분 소득의 50%), 가족 유형별 평균 지급 기준	2023년	https://stat.link/t97kmi

주: (C)는 사회적 맥락, (S)는 사회적 상태, (R)은 사회적 대응을 의미함
출처: “한눈에 보는 사회 2024”, OECD Korea policy Centre, 2024.

〈부표 4〉 한눈에 보는 사회 2024에서 고려한 자활 지표의 상세 목록

지표 구분	내용	데이터	기준연도	StatLinks
고용 (S)	2023년 말 고용률은 대체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함	고용률, 노동 연령 인구(15~64세) 비율, 성별	2019년 4분기 및 2023년 4분기	https://stat.link/s8z3dw
	막내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모성 고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자녀(0~14세)가 있는 여성(25~54세)의 고용률(%), 막내 자녀의 연령별	2021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https://stat.link/d31qj7
	OECD 평균적으로 27%의 일자리가 자동화 고위험군에 속함	자동화 고위험 직업의 비율	2021년	https://stat.link/cr8jf2
실업 (S)	OECD 회원국 전반에서 낮은 실업률 유지됨	실업률, 노동력(15세 이상) 비율, 계절 조정	2019년 12월 전후, 2024년 1월	https://stat.link/hv76wp
	평균적으로 인력 8명 중 1명(12%)이 “저활용된다”고 응답함	노동 저활용률, 노동력(15세 이상) 비율, 계절 조정	2019년 4분기, 2023년 3분기	https://stat.link/c0xpif
	평균적으로 청년 8명 중 1명(12%)은 고용되지 않았거나 교육 또는 훈련 중임	고용, 교육 또는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15~29세 비경제활동인구 (NEET) 비중	2019년 및 2022년	https://stat.link/ntfwy7
기술 (S)	부족한 일자리 10개 중 5개 이상이 숙련도 고급 직종에서 발견됨	숙련도 고급 기술 분야 고용 비율	2019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https://stat.link/xm45f1
	AI 기술을 요구하는 온라인 채용공고의 비중은 작지만 증가하고 있음	AI 기술이 필요한 온라인 구인 광고 직책의 비율	2019년 및 2022년	https://stat.link/vhkj1d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 및 훈련에 더 많이 참여함	지난 4주 동안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한 25~64세 인구의 성별 참여율(%)	2022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https://stat.link/iyoct7

지표 구분	내용	데이터	기준연도	StatLinks
학생성과 (S)	2018년과 2022년 사이 OECD 회원국 전반에서 수학 및 읽기 성취도가 크게 하락함	읽기, 수학, 과학 분야의 평균 학생 PISA 성적	2018년과 2022년	https://stat.link/d8ci9g
	OECD 회원국의 과목별 성별 성과 격차 비교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학, 읽기, 과학 점수 차이(남학생-여학생)	2022년	https://stat.link/0pc9n5
	2018년 이후 수학, 읽기, 과학에서 상위권과 하위권 간의 점수 차이가 확대되었지만, 그 유의성은 국가마다 다름	상위 및 하위 분기 ESCS의 평균 실적 변화	2018년과 2022년 사이	https://stat.link/o2wvx9
은퇴 후 기대수명 (R)	여성은 남성보다 은퇴 후 4.5년을 더 보냄	남성/여성의 은퇴 후 기대여명	2022년	https://stat.link/0g79bj
	2022년 남성과 여성의 은퇴 후 평균 수명은 1980년보다 4.5년 더 길어짐	은퇴 연령 및 은퇴 후 연도별 추이	1980~ 2022년	https://stat.link/9tnbgp

주: (C)는 사회적 맥락, (S)는 사회적 상태, (R)은 사회적 대응을 의미함
출처: “한눈에 보는 사회 2024”, OECD Korea policy Centre, 2024.

〈부표 5〉 한눈에 보는 사회 2024에서 고려한 보건 지표의 상세 목록

지표 구분	내용	데이터	기준연도	StatLinks
기대여명 (S)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5년 이상 더 오래 사는 비율	출생 시 기대여명 (연 단위 성별)	2021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https://stat.link/e4l3hg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기대여명 감소	출생 시 기대여명 변화	2010~ 2019년 및 2019~ 2021년	https://stat.link/i0qs45
	65세 건강수명은 평균적으로 여성은 10년, 남성은 9.6년으로 65세 일반 기대여명에 비해 남녀 간 차이가 현저히 적었음	65세의 기대여명 및 건강수명(성별)	2021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https://stat.link/cbgzj1
자살 (S)	OECD 회원국에서 남성의 자살률은 여성보다 2~8배 더 높음	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된 자살률(성별)	2021년(또 는 가장 가까운 연도)	https://stat.link/h5f1cr
	자살률은 평균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국가별 추세는 크게 다를 수 있음	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된 자살률 추이	1980~ 2021년	https://stat.link/89ioqv
	자살률은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함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연령대 및 성별	2021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https://stat.link/k7x41w
흡연 및 음주 (S)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성인 흡연율의 현저한 감소세를 보임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흡연하는 인구의 성별 비율	2011년과 2021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https://stat.link/b9ns4
	많은 OECD 회원국의 성인 알코올 소비량이 소폭 감소함	15세 이상 1인당 순수 알코올 소비량(리터)	2011년과 2021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https://stat.link/cy8p46

지표 구분	내용	데이터	기준연도	StatLinks
	15세 청소년 7명 중 1명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담배를 피움	지난 30일 동안 흡연한 15세 인구의 성별 비율	2021년~2022년	https://stat.link/m6wkh4
	15세 청소년 5명 중 1명은 평생 두 번 이상 술을 마신 경험이 있음	성별에 따라 음주 경험이 2회 이상인 15세 인구의 비율	2021년~2022년	https://stat.link/fkj29o
보건 지출 (R)	OECD 국가 간 1인당 보건 지출의 큰 차이	자금 조달 방식별 1인당 보건 지출, USD PPP 기준	2022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https://stat.link/pqyzf3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과 2021년에 1인당 보건에 대한 실질 지출이 증가함	1인당 보건 지출 및 GDP의 실질 연평균 성장률	2005~2022년	https://stat.link/8a3fir
	코로나19의 출현으로 OECD 회원국의 3분의 2에서 보건 지출이 증가함	1인당 보건 지출의 실질 연평균 성장률	2015~2019년 및 2019~2022년	https://stat.link/oxp9ej
보건 및 의료인력 (R)	OECD 평균적으로 간호사 수는 의사의 약 2.5배임	인구 1,000명당 의사 및 간호사 수	2021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https://stat.link/eji4wd
	OECD 회원국 전체 의사의 3분의 1과 간호사의 4분의 1이 55세 이상임	55세 이상 의사 및 간호사 비율	2023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https://stat.link/i3gyn6
	OECD 전체 의사 수의 절반과 장기요양 종사자의 87%가 여성임	여성 의사 및 여성 장기요양 종사자 비율	2021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https://stat.link/jrcgf9

주: (C)는 사회적 맥락, (S)는 사회적 상태, (R)은 사회적 대응을 의미함
출처: “한눈에 보는 사회 2024”, OECD Korea policy Centre, 2024.

〈부표 6〉 한눈에 보는 사회 2024에서 고려한 사회통합 지표의 상세 목록

지표 구분	내용	데이터	기준연도	StatLinks
삶의 만족도 (S)	삶의 만족도 수준과 추세는 국가별로 상당히 다양함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0~10점 척도)	2021~2022년과 2018~2019년	https://stat.link/9z8lew
	사회 인구학적 그룹에 따라 달라지는 삶의 만족도	사회 인구 통계 그룹별 0~10점 척도의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	2021~2022년	https://stat.link/0akmy3
	사람들의 일상적인 느낌, 감정, 경험에 대한 스냅샷	긍정적 경험 지수 대 부정적 경험 지수	2021~2022년	https://stat.link/k72g1d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S)	평균적으로 인구의 절반 미만이 중앙 정부를 신뢰함	다양한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거나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	2021~2022년	https://stat.link/qokm1w
	중앙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인구의 하위 그룹에 따라 다름	하위 그룹별 중앙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거나 보통, 낮거나 전혀 없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	2021~2022년	https://stat.link/m8sx6a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정부의 부패를 인식하고 있음	정부 전반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보고한 사람들의 비율	2021~2022년과 2011~2012년	https://stat.link/zeji4g
여성에 대한 폭력 (S)	여성 25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친밀한 파트너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함	일생 동안 그리고 지난 12개월 동안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및/또는 성적 폭력을 한번 이상 경험했다고 보고한 여성의 비율	2018년	https://stat.link/jgp1k9
	OECD 여성 10명 중 1명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을 목인함	남편이 아내를 때리거나 구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15~49세 여성의 비율	2010~2021년	https://stat.link/t7x290
	여성은 남성보다 밤에 혼자 걷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거주 도시 또는 지역에서 밤에 혼자 걷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성별 비율(%)	2010~2021년	https://stat.link/b1nql8

지표 구분	내용	데이터	기준연도	StatLinks
온라인 활동 (S)	지난 20년간 모든 OECD 회원국에서 인터넷 사용 증가율	인터넷 사용자, 전체 인구 대비 비율	2022년, 2015년, 2005년	https://stat.link/xaeqnk
	인터넷 사용은 학력, 연령, 가구소득에 따라 다름	성별, 연령, 학력, 가구소득별 인터넷 사용자 수	2022년	https://stat.link/tgdkux
	10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빈도가 더 높음	지난 몇 달 동안 사이버 폭력을 한 번 이상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11세, 13세, 15세 어린이의 성별 비율	2021~2022년	https://stat.link/ldvgfm
투표 (R)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선거 참여율이 감소함	최근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투표 연령 인구 비율	1990년대 초반 및 2020년대 초반	https://stat.link/7832dm
	젊은 층은 25~50세 성인보다 투표율이 낮은 경향이 있음	인구 집단별 투표율 비율	2016~2021년 전후	https://stat.link/41yski
	OECD 청년 4명 중 1명은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음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	2022년 또는 작년 자료 없음	https://stat.link/9hyi0o

주: (C)는 사회적 맥락, (S)는 사회적 상태, (R)은 사회적 대응을 의미함
출처: “한눈에 보는 사회 2024”, OECD Korea policy Centre, 2024.

〈부표 7〉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대표·형평성 지표

총6분과	28개 중점과제	대표 지표	형평성 지표
건강생활 실천	금연	성인 남성 현재흡연율 (연령표준화)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현재 흡연율 격차 (연령표준화)
		성인 여성 현재흡연율 (연령표준화)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현재 흡연율 격차 (연령표준화)
	절주	성인 남성 고위험음주율 (연령표준화)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고위험음주율 격차 (연령표준화)
		성인 여성 고위험음주율 (연령표준화)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고위험음주율 격차 (연령표준화)
	영양	식품안전성 확보 가구분율	소득 1~5분위 식품안전성 확보 가구분율 격차
	신체활동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연령표준화)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연령표준화)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연령표준화)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연령표준화)
	구강건강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 (연령표준화)	-
정신건강 관리	자살예방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
		남성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지역 상-하위 20% 남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여성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지역 상-하위 20% 여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치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전국 평균)	지역 상-하위 20%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격차
	중독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신건강 서비스이용률	-

총6분과	28개 중점과제	대표 지표	형평성 지표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암	성인 남성(20~74세) 암 발생률 (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지역 상-하위 20%의 성인 남성 암 발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성인 여성(20~74세) 암 발생률 (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지역 상-하위 20%의 성인 여성 암 발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심뇌혈관질환	성인 남성 고혈압 유병률 (연령표준화)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고혈압 유병률 격차 (연령표준화)
		성인 여성 고혈압 유병률 (연령표준화)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고혈압 유병률 격차 (연령표준화)
		성인 남성 당뇨병 유병률 (연령표준화)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 (연령표준화)
		성인 여성 당뇨병 유병률 (연령표준화)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 (연령표준화)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 비율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비율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비만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연령표준화)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격차(연령표준화)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연령표준화)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격차 (연령표준화)
	손상	손상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
감염 및 기후변화성 질환 예방관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신고 결핵 신환자율 (인구 10만 명당)	-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MMR 완전접종률	-
	기후변화성 질환	기후보건영향평가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영유아	영아사망률 (출생아 1천 명당)	영아사망률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출생아 1천 명당)

총6분과	28개 중점과제	대표 지표	형평성 지표
	아동·청소년	고등학교 남학생 현재흡연율	-
		고등학교 여학생 현재흡연율	-
	여성	모성사망비 (출생아 10만 명당)	-
	노인	노인 남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소득 1~5분위 노인 남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노인 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소득 1~5분위 노인 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장애인	성인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성인 남성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성인 여성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근로자	연간 평균 노동시간	-
	군인	군 장병 흡연율	-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	-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능력 수준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능력 수준 격차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능력 수준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능력 수준 격차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	-
	재원 마련 및 운용	-	-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	-

출처: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1~2030)” (개정판), 한국건강증진
개발원, 2022.

〈부표 8〉 2023 한국의 사회지표 세부 구성 및 지표 소개

영역	하위 영역	통계표 명	지표 정의
인구	총인구	총인구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에 상주하는 모든 인구(외국인 포함). 2022년까지는 확정인구이고 2023년부터는 추계인구임
	인구 구성	시도별 인구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인구. 2022년까지는 확정인구이고 2023년부터는 추계인구임
		성 및 연령별 인구	남녀 및 10세별 인구. 2022년까지는 확정인구이고 2023년부터는 추계인구임
		혼인상태별 인구 구성	인구의 혼인상태(미혼·유배우·사별·이혼)별 구성비율임
		평균 연령	총인구의 평균 연령, 전체 인구의 연령을 산술평균한 값임
		(국제비교)중위 연령	총인구의 중위연령, 전체 인구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연령
		부양비	생산연령인구(15~64세)에 대한 유소년인구(0~14세)와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 인구의 연령구조를 나타냄
	출생	출생아 수	연간 출생아의 수
		합계출산율	가임기(15~49세)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의 수,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는 데 사용됨
	사망	사망률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의 수
	인구이동	입출국자 수	내국인과 외국인 입국자와 출국자의 수. 체류 기간 90일을 초과하여 상주자를 올긴 내·외국인 입국자와 출국자를 대상으로 함. 국제인구이동 규모를 나타냄
		시도별 등록외국인 수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등록외국인 수,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기 위해 등록한 외국인을 말함
		성 및 연령별 등록외국인 수	남녀 및 연령별 등록외국인의 수,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기 위해 등록한 외국인을 말함
		시도별 장기체류외국인 수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등록외국인의 수와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수
		순 인구이동률	광역시도별 순이동인구의 비율,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뺀 순이동인구를 주민등록연앙인구로 나누어 산출함

영역	하위 영역	통계표 명	지표 정의
가구·가족	가족 및 가구 구성	가구 수	일반가구와 집단가구, 외국인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의 수, 일반가구는 친족가구와 비친족 5인 이하 가구, 1인 가구로 구성되고 집단가구는 집단시설가구와 비친족 6인 이상 가구로 구성됨
		평균 가구원 수	일반가구의 가구당 가구원 수, 일반가구 총가구원수를 일반가구수로 나누어 산출함
		가구주 성 및 연령별 가구 구성	일반가구의 가구주 성 및 연령별 구성 비율
		가족 형태별 가구 구성	친족가구의 가족 형태별 구성 비율, 친족가구는 가족으로 이루어지거나 가족과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를 말함
		분거율	가구주와 떨어져 사는 배우자 또는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있는 가구의 비율
		결혼이민자 수	한국인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결혼이민자의 수
		가구 유형별 노인가구 구성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의 가구유형별 구성 비율
	가족 형성	초혼연령	초혼자의 평균 초혼연령
		이혼연령	이혼자의 평균 이혼연령
		재혼연령	재혼자의 평균 재혼연령
		초혼인율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
		조이혼율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
		재혼건수	남편과 아내 모두 재혼인 경우 남편과 아내 중 한 사람이라도 재혼인 경우를 포함하는 총 재혼건수
		외국인 배우자 부부 혼인 및 이혼 건수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및 이혼 건수
		첫째아 모(母) 평균 출산 연령	첫째아 모의 평균 출산 연령
		이상 자녀 수	10-49세 기혼여성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
	가족생활	맞벌이 가구 비중	전체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율

영역	하위 영역	통계표 명	지표 정의
		가사분담률	남편과 아내의 가사 분담(아내 주도, 공평 분담, 남편 주도) 비율
		일·가정 균형 어려움	취업자가 경험한 일·가정 균형 어려움 정도,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의 일·가정 균형 어려움 문항(1-5점) 평균 점수로 산출함
		부모 부양 책임자	부모에게 생활비를 주로 제공하는 자녀
		부모와의 연락 빈도	성인 자녀가 따로 사는 부모에게 연락하는 빈도
		가족 간 대화시간	배우자 관계 및 (2017년)부모-자녀 간 하루 대화시간, (2020년)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대화 시간 포함)
		미취학 자녀 돌봄 유형	영유아가 최다 시간 보내는 기관
		취학 자녀 돌봄 유형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돌봄기관
		가족관계 만족도	13세 이상 인구 중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통계청 사회조사에 자신의 가족관계에 대해 '약간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로 산출함
		가정폭력 발생률	만 19세 이상 유배우(사실혼 포함), 비혼동거 파트너인 응답자의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
	가족 규범	결혼에 대한 인식	13세 이상 인구의 결혼 당위성에 대한 인식
		이혼에 대한 인식	13세 이상 인구의 이혼 당위성에 대한 인식
		자녀 필요성 인식	13세 이상 인구의 결혼 후 자녀 출산 당위성에 대한 인식
		부모부양책임 인식	13세 이상 인구의 노부모 부양책임(노부모 본인, 가족, 정부·사회)에 대한 인식
		가족 내 성 역할 인식	12세 이상 인구의 가족 내 남·여 역할에 대한 인식
건강	건강 상태	기대수명	0세의 기대여명, 즉 0세의 출생아가 향후 살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
		사인별 사망률	주요 사망원인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고혈압 유병률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한 비율

영역	하위 영역	통계표 명	지표 정의
		당뇨병 유병률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 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사용하거나, 당화혈색소 6.5% 이상인 분율. 만 19세 이상
		악성신생물(암) 유병률	인구 10만 명당 암환자의 수
		결핵 신환자율	인구 10만 명당 신규 발생 결핵환자 수
		스트레스 인지율	만 19세 이상 인구 중 평소 스트레스를 느끼는 인구의 비율.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와 '대단히 많이 느낀다'는 응답자의 비율로 산출함
		우울감 경험률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분율
		주관적 건강 상태	13세 이상 인구 중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좋은 편이다'와 '매우 좋다'는 응답자의 비율로 산출함
		2주간 유병률	지난 2주일 동안 아팠던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지난 2주일 동안 질병이나 사고로 아팠던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로 산출함
	건강영양요인	현재 흡연율	만 19세 이상 인구 중 흡연 인구의 비율.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평생 일반담배(필련) 5갑(100개비) 이상을 피웠고 현재도 일반담배(필련)를 피우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로 산출함
		월간 음주율	만 19세 이상 인구 중 한 달에 한 번 이상 음주하는 인구의 비율.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하였다는 응답자의 비율로 산출함
		유산소 신체활동실천율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 (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실천한 분율
		비만율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체질량지수가 25kg/m ² 이상인 인구의 비율

영역	하위 영역	통계표 명	지표 정의
		건강 식생활 실천율	지방, 나트륨 과일 및 채소, 영양표시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을 만족하는 분율, 초등학생 이상
		저체중아 비중	전체 출생아 중 출생체중이 2.5kg 미만인 출생아의 비율
	보건의료체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인구 1,000명당 면허의사 수
		암 검진 수진율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2년 동안 암 검진을 받은 인구의 비율
		어린이 예방접종률	3세 아동인구 중 정기 예방접종을 완료한 아동의 비율
		제왕절개 분만을	전체 분만 중 제왕절개 분만의 비율
		급성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급성 상기도감염 환자 중 항생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비율
		GDP 대비 경상 의료비 비율	경상 의료비의 GDP 대비 비율. 경상 의료비는 국민 전체가 보건의료 재화와 서비스에 지출한 총액을 말함
		건강보험 보장률	건강보험환자의 치료목적으로 발생 된 전체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
		1인당 연간 내원일수	국민 1인당 연간 의료기관 내원일수 외래일수와 입원일수를 합한 일수임
		의료서비스 만족도	(종합)병원 의료서비스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종합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해 ‘약간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로 산출함
		연간 미충족 의료율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년 동안 병·의원 및 치과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였으나 받지 못한 인구의 비율
교육·훈련	교육·훈련의 기회 및 자원	유아교육 취원율	3~5세 아동인구 중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비율
		취학률	학교급별 취학적령 인구 중 해당 학교급에 취학해 있는 인구의 비율
		진학률	해당 연도 졸업자 중 상급학교 진학자의 비율
		학업중단율	전체 학생 중 학업 중단(유예, 면제, 자퇴, 퇴학, 제적 등)을 한 학생의 비율

영역	하위 영역	통계표 명	지표 정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정부 부담 공교육비와 민간부담 공교육비를 포함한 공교육지출의 학생 1인당 금액 연간 공교육지출액을 당해 연도 학생 수로 나누어 산출함
		사교육 참여율	초·중·고 학생 중 유료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비율
		교육비 부담도	30세 이상 가구주 중 소득에 비해 자녀 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가구의 비율
		다문화 학생 비율	초·중·고 학생 중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율. 국제결혼가정 1) 자녀(국내 출생, 중도 입국)와 외국인 가정 2) 자녀를 포함함
		평생교육 참여율	25~79세 인구 중 형식 또는 비형식 평생교육에 참여한 인구의 비율
		직업 관련 비형식 교육 참여율	25~79세 인구 중 직업과 관련된 목적으로 비형식 교육에 참여한 인구의 비율
		평생교육 자부담학습비	25~79세 평생교육 참여자의 자기부담 학습비
		임금근로자 교육훈련 경험률	임금근로자 중 지난 1년간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의 비율
	교육·훈련의 과정 및 활동	교원 1인당 학생 수	유·초·중·고의 교원 1인당 학생 수 전체 학생수를 교원 수로 나누어 산출함 학교의 교육 여건 수준을 나타냄
		학급당 학생 수	유·초·중·고의 한 학급당 학생수. 전체 학생수를 학급수로 나누어 산출함 학교의 교육여건 수준을 나타냄
		학습 동기	중·고등학생의 내재적 학습동기와 외재적 학습동기 정도
		학교생활 만족도	중·고등학생 중 자신의 학교생활(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시설, 주변환경, 전반적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학생의 비율
		학교폭력 피해율	전년도 2학기부터 조사 시점까지 초 4~고3 재학생 전체 중 학교폭력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 신체폭행, 금품갈취, 성추행·성폭행, 강제 심부름)을 당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

영역	하위 영역	통계표 명	지표 정의
교육·훈련의 결과 및 성과		진로직업 교과 선택률	‘진로와 직업’ 과목을 채택하여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의 비율
		학업성취도 국제순위	한국 학생의 PISA 성취도와 TIMSS 성취도 국제순위. PISA에서는 15세 학생의 읽기·수학·과학 성취도를 측정하고, TIMSS에서는 9세(초등학교 4학년)와 13세(중학교 2학년) 학생의 수학·과학 성취도를 측정함
		기초학력 미달률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 국·영·수 과목별 기초학력(기본 내용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의 비율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함
		학교 교육 효과 인식	13세 이상 인구 중 학교교육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인구의 비율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 중 취업대상자 대비 취업자의 비율 취업대상자는 졸업자에서 진학자, 입대자, 취업 불가능자, 외국인 유학생, 제외인정자를 제외하여 산출
		석박사학위 취득자 수	전국 대학부설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한 졸업자 수
		고등교육 이수율	25~64세 인구 중 대학을 졸업한 인구의 비율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을수록 사회의 교육 수준이 높고 교육 기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전공직업 일치도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의 학교 전공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교육 수준별 임금 수준	대졸자 대비 상대적 임금 수준. 대졸자 월임금을 100으로 할 때 중졸 이하, 고졸자, 전문대 및 대학원 졸업자의 월 임금
		평생교육 성과 인식	25~79세 평생교육 참여자의 교육성과에 대한 인식
		IMD 교육경쟁력 국제순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 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교육경쟁력의 한국 정성지표 순위. IMD 교육경쟁력은 정량지표 12개와 정성지표 4개로 구성됨

영역	하위 영역	통계표 명	지표 정의
노동	노동력	고용률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
		산업별 취업자 구성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 비율
		직업별 취업자 구성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 비율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구성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 비율
		근로 형태별 임금근로자 구성	임금근로자의 근로 형태별 구성 비율
		사업체 규모별 임금근로자 구성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규모별 구성 비율
		장애인 경제활동	장애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및 실업률이며, 2022년부터 반기 조사로 주기 단축
		이민자 경제활동	외국인과 귀화자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및 실업률
	일자리 분포	전체 일자리 수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을 포함하는 전체 일자리 수
		공공부문 일자리 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기업 등을 포함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수
	노동시장 이행	졸업자 취업 소요 기간	15~29세 졸업자와 중퇴자가 첫 취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고용의 질	산재 사망률	근로자 1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
		임금근로자 근속연수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
		임금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	임금근로자의 공적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
		일자리 만족도	직장의 근로 여건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현재 다니는 직장의 임금, 근무환경, 근로시간, 전반적 근로여건에 대해 '약간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로 산출함
	노사관계	노동조합조직률	노동조합 조직 대상 근로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의 비율
		노사분규 건수	연간 노사분규 발생 건수
	임금근로자 소득	월평균 임금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현금 및 현물 등)

영역	하위 영역	통계표 명	지표 정의
		임금 5분위 배율	임금 하위 20%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임금 상위 20% 근로자 평균 임금의 배율. 상위 20% 근로자의 임금이 하위 20% 근로자 임금의 몇 배인지를 나타냄
	근로시간	임금근로자 주당 취업 시간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 시간
		비임금근로자 주당 취업 시간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 시간
		초단시간 및 장시간 취업자 비율	전체 취업자 중 주당 1~14시간(초단시간) 일하는 취업자 비율과 주당 53시간 이상(장시간) 일하는 취업자 비율
	노동비용 및 생산성	실질임금 및 노동생산성 증가율	실질임금과 노동생산성지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
소득· 소비· 자산	소득	국내총생산(GDP)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
		경제성장률	국내총생산(GDP)의 전년 대비 증가율
		1인당 국민총소득(GNI)	국민총소득(GNI)의 1인당 금액임. GNI는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가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로 자국민(거주자)이 국외로부터 받은 소득(국의 수취 요소소득)은 포함하고 외국인(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국의 지급 요소소득)은 제외함
		1인당 가계 총 처분가능소득	국민 1인당 가계 총처분가능소득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임. 제한적이거나 가계의 구매력을 나타냄
		가구소득	가구의 연간 경상소득과 처분가능소득. 전체 가구 평균 소득임
		소득원천별 소득구성	경상소득의 원천(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별 구성 비율
		비용자보수 비율	요소비용국민소득 중 비용자보수의 비율
		소득 만족도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본인의 소득에 대해 '약간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로 산출함

영역	하위 영역	통계표 명	지표 정의
	자산	가구 순자산	가구의 순자산액. 가구자산에서 가구부채를 뺀 금액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가계신용의 GDP 대비 비율. 가계신용은 금융기관(공적 금융 포함)이 가계에 제공한 총 신용으로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것임
	소득분배	지니계수	전체 가구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 0에서부터 1까지의 수치로 나타내는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의미함.
		상대적 빈곤율	전체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 또는 60% 이하인 인구의 비율
		순자산 5분위 배율	소득 하위 20% 평균 순자산 대비 소득 상위 20% 평균 순자산의 배율. 가구의 자산 불평등도를 나타냄
	소비와 물가	1인당 민간소비지출	국민 1인당 민간소비지출액. 민간부문 전체 소비지출을 총인구로 나눈 것으로 국민의 평균적인 소비 수준을 나타냄
		소비지출 비목별 구성비	가구의 소비지출 비목별 비중
		소비자피해 구제율	인구 1만 명당 소비자피해 구제 건수로 소비자 주권과 소네 환경 등 소비생활의 질적 수준을 나타냄. 한국소비자원이 처리한 소비자피해 구제 건수를 총인구로 나누어 산출함
		소비생활 만족도	자신의 소비생활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본인의 소비생활에 대해 '약간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로 산출함
		소비자물가 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대비 등락률.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구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지수임. 소비자가 일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비품목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므로 소비자 구매력 측정에 사용됨
	저축과 투자	총투자율	국민총처분가능소득 대비 총투자액의 비율
		가계 저축률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중 소비지출에 쓰이지 않고 저축된 비율. 가계 저축률이 낮을수록 높은 소비성향을 보임. 가계 순저축을 가계 순수입으로 나누어 산출함

영역	하위 영역	통계표 명	지표 정의
	조세와 재정	국민부담률	GDP 대비 국민의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 비율.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를 말하고 사회보장기여금은 공적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말함. 국민의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 수준을 나타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공공 및 법정 민간 사회복지지출의 GDP 대비 비율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 국가채무의 상대적 규모를 나타냄.
여가	여가 자원	인구 10만 명당 예술행사 수	시각예술(미술전시)과 공연예술(국악, 양악, 연극, 무용)의 인구 10만 명당 행사 건수
		문화예술 시설 수	공연시설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문화의집 등을 포함하는 문화예술시설의 수
		공공 체육시설 수	간이운동장, 육상경기장, 축구장, 야구장, 수영장 등을 포함하는 주요 공공체육시설의 수
		공공도서관 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민간이 설립한 공공도서관의 수
		오락·문화 & 통신의 소비지출 구성비	가구의 소비지출 중 오락·문화비와 통신비 지출의 비율
		여가시간	15세 이상 인구의 평일과 휴일 평균 여가시간
	여가활동	시간 사용	10세 이상 인구의 행동 유형별 사용 시간
		여가활동 동반자	15세 이상 인구의 여가활동 주 동반자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13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공연이나 전시, 스포츠를 관람한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
		독서인구 비율	13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책을 읽은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
		영화관람 횟수	전국 극장에서 관람한 1인당 영화관람 횟수
		사회성 여가 참여율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와 동호회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구의 비율임
		휴가 활용률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휴가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인구의 비율

영역	하위 영역	통계표 명	지표 정의
		여가활동별 여가시간	10세 이상 인구의 문화 및 여가활동 시간
		여행자 비율	13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국내 관광여행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
		레저시설 이용률	13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레저시설을 한 번 이상 이용한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율	10세 이상 인구 중 주 1회 이상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인구의 비율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	15세 이상 인구의 하루 중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
	여가 결과	여가생활 만족도	자신의 여가생활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평소 여가생활에 대해 '약간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로 산출함
		여가 여건 충족도	15세 이상 인구 중 여가시간, 여가비용, 여가시설 각각에 대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나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스마트폰 과의존율	3~69세 인구 중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
주거	주택 수급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인구 1000명당 주택호수. 당해 연도 총주택 수를 총인구로 나누어 산출함. 주택수급 상황을 나타냄
		주택보급률	총가구수 대비 주택호수의 비율. 주택 수에 다가구주택 구분 거치를 반영함. 주택 수급 상황을 나타냄
		주택 재고 수	재고 주택의 수 재고 주택은 한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서 영구건물,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독립된 출입구,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 단위 등의 요건을 갖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을 말함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공공부문에서 공급한 임대주택 재고 수
		신규주택 건설 수	주택 준공 검사를 완료한 신규 건설 주택의 수
		주택 매매가격 지수	기준 시점(2021년 6월) 주택 매매가격을 100으로 한 가격 지수
	주택시장	주택 중위 매매가격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매매 중위가격

영역	하위 영역	통계표 명	지표 정의
		주택 전세가격 지수	기준 시점(2021년 6월) 주택 전세가격을 100으로 한 가격 지수
		주택 중위 전세가격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 전세 중위가격
		주택 월세가격 지수	기준 시점(2021년 6월) 주택 월세가격을 100으로 한 가격 지수
		자가점유율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 주택의 점유 형태를 나타냄
		임차가구 중 전세가구 비율	임차가구 중 전세(무월세)로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 주택의 점유 형태를 나타냄
	주거지불 가능성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자가가구의 주택 구입 부담 수준을 나타냄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임차가구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수준을 나타냄
	주거 적절성	주택 이외의 거주 가구 수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의 수. 고시원이나 고시텔, 숙박업소의 객실,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 일터나 다중이용업소(PC 방 등) 등에 거주하는 가구를 포함함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전체 가구 중 면적, 시설, 침실 등의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
		1인당 주거 면적	가구의 1인당 주거 면적. 전체 가구의 총주거면적을 총가구원수로 나누어 산출함. 가구의 주거 질 수준을 나타냄
		주택 거주기간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거주한 기간
		주택 만족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만족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의 주택만족도(1~4점) 평균 점수로 산출함
		주거환경 만족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 전반에 대한 만족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의 전반적 주거환경만족도(1~4점) 평균 점수로 산출함
		통근시간	통근인구가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집과 직장을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임.
		대중교통 만족도	대중교통 이용인구의 교통이용 만족도. 국토교통부 「대중교통현황조사」의 대중교통 전반적 만족도(1~7점) 평균 점수로 산출함

영역	하위 영역	통계표 명	지표 정의
생활환경	오염물질배출	온실가스 배출량	LULUCF(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부문에서 배출되는 6개 온실가스의 배출총량으로 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나타냄. 온실가스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주된 요인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별 배출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목록에 따른 배출원별 배출량을 합산하여 오염물질별로 산정함. 대기오염물질별로 대기오염을 야기하는 기제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 물질의 배출량을 단순 합산하지 않음
		폐수발생량	산업폐수의 1일 발생량 폐수는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침
		해양오염사고 오염물질 유출량	해양오염사고로 인해 바다로 유출된 유류, 폐기물, 유해 물질의 양 오염물질별로 특성이 달라서 단순 합산하지 않음
		폐기물 발생량	일반폐기물(생활계 폐기물(생활폐기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의 1일 발생량
		화학물질 배출량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제조·사용하는 과정에서 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 조사 대상 사업장(종업원 수 30인 이상)의 통계 작성 대상 화학물질 배출량을 집계하여 산정함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원전 및 비원전 시설에서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양
	환경상태	미세먼지 농도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 도시별 측정소의 연간 평균치임
		수질 오염도	대강 주요 지점의 수질오염도. 측정지점별 연간 평균치임
		해수 오염도	주요 해역의 연평균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각 측정망의 분기별 자료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함
		소음도	주요 도시의 도로별 주거지역 소음도
		토양오염 기준 초과율	토양오염 조사 지점 중 우려 기준과 대책 기준을 초과한 지점의 비율

영역	하위 영역	통계표 명	지표 정의
		먹는 물 수질 기준 초과율	정수장, 수도꼭지, 소규모 수도시설, 약수터의 수질 측정지점 중 먹는 물로 부적합한 수질로 측정된 지점의 비율
		환경성 질환 유병률	환경성 질환(비염, 아토피 피부염, 천식)을 앓고 있는 인구의 비율
		대기질 만족도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대기질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대기에 대해 '약간 좋다'와 '매우 좋다'는 응답자의 비율로 산출함
		수질 만족도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수질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하천에 대해 '약간 좋다'와 '매우 좋다'는 응답자의 비율로 산출함.
		소음 만족도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소음·진동 수준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소음·진동에 대해 '약간 좋다'와 '매우 좋다'는 응답자의 비율로 산출함
		토양환경 만족도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토양환경 정도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토양환경에 대해 '약간 좋다'와 '매우 좋다'는 응답자의 비율로 산출함
		녹지환경 만족도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녹지환경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녹지환경에 대해 '약간 좋다'와 '매우 좋다'는 응답자의 비율로 산출함
		농약오염 불안도	농약오염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인구의 비율.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농약 및 화학비료 문제에 대해 '약간 불안하다'와 '매우 불안하다'는 응답자의 비율로 산출함
		기후변화 불안도	기후변화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인구의 비율.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약간 불안하다'와 '매우 불안하다'는 응답자의 비율로 산출함
	환경관리	상수도 보급률	전체 인구 중 상수도를 공급받는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

영역	하위 영역	통계표 명	지표 정의
		하수도 보급률	총 인구중 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공공폐수 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하수처리 구역 내 하수처리 인구 비율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도시공원의 시민 1인당 면적. 도시공원 조성 면적을 용도지역상 도시(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인구로 나누어 산출함
		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 비율	환경보호지출의 GDP 대비 비율. 환경보호지출액을 명목 GDP로 나누어 산출함
		환경예산 비율	정부예산 중 환경예산의 비율. 환경예산은 환경부를 포함한 정부 전체의 환경 관련 예산임
범죄·안전	범죄	범죄율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 형법 범죄와 특별법 범죄를 포함함
		시도별 범죄율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
		범죄자율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의 수. 형법 범죄자와 특별법 범죄자를 포함함
		범죄자 평균연령	살인, 강도, 성폭력, 폭행·상해, 절도 범죄자의 범행 당시 평균 연령
		외국인 범죄자율	국내 체류외국인 10만 명당 외국인 범죄자의 수
		소년 범죄자율	18세 이하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의 수
		노인 범죄자율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 명당 범죄자의 수
	형사사법활동	공공안전 지출	공공안전지출의 GDP 대비 비율. 경찰지출과 교정시설 수용자예산의 합계액을 GDP로 나누어 산출함
		공공안전 인력	경찰관, 교도관, 보호관찰관을 포함하는 공공안전인력의 담당 인구, 수용 인원 및 관리 사건 수
		공공안전 시설	지구대·파출소 1개소당 담당인구와 교정시설 정원 대비 수용 인원 비율
		형사사법기관 성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과 교정시설 출소자의 3년 이내 재복역률
	사법정의	법률구조 건수	정부가 사회적 약자와 법 소외계층을 위해 제공한 법률지원 실적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건수	범죄피해 당사자나 유족에게 지급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건수

영역	하위 영역	통계표 명	지표 정의
		형사사법기관 신뢰도	형사사법기관(법원, 검찰, 경찰)을 신뢰하는 인구의 비율
		형사사법기관 공정성 인식	형사사법기관(법원, 검찰, 경찰)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재해와 사고	자연재해 사망자 수	호우, 태풍, 강풍, 대설 등 자연재해 발생에 의한 사망자의 수
		화재 사망자 수	화재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의 수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도로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의 수. 사고 발생 30일 이내 사망자를 포함함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14세 이하 아동인구 10만 명당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아의 수. 교통사고, 추락, 익사, 화재, 중독 등에 의한 사망을 포함함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	소방관 1인이 담당하는 인구의 수. 총인구를 소방공무원 수로 나누어 산출함
	안전 인식 및 평가	야간보행 안전도	13세 이상 인구 중 야간보행 시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의 비율
		범죄피해 두려움	14세 이상 인구 중 범죄(절도, 강도, 폭행, 사기, 성폭력, 손괴, 주거침입, 괴롭힘)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인구의 비율
		안전환경 지수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안전환경에 대한 인식 지수
		사회안전 인식	13세 이상 인구 중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사회통합	시민성과 거버넌스	선거투표율	전체 선거인(유권자) 중 투표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
		여성 국회의원 비율	전체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원의 비율
		정치적 역량감	자신의 행동과 의견이 정치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비선거 정치활동 참여율	지난 1년 동안 투표 이외의 정치적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
		시민의식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 가치관	물질주의 가치(국가질서 유지, 물가인상 억제)와 탈물질주의 가치(국가적 결정에 국민참여, 표현의 자유 확대)를 우선시하는 인구의 비율

영역	하위 영역	통계표 명	지표 정의
		정치 및 경제 전망	향후 우리나라 정치 상황과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인구의 비율
		기관 신뢰도	국가기관(중앙정부,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군대)을 신뢰하는 인구의 비율
		부패인식 지수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청렴도 점수. 0~100으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함을 나타냄
		사회 갈등 인식	우리 사회의 갈등(빈곤층과 중상층, 보수와 진보, 근로자와 고용주, 수도권과 지방, 개발과 환경보존, 노인층과 젊은 층, 남자와 여자, 종교 간) 수준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준법 수준 인식	자신과 타인의 준법 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인구의 비율
	연대	사회단체 참여율	13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
		자원봉사 참여율	13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자원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
		기부 참여율	13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현금 또는 물품을 기부한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
		이타주의 가치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국민 자긍심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인구의 비율
		지역사회 소속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시도, 시군구, 읍면동)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인구의 비율
		사회적 관계망	어려울 때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이나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이 있는 인구의 비율
		사회적 고립감	고립감을 느끼는 인구의 비율
		대인 신뢰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하는 인구의 비율
	포용	여성 관리자 및 전문가 비율	전체 관리직과 전문직 종사자 중 여성의 비율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	본인과 자식 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영역	하위 영역	통계표 명	지표 정의
		계층귀속감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할 때 자신이 속한다고 생각하는 계층
		소수자에 대한 거리감	전과자와 성적 소수자를 자신의 배우자, 친구, 직장동료, 이웃 중 어떤 관계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구의 비율
		공정성 인식	우리 사회의 교육 기회, 취업 기회, 법 집행, 과세 및 납세, 병역의무 이행, 성별에 따른 대우 각각에 대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차별 경험률	지난 1년간 성별, 종교,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	삶의 만족도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사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나타냄
		삶의 자유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데 자유로운 인구의 비율
	정서 경험	긍정적 정서 경험	어제 행복감을 느낀 인구의 비율
		부정적 정서 경험	어제 걱정을 한 인구와 우울감을 느낀 인구의 비율
	삶의 의미와 보람	일의 가치 인식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출처: “2023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2024.03.를 바탕으로 재구성.

〈부표 9〉 저출산 통계지표의 주요 지표와 지표 정의

영역	부문	하위부문	지표	정의
출산 현황 (18)	출산력	출산 규모	[대표]출생아 수	• 1년간 대한민국 국적의 총 출생아 수 (조출생률: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 출산의 절대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
			혼외출산 비율	• 출생아 중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의 비율
		출산연령	[대표]여성의 평균 출산연령	•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 • 여성의 평균적인 출산 시기를 보여주는 지표
			연령별 출산율	• 모의 연령별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
			출산순위별 연령별 출산율	• 모의 연령별 여성 1,000명당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출산율	[대표]합계출산율	• 15~49세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의 합 • 출산력의 기본 지표로서 국제 비교 지표
			유배우 출산율*	• 혼인을 기반으로 한 15~49세 유배우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의 합
			코호트 출산율	• 기준 연도에 가임기간이 종료된 여성 50~54세의 평균 총 출생아 수
		무자녀 비율	신혼부부 무자녀 비율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혼인 유지 부부 중 자녀가 없는 부부의 비율
			코호트 무자녀 비율	• 기준 연도에 가임기간이 종료된 여성 50~54세) 중 무자녀 비율
	혼인력	혼인 규모	[대표]혼인건수	• 1년 동안 발생한 혼인건수 (조혼인율: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 • 혼인의 절대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
			초혼건수	• 1년 동안 발생한 초혼건수
			연령별 유배우율	• 연령별 인구 대비 유배우자 비율
		혼인 연령	[대표]평균 초혼연령	• 초혼인 남편, 아내의 평균 연령 • 혼인 시기를 보여주는 지표
	모자보건	모자보건	영아사망률	• 신생아 1,000명당 1세 미만 사망자 수
			조산아 출생 비율	• 신생아 중 임신기간 37주 미만 비율
			[대표]저체중아 출생 비율	• 신생아 중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저체중 비율 • 신생아 보건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
			다태아 출생 비율	• 신생아 중 다태아 비율
결정 요인 (24)	가족 형성 가치관	가치관 및 인식	자기실현주의	•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 중 중요도에 대한 평가

영역	부문	하위부문	지표	정의
			물질주의	• 향후 10년간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할 국가 목표를 경제성장, 물가안정 등 물질주의 가치관에 응답한 비율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	• 본인 세대 및 자녀 세대에서 계층적 상승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
			[대표]가족 내 성역할 인식	• 가족 내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 성별 역할 구분 인식 지표
		의향	결혼에 대한 견해	• 13세 이상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생각
			결혼하지 않는 이유	• 13세 이상 미혼 남녀의 결혼하지 않는 이유
			[대표]자녀에 대한 견해	•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인식 • 출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자녀에 대한 인식 지표
			출산의향	• 19~49세 기혼여성의 (추가)자녀 계획이 있는 여성의 비율
			기대자녀 수	• 19~49세 기혼여성의 자녀 수와 추가 출산계획 자녀의 합
	가족 형성 조건	사회환경	[대표]청년층 수도권 집중도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층(19~39세) 인구의 비중 • 청년층 경쟁적 환경 지표
			소득분배지표	• 10분위 배율(소득 하위 10% 대비 소득 상위 10%의 소득)
			청년층 소득이동성	• 두 기간 모두 소득이 신고된 청년층(19~39세)의 소득분위(5분위) 이동 비율
		고용	청년층 고용률	• 청년층(20~39세) 인구 중 취업자 비율
			[대표]청년층 정규직 근로자 비율	• 청년층(20~39세)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 비율 • 청년층 고용 안정성 수준 지표
		소득	청년층 가구소득	• 가구주가 청년층(15~39세)인 가구의 가구소득으로 한 해 동안의 정상소득(근로, 사업, 재산소득 등 포함)
			[대표]청년층 소득 구 간별 분포	• 청년층(19~39세) 상시 근로자 연소득금액의 소득 구간별 분포 • 청년층 소득 분포 지표
		주거	[대표]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 월소득(중위수 및 평균 기준) 대비 임대료 비율(RIR) • 주거비 부담 정도 지표

영역	부문	하위부문	지표	정의
			청년층 자가(전세) 비율	• 청년층(19~39세)이 가구주인 가구 중 자기 소유(또는 전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
			신혼부부 금융권 대출잔액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혼인 유지 부부가 제1, 2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대출 합산 잔액
	양육 및 돌봄	비용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료, 공교육비, 사교육비, 돌봄비용, 기타비용 등
			[대표]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자녀 사교육 지출 정도 지표
			자녀 교육비 부담도	• 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가구주 중 소득에 비해 자녀 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가구주의 비율
		시간	성별 가사노동시간	• 남녀의 가정관리 및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시간의 합
			[대표]부모별 자녀돌봄 시간	•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 부모의 자녀돌봄 시간 • 자녀돌봄에 대한 시간 부담 정도 지표
정책 제도 (19)	정책 수요	정책 수요	[대표]저출생 정책 제도 수요	• 정책 수요자(국민) 입장에서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 정책 수요에 근거한 정책 제도 추진 및 개선 파악 지표
	가족 형성 지원	가족	[대표]가족에 대한 공적 지출	• GDP 대비 가족에 대한 현금, 서비스, 세금 감면 등 가족 혜택 관련 지출 비율 • 국가의 가족정책에 대한 총체적 지출 규모 지표
		고용	고용에 대한 공적 지출	• GDP 대비 공공 고용 서비스, 교육, 고용 보조금 및 공공부문의 직접 일자리 창출과 실업 수당 등 고용에 대한 지출 비율
		주거	[대표]임대주택 공급 현황	•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공급 현황(연도별 사업승인 또는 신규등록 임대주택) • 주거 안정 지원 지표
		출산	[대표]난임시술 지원 현황	• 난임시술 시행환자 수, 총진료금액 • 출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출산 지원 지표
	양육 돌봄 지원	돌봄	[대표]자녀돌봄수당	• 영유아기 지원정책인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영아수당), 아동수당의 예산 규모 • 양육돌봄에 대한 현금 지원 지표

영역	부문	하위부문	지표	정의
			보육기관에 대한 공적 지출	• 영유아(0~5세) 1인당 보육기관에 대한 공적 지출
			[대표]보육시설 이용률	• 보육연령별(0~5세)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전체 어린이집 보육아동 중 국공립어린이집, 사회 복지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의 비율) • 양육돌봄에 대한 시설 지원 지표
			보육교사 1명당 보육아동 수	• 보육시설(어린이집)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일가정 양립 지원	출산휴가 사용자 수	• 유급 출산휴가 사용자 수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 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
			[대표]육아휴직 사용률	• 출생아 부모 중 해당 연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비율 • 양육돌봄에 대한 일가정 양립(육아휴직) 지표
			[대표]유연근무 이용률	•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임금근로자의 비율 • 양육돌봄에 대한 일가정 양립(유연근무) 지표
			출산 전후 모의 취업비율	• 출산한 모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360일)과 출산 후(90~720일)의 취업 비율
			기혼여성 고용률	• 15~54세 기혼 여성 중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여성의 고용률
			맞벌이 부부 비율	•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부부 비율
			가족친화 인증기업 수	• 가족친화제도를 인증받은 기업의 수
		교육환경 개선	학교급별 공교육비	• GDP 대비 학교급별 정부 부담 공교육비 지출 비율
			늘봄학교 이용률	• 전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중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 수(2024년 기준) • 양육돌봄에 대한 교육 환경 개선 지표

주: * 항목은 개발 추진 중인 항목임
출처: 통계청h, (2015. 01), 저출산 통계지표 웹사이트 지표 소개.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tro/LowbirthIntro.do?cdNo=110&lrgcClassCd=016>

〈부표 10〉 균형발전지표 구축현황: 43종

영역	지표 정의	지표 산식	단위	산출 단위 (2023년도 지표 기준)			비고
				시군구	시도	미생산	
인구 (6개)	인구증감률	인구증감률	%	○			통계청 인구총조사
	합계출산율	연령별(15~49세) 출산율의 합÷1,000	가임여성 1명당 명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조사망률	1년간의 총사망자 수/당해연도의 연앙인구*1000	1천 명당 명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등록외국인 수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집계한 수 (외국인의 범위: 단기체류외국인, 등록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거소 신고자를 포함,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명	○			통계청 인구총조사
	고령화지수	(65세 이상 인구 / 15세 미만 인구) × 100	명	○			통계청 인구총조사
	청년층 순이동률	{(전입인구 - 전출인구)/주민등록연앙인구} × 100 (청년층: 만19~34세)	%	○			국내인구이동통계
주거 및 교통 (2개)	노후주택 비율	(30년 이상된 주택 수 / 전체 주택 수)×100	%	○			통계청 (주택총조사)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버스와 철도의 여객수송실적 / 육상교통수단 총여객수송실적) × 100	%	-			국토교통부 (KTDB)
교육 (4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서비스권역 내 영유아 인구 비율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서비스권역 이내에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영유아(7세 이하) 인구수×100/총 주민등록인구 중 영유아 인구수	%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영역	지표 정의	지표 산식	단위	산출 단위 (2023년도 지표 기준)			비고
				시군구	시도	미생산	
안전 (5개)	초등학교 서비스권역 내 학령인구 비율	초등학교 서비스권역 이내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초등학교(8-13세) 인구수 ÷ 100 / 총 주민등록인구 중 초등학교령 인구수	%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	(지역 4년제 일반대학의) 취업자 수 / 조정된 졸업자 수 × 100	%	○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인구 만 명당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수	원격 형태를 제외한 평생교육법상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수 / 주민등록 인구 수 × 10,000	개소	○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조사)
	소방서 접근성	가장 가까운 소방서까지 도로 이동 거리	km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경찰서 접근성	가장 가까운 경찰서까지 도로 이동 거리	km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주민수	주민등록 인구수 ÷ 구조구급대원	주민 수/ 구조구급 대원 1명	-			통계청(e-지방지표)
	119 안전센터 1개당 담당주민수	주민등록 인구수 ÷ 119 안전센터 수	주민수/ 119 안전센터 1개	○			소방청 소방정책과
	지진옥외대피소 접근성	가장 가까운 지진옥외대피소까지의 도로 이동 거리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영역	지표 정의	지표 산식	단위	산출 단위 (2023년도 지표 기준)			비고
				시군구	시도	미생산	
문화·여가 (3개)	공공도서관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서비스권역 이내에 거주하는 인구수×100/총 주민등록 인구수	%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공공체육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공공체육시설로부터 서비스권역 이내에 거주하는 인구수×100/총 주민등록 인구수	%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지자체 예산 중 문화예산 비율	지자체 문화 관련 예산/지자체 예산 총액*100	%	-			행안부 (지방재정36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100/총 주민등록 인구수	%	○			통계청(e-지방지표)/ 보건복지부(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현황)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지출 비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액+보건 분야 예산액)*100/전체 일반회계 예산 (총 사회복지시설 수÷주민등록 인구)×100,000 * 사회복지 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부랑인시설을 포함	%	○			통계청(e지방지표)/ 행안부(지방재정연감)
보건·복지 (5개)	인구 심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개소/ 심만명	○			통계청 (e지방지표)/시도통계 연보
	응급의료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응급의료시설로부터 서비스권역 이내에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인구수×100/행정구역 내 총 거주 인구수	%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병원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병원 시설로부터 서비스권역 이내에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인구수×100/행정구역 내 총 거주 인구수	%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영역	지표 정의	지표 산식	단위	산출 단위 (2023년도 지표 기준)			비고
				시군구	시도	미생산	
생활 환경 (6개)	하수도보급률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주민등록 인구+등록외국인 인구)]×100	%	○			행정안전부 (한국도시통계)
	생활권 공원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생활권 공원으로부터 서비스권역 이내에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인구수 × 100 / 행정구역 내 총 거주 인구수	%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행정구역 면적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대기오염물질배출량(톤)/행정구역 면적(1㎢) * 대기오염물질배출량: 8개(CO, NOx, SOx, TSP, PM10, PM2.5, VOC, NH3)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임	톤/㎢·년	○			환경부 시군구별 배출량 자료, UPIS
	생활계폐기물 재활용 비율	(재활용 처리량/생활계 폐기물 발생량)×100 * 생활계 폐기물: 생활(가정)폐기물+사업장 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	%	○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행정구역 면적 대비 공원면적비	(공원 면적/행정구역 면적)×100	%	○			한국국토정보공사 (도시계획현황통계)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생활폐기물 배출량/주민등록 인구	kg/명	○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산업· 일자리 (6개)	사업체 수 증감률 (최근 3개년)	변화율은 연평균증감률(해당년/기준년) [^] (1/기간)-1)*100	%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종사자 수 증감률 (최근 3개년)	변화율은 연평균증감률(해당년/기준년) [^] (1/기간)-1)*100	%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인구 ÷ 15세 이상 인구) × 100	%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영역	지표 정의	지표 산식	단위	산출 단위 (2023년도 지표 기준)			비고
				시군구	시도	미생산	
	연구개발인력당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연구개발 인력	천 원/ 연구개발 인력 1명	-			통계청, 과기부 (연구개발활동조사)
	지식기반산업 집적도(3개년 평균)	지식기반산업 = 지식기반제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집적도(IQ) = (지역의 지식기반산업 종사자 수/지역의 전산업 종사자 수)/(전국의 지식기반산업 종사자 수/전국의 전산업 종사자 수)		-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지수)
	창업기업 수 증감률 (최근 3개년)	$\frac{\text{변화율}}{\text{연평균증감률}} = \left(\frac{\text{해당년/기준년}}{\text{기준년}} \right)^{\frac{1}{\text{기간}} - 1} \times 100$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
	GRDP	지역 내 총생산	단위: 백만 원	○			통계청 (지역소득통계)
	지역 내 무역거래량	수출액+수입액		-			통계청
생산· 분배 (3개)	지역 내 소비	지역별 소비유형별 개인 신용카드 사용 금액(연도별 총액)(실승인 기준)	단위: 백만 원	-			신용카드사 (민간자료, 한국은행)
	소비지물가상승률	가구에서 일상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한 지수의 상승률	%	-			통계청
	지가변동률	기준시점 대비 해당 시점의 토지가격의 상승률	%	○			한국부동산원
	재정자립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일반회계 세입)×100(%)	%	○			통계청, 행안부 (지방재정365)

출처: 지방시대위원회, (2024. 01.), 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 <https://www.nabis.go.kr/atlantistDetailView.do> 균형발전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용
기초통계 목록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11〉 지역사회보장지표 지표별 분석 결과 전체

영역	지표 코드	지표명	적절성			중요도			활용 가능성		
			평균	CVR	CV	수렴도	평균	CVR	CV	수렴도	수렴도
돌봄(아동)	a1	영유아 인구 천 명당 보육료 지원 영유아 수	4,000	0.400	0.194	0.750	4,000	0.400	0.194	0.750	0.875
돌봄(아동)	a2	영유아 인구 천 명당 유아학비 지원 영유아 수	4,000	0.600	0.158	0.000	4,000	0.600	0.158	0.000	0.500
돌봄(아동)	a3	영유아 인구 천 명당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	3,900	0.600	0.213	0.000	3,900	0.400	0.242	0.750	0.875
돌봄(아동)	a4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여부	3,600	0.000	0.184	0.500	3,700	0.200	0.173	0.500	0.875
돌봄(아동)	a5	만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설립 주체별 어린이집 정원	4,000	0.600	0.158	0.000	4,100	0.800	0.131	0.000	0.375
돌봄(아동)	a6	만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특수보육어린이집 정원	4,300	0.800	0.149	0.500	4,300	0.600	0.182	0.500	0.375
돌봄(아동)	a7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4,700	1.000	0.097	0.375	4,600	0.800	0.144	0.375	0.500
돌봄(아동)	a8	영아(만 0~2세) 보육서비스 충족률	4,200	0.400	0.208	0.875	4,000	0.200	0.274	1.000	1.000
돌봄(아동)	a9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4,000	0.400	0.250	0.875	4,000	0.600	0.224	0.375	0.375
돌봄(아동)	a10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4,100	0.600	0.230	0.500	4,200	0.600	0.233	0.500	0.375
돌봄(아동)	a12	18세 미만 인구 만 명당 지역아동센터 수	3,500	0.000	0.409	1.375	3,600	0.200	0.356	0.875	0.875
돌봄(아동)	a17	등록 발달장애아동 백 명당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률	4,200	0.600	0.178	0.500	4,300	0.600	0.182	0.500	0.500
돌봄(아동)	a23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비율	4,600	0.600	0.174	0.000	4,600	0.600	0.174	0.000	0.875
돌봄(성인)	b1	장애인구 비율	4,231	0.692	0.210	0.500	4,385	0.846	0.143	0.500	0.500

영역	지표 코드	지표명	적질성				중요도				활용 가능성			
			평균	CVR	CV	수렴도	평균	CVR	CV	수렴도	평균	CVR	CV	수렴도
돌봄(성인)	b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인구 비율	4.077	0.692	0.203	0.500	4.385	0.846	0.143	0.500	4.231	0.692	0.165	0.500
돌봄(성인)	b3	장애인 천 명당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	3.538	0.077	0.263	0.500	3.462	-0.077	0.215	0.500	3.538	0.077	0.306	0.500
돌봄(성인)	b4	장애인 천 명당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3.538	-0.077	0.238	0.500	3.692	0.077	0.246	0.500	3.692	0.231	0.308	1.000
돌봄(성인)	b5	장애인 천 명당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수	3.538	-0.231	0.211	0.500	3.692	0.077	0.196	0.500	3.615	-0.077	0.204	0.500
돌봄(성인)	b8	장애인 만 명당 지역사회 거주시설 수	3.615	-0.077	0.255	0.500	3.692	0.231	0.268	0.500	3.615	0.077	0.231	0.500
돌봄(성인)	b9	장애인 거주시설 총이용자 대비 지역사회 거주시설 이용자 비율	3.615	-0.077	0.255	0.500	3.615	0.077	0.277	0.500	3.615	0.077	0.317	1.000
돌봄(성인)	b16	노인인구 비율	4.538	0.846	0.140	0.500	4.462	0.846	0.142	0.500	4.538	0.846	0.140	0.500
돌봄(성인)	b17	요보호 노인인구 비율	4.615	0.846	0.135	0.500	4.769	1.000	0.088	0.000	4.615	0.846	0.135	0.500
돌봄(성인)	b18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4.077	0.538	0.225	0.500	4.077	0.538	0.225	0.500	4.231	0.846	0.189	0.500
돌봄(성인)	b19	노인 만 명당 노인복지관 종사자 수	3.538	0.077	0.211	0.500	3.538	-0.077	0.179	0.500	3.692	0.231	0.164	0.500
돌봄(성인)	b22	노인 만 명당 지역사회 거주시설 수	3.923	0.538	0.211	0.000	4.077	0.692	0.151	0.000	4.154	0.538	0.185	0.500
돌봄(성인)	b23	노인 거주시설 총이용자 대비 지역사회 거주시설 이용자 비율	3.615	0.077	0.173	0.500	3.692	0.231	0.164	0.500	3.538	0.077	0.263	0.500
돌봄(성인)	b27	노인 천 명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	3.846	0.385	0.224	0.500	3.769	0.077	0.212	0.500	3.923	0.385	0.186	0.500
돌봄(성인)	b28	노인 만 명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수	4.077	0.385	0.203	1.000	4.000	0.538	0.170	0.000	4.077	0.538	0.179	0.500
보호안전	c3	아동보호전문기관당 아동 수	4.600	1.000	0.107	0.500	4.700	1.000	0.097	0.375	4.300	0.800	0.149	0.500
보호안전	c4	노인보호전문기관당 노인 수	4.400	0.800	0.208	0.500	4.600	0.800	0.144	0.375	4.300	0.600	0.182	0.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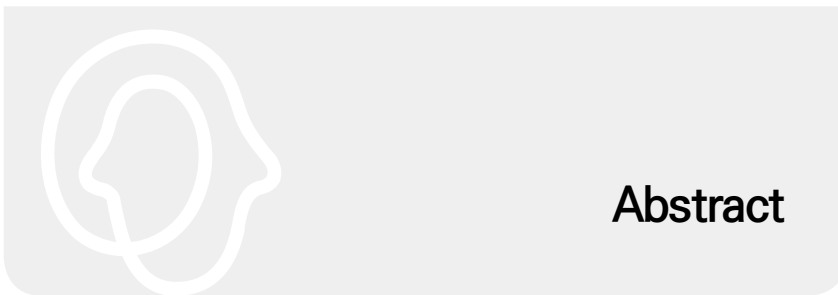
영역	지표 코드	지표명	적질성				중요도				활용 가능성			
			평균	CVR	CV	수렴도	평균	CVR	CV	수렴도	평균	CVR	CV	수렴도
보호안전	c6	학대아동 발견율	4.300	0.600	0.182	0.500	4.600	0.800	0.144	0.375	4.200	0.600	0.233	0.500
보호안전	c7	학대노인 발견율	4.300	0.600	0.182	0.500	4.500	0.800	0.205	0.375	4.300	0.600	0.182	0.500
보호안전	c9	1인당 안전 및 범죄예방 예산	4.100	0.800	0.131	0.000	4.200	1.000	0.095	0.000	4.100	1.000	0.073	0.000
보호안전	c11	10만 명당 안전신고 건수	3.500	-0.400	0.230	0.375	3.600	-0.200	0.222	0.500	3.500	0.000	0.293	0.500
보호안전	c12	형법범죄 발생비	3.800	0.400	0.229	0.375	3.700	0.200	0.173	0.500	3.600	0.200	0.222	0.500
보호안전	c15	노인학대 재학대 사례 비율	4.000	0.400	0.250	0.875	4.500	1.000	0.111	0.500	4.000	0.400	0.194	0.750
건강	d3	전체 화재 중 보건의료 예산 비율	4.100	0.400	0.203	0.875	4.400	0.800	0.151	0.500	3.800	0.200	0.197	0.500
건강	d4	주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3.700	0.200	0.173	0.500	3.800	0.400	0.158	0.375	3.800	0.400	0.229	0.375
건강	d5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률	4.700	1.000	0.097	0.375	4.600	1.000	0.107	0.500	4.700	1.000	0.097	0.375
건강	d6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4.300	0.600	0.182	0.500	4.200	0.600	0.178	0.500	4.200	0.600	0.178	0.500
건강	d7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	4.200	0.600	0.178	0.500	4.300	0.600	0.182	0.500	4.400	0.800	0.151	0.500
건강	d8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3.700	0.200	0.173	0.500	3.800	0.400	0.229	0.375	3.500	0.000	0.230	0.500
건강	d9	건강생활실천율	4.700	1.000	0.097	0.375	4.800	1.000	0.083	0.000	4.500	1.000	0.111	0.500
건강	d10	현재 흡연율	4.600	0.800	0.144	0.375	4.600	0.800	0.144	0.375	4.500	0.800	0.149	0.500
건강	d11	고위험 음주율	4.600	0.800	0.144	0.375	4.500	0.800	0.205	0.375	4.200	0.600	0.233	0.500
건강	d12	우울감 경험률	4.200	0.800	0.208	0.500	4.200	0.600	0.233	0.500	3.900	0.400	0.242	0.750
건강	d13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4.400	0.800	0.151	0.500	4.400	0.600	0.182	0.500	4.200	0.600	0.233	0.500
건강	d14	비만율(자기보고)	3.900	0.200	0.213	0.875	3.700	0.200	0.243	0.500	3.600	0.200	0.222	0.500

영역	지표 코드	지표명	적질성				중요도				활용 가능성			
			평균	CVR	CV	수렴도	평균	CVR	CV	수렴도	평균	CVR	CV	수렴도
건강	d15	고혈압 진단 경험률	3.900	0.200	0.268	1.000	3.900	0.200	0.268	1.000	3.900	0.200	0.268	1.000
건강	d16	당뇨병 진단 경험률	3.900	0.200	0.268	1.000	3.900	0.200	0.268	1.000	3.900	0.200	0.268	1.000
건강	d17	자살사망률	4.700	1.000	0.097	0.375	4.800	1.000	0.083	0.000	4.600	1.000	0.107	0.500
건강	d18	인구 1만 명당 병상 수	4.200	0.800	0.143	0.375	4.200	0.600	0.178	0.500	4.100	0.400	0.203	0.875
건강	d19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	4.300	0.800	0.149	0.500	4.400	0.600	0.182	0.500	4.300	0.600	0.182	0.500
건강	d20	인구 10만 명당 응급의학 전문의 수	3.600	-0.200	0.283	0.875	3.700	0.000	0.272	0.875	3.800	0.000	0.283	1.000
건강	d21	인구 100만 명당 응급의료기관 수	4.200	0.600	0.233	0.500	4.200	0.600	0.233	0.500	4.200	0.600	0.233	0.500
건강	d22	연간 미충족의료물	4.600	0.800	0.144	0.375	4.600	0.800	0.144	0.375	4.500	0.600	0.179	0.375
건강	d23	응급 시 119 구급차 현장 도착 시간 30분 이내 도달률	4.400	0.800	0.151	0.500	4.500	0.800	0.149	0.500	4.500	0.800	0.149	0.500
교육	e1	1만 명당 평생교육기관 수	4.000	0.600	0.158	0.000	3.800	0.200	0.197	0.500	4.000	0.600	0.158	0.000
교육	e2	학령기 인구 1만 명당 학교 수	4.300	0.800	0.149	0.500	4.200	0.600	0.178	0.500	4.200	0.800	0.143	0.375
교육	e3	특수교육 대상자 수	4.400	1.000	0.111	0.500	4.500	1.000	0.111	0.500	4.400	1.000	0.111	0.500
교육	e4	1인당 평생직업교육 예산	4.000	0.600	0.224	0.375	4.000	0.600	0.224	0.375	3.900	0.600	0.268	0.375
교육	e5	1만 명당 평생교육사 수	3.400	-0.200	0.235	0.500	2.900	-0.600	0.325	0.500	3.200	-0.200	0.306	0.875
교육	e6	1만 명당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3.600	0.000	0.184	0.500	3.300	-0.200	0.273	0.500	3.400	-0.200	0.235	0.500
교육	e7	1만 명당 평생교육 교강사 수	3.500	-0.200	0.192	0.500	3.000	-0.400	0.258	0.750	3.200	-0.200	0.234	0.500
교육	e8	평생학습 참여율	4.000	0.400	0.194	0.750	4.100	0.400	0.203	0.875	4.000	0.400	0.194	0.750

영역	지표 코드	지표명	적절성				중요도				활용 가능성			
			평균	CVR	CV	수렴도	평균	CVR	CV	수렴도	평균	CVR	CV	수렴도
교육	e10	학생 1인당 교육 투자액	4.400	0.800	0.151	0.500	4.300	0.600	0.182	0.500	4.400	0.800	0.151	0.500
교육	e12	교사 1인당 학생 수	4.300	0.600	0.182	0.500	4.400	0.600	0.182	0.500	4.500	0.800	0.149	0.500
교육	e14	학급당 학생 수	4.200	0.600	0.178	0.500	4.300	0.800	0.149	0.500	4.200	0.600	0.178	0.500
교육	e15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	4.300	1.000	0.107	0.375	4.400	0.800	0.151	0.500	4.400	1.000	0.111	0.500
교육	e16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	4.500	1.000	0.111	0.500	4.700	1.000	0.097	0.375	4.500	1.000	0.111	0.500
교육	e18	특수학교(급)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	4.500	1.000	0.111	0.500	4.600	1.000	0.107	0.500	4.500	1.000	0.111	0.500
교육	e20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3.600	0.000	0.255	0.500	3.500	0.000	0.293	0.500	3.600	0.000	0.309	0.875
고용	f1	고용률	4.231	0.692	0.165	0.500	4.385	0.846	0.143	0.500	4.231	0.538	0.189	0.500
고용	f2	실업률	4.077	0.538	0.179	0.500	4.154	0.692	0.159	0.500	4.000	0.385	0.196	1.000
고용	f3	장애인 의무고용률	3.769	0.231	0.236	0.500	4.000	0.692	0.139	0.000	3.846	0.538	0.246	0.000
고용	f12	경력단절여성 비율	3.692	0.077	0.246	0.500	4.077	0.385	0.203	1.000	3.846	0.077	0.267	1.000
고용	f19	신규 사회적 기업 육성 실적	3.231	-0.538	0.216	0.000	3.231	-0.385	0.247	0.500	3.154	-0.538	0.244	0.000
고용	f20	신규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 실적	3.000	-0.692	0.261	0.000	3.154	-0.385	0.274	0.500	3.308	-0.385	0.218	0.500
고용	f24	사회적 기업 평균 생존 기간	3.231	-0.077	0.325	0.500	3.308	-0.231	0.248	0.500	3.077	-0.231	0.298	0.500
주거	g1	인구 1천 명당 주택 수	3.769	0.077	0.258	1.000	3.923	0.385	0.234	1.000	3.615	0.077	0.317	1.000
주거	g2	주택보급률	3.769	0.077	0.258	1.000	3.769	0.077	0.258	1.000	3.692	0.077	0.326	1.000
주거	g3	자기점유율	3.615	0.077	0.317	1.000	3.462	-0.231	0.291	0.500	3.462	0.077	0.332	1.000
주거	g4	공공부문 임대주택 재고	4.154	0.692	0.159	0.500	4.154	0.538	0.185	0.500	4.154	0.538	0.228	0.500

영역	지표 코드	지표명	적질성				중요도				활용 가능성			
			평균	CVR	CV	수렴도	평균	CVR	CV	수렴도	평균	CVR	CV	수렴도
주거	g5	민간부문 임대주택 재고	3,769	0.231	0.236	0.500	3,769	0.231	0.236	0.500	3,846	0.231	0.246	1.000
주거	g6	1인당 주거 면적	4,000	0.538	0.219	0.500	3,846	0.385	0.267	1.000	3,615	-0.077	0.298	1.000
주거	g7	상수도 보급률	3,385	-0.231	0.273	0.500	3,462	-0.077	0.268	0.500	3,385	-0.077	0.296	0.500
주거	g8	하수도 보급률	3,385	-0.231	0.273	0.500	3,462	-0.077	0.268	0.500	3,385	-0.077	0.296	0.500
주거	g9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4,000	0.385	0.196	1.000	4,000	0.231	0.219	1.000	4,000	0.538	0.260	0.500
주거	g18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4,538	1.000	0.110	0.500	4,692	1.000	0.098	0.500	4,308	0.846	0.191	0.500
주거	g19	주택 이외의 거주 가구 비율	4,231	0.538	0.189	0.500	4,077	0.385	0.245	1.000	3,615	0.077	0.277	0.500
환경	i1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연간 발령 횟수	4,000	0.400	0.194	0.750	4,200	0.800	0.143	0.375	3,900	0.400	0.242	0.750
환경	i2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연간 발령 횟수	4,000	0.400	0.194	0.750	4,100	0.600	0.171	0.375	3,800	0.200	0.258	0.875
환경	i3	오존 주의보 연간 발령 횟수	4,000	0.400	0.194	0.750	4,100	0.600	0.171	0.375	3,800	0.200	0.258	0.875
환경	i4	1인당 지자체 환경보호 관련 예산	3,900	0.400	0.242	0.750	3,900	0.200	0.268	1.000	3,200	-0.400	0.273	0.375
환경	i10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3,500	-0.200	0.263	0.500	3,500	-0.200	0.263	0.500	3,200	-0.400	0.273	0.375
환경	i12	주민 1인당 재활용품 일일 분리배출량	3,300	-0.400	0.385	0.750	3,300	-0.400	0.385	0.750	3,100	-0.600	0.366	0.000
문화	h2	1인당 문화 관련 예산	3,600	0.200	0.198	0.500	3,467	0.200	0.232	0.500	3,667	0.333	0.293	0.500
문화	h4	총예산 대비 문화 관련 예산 비율	3,600	0.200	0.244	0.500	3,733	0.200	0.267	0.750	3,600	0.200	0.244	0.500
문화	h5	지역 문화예술법인·단체 및 사회적 기업 수	2,667	-0.333	0.403	1.000	3,000	-0.067	0.344	1.000	2,867	-0.333	0.334	1.000
문화	h15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3,200	-0.200	0.234	0.500	3,067	-0.333	0.252	0.750	3,333	0.067	0.283	0.750
문화	h16	도서관 1관당 인구 수	3,667	0.200	0.215	0.500	3,800	0.333	0.219	0.500	3,933	0.467	0.217	0.500

영역	지표 코드	지표명	적질성				중요도				활용 가능성			
			평균	CVR	CV	수렴도	평균	CVR	CV	수렴도	평균	CVR	CV	수렴도
문화	h25	1인당 방문 횟수	2.933	-0.467	0.291	0.500	3.067	-0.200	0.303	0.750	3.267	0.067	0.284	0.500
총괄	j1	기초연금 수급률	4.133	0.733	0.195	0.500	4.067	0.733	0.245	0.500	3.867	0.733	0.265	0.000
총괄	j2	장애인연금 수급률	4.133	0.733	0.195	0.500	4.000	0.600	0.258	0.500	3.933	0.467	0.270	0.750
총괄	j3	총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	4.200	0.733	0.155	0.500	4.267	0.733	0.159	0.500	4.200	0.733	0.198	0.500
총괄	j4	인구 1만 명당 공무원 수	3.400	-0.200	0.300	0.500	3.333	-0.200	0.237	0.500	3.267	-0.200	0.305	0.750
총괄	j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4.467	0.867	0.138	0.500	4.400	0.867	0.139	0.500	4.333	0.867	0.182	0.500
총괄	j9	차상위계층 수급자 비율	4.267	0.733	0.159	0.500	4.333	0.733	0.161	0.500	4.400	0.867	0.139	0.500
총괄	j10	근로연령층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4.133	0.733	0.195	0.500	4.067	0.600	0.210	0.500	4.067	0.600	0.210	0.500
영역	k1	"돌봄(아동)" 영역 지표	4.133	0.467	0.232	0.750	4.133	0.467	0.232	0.750	4.000	0.467	0.258	0.750
영역	k2	돌봄(성인) 영역 지표	4.133	0.733	0.195	0.500	4.267	0.733	0.159	0.500	4.267	0.733	0.159	0.500
영역	k3	"보호안전" 영역 지표	4.133	0.733	0.150	0.250	4.400	0.867	0.139	0.500	4.133	0.733	0.150	0.250
영역	k4	"건강" 영역 지표	4.200	0.467	0.198	0.750	4.333	0.733	0.161	0.500	4.267	0.600	0.181	0.500
영역	k5	"교육" 영역 지표	3.800	0.200	0.239	0.750	3.867	0.200	0.247	1.000	3.867	0.333	0.186	0.500
영역	k6	"고용" 영역 지표	4.067	0.333	0.210	1.000	4.200	0.467	0.198	0.750	4.133	0.467	0.232	0.750
영역	k7	"주거" 영역 지표	3.800	0.200	0.275	1.000	3.733	0.333	0.249	0.500	3.800	0.200	0.239	0.750
영역	k8	"문화여가" 영역 지표	3.533	0.067	0.250	0.500	3.733	0.333	0.249	0.500	3.600	0.200	0.244	0.500
영역	k9	"환경" 영역 지표	3.733	0.200	0.229	0.500	3.533	-0.067	0.308	0.750	3.467	-0.067	0.255	0.500
영역	k10	"총괄" 영역 지표	4.400	0.733	0.162	0.500	4.400	0.733	0.162	0.500	4.467	0.867	0.138	0.500



Abstract

A Study on the Enhancement and Utilization of Community Social Security Indicators

Project Head: Park, Seongjun

This study diagnoses the current status of Community Social Security Indicators (CSSIs) and sets forth future directions for restructuring the CSSI framework, together with strategies for its efficient management and expanded use. It pursues three objectives. First, through a status review and case analyses, the study explores ways to refine the CSSI framework. Second, by examining indicator domains, sub-indicators, and data architecture, it identifies key management challenges. Third, it proposes measures to broaden CSSI utilization, including strategies to meet data demand and to build the requisite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The findings will inform efforts to strengthen data-driven community policy. In particular, by narrowing health- and welfare-sector data gap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by reducing inter-regional disparities in information-utilization capacity, they are expected to provide a firmer basis for advancing community social security policy.

Key words: Community Social Security Indicators, Data-Driven Community Policy, Enhancement of the indicator framework, demand-driven data use

Co-Researchers: Kim, Kahee·Ham, Young-Jin·Kim, Kyunghwan·Song, Hyun-Jin·Kim
Ji Min